

(사)나라사랑연구회 · 대한정치학회 국제학술세미나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의의와 나라사랑:

PEACE FOREVER



# 개 회 사



반갑습니다. 대한정치학회 회장 김진윤입니다.

먼저 이역만리 필리핀에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당시의 생생한 증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86세의 노구를 무릅쓰고, 이곳 대한민국 경산까지 찾아주신 피델 발데즈 라모스(Fidel Valdez Ramos) 前 필리핀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필리핀 참전용사회 막시모 영(Maximo Young)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찰과 국군으로서 참전 증언을 위해 기꺼이 참석해주신 대구동구참전경찰유공자회 손진한 회장님, 다부동전투참전용사회 김경한 회장님, 경산상이군경회 전성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본 세미나의 후원으로 뜻을 같이 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님,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님,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 청장님, 박희관 대구지방보훈청 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2부에서 각 분야별 주제발표를 해주실 경북대 허만호 교수님, 계명대 김옥준 교수님, 경찰교육원 강윤식 교수님과 영남이공대학교 이정훈 교수님, 육군3사관학교 최용성 교수님, 멀리 미국에서 오신 시몬 천(Simone Chun)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프랑스군의 활약상을 발표해주실 장계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세미나를 공동으로 준비하시면서 필리핀까지 다녀오시고 주제발표까지 해주실 나라사랑연구회 이사장님이신 경일대 성기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세미나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원만히 진행되도록 애쓰시는 개최식 사회 대구대 박광득 교수님, 제1부 사회 김영문 전 영남대 교수님, 제2부 사회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님, 제3부 종합토론의 사회 수성대학교 전동훈 명예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밖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해외에서, 경향각지에서 참석해주신 각계 내빈, 그리고 대한정치학회 회원님들과 나라사랑연구회 회원님, 도움을 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의 내용은 한국전쟁의 외견상 참전주제 4대 세력인 이른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군과 중공군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조선인민군에 대한 것은 아직 그 때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국군에서 마지막 대구경북 사수의 주축으로 현격한 전공을 세운 경찰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치안에서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피땀을 흘려 싸웠지만 아직 학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서 주제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미나를 준비한 의의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85달러 밖에 안되는 가난하고 모든 것이 열악한 신생독립국에게 당시 세계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의 무기지원은 물론, 공군이 직접 참전하고, 수십만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김일성 독재자의 무자비한 침략에 맞서서,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과 그 명예를 바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럽고 존경해마지 않는 먼저 가신 참전용사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아직 살아계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높이 받들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오로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유엔군의 이름으로 저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서, 콜롬비아의 열대 야자수 그늘 아래 있던 젊은이에서, 아시아의 필리핀을 거쳐 아프리카 메마른 대지의 에티오피아 젊은이, 유럽 각국과 영국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에서 참전한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의 고귀한 희생과 원조에 조금이나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가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특히 참전용사의 증언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사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날을 되새기며 배우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7. 26.

대한정치학회 회장 김진윤



## 환 영 사



한국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방안모색 국제학술세미나를 우리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라모스 필리핀 전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행사에 참석해주신 김범일 대구시장님,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님, 최동해 대구지방경찰청장님, 박희관 대구지방보훈청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약진하여 이제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가 되는 선진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국의 정세도 많이 변하였고, 특히 중국과는 활발한 교역 등을 통해 상당히 가까운 이웃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한과 대치하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전체제하에 나라사랑의 길을 모색하고, 국가보훈 의식을 연구과제로 하는 대한정치학회의 이번 학술회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정치학회는 1985년 우리 지역의 “대구-경북정치학회”를 모태로 하여, 1999년 “대한정치학회”로 거듭 태어났으며, 임원진들의 헌신으로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역사과 전통을 가진 학술단체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대한정치학회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은 물론, 나라사랑연구회 회원 상호간 친교와 우의를 쌓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한정치학회가 정치 관련 학술대회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26.

영남대학교 총장 노 석 균

## 축 사



한국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나라사랑정신 고취를 위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기념 나라사랑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260만 대구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해외에서 방문해 주신 피델 발데스 라모스(Fidel Valdez Ramos) 前 필리핀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훌륭한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윤 대한정치학회장님, 성기중 (사)나라사랑연구회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전쟁 발발 한달 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온 적들을 오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막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땅에서 우리는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260만 시민과 함께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당시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기초연설을 해 주실 피델 발데스 라모스(Fidel Valdez Ramos) 前 필리핀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신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한국전쟁은 올해로 정전 60주년이 됩니다. 여전히 북한은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군사행동과 일방적 대화단절로 국제적으로 고립무역을 자초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과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유엔참전국과 우리지역과의 관계발전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재술입니다.



민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 세미나』를 뜻깊게 생각하며, 세미나 준비로 애쓰신 대한정치학회 김진운 회장님과 나라사랑연구회 성기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아시아 평화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영웅으로 오늘 기조연설을 해 주실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님을 비롯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정전 상태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중 하나이고,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전 60년간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이루었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세계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해법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도 새 정부와 함께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지역 발전을 이루고, 더 큰 통일 한국을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전쟁의 원인과 피해 상황,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보훈의식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나라 사랑법을 모색하여 통일한국의 이정표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함께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재술

##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장 최동해 치안감입니다.

오늘 이곳 영남대학교에서 대한정치학회와 (사)나라사랑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미나 개최 준비에 애쓰신 김진운 회장님과 성기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 2011년에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이어 세계 9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지난해에는 세계 8위에까지 오르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이제 곧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영된 나라에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 역시 구국경찰의 신념으로 각종 전투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계속 남하하여 대구 근처에까지 왔을 때 낙동강 주변 전선에 1만 5천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대구를 완벽하게 사수해낸 일은 한국전쟁사에 길이 빛날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후에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침투로부터 끝까지 나라를 지켜내는 호국경찰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지금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위협, 사이버공격, 후방 지역 테러 등 호시탐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철저히 대응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구국과 호국의 정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26.

대구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최 동 해

## 축 사



6·25전쟁 UN군 참전·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분단 현실을 재조명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0여년전 6.25전쟁에 참전하시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피델 발데스 라모스(Fidel Valdez Ramos) 전 대통령과 UN참전용사 대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세미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성기중 나라사랑연구회 이사장님, 김진운 대한정치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올해는 6·25전쟁 UN군 참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풍전등화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사투를 벌일 때, 국제사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약소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UN참전용사분들과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대국, 그리고 문화강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는 7월 27일 UN군 참전일을 계기로 UN을 포함한 27개국 정부대표와 참전용사를 초청해 6·25전쟁 UN참전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감사행사를 거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UN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도록 기억과 보은의 유산을 물려주어, 자유와 평화의 땅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나라사랑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진정한 국가보훈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나라사랑 정신이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성기중 나라사랑 연구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 7. 26.

대구지방보훈청장 박 희 관



# Contents

- 등록 12:40~13:30

영상물 비디오 방영

개회식 13:30~14:10

장소 : 사파이어 홀

사회 : 박광득(대구대 교수)

국민의례

개회사 : 김진운(대한정치학회 회장)

기념사 : 성기중((사)나라사랑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 노석균(영남대학교 총장)

축사 : 김범일(대구광역시 시장)

축사 : 이재술(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축사 : 최동해(대구지방경찰청 청장)

축사 : 박희관(대구지방보훈청 청장)

제1부 : 발표, 토론, 참전 증언 14:30~16:00

장소 : 사파이어 홀

The First Session : Entry into the Korean War by the U. N. Forces  
Moderator : Kim, Young-Mun(Professor Emeritus, Yeungnam Univ.)

<기조연설> Fidel Valdez Ramos(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The History of the Filipino in Korea(Video) and Peace Forever

<Q/A and Break time>

제1주제 Maximo Young(The Philippines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Veterans Association Inc)

SEOUL AND SOUL- Report of Filipino Korean War Veterans .....

제2주제	Jim Newman(President of New Zealand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Korean War Memory and Cooperation Activity with the Association of Korean War Veterans ..... 19
제3주제	Seong, Khee-Joong(Chief Director of Nara-Sarang Research Association, Professor of Kyungil Univ.) The meaning of the U. N. Forces' Entry into the Korean War,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s in Different Countries(한국전쟁에서 UN 참전군의 의미와 각국 참전용사회의 활동) .....9
제4주제	Eric Jouin(A Military Attache of French Ambassador in Korea) Dr. Jang, Gye-Hyun The Participation of French Army in the Korean War and Its Historical Meaning(한국전쟁 참여 프랑스군의 활약과 그 역사적 의의) .....1
제5주제	Son, Jin hwan(Chairman of Daegu Dong-gu Branch Korean War Police Veteran of National Meit) Police's Account of Nakdong River Battle(경찰의 낙동강 방어 전투실상 증언)9
제6주제	Kim, Kung-Han(Korean War Veterans' of the Dabudong battle) On the Dabudong Battle(다부동 전투의 실상 증언) .....9
제7주제	Jeon, Sung Moon(Korea Disabled Veterans Organization, Gyeongsan) Wonsan Landing Mission and Activities of Korea War Veterans Associations in Gyeongsan(원산상륙작전 증언과 경산시 참전상이군경회 보고) .....3
토론자	Dr. Oh, In Gyu(Korea Univ.), Dr. Emrly Abagat(Daegu Catholic Univ.)

제2부 : 주제 발표 및 토론 15:10~17:45

장소 : 마드리드 홀

사회 : 노동일(전 경북대 총장)

- 제1주제 Heo, Man-ho(Kyungpook Univ.)  
Historical Legacies in Changing the Korean Armistice Regime: Centering on South Korean POWs and Civilian Abductees(휴전체제 전환의 역사적 유제들: 국군 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1
- 제2주제 Yun-sik Gang and Lee Jung Hun(Police Training Institute,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Entry into the Korean War by the Korean Police  
(한국전쟁에서 경찰의 참전 실태) .....10
- 제3주제 Ok-jun Kim (Keimyong Univ.)  
Entry into the Korean War by the Chinese Army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참전) .....93
- 제4주제 Yong Seong Choi (Korea Army Academy at Young Cheon / The Dean of the Department of Military War)  
Activities of the Korean Armed Forces in the Korean War(6·25전쟁에서 한국군의 활약상) ..... 13
- 제5주제 Simone Chun (Suffolk Univ., United States)  
Trustpolitik and a Liber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 25
- 토론자 홍원표(한국외대), 김진봉(KBS), 김주삼(조선대), 박동찬(육군군사편찬연구소), 박 형(영남대)
- Coffee Break 17:45~18:00

제3부 : 종합토론 18:00~18:40

장소 : 사파이어 홀

사회 : 전동훈(수성대 명예총장)

만찬 18:40~20:00

장소 : 컨벤션 홀

사회 : 이유신(영남대 교수)



(사)나라사랑연구회 · 대한정치학회 국제학술세미나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의의와 나라사랑: PEACE FOREVER

제1부 : 발표, 토론, 참전 증언

장소 : 사파이어 홀

The First Session : Entry into the Korean War by the U. N. Forces  
Moderator : Kim, Young-Mun(Professor Emeritus, Yeungnam Univ.)

- 기조연설 Fidel Valdez Ramos(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Philippines)  
The History of the Filipino in Korea(Video) and Peace Forever  
<Q/A and Break time>
- 제1주제 Maximo Young(The Philippines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Veterans Association Inc)  
SEOUL AND SOUL- Report of Filipino Korean War Veterans
- 제2주제 Jim Newman(President of New Zealand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Korean War Memory and Cooperation Activity with the Association of Korean War Veterans
- 제3주제 Seong, Khee-Joong(Chief Director of Nara-Sarang Research Association, Professor of Kyungil Univ.)  
The meaning of the U. N. Forces' Entry into the Korean War,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s in Different Countries(한국전쟁에서 UN 참전군의 의미와 각국 참전용사회의 활동)
- 제4주제 Eric Jouin(A Military Attache of French Ambassador in Korea)  
Dr. Jang, Gye-Hyun  
The Participation of French Army in the Korean War and Its Historical Meaning(한국전쟁 참여 프랑스군의 활약과 그 역사적 의의)
- 제5주제 Son, Jin hwan(Chairman of Daegu Dong-gu Branch Korean War Police Veteran of National Meit)  
Police's Account of Nakdong River Battle(경찰의 낙동강 방어 전투실상 증언)
- 제6주제 Kim, Kung-Han(Korean War Veterans' of the Dabudong battle)  
On the Dabudong Battle(다부동 전투의 실상 증언)
- 제7주제 Jeon, Sung Moon(Korea Disabled Veterans Organization, Gyeongsan)  
Wonsan Landing Mission and Activities of Korea War Veterans Associations in Gyeongsan(원산상륙작전 증언과 경산시 참전상이군경회 보고)
- 토론자 Dr. Oh, In Gyu(Korea Univ.), Dr. Emrly Abagat(Daegu Catholic Univ.)



제1주제 : SEOUL AND SOUL—Report of Filipino Korean War Veterans

From Miudong to Yuldong:  
the combat career of a Filipino soldier in the Korean War

**By Maj. Maximo Young, AFP (Ret.)**

10th Battalion Combat Team, Reconnaissance Company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PEFTOK)

---

I have been a soldier since I was 19 years old.

I first defended my beloved Philippines from Japanese invaders; fought Filipino communists whose rebellion sought to transform the Philippines into a communist state; battled Communist Chinese and North Koreans in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magnificent concept we call DEMOCRACY and finally served as military advisors to two (2) South Vietnamese provinces under the CORDS program or the Civil Operations and Revolutionary Development Support Program during the Vietnam War, also fighting against communism which was being espoused by the North Vietnamese Army and the Viet Cong.

I was conscripted for military service after the Empire of Japan attacked the Philippines on 8 December 1941. I was then employed as a shipping consignee clerk of a commercial ship known as the MV Legaspi. When the war broke out, our ship was commandeered by the USAFFE, better known as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the Far East. Thereafter, we, the officers and members of the crew of MV Legaspi, were commissioned to undertake covert operations of transporting supplies, troops and ammunition from the Visayas region to the province of Bataan in Luzon and the island-bastion of Corregidor, which were both being besieged by the Japanese invaders.

The Silver Star Medal

Our transport operations were initially successful as our vessel, the MV Legaspi, made two dangerous sea voyages and eluded the Imperial Japanese Navy until our luck ran out. We were captured after a Japanese cruiser sank our unarmed ship off Mindoro Island.

#### 4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의의와 나라사랑: PEACE FOREVER

I was sent to a prisoner-of-war camp in Mindoro along with my surviving shipmates. We languished in jail and after 20 days of hard labor and confinement, we managed to escape. I then joined the guerillas in the Island of Negros and fought the Japanese until their surrender in 1945.

After the war, I was awarded the U.S. Silver Star,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hird highest military decoration for heroism and valor, for my service on board the MV Legaspi.

In 1947, communist Filipinos called "Huks" raised the flag of rebellion as they sought to destroy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and replace it with communism. I fought against Filipino communists in the jungles, hills and rice fields that dotted the region of Central Luzon, north of Manila.

#### Fighting to save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in the midst of this campaign against communism that the 10th Battalion Combat Team to which I belonged was selected the first Philippine Army unit to be deployed to Korea. The 10th BCT and its 1,400 officers and men arrived in Busan on 19 September 1950 after a three-day sea voyage.

Busan then is a world away from Busan now. When we arrived, the port was a massive military facility packed with troops of different nationalities, weapons and supplies. It was a fortress geared for war.

It was at Busan that we first came face-to-face with frightened and thin Korean refugees, many of them children, begging us for food. One of my enduring memories of my first months in Korea was the seemingly unending stream of Korean refugees fleeing the fighting. And there seemed to be so many parentless children among these refugees.

Again and again we saw children, alone or in small groups, standing bewildered and alone, many of them crying. It was heartbreaking.

We had seen such sights in our home country during the brutal Japanese occupation from 1942 to 1945. Poverty was widespread after the war ended in my country in September 1945. The war had devastated our industries, ruined our farms and made many Filipinos poor.

And here we were in Korea, a thousand miles from home, witnessing a tragedy many of us hoped we would never see again.

#### Anti-guerilla fighters

We spent our first two weeks in Korea acclimatizing to the terrain, continuing unit training interrupted by our abrupt departure and taking in weapons and supplies. We put up camp initially in the town of Miryang, 35 miles north of Busan, and moved to other towns farther north. We joined the war in the city of Waegwan. The battalion was first attached to the U.S. 25th Infantry Division.

Preceded by our reputation as a tough anti-guerilla unit, we were first given the mission of hunting down North Korean guerillas interdicting the main supply route (MS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battalion's first area of operations covered more than 800 square miles and harbored some 3,000 guerillas. The battalion was deployed on anti-guerilla operation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of its tour in Korea.

On 31 October, advanced elements of the battalion crossed the 38th Parallel dividing North and South Korea. The next day, the rest of the battalion moved further north towards Pyongyang, and was given the mission of securing the MSR from Kaesong to Pyongyang and clearing the area of guerillas.

#### The historic Battle of Miudong

At the outskirts of the town of Miudong on 11 November, the battalion fought its first pitched battle, this against a North Korean battalion. "The Battle of Miudong" was the first battle fought, and won, by Filipinos on foreign soil.

At the time of this victory, I was a First Sergeant and a Tank Platoon Leader of the Reconnaissance Company. I commanded five M24 Chafee light tanks each armed with a 75 mm gun. Our secondary weapon was a .50 caliber heavy machine guns mounted atop the turret.

The task given our battalion was to clear and secure the town of Singye prior to its occupation by the U.S. 3rd Infantry Division to which our battalion was attached. We were stationed at the town of Na Chon Kon to the south of Singye.

We moved out towards Singye in a long column at 0730H, a heavy truck leading the way followed by my five tanks and the infantry of Recon and Able Company riding in trucks. It had begun to snow and we were told to expect trouble.

Ambush!

At 0930H, my tank platoon had just cleared the bend of a winding mountain road leading to the town of Miudong when an explosion destroyed the truck leading the column. We were then hit by heavy small arms fire from North Korean soldiers dug in along the forward slopes of hills on our right flank.

The sudden storm of fire drove our men to cover. Our men were quickly pinned down and answered with only desultory fire. The situation was immediately critical since the North Koreans could be expected to charge us at any moment.

I was buttoned down inside my tank when the ambush was sprung. My first inkling we were in action was the repeated sound of bullets clanging off the hull of my tank. My tank column stopped and we swung our 75 mm guns to the right searching for targets.

Face-to-face with Death

I could not see the enemy positions from inside the tank and my gunner was yelling at me for target coordinates. There was only one thing to do.

I flung open the turret hatch, clambered out of the turret, braced my feet against the metal hull and swung the .50 caliber machine gun towards the enemy positions. The machine gun had no gun shield and I was fully exposed to enemy fire that continued to strike my tank.

I fired aimed bursts at the enemy foxholes and watched the big .50 caliber rounds tear up the ground around those positions. I saw some of the enemy fall while others fled their trenches. The sound of my fire apparently roused our pinned down infantry who rallied and began to pour heavier fire onto the disorganized North Koreans.

I was certain the North Koreans were firing at me since I was totally visible atop my tank while firing my machine gun. Why I was never hit, I do not know. But the only thing that entered my mind in those seconds of terror as I stared Death in the face was doing my duty. I was a Filipino soldier saving other Filipino soldiers.

Our field artillery battery, which had been prudently positioned in the rear to cover our advance, began shelling the North Korean positions. Directed by a Forward Observer, the barrage was deafening but our well-trained 105 mm howitzer crews were deadly accurate. Our 81 mm mortars also went into action and began firing.

Our infantry then charged the smoldering North Korean positions before the dust from the barrage had settled. I continued to fire my machine gun to support the counterattack while the other tanks in my platoon poured fire on the enemy.

The North Koreans ran and were shot down as they fled their trenches. Our men chased the retreating North Koreans to Singye whose defenders, two battalions, fled before our attack. The battle was over after 45 minutes.

We counted 42 enemy dead and estimated that some 100 more could have been wounded. We lost one man killed and a few wounded. I later learned that this battle was witnessed by several high ranking officers from the U.S. 3rd Infantry Division and some foreign officers, who later congratulated me for my part in the combat.

I received a “Well done” congratulatory note from my battalion commander, Col. Mariano Azurin, and our Executive Officer, Major Delfin Argao. I was awarded a battlefield commendation for my role in the Battle of Miudong. Eventually, upon my return to the Philippines, I was recommended further for direct commission which would entail my promotion to the rank of second lieutenant.

Over 50 years later, I would belatedly be conferred the Philippines’ Gold Cross Medal for this daring combat feat. The Gold Cross is awarded only for gallantry in action and is the Philippines’ fourth highest military award.

The Communist Chinese intervene

The Korean winter set in, the coldest in 200 years with temperatures well below zero. Then the Communist Chinese intervened in force. On 25 Novemb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nt more than 200,000 men in what it disingenuously terme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CPV) against the UNC.

The Chinese “volunteers,” who were in reality battle hardened regular soldier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quickly defeated both the US Eighth Army and the US X

Corps near the border of North Korea and China.

Advancing southward, the CPV re-took Pyongyang and Seoul within the year. The 10th retreated with the UNC in this harsh winter of defeat that men of the US Army derisively nicknamed “The Big Bug Out.”

The battalion spent its first Christmas in Korea at the town of Suwon south of the Han River. When the UNC launched its counterattack in February 1951, the 10th went on the offensive. In March and April, the battalion was in continuous action, capturing hill after hill from the Communist Chinese. Now a front line

fighting unit, the 10th pushed northward towards the 38th Parallel defeating Chinese counterattacks along the way.

By 14 April, the 10th was the northernmost of all UNC units. The men were exhausted after close to two months of non-stop fighting but were in high morale. The battalion was down to some 900 men. Most of its casualties, however, were non-battle in nature.

Yuldong: an epic of Filipino arms

The Battle of Yuldong is hailed as the greatest Filipino victory in the Korean War. It was one of many battles comprising the biggest offensive of the Korean War: the communist’s “Great Spring Offensive of 1951.” The CPV and NKPA had massed some 400,000 men for this massive counterattack against the advancing UNC.

The 10th was ordered to defend a three-mile segment of Line Utah, the northernmost UNC defensive line inside North Korea and the logical target for any Communist Chinese attack. The enemy assault that triggered the Battle of Yuldong came on the evening of April 23.

An entire Communist Chinese army of 40,000 men struck hasty defensive firing positions the battalion had only occupied only the day before. The battalion line did not rupture.

In hours of savage, close quarter combat, the veterans of the 10th BCT prevented the Communist Chinese from overrunning their positions, thereby putting a fatal brake on the communist’s advance. Hundreds of Communist Chinese fell to the rifles, machine guns and mortars of the battalion.

### Defeating the communist conquest of South Korea

By 6:00 am of 23 April, the 10th was only one of only two UNC units on the Western Front not overrun or wiped out by the tremendous Chinese assault. In standing firm at Yuldong, the grossly outnumbered Filipinos helped prevent the Communists from winning the Korean War.

The Communist Chinese army we kept at bay, and which we even counterattacked, could have given the communists the extra strength they needed to carry the greatest communist offensive of the Korean War to final victory. As it turned out, the defeat of their Great Spring Offensive forced the communists to open peace talks with the United Nations Command.

### The Vietnam War

Over a decade after the Korean War ended, I found myself again fighting for DEMOCRACY and this time 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South Vietnam during the Vietnam War. In the late 1960s, I became one of a select group of veteran Filipino soldiers sent to Vietnam to serve as military advisors the Army of the Republic of South Vietnam. A program known as the Civil Operations and Revolutionary Development Support was adopted by the US military hierarchy and I was assigned to serve two (2) critical provinces in South Vietnam.

My comrades and I were part of the largest pacification campaign in the Vietnam War through the Civil Operations and Revolutionary Development Support or CORDS. As earlier said, I was a military advisor to implement CORDS operations in two South Vietnamese provinces, the erstwhile provinces of Khien Tuong and Bac Lieu. Vietnam was my last war.

Mine has been a life well lived. It has been a purposeful life for there are but few men who have had the honor of fighting for their country and Democracy in four w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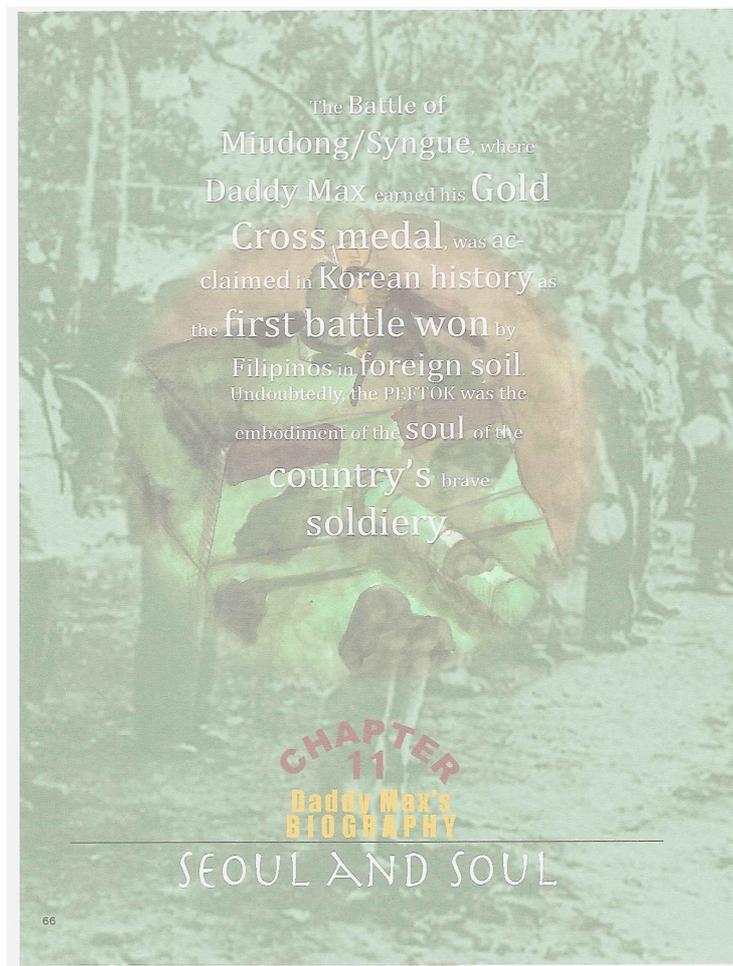
### The PVAO

Before ending this note, I am proud to announce to the world that veterans in the Philippines are well taken care of. The PVAO, which is the acronym for the Philippine Veterans Affairs Office, through its present Administrator, the energetic Lieutenant General Ernesto G. Carolina, a retired AFP officer, has done more than enough in

seeing through a competent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of veteran affairs. This, Gen. Carolina has done by initiat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whole veterans' organizations of our country, through the diligent and persevering assistance from his equally energetic staff. Thus, more veterans and their respective families have now truly felt the sympathy and caring by the Philippine government. Indeed, veterans in our country, the Philippines, have now acknowledged the continuing accomplishments of PVAO as it endeavors to sustain its noble quest of serving and giving what is rightfully due to our war veterans, within the limits of our country's capability.

Thus, I am a proud to be a Filipino Soldier and a Filipino War Veteran. I am now 91 years old.

Thank you and good day!



## **THROUGH ADVERSITY TO THE STARS**

(Per ardua ad astra)

**By Maj. Maximo Young, AFP (Ret.)**

10th Battalion Combat Team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PEFTOK)

“Through adversity to the stars!” is motto which was made relatively popular by reason of its Latin origins. Its original Latin version is PER ARDUA AD ASTRA.

This motto is applicable to men of strong character—and strong nations like the Republic of Korea—that have survived great misfortunes and great sufferings to finally triumph in the end. It is the motto of the Royal Air Force and was created to inspire British flyers who fought in World War I with a strong esprit d’ corps.

The stars now brightly shine o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risen from one of the 10 poorest nations in the 1950s to one of the 30 richest nations today. And it is all because the generation of Koreans born in the decades before the 1950s not only endured the horrors of the Korean War, but took it upon themselves to rebuild Korea into the great nation it is today.

Koreans rebuilt Korea. This is obvious! But who are these Koreans who built modern-day Korea?

For myself and my comrades in the 10th Battalion Combat Team of the 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or PEFTOK who landed in Korea on 19 September 1950, the Koreans who rebuilt Korea were the many children—many of them thin, starving and dirty—who came to us begging for food, water and medicine.

We first met them at Busan and we gladly gave them what we could. We met them in the gloomy Korean towns along the dusty road to Miryang, our battalion’s first combat base. We met them again and again as our battalion moved north towards the 38th Parallel in the autumn and winter of 1950 in pursuit of the beaten remnants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we met them again as we retreated along with our comrades in the United Nations Command after Communist China intervened in November 1950. One of my enduring memories of my first months in Korea is the seeming unending stream of Korean

refugees fleeing the fighting. And there seemed to be so many parentless children among those refugees.

Again and again we saw children, alone or in small groups, standing afraid and alone, many of them crying. It was heartbreaking.

We had seen such sights in our home country during the harsh Japanese occupation from 1942 to 1945. Poverty was widespread after the war ended in my country in September 1945. The war had destroyed our industries, ruined our farms and made many Filipinos poor.

Caring for the many poor Filipinos was a national priority in the five years before the Korean War began on 25 June 1950. We were aided in our national recovery effort by aid from our all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hilippines was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its war torn economy when it had to contend with another war. In 1947, Filipino communists loyal to the Chinese communists began a nationwide rebellion to destroy democracy in the Philippines and replace it with communism of the Marxist-Leninist type.

I had fought against the Japanese in the Second World War. Many of my comrades in the 10th BCT had also fought against them. Now we had to fight against Filipino communists. It was during our operations against Filipino communist guerillas called “Huks” that our battalion was selected as the first Filipino combat team to be deployed to Korea.

My battalion was unique among the five PEFTOK BCTs in that it spent most of its tour of duty on the move. The war before the stalemate set in on July 1951, was one of never-ending movement.

When we arrived in September 1950, the UNC ran after the NKPA northwards.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CPV) pursued the UNC southwards in November 1950, and after April 1951—a month which Filipinos remember as that historic Battle of Yuldong—the UNC chased the CPV northwards until the pursuit ended roughly where the Demilitarized Zone is today.

It was during the few months before September 1951 when my battalion returned to the Philippines that I became more acquainted with these brave Korean boys, who were eager to do odd jobs for us in return for food and money for their families.

We had been fighting almost non-stop for seven months and were delighted to leave the battlefield far behind us and head for the peace and quiet of our new base camp many miles behind the battle front.

Away from the terrors of the front, my comrades and I became civilians in soldiers' uniforms. We temporarily stored away our rifles, machine guns, ammunition and equipment and went on rest and recreation. I commanded an M24 Chaffee light tank with a four-man crew and I admit I felt nostalgic at saying goodbye to a tank that had been our home for months.

At our base camp were many Korean boys doing the many odd jobs that make life behind the front bearable. Most of these Korean boys I guess were in their teens or pre-teens. I wondered at the time where all the older Korean boys were. I knew that those of military age were ser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my or in the two other branches of the armed forces.

It was later that I found out that Korean teens below military age also served in the Korean Service Corps along with elderly Korean men. The brave boys and old men of the KSC carried ammunition and supplies to Allied troops in the front line and brought back dead and wounded Allied soldiers, including Filipinos. They suffered many casualties because they worked so close to danger.

It seemed as if every one of our men had at least one Korean boy as a helper. These hardworking boys ran errands, cleaned our beds, cooked food, did laundry, ironed clothes and polished boots. I had my own little helper and although I have forgotten his name, he was a thin young man with a smile on his eager face and always seemed to be working. I named him Kim.

We could not speak Korean and the Korean boys could not speak English. To us, most Korean boys were either named Park or Kim. One of my comrades took care of two young boys whom he named Kim 1 and Kim 2. They always called him, Sir, he told me and were always bowing, as was the Korean custom.

Having seen firsthand the terrible condition of Korean refugees, I determined to make the life of my Korean boy helper as easy as possible. He worked hard and quickly did any job I asked him.

My wish was that I could talk to him to get to know more about him and his family;

his dreams and ambition and what he planned to do after this war was over. Not knowing each other's language, however, limited us to politely smiling at one another and my patting him on the head for a job well done. He was always bowing.

Bowing is not a custom among Filipinos. We usually show respect for our elders by adding the word "po" to a sentence. The word "po" does not have any direct English equivalent. The closest is "Sir" or "Madam." I sometimes wished my boy would not bow so much but I never stopped him from doing so since I saw it as a sign of respect for me as an elder person.

What I and the rest of the men in my battalion knew, however, was that these industrious Korean boys were working very hard to feed their families. With their fathers and elder brothers away fighting in the war or aiding in the war effort, many Korean families consisted of women, old persons and young boys and girls.

This unnatural situation meant that many young pre-teen Korean boys became their families' main breadwinners. These young boys knew how heavily their families depended on them for day-to-day survival. And I guess that is why these boys were hard working. Love of family was very strong among these Korean boys.

It was always a happy occasion seeing groups of these young boys walk home carrying bags filled with canned goods, bread and other foodstuff to be given to their families.

That love of family was showing in my young helper. I once gave him five pieces of bread for his afternoon snack. He only ate two and wrapped the remaining three in a brown paper bag to take home to his family that evening. I heard similar stories from other Filipinos. Since Filipinos also have great love for their families, we understood the great sacrifices these young men were making for their families. Theirs was a truly divine heroism.

The bonds among some of our men and these young Korean boys grew so strong as to defy death. In our battalion and in the other battalions that fought against the communist enemy, we heard stories of those young boys following their Filipino "foster fathers" into battle.

One particularly famous case was that of a young Korean boy who followed his Filipino "foster father" to the front line to find him fighting desperately against Chinese communists. The Filipino was shot dead and the grieving Korean boy shouldered his rifle and fired away at the enemy until he, too, was killed.

Other Korean boys were adopted by their Filipino “foster fathers” and returned to the Philippines to start new lives.

These were the boys born in the 1940s. These are the men aged over 70 years old today whose hard work, enduring patriotism and love of family sparked the economic miracle of the 1970s that made Korea the great nation it is today.

I take comfort in knowing that I helped at least one Korean family endure the horror of the Korean War because of a hard working son who decided to be my helper and friend. I salute you wherever you are and would want to meet you again if you are still alive.

But I don’t even know your full name. I only know you did what any good son would have done—ensure your family’s survival against incredible odds.

“THROUGH ADVERSITY TO THE HIGHEST STAR!”

메 모

메 모

메 모

제2주제 : Korean War Memory and Cooperation Activity with the Association of Korean War Veterans

## New Zealand and the War in Korea



**Jim Newman**

2009 - The National President of the New Zealand Korea Veterans Association

2013 - The 1<sup>st</sup> Vice President of the IFKWVA

Before 1950 few New Zealanders had ever heard of the country called Korea, we knew in some detail about Japan and China and the Philippines as they were the centre of the Pacific War during WW2.

I was never taught at school just where Korea was situated and no one I knew had ever been there.

On June 25 1950 the Communist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and quickly overcome whatever resistance the South could muster.

The issue quickly came before the United Nations and it was decided to uphold the principals that the South Koreans stood for and a Police action was decided upon by the United Nations who then called upon the Nations of the world to come to the defence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t is well to remember in 1950 NZ had a population of around 1.4 Million People and during the whole of the War in Korea NZ sent over 6000 troops (both Soldier and Sailors) to the Zone.

New Zealand was one of the first t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rights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remain free and on the first of August 1950 two New Zealand Frigates arrived in Sasebo Japan after leaving New Zealand some 28 days prior.

The Tutira and the Pukaki were two Loch Class Frigates of the New Zealand Navy and they were deployed mainly on the West Coast of Korea although there were times that they operated alongside of the US Navy of the Eastern side of the Peninsular.

My name is James (Jim) Newman and I went to the Korean War aged just 17 years of age.

How did I go to war at such a young age?

I had joined the Royal New Zealand Navy on the 8/9/1949 as a seaman Boy second class and after a year at the Naval Training base at HMNZS Tamaki I was posted to the HMNZS Bellona a Light Cruiser for sea training.

By this time the War in Korea was a reality and everyone knew that sooner or later they would be going to Korea.

I left New Zealand in early March 1951 on the HMNZS Hawea with our destination being the War in Korea, we knew that we would be away from NZ for around a year and there were plenty of tears as well pulled out of Devonport Naval Base in Auckland.

I think that the majority of the crew were 22 years and younger.

It was for those who were younger, a big experience for we were going to a war, most of us knew what war was about from the newspapers that reported on the WW2.

On arrival in the combat zone we were required to patrol the Western side of the Korean Peninsular from around Cho Do Island to the North, most of this was very boring as we had a patrol to do about 50 to 60 miles long and we travelled at a very low speed of 7 knots. When we got to the far end we turned around and came back along the same track.

There were some rather more exciting times when we shield gun emplacements on the North Korean Mainland.

Again on occasions we made raids on a number of sites on the North where we took a number a well armed sailors ashore so that they could either bring back information or do as much damage as they could in the time they were there.

Some considerable time was spent up the Han River mouth where the Communists held the northern banks of the river while the eastern banks were held by the Americans.

The Hawea was given the task of surveying the Han River estuary in order to make it safer for navigation in the area as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mud banks that were forever shifting around and making navigation a bit hazardous for those who ventured into the area.

We watched in awe as the US Air force napalmed the North Koreans on the Northern Banks of the Han. It was a terrible sight to see.

On two separate occasions the Hawea joined up with the US Navy and patrolled the Eastern side of the peninsular, on one of these we accompanied a US Destroyer up the eastern side until we got in sight of the Border of the USSR. The Russians sent a Mig Fighter out to have a look at us but as it had Russians markings on it, the Russians could not do anything as technically they were not at war with us or the Americans.

Back on the Western side, two frigates ( The Black Swan and the Hawea ) sailed right up the West Coast and late at night went up the Yalu River which was the Border between Communist China and North Korea. I understand our target was a power station that was situated on the Southern side of Yalu and within shelling distance for the two Frigates.

From memory we sailed up around 20 miles and then turned around in midstream and once we had accomplished that we let loose with all guns that could land shots on North Korea. The North side of the river was Communist China's territory and we were not at war with them.

After around twenty minutes of firing all the guns that could hit the South we ceased fire and got out of the place as fast as we could. We must have taken the North Koreans by surprise as not one shot was fired back at us during the whole raid.

On our last patrol to the Western side and while we were up the Han River 4 crew members disembarked from the Hawea and made their way over several days to the NZ Front Lines close to hill 377.

I was one of those and we spent around a week travelling around the peninsular while we were going up to 133 Battery of the NZ 16<sup>th</sup> Field Regiment and then later back to Busan.

While we were with 133 Battery I managed to hitch a ride on a Jeep to the Observation Post situated near the top of Hill 377.

As we drove across the Rice Fields we could see soldiers from the other side about a 1000 metres away, they went out of view as we drove up the hill.

Soon after arriving at the OP we were subject to a mortar attack and I jumped in a foxhole that was occupied by a young Korea boy, Soon after another round came in and a piece of shrapnel went passed my ear and went into the side of the Hole, I then dug it out and I still have that piece in my collection.

It was very cold there and the ground was frozen and I was thankful that I was serving in the Navy and could keep warm within the ship.

When we left 133 battery we made our way back to Seoul and then on the train down to Pusan where we hitch a ride with the Australian Air Force to get back to our ship which was by this time in Kure, Japan.

Soon after flying back to Japan the Hawea left for New Zealand and my war was over at least for the time being. I still had several months to go to my 19<sup>th</sup> birthday.

I was to go back to Korea on the HMNZS Kaniere in 1955 for a period but by then it was Cease Fire between the sides. I have returned to Korea some five times as a Veteran of the War. Twice in 1999 with one of those with my wife, and once in 2005 and again with my wife in 2010 and on my own in 2013.

In 2009 I was elected the National President of the New Zealand Korea Veterans Association and in 2013 I was elected to be the 1<sup>st</sup> Vice President of the IFKWVA

Jim Newman

8/7/13

## Photo exhibition

The Korean War has long been called the forgotten War, Let me assure you all that the 6000 odd Soldiers and sailors that went to Korea will never forget it.

The war was all too real for those who went north to Korea, some were as young as 16 or 17.

The photos you are to see in this exhibition will show to you the intensity the danger and the huge cost in human lives that the war made on those who served in Korea.

People will say the war in Korea was no better or worse than any other war.

Let me be very clear, no war is nice, good men die in battle and others are hurt, some will be invalid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Korea was not a nice war and it took a terrible toll on those who were there.

The Veterans of that War in Korea knew that they had to stop the North Koreans from rolling down over the Southern part of the isthmus and if they had not contained them who knows just where the North would have stopped. It would have been naïve to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have stopped at Busan.

We have to thank the United Nations who made it a conflict that had to be contained on Korean soil.

What other outcome could there possibly be. It would be a hard fought war and the fact that the North rolled back the United Nations Troops to the 38th parallel indicates that it was a hard fought series of battles that took many lives of good men.

These Photographs show in great detail the graphic images of what war did to the landscape of Korea and the personnel who were there, it was cold in the winter and hot in the summer, it was no place to feel at safe or comfortable.

I would like to see every person who views this exhibition express their opinion about war in general and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No war is nice and the only good thing that comes from being there is the camaraderie and lifelong friendships one makes from being there.

I would like to thank those who have gone to great lengths to arrange this exhibition and I sincerely hope that many people will come and see what the forgotten war was about and remember just what toll it took on the people who fought there.

24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의의와 나라사랑: PEACE FOREVER



좌로부터 성기중 나라사랑이사장, Jim Newman 뉴질랜드한국전 참전용사회회장과 임원들



메 모

메 모

메 모

제3주제 : 한국전쟁에서 UN 참전군의 의미와 각국 참전용사회의 활동

## 한국전쟁에서 UN 참전군의 의미와 각국 참전용사회의 활동

"The meaning of the U. N. Forces' Entry into the Korean War, and  
Activities of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성기중((사)나라사랑연구회 이사장, 경일대학교 교수)

Seong, Khee-Joong(Chief Director of Nara-Sarang Research Association, Professor of Kyungil Univ.)

### 1. 시작하며

올 해는 6.25 한국전쟁이 정전되고 60주년이 되는 해다. 정전 60년을 돌아보며 한국전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한국 전쟁에 참전한 21개국 참전 용사회와 그 가족 후손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다.

해외 참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영원한 혈맹이고, 우리의 중요한 해외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6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으로 참전용사들 1세대의 생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참전용사들의 연령대가 높다보니 얼마 있지 않아 한국전쟁의 증언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세대들에게 한국전쟁은 정말 잊혀진 전쟁이 된다. 전쟁의 교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의 비극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우리에게 있어 6.25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인식할 때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반드시 되새겨 보도록 해야 한다.

한국전쟁은 분명히 우리의 전쟁이었음에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족 간 관계상실과 국가적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에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오늘까지 왔다.

60년이란 시간이 흘러 경제적 성장도 일구었고 대외적인 인식도도 높아졌다. 이러한 발전의 밑거름에는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의 현재는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참전 국가들의 도움을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도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 용사회와 관계를 맺으며<sup>1)</sup>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1) 이번 행사는 2004년 뉴질랜드 와이카토대학 객원교수로 1년간 지내면서 현지 교민단체와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

되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몇 가지 행사로 보답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세대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모두 끝난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참전용사의 후손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나라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4년 처음으로 참전용사들과 만난 그 당시 50여 년 전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뉴질랜드 각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어 수 십 년을 정기적으로 친교와 전우애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 그것은 감동 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지우지 못하는 전쟁의 아픔들을 그들을 보면서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추억이자 스트레스는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였다는 것도 그들과의 대화에서 읽을 수 있었다.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친구가 죽고, 동년배의 적을 사살하고 때론 사지를 넘어오는 공포의 그 잔상들이 지금까지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용맹스러움을 넘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다고 느꼈다.<sup>2)</sup>

그들이 진정 바랐던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와 세계평화였다. 그때 그분들의 바람이 세계평화와 자유였기 때문에 저 또한 **Peace Forever**을 이루는 것이 이분들의 꿈을 이뤄드리는 것이고, 이 꿈은 바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나라사랑 연구회의 꿈이다. **We love Korea, We love World**가 나라사랑 연구회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출발은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 우리의 제2의 교민이라 생각하고, 영원한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을 각오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 못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목숨으로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엔 21개국은 형제국들의 재발견이라 생각한다. 잊지 말고 감사하고, 동맹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잊지 말고 함께 평화를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

우리 나라사랑연구회에서 여러 차례 그들과의 교류에서 필요한 행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들을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 예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전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시회 계획이 있고(2010년도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2차례 전시회를 가졌다),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 사진, 전우와의 사연, 그 당시 에피소드 등을 문집으로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유엔군의 참전의미와 21개국 참전용사회 활동 중 대표 몇 사례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유엔군의 참전의미에 대한 자료는 한국전 60주년 사업회와 국가보훈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의 활동을 보고 관심을 가지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회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바 있다. 일본의 코무덤을 처음 보았을 때 망치로 머리를 치는 전율을 느꼈고, 뉴질랜드에서 참전국에서 왔다고 반갑다고 손 내밀 때 가슴이 떠거워짐을 느꼈다.

2) 일부는 그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극복을 하고 있음.

## 2. 한국전쟁과 유엔군의 참전

### (1) 전쟁의 원인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있기까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3년 1개월 2일간 지속됐다. 당시 우리 청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유엔군 참전 용사들중 대부분은 사실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자유와 평화가 갈급한 상황 하나만을 보고 미국을 비롯한 21개국의 연인원 194만498명 참전용사들이 참가했다. 이들 가운데는 안타깝게 44,786명이 전사, 실종 하였다.<sup>3)</sup>

한국전쟁은 성격이나 원인으로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하기도 한다.<sup>4)</sup> 6·25 한국전쟁을 원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 내부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국제전적 내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결과 면에서 본다면 ‘국내적으로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란’으로 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도 본다.

이제 전쟁의 배후였던 소련은 붕괴되고, 중국과는 수교를 맺어 년 2,000억불 이상의 제1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냉전으로 통칭되던 국제 사회의 갈등 또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정전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한국전쟁 당시 보다 더 많은 군비가 남북 간 서로를 향하여 대치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아직 정전상태 즉 전쟁이 멈춰있는 상태이지, 결코 전쟁의 끝이 아니다.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이 세상을 모두 떠나게 되면 젊은 세대는 한국전쟁의 참전 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기 쉽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도록 온 국민이 나라사랑 마음으로 다짐해야 한다.

### (2) 유엔군의 참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북한의 공격 사격과 더불어 T-34 전차를 앞세우고 기습공격을 개시하자 유엔은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26일 04:00(현지시간 25일 14:00)에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제안을 영국이 약간 수정한 '공산 침략행위 정지요청에 관한 결의문'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0표, 기

3) 부상 104,280, 포로 5815명. <http://www.koreanwar60.go.kr/20/2002000000.asp>

4) 수정주의적 해석도 있지만 정통설로는 소련, 중국, 북한의 아시아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남침설. 이는 모택동의 중국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소, 중국, 북한 간의 삼각동맹의 형성을 기반으로 분석한 논리이며 1992년부터 구소련의 문서자료(archives)가 공개 되면서 명백해졌다.(1994년 러시아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국전 관련 자료 전달).

권 1표로 가결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북한당국에게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시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유엔한국위원단으로부터 북한당국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여 줄 것을 유엔에 호소하였음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회원국에게 권고하는 바이다."<sup>5)</sup>

이 결의문의 초점은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유엔회원국들이 지원하는 것이었다. 2차에 걸친 유엔의 결의는, 유엔이 창설된 이후 국제평화의 파괴행위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 안전보장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을 제외한 유엔회원국 중 유엔 결의에 따라 제일 먼저 군사지원을 약속한 나라는 영연방 국가들이었다. 영국은 해군 기동부대의 파견을 통보해 왔고, 오스트레일리아가 해군과 공군의 파견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구축함 지원을 약속했다. 영국·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서 근본적으로 소련의 유럽 지배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미국의 확고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인접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캐나다는 초기부터 북한 남침의 배후에는 소련의 팽창욕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엔의 공동노력으로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해 두고자 참전을 결정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중국의 공산화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팽창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은 미래에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 팽창을 막는 유력한 예방책이라고 판단했다.

터키와 그리스는 다다넬스 해협과 발칸반도에서 소련과 그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호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두 나라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는 유엔의 집단행동에 동참함으로써 강한 결속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했고, 훗날 자신들의 나라에 좀 더 많은 미국의 군사원조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필리핀과 태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호주와 뉴질랜드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의 공산세력이 팽창하고,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 활동이 급증하는 것이 이들 나라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는 유엔의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참전했다.

참전한 유엔 회원국들은 대부분 그들 국가 주변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위협에 불안함을

5) 유엔군 즉각 참전 결의문 (1950.6.28) 중에서

느끼고 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한국 침략의 미래에 있을지 모를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이나 전복활동의 한 시발점으로 보았다.6)

유엔 회원국들의 군사행동에 통일성과 집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7월 7일 '유엔군사령부의 설치'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지휘하는 통합군사령부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은 주미 유엔대사를 통해 유엔기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은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장군을 임명하였다.

제8군사령부는 도쿄에서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소하였고, 이때부터 제8군은 미 지상군은 물론 6.25전쟁에 참전하는 유엔 지상군부대들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7월 24일 유엔군사령부(UNC : United Nations Command)를 설치하였다.

**\* 전투병력 파견국-16개국**

**전투병력 파견국**

	국명	참전면인원 (명)	지상군	해군	공군
	미국	1,789,000	보병사단 8 해병사단 1 연대전투단 2 병력 302,483명	극동해군 미 제7함대	극동공군
	영국	56,000	보병여단 2 해병특공대 1 병력 14,198명	함정 17척 (항공모함 1척포함)	-
	오스트레일리아	8,407	보병대대 2 병력 2,282명	항공모함 1척 구축함 2척 프리깃함 1척	전투비행대대 1 수송기편대 1
	캐나다	25,687	보병여단 1 병력 6,614명	구축함 3척	수송기편대 1
	네덜란드	5,322	보병대대 1 병력 819명	구축함 1척	-
	뉴질랜드	3,794	보병대대 1 병력 1,389명	프리깃함 1척	-
	프랑스	3,421	보병대대 1 병력 1,119명 (1,185)	구축함 1척	-
	터키	14,936	보병여단 1 병력 5,455명	-	-
	필리핀	7,420	보병대대 1 병력 1,496명	-	-
	태국	6,326	보병대대 1 병력 1,294명 (2,274)	프리깃함 7척 수송선 1척	수송기편대 1
	그리스	4,992	보병대대 1 병력 1,263명	-	수송기편대 1
	남아프리카 공화국	826	-	-	전투비행대대
	에티오피아	3,518	보병대대 1 병력 1,271명	-	-
	콜롬비아	5,100	보병대대 1 병력 1,068명	프리깃함 1척	-
	벨기에	3,498	보병대대 1 병력 900명	-	-
	룩셈부르크	83	보병소대 1 병력 44명 (48)	-	-

출처: <http://mpva.tistory.com/1128>(검색일자: 2013.3.21.)

6) <http://www.koreanwar60.go.kr/20/2003000000.asp>

\* 의료지원 5국과 피해현황

의료지원국

	국명	참전연인원(명)	근무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스웨덴	160	154(162)	적십자병원
	인도	627	70(333)	제600전병원
	덴마크	630	100	병원선
	노르웨이	623	105(109)	이동외과병원
	이탈리아	128	72	제68적십자병원

피해 현황

구분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총계	178,569	555,022	28,611	14,158	776,360
한국	137,899	450,742	24,495	8,343	621,479
미국	36,940	92,134	3,737	4,439	137,250
영국	1,078	2,674	179	977	4,908
오스트레일리아	339	1,216	3	26	1,584
네덜란드	120	645	-	3	768
캐나다	312	1,212	1	32	1,557
뉴질랜드	23	79	1	-	103
프랑스	262	1,008	7	12	1,289
필리핀	112	229	16	41	398
터키	741	2,068	163	244	3,216
태국	129	1,139	5	-	1,273
그리스	192	543	-	3	738
남아프리카 공화국	34	-	-	9	43
벨기에	99	336	4	1	440
룩셈부르크	2	13	-	-	15
콜롬비아	163	448	-	28	639
에티오피아	121	536	-	-	657
노르웨이	3	-	-	-	3

출처: <http://mpva.tistory.com/1128>(검색일자: 2013.3.21.)

\* 물자지원국 현황

<자료참조: <http://www.koreanwar60.go.kr>>



물자 및 재정지원은 최초 개전 직후부터 1952년 5월까지 한국민간구제단(CRIK)을 통해서 라이베리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바티칸, 베네수엘라 등 19개국이 지원을 하였다. 1953년 12월까지 유엔한국재건단(UNKRA)을 통해서는 과테말라, 자유중국 등 13개국이 지원하였다.

그리고 1956년 6월까지 추가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전후복구를 지원하였다. 기타 유엔 긴급구제계획(EERP)에 의거 1958년 6월 30일까지 서독 등 3개국이 물자를 지원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전 직후부터 전후 복구기간까지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과테말라, 대만 등 19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원한 것을 추가 확인함으로써 당시 독립국가 93개국 중 63개국(68%)이 대한민국을 지지하거나 지원한 사실을 밝혔다.



전쟁 지원국에는 지원의사를 표명한 3개국(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도 포함된다. 니카라과는 쌀과 주정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수송문제로 인해 지원이 제한되었고, 볼리비아는 구호전문장교 30명의 파견을 제의하였으나 유엔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브라질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270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1958년까지 국내문제로 지원하지 못했다.

물자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194만 여명의 해외 참전용사와 현재가치로 4조 5900억원에 해당하는 물적 원조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sup>7)</sup>

국방부는 2012년 5월 10일 6·25전쟁 당시 지원국이 모두 63개국이라고 공식 확정했다. 직접 참전한 16개국 외에도 노르웨이 등 의료진을 파견한 5개국, 물자를 지원한 39개국 등이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당시 세계 독립국 93개국 중 64.5%가 대한민국을 지원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 세계 6·25 참전용사 중 53만여 명이 현재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2011기준)

참전국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편성됨에 따라 구호와 재건지원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전쟁기간 구호원조 총액이 1953년 기준으로 4억 7190만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한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9억 8856만 달러(약 4조 5900억원)에 해당한다.

7)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았다.(국방부, 2012년 5월 자료참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22006009> (서울신문: 2012.06.22).

### (3) 유엔군 참전의 의미

유엔의 지원결의에 따라 유엔 21개국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기를 앞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들은 미군의 작전통제 하에 낙동강과 압록강을 오르내리면서 전쟁을 주도했으며 이들의 참전활동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sup>8)</sup>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유엔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사상 최초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집단안전 보장 원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됐다. 당시 참전국은 총 21개국이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5개 국가가 의료지원단을 보내왔다. 그리고 40여 개국은 물자를 지원했다.

이들의 참전의의는 회원국들의 파견한 병력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평화의 파괴자”에 맞서 국제기구의 집단적 행동으로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세계대전의 포성이 멎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와 자유의 위협에 대해 세계는 “유엔현장에 입각해 이를 집단행동으로 막아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유엔군은 한반도의 남단 일각마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참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망의 기로에 선 한국을 기사회생시키고, 나아가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유엔의 지원 결의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결속됐다. 이러한 사실은 그 후 전 세계 자유민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데 좋은 교훈이 됐다. 이로써 동서 냉전체제는 6·25전쟁을 계기로 더욱 고착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 땅에서 피를 흘리며 자유를 수호했다. 각국 전몰장병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이들이 남긴 수많은 전공과 그 속에 솔한 교훈은 우리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이다.<sup>9)</sup>

## 4. 각국 참전용사회의 활동

### (1) 뉴질랜드 활동 (별도 PPT 자료)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은 수 십년 동안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임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매년 7월이 되면 어김없이 휴전 기념식에 참석할 뿐 아니라 교민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며 옛날 기억을 더듬어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거의

8) <http://www.koreanwar60.go.kr/20/2004000000.asp>

9) <http://www.koreanwar60.go.kr/20/2004000000.asp>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며 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한국전 사진전시회 할 때 감격해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있었다. 아직도 지명을 외우고 그 당시 지역을 더듬어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위로 음악회도 몇 차례 개최하였는데 그때도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2) 참전 용사회와 교민단체의 협력

참전 21개 국가에서 각 참전 용사회가 한국 교민회와 가지는 돈독한 우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러한 관계는 친선을 넘어 혈맹의 관계답게 각별한 관계임이 틀림없다. 민간 관계 같은 성격을 띠면서 국가적인 깊은 우호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그 가족과 후손을 통해 다시 연결되고 그들을 통해서 국가 간 좋은 관계로 발전하리라 본다.

일부 참전국가 용사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온 사례들도 늘고 있다. 그들의 유학은 단순 유학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참전한 의미 있는 나라라는 끈끈한 관계형성에서 우리의 동맹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 5. 마무리

(1) 유엔군 참전의 의미는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이 유엔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사상 최초의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원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됐다.

세계의 정치적 정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한국전쟁을 위해 유엔군이 집단안전보장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파병이 되었다는 것은 세계평화의 요지로서 한국이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거대한 세계의 흐름이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 참전 21개 국가에서 한국 교민과의 돈독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참전 용사회 후손들과의 교류가 계속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 각 개인이나 민간단체, 또한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바로 그들로부터 믿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는 글로벌 시대 우리가 가져야하는 국가 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본다. 일개인의 관계들이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가 그 후손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 커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계가 하나로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걸음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이다.

### (3) 대한민국 해외 인적자산

우리나라 해외인적자산의 제1은 재외교포 700만명이나, 그 다음 인적자산은 참전 용사와 그 가족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청년기 목숨을 바쳐 한국전에 투입되어 생사를 넘었고, 이들

은 아직도 한국을 잊지 않고 있다.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군은 해외에서 대부분 친한파로 스스로 제2의 조국이라 하고 있다.

(4)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이러한 참전용사 이야기의 사실을 전해줄 의무가 있다. 지역 참전 용사 인터뷰와 참전 용사가 보유한 한국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등을 통해 한국전에 관한 기록 보전을 돕고 참전 용사들에 대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한국전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등을 알리는 일과 참전관련이나 격전지 지도 등을 만들어 살아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4대강에 자전거 길 만들 듯 이제는 격전지도 둘러볼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해야 한다.)

(5) 향후 대책으로 정전 60주년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 참전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쟁의 비극, 참혹상에 대한 자료를 남겨주는 한편, 그들의 마음 한구석의 응어리를 Peace Forever 운동으로 풀어주며 특정국가에 국한 되지 말고, 세계가 하나로 기대하는 Peace Forever가 되기 바란다. 정전 60주년을 돌아보며 한국전쟁은 아직 60년간 멈춰있다. 잊지 말자, 기억하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Peace Forever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다.

이는 또한 전 세계의 염원이기도하며 특히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바램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하나 되기를 바란다.

메 모

메 모

제4주제 : 한국전쟁 참여 프랑스군의 활약과 그 역사적 의의

I. Interview avec Colonel JOUIN  
(쥬앵 대령과의 인터뷰)

Eric Jouin(A Military Attache of French Ambassador in Korea)

Dr. Jang, Gye-Hyun

Je vous remercie, **Colonel JOUIN**, d'être interviewé. En tant que combattant français participé à la guerre de Corée, il y aura des choses que vous vous sentez différemment des autres. Tout en croyant qu'il est nécessaire de maintenir la paix internationale, tous les membres de **BF(프랑스 대대, Bataillon Français)** ont-ils consacré volontairement leur vies à la protection de Corée contre la force qui violait la paix. Je vous prie pour le repos de l'âme des morts pendant la guerre de Corée.

**쥬앵 대령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 군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는 반드시 유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프랑스 대대원 들은 모두 평화를 깨뜨린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6.25 전쟁 동안 산화하신 모든 영령들께 명복을 빕니다.

1) On sait que le BF **ONU(유엔,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a joué le rôle très important de repousser l'ennemi à la guerre de Corée. Dites-moi un peu plus précisément la situation de ce qui est arrivée.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소속 프랑스군은 적을 물리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Le BF ONU a pris part à la totalité des combats de la guerre de Corée aux côtés des forces des Nations Unies. Arrivé sur la péninsule en novembre 1950, il y est resté jusqu'en 1965.

유엔군 소속의 프랑스 군은 6.25 전쟁의 모든 전선에 참여하였습니다. 프랑스 군은 당시 1950년 11월에 한반도에 투입되어 1965년까지 머물렀습니다.

Intégré au sein de la 2<sup>e</sup> DI US, le BF ONU s'est particulièrement illustré lors des combats de Wonju, Chipyongri et Crèvecoeur par sa bravoure, sa ténacité et son esprit guerrier. Il a été récompensé de plusieurs médailles et citations américaines et coréennes.

프랑스 군은 미국 2사단에 편입되어 원주, 지평리, 단장 능선 전투에서 그 용맹함과 끈기와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이러한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훈장과 표창이 수여 되었습니다.

2) Est-ce que vous pourriez présenter l'Association des anciens combattants français participés à la guerre de Corée?

6.25 전쟁에 참여한 프랑스 용사회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Il reste aujourd'hui une trentaine de survivants français du BF ONU, avec une poignée de vétérans coréens. L'association française est présidée par M. Patrick BEAUDOUIN, maire de Saint Mandé (près de Paris). Cette association regroupe également des vétérans des guerres d'Indochine et d'Algérie, où le BF ONU a été engagé après son départ de Corée.

현재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여했던 프랑스군은 약 30명 정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군도 소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용사회는 파트릭 보두앵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두앵 씨는 생 망데(파리 근교)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랑스 용사회는 6.25 전쟁 이후에 벌어졌던 인도차이나 전쟁<sup>1</sup>과 알제리 전쟁<sup>2</sup>에 참여한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Comment trouvez-vous la différence entre la Corée d'alors et celle d'aujourd'hui?

6.25 전쟁에 참여한 군인으로서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 간에 차이가 있나요?

Ils sont tous très stupéfaits de la modernisation de la Corée et de ce qu'ils ont permis grâce à leur action. Ils sont également à chaque fois très touchés par les marques de reconnaissance que le peuple coréen leur témoigne à chacun de leur voyage ici.

프랑스 용사들은 한국의 달라진 현대화된 모습에 모두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용사들의 희생이 이러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

실에 매우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프랑스에 관광하러 오는 한국인들이 매번 감사의 말을 전할 때마다 감동을 받곤 합니다.

4) Pour autant que je sache, les anciens combattants français établissent des liens d'amitié avec la communauté Coréenne en France. Comment trouvez-vous des liens?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용사들과 프랑스 내 한국 단체는 돈돈한 우정의 관계를 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Organisés par l'ambassade de Corée à Paris à chaque fois que possible, ils permettent de maintenir, à Paris, le lien puissant qui unit nos vétérans à la Corée.

파리에 있는 주불 한국 대사관 주최로 프랑스 용사들과 한국 간에 가능한 자주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프랑스가 식민지이던 인도차이나 3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을 다시 한 번 지배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1946~1954).

2. 1954년부터 8년간에 걸쳐 프랑스와 벌인 알제리의 독립전쟁.

## II. 한국전쟁 중 유엔군-프랑스 보병 대대의 활약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는 유엔군 사령부 설치안을 영국과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르네 뵈레방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내각은 1950년 7월 22일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서 참전을 결정함으로써 프랑스의 국내정치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원병 형식의 1개 대대를 모집하여 그 해 11월 29일 부산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대구에서 미국식 장비와 보급품으로 새롭게 무장한 프랑스 대대는 1950년 12월 11일 미 제 2사단 제 23 연대에 배속되어 1951년 1월과 2월 사이에 원주 쌍터널 전투 및 지평리 전투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렀다. 또한 프랑스군 대대는 1951년 4월부터 미 제 2사단과 함께 화천 저수지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화살머리고지 전투와 같은 고지 쟁탈전에 참여했다. 이러한 격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프랑스군대대는 백병전 및 정찰작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작전 중에는 특유의 감투 정신을 발휘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지원병들로 구성된 프랑스군은 한반도에서 아주 험난한 중동부 전선에서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숫자의 열세를 용기로 만회하며 방어진지를 방어하는 전공을 세웠다.

프랑스는 한국전쟁 기간 중 3차에 걸쳐 3개 대대 총 3천 5백명의 병력을 한국에 파병하였고, 이 기간에 전사 262명, 부상 1,800명, 실종 7명 등 총 1289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휴전이 성립된 후 프랑스군은 1953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소규모 인원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였다.

## 1. 대표적인 전투들 소개

### (1) 원주/문막 전투(1951.1.5-1.26)

원주/문막 전투는 프랑스군 대대가 한국전선에서 치른 최초의 전투이다. 원주/문막 전투는 12월 31일부터 시작된 중공군과 인민군의 공격에 대하여 중부전선의 춘천 정면을 방어하던 한국군 제 3군단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발생한 전투와 원주를 적에게 빼앗긴 후 이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작전 활동이다.

원주에서 한국군 제 3 군단 철수 엄호작전을 수행하는 미 제 2사단에 대한 인민군 4개 사단과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은 1월 7일 22:00에 시작되어 일대 격전이 전개되었다.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야간 공격을 가하는 적군에 대하여 미 제 2 사단은 사단이 보유한 제 37 야전포병대대의 집중 포격과 더불어 야간에 출격한 공군 폭격기의 폭격으로 방어선을 사수하였지만,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로 인하여 1월 8일 00:00시에 원주 남쪽 5Km의 고지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프랑스 대대는 미 제 23연대와 함께 원주에서 철수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공병 특수폭과조를 편성하여 원주천 철교를 폭과함으로써 작전에 대한 책임감의 분보기가 되었다.

프랑스군 대대는 첫 전투인 원주의 엄호철수전투에서 험준한 지형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였던 영하 30도를 넘는 혹한과 야간전투라는 난제를 잘 극복하였다.

### (2) 원주 쌍터널 전투(1951.1.31-2.2)

원주 서북방 25km의 원주-양평 간 중앙선 철로상의 쌍터널 부근에서 있었던 쌍터널 전투는 프랑스 대대가 중공군 제 125사단과 치른 전투로서 프랑스군 작전의 우수함이 돋보였던 전투였다. 미 제 2 사단이 원주를 재탈환한 후 미 제 10군단은 미 제 2사단에게 “경기도 양평의 지평리 남쪽 약 8km 지점의 쌍터널 지역으로 북진하라는 공격명령을 내렸고, 명령에 따라서 전진하던 미 제 23연대 제 2 대대 정찰대가 쌍터널 부근에서 인민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포위당하였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제 23연대 제 3 대대와 프랑스 대대가 1월 31일 저녁 지평리 도로 서쪽 쌍터널 전방으로 진출했다.

2월 1일 새벽 04:50부터 중공군 제 125사단 예하 제 374연대 소속의 중공군이 프랑스군과 미군부대가 구축한 사주방어진지를 공격해왔다. 프랑스군은 포복으로 대대지휘소 전방까지 침투해온 중공군을 향하여 사격을 가하고, 후방 3km에 위치한 미군 포병들도 계속적으

로 화력을 지원하였으며, 프랑스 군 대대와 미군 제3 대대는 위생병과 통신병까지 동원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긴급 보급품을 제공해 주었다. 적군은 프랑스 대대가 점령한 진지 정면에 전면적인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고, 프랑스군은 보급품이 다 떨어지자 화력 지원과 함께 낙하산에 의한 보급을 미 제 2사단에 요청하였으며, 1시간 후 6대의 수송기가 보급품을 공중에서 투하하였다. 프랑스군은 재차 공격해 오는 중공군에게 사격을 퍼부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격렬한 전투를 계속하였다. 살아남은 장교가 단 1명에 불과할 만큼 치열한 작전이 벌어졌지만, 프랑스 대대는 마침내 고지 정상을 지켜냈다. 그러자 전력을 완전히 소모한 중공군은 더 이상의 돌격을 멈추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 (3) 지평리 전투(1951.2.13-2.15)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속된 중공군의 2월 공세 시 미 제 2사단 제 23 연대와 이 연대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는 중동부 전선의 요충지인 지평리(양평 동쪽 12km)에서 중공군 제 39군 예하 3개 사단에 의해 완전 포위되는 위기에 빠졌으나, 제 23 연대의 전 장병이 3일에 걸친 근접전투와 백병전으로 적군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한 전투로서 유엔군이 중공군 참전 이후 공세작전에서 첫 승리한 전투이기도 하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중공군을 38도선 북방으로 밀어내는 재반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월 13일 저녁 적군은 지평리 서쪽 고지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 대대의 전초 기지 앞까지 공격을 가하여 왔고, 다음 날인 2월 14일 02:00에 중공군은 나팔과 피리를 불면서 다시 돌격해 왔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군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수동 사이렌을 울리면서 수류탄으로 치열하게 반격했다. 하지만 수의 압도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공군이 진지 내로 침투하여 근접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때 프랑스군은 모두 철모를 버리고 머리에 빨간 수건을 동여맨 총검과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웠다. 이처럼 용맹스러운 프랑스군의 반격과 매 5분 간격의 조명탄 사격으로 중공군은 퇴각을 시작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일제히 박격포 세례가 쏟아졌다. 천지가 포연에 휩싸이고 시체가 산처럼 사이는 지옥이었다. 2월 16일 아침이 밝으면서 더 이상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중공군도 전력이 고갈되어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해 사라졌다. 이로써 중공군 2개 사단의 공격에 맞선 지평리 전투는 유엔군이 저지선을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 (4) 단장의 능선 전투 (1951.9.13-10.13)

단장의 능선 전투는 미 제 2 사단과 프랑스 대대가 양구 북방 22km 지점에 ‘단장의 능선’에 배치된 인민군 제 6, 12 사단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단장의 능선(931고지) 전투는 9월 15일 제 23연대 주도로 시작됐다. 이 연대의 3개 대대는 4 차례에 걸쳐 이 능선의 정상을 빼앗고 빼앗기는 격전을 벌였고, 프랑스 대대는 9월 26일부터 제 1 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931고지 북방 1km로 이동하였다. 이날 오후 프랑스

대대의 3 중대는 무반동총, 기관포, 박격포의 지원을 받아 돌격을 감행하여 100 명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훌륭한 공격작전을 보여주었고, 이와 같은 공격은 2주일이나 계속되었다. 프랑스 대대 제 2 중대는 10월 6일 정오에 드디어 931 고지인 단장의 능선을 점령했다. 그 이튿날부터 인민군에게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 능선의 비탈길을 소탕하면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 전투에서 미 제 2 사단과 프랑스 대대는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많은 사상자를 냈으나 30만발에 달하는 포병 사격지원과 공군기의 근접 항공지원을 받아가며 1개월 동안에 걸친 끈질긴 공격 끝에 북한군을 격퇴하고 단장의 능선을 확보하였고, 이 전투가 끝난 9일 후 휴전 회담이 재개되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간 이 고지는 ‘단장(斷腸 :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나 괴로움)의 능선’이라는 애절한 이름으로 불렸다.

\* 이 글은 <한국전쟁 중 유엔군-프랑스 보병대대의 작전>, 이명환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글에서 인용됨.

메 모

메 모

제5주제 : 경찰의 낙동강 방어 전투실상 증언

韓國戰爭 洛東江戰鬥와 大邱死守戰鬥에서 警察의 役割  
- 參戰勇士의 證言 -



성명; 海庵 손진한(孫鎭漢) 생년월일; 1933년 11월 25일생  
학도의용군 입대; 1950년 8월 8일  
경찰임용; 1951년 1월 11일  
경찰퇴임; 1999년 12월 30일(경정, 43년간 봉직)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824번지  
팔공3차 보성타운 307동 606호  
경력; 大邱東區 參戰警察國家有功者會 會長  
大韓民國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諮問委員  
大邱廣域市 參戰警察 國家有功者會 中央會 代議員

學歷 및 經歷

1. 學歷

大邱永信中高等學校 卒業  
서울 檀國大學校 법학과 졸업(학사)  
嶺南大學校 經營大學院 卒業(석사)  
日本 大판전기공업학교 電氣火災鑑識教育 研修  
美國 인디애나주 먼시 볼스트리트 대학원 연수  
경찰전문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수료

2. 經歷

1950년 8월 6일 學徒義勇隊 自進 志願 洛東江戰鬥 參戰  
1951년 1월 11日 任 巡警 靑松警察署 遊警隊勤務中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출 제2연대  
제2중대근무 경북전출 대구경찰서, 경북경찰국, 경남 양산, 김해경찰서, 남대구경  
찰서, 경북지방경찰청 으로부터 43년간 在職타가 警正으로 停年退職  
大韓民國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大統領 諮問委員 委囑  
대구동부 재향경우회 회장  
대구동구 참전경찰 국가 유공자 회장  
대구광역시 육해공군 합동 六二五參戰 국가유공자회 상임부회장

대한민국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中央會 代議員  
대구광역시 在鄉警友會 理事  
대구광역시 참전경찰 국가 유공자회 이사  
國際로타리 3700地區 大邱東信 로타리 클럽 副會長現元老會員  
嶺南大學校 大學院 44期 동기회 회장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密陽孫氏 中央宗親會 부회장  
密陽孫氏 遯巖公波 宗親會 會長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東新代理店 점주

### 3. 賞勳關係

六二五事變 中軍기장  
李承晩 大統領 개인별수장  
화랑무공훈장  
근정표창  
大韓民國忠誠章  
공비도별기장  
內務部長官 表彰 외 60회 表彰受領

## 1. 學徒義勇軍과 警察에의 入門

本人은 大邱永信中學院 3學年在學 當時 滿18歲 일때인 1950年 6月25日 六二五事變이 發生하여 慶北義城郡 佳音面 陽地洞 故鄉으로 가서 永川 新寧 河川 부지에서 父母님과 避難도중 學徒義勇軍에 志願 入隊하여 慶山 慈仁初等學校에서 一週日간 MI小銃 射擊 教育을 받고 漆谷郡所在 初等學校에서 各處에서 集結된 學徒義勇隊 및 義勇警察隊約 200名이 美第1기갑사단에 編入되어, 1950年 8月15日 洛東江(왜관) 鐵橋를 미군 측에서 爆破하여 敵의 渡河를 阻止하면서, 왜관교 제방뚝을 起點으로 人民軍 15師團의 支援를 받은 敵40여단 戰車100여대를 先두로 맹공격을 감행하였으나 美軍 측에서 8月16日 B29폭격기 99대가 出격하여, 왜관교에서 약목방향을 중심으로 敵의 진지에 폭격을 하여 아군의 역습과 追擊作戰으로 적사살 및 생포를 하는등 당시 낙동간 왜관전투에 參전한 경찰관111名이 戰死하고 학도의용군 수 십 명이 戰死 또는 負傷을 당한 것을 보았다.



學徒義勇軍6·25戰跡碑  
所在：浦項 포항여고앞 建立：1977年



구국전선에 지원하는 학생들  
가족·친지의 환송을 받으며 열차에 오르고 있다.



교모를 쓰고 무장을 갖춘 학생들  
구국충정에 불타고 있다.



교복을 입은채로 국군과 나란히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 2. 洛東江과 大邱死守戰鬪

(1) 洛東江을 기점으로 交戰中 8月21日 한밤중에 大邱 중심지에 적의 박격포탄 3발이 떨어졌고, 8月 23日에는 大邱驛前을 중심으로 박격포탄 5발이 떨어지는 등 전세가 급迫해짐으로서 美第8軍 司令官인 위커 중장 과 大邱에 避難은 李承晩大統領과 申性模 國防部長官이 釜山으로 移動하였다.

(2) 當時內務部長官 趙炳玉 大邱死守 總責任者인 崔致煥總警

大邱 잔류 憲兵 文宗郁大尉 美陸軍 크로우 중령 등이 주축이 되어, 8月24日 漆谷郡 가산 902高地에서 作戰中인 國軍第8師團 第10聯隊가 戰鬪警察隊와 合同하여 洛東江戰鬪에서 분산된 敵1개 大隊가 大邱 서쪽 칠곡군 지천면 칠전리에 侵入을 하고, 洛東江 맹폭격으로 분산된 敵1000여명이 大邱 오봉산 북부방향으로 침공하는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로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1950年 8月 18日과 19日 어간에 人民軍 탱크 13대, 敵射殺 3078名과 포로 1,363名을 생포하는 등 戰果를 올린 바 있다.

## 3. 智異山 德遊山 共匪討伐作戰

六二五事變前後 智異山 德遊山을 중심으로 太白山地區 戰警察司令部 207部隊가 창설되어 2년 동안 共匪討伐作戰中인 1951年 1月 11日 西南地區戰鬪 警察司令部 金宗元 司令官第2聯隊 車利赫 總警 第2中隊에 편입되어 남원, 주천, 임실, 장수, 무주, 안의, 구래, 고성, 운봉, 합천 거창을 作戰地域으로 智異山, 德遊山 노고단 반야봉을 거점으로 남한 공비괴수인 李鉉相이가 주동으로 주간에는 대한민국이며 야간이 되면 인민공화국으로서 六二五事變은 3年만에 休戰이 되었지만 智異山 共匪討伐作戰은 7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作戰中 6,333名의 戰死자가 發

生하여 初代建國 李承晩 大統領께서 南原 光한루에 慰靈塔을 建立하여 오던 중 1980年대에 이르러 現 南原市 所在 智異山 벤사골에 忠魂塔이 옮겨져 2011年까지 大韓民國 中央會 六二五 參戰警察 國家有功者會에서 每年 慰靈祭를 奉行하여 오다가 2012年度부터는 南原市에서 慰靈祭를 奉行하고 있다.



1952년 5월 13일 경북경찰청 청송경찰서에 근무 당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에 함께한 전우와 남원광화루 오작교에서 촬영한 사진



1952년 3월경 제2연대 제2대대 제1중대에서 지리산 덕유산 반야봉 작전지역 적(敵) 척후병으로 작전중인 동료와 함께 촬영한 사진



1952년 11월 15일 전북 남원 주천리 덕유산 기슭에서 제2연대 제2대대 본부요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



1954년 12월 13일 지리산 최고봉에서 휴식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 4. 警察의 洛東江戰鬪와 大邱死守

1) 六二五事變 洛東江(왜관)作戰中 大韓民國 當時全國 警察이 戒嚴令下 軍에 隸屬되어 戰鬪 警察로 編成됨으로서 洛東江戰鬪當時,

- ① 治安局 및 서울 市警部隊는 李益興 이사관 指揮下에 達城警察署 및 성북지서에 주둔하면서 낙동강을 起點으로하여 창녕, 함양, 거창, 고령, 성주 等지에서 作戰을 하였고,
- ② 京畿道警察局 韓景綠 경무관은 2개 大隊兵力으로 慶山警察署에 本部를두고 와촌 淸道 지

역에서 作戰을 하였고,

- ③ 忠南警察局 심현택 경무관은 大邱 공산지서에 本部를두고 팔공산을 기점으로 침투하는 敵과 교전을 하였고,
- ④ 忠北道警察局 정태섭 경무관 部隊는 칠곡 다사지서에 本部를두고 洛東江에서 大邱로 進入하는 人民軍과 교전을 하였고,
- ⑤ 慶北道警 趙俊泳 경무관의 2개 大隊兵力은 칠곡 신동, 동명, 와룡산 지역을 중심으로 敵人民軍과 치열한 작전을 하였고,
- ⑥ 양홍식 警監 戰鬥警察大隊는 達城 비슬산 가창 우록동 방향에서 침투하는 敵과 교전을 하였고,
- ⑦ 辛相默 總警 戰鬥警察部隊는 월배지서에 주둔하면서 洛東江 外廓線을 중심으로 作戰을 하였고,
- ⑧ 江原道 警察局 尹明運 경무관 부대는 慶州警察署에 本部를 두고 國軍 第1師團에 豫속되어 安康戰鬥에 參戰하였고,
- ⑨ 김형산 警監 戰鬥警察部隊는 永川 보현산에서 인민군과 치열한 작전을 하였고,
- ⑩ 全羅南北道警察局 전신진 경무관 部隊는 美 弟 25사단 키인 小將 指揮下에 編成되어 大邱로 침투하고있는 永川市가지 戰鬥에 參戰하였고,
- ⑪ 鐵道警察部隊는 大邱에서 釜山까지 運行하고 있는 鐵道輸送警備에 當하였고,
- ⑫ 濟州道 警察局部隊는 大邱 外廓線 警備作戰에 參戰하였다.

2) 洛東江 戰鬥當時 國軍第2軍團長 琴在弘 小將지휘하에 慶尙南北道 戰鬥 警察部隊는 2개 大隊로 編成되어 충청남도 경찰국 병력 1개 대대와 합동하여 천평, 동명 등지에 거점 배치되어 大邱로 侵入하는 적과 교전을 하였다.

3) 國軍第2軍團에 配屬된 京畿道警察局 제5독립 戰鬥大隊長 金億淳 警監은 팔공산 동쪽 산악지대에서 人民軍과 交戰하여, 敵 軍醫官 중위 1名. 소위 1名. 人民義勇軍 소위 2名, 경찰병 1名, 義勇軍 9名을 射殺하였다.

4) 9月 5日 敵의 공세가 洛東江에서 大邱西便方向 大邱市內로 侵攻함으로서 戰鬥警察部隊와 치열한 作戰을 하였다.

5) 1950年 9月 7日과 9日에는 安康에서 永川 서쪽으로 침투하는 人民軍과 치열한 軍과 合同作戰을 하였으나, 永川市內에 人民軍이 침공함으로서, 美8軍司令官이 大邱死守를 위하여 大邱防禦司令官으로 趙俊泳 警務官과 江原道 警察部隊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영천 경찰부대를 戰鬥警察部隊로 編成하여 國軍과 合同作戰으로 大邱를 끝까지 趙炳玉 內務部長官의 透徹한 방어능력을 발휘하여 死守하게 되었다.

六二五事變當時 警察戰鬥隊에서는 指揮官에 한하여 카빈소총이 지급되었고, 一般戰鬥隊員은 구구식 장총과 蘇聯製 소총으로 武裝하여 參與타가 洛東江戰鬥에 參與한 警察戰鬥隊員에 美8軍의 지원하에 M1소총으로 무장하여 戰鬥를 하게 되었음 마지막 大邱死守를 위한 지휘관

會議에 參席한 會議에서 大邱가 무너지면 全國警察官은 갈 곳이 없으니 끝까지 싸우다 함께 죽자고 決意를 한 바 있다는 말을 當時指揮官會議의 參席者로부터 전해들은 바 있다.

## 5. 反共意識과 從北 追從 勢力들의 蠻行에 대하여

1) 동국대학교 강정구 전교수는 李承晩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南北統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仁川上陸作戰을 주도한 맥아더 원수의 銅像을 撤去 하고저 하였다.

2) 강원도 평창군 진보면 속사리 속사초등학교 개방분교 제2學年에 在學中인 李承福이 南侵한 間諜에게 “나는 共產黨이 싫어요”해서 무참히 殺害당한 이승복에 대한 安保教育用으로 분교운동장 모퉁이에 설치된 銅像을 김대중 大統領 就任直後 撤去된 바 있다.

3) 김대중 大統領 취임초기에 智異山 뱀사골 六二五參戰 戰死者 6,333名의 慰靈塔 銅像에 설치된 육군은 MI소총이며 경찰은 카빈소총의 대검과 총개머리판을 쇠톱으로 切斷된 바 있다.

4) 노무현 大統領은 1989年 勞働者 罷業現場에 방문하여 노동자를 선동하는 연설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기업가 국회의원 사장들은 한배를 타고 바다에 풍덩 빠져 죽어도 나라는 아니 망합니다”라고 했다.

5) 지금 현재에도 大韓民國 國會內에 親北左派勢力들이 국민들이 낸 税金으로 보좌관들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 6. 結 論

六二五 參戰國家 有功者 대다수가 報勳病院에 無料入院治療g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다. 당시 參戰者로서 負傷 級數에 따라 全額 醫療費 등이 무상으로 治療가 되고 있고 交通費까지 無料 乘車가 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끝까지 戰鬪에 參戰하여 갖은 苦生을 다하였음에도 國家有功者 處遇에 問題점이 있으니, 報勳廳에서는 이에 대한 配慮가 있으시기를 바란다. 六二五參戰者는 平均 나이가 84歲에서 86歲어간이라는 것을 諒知하기 바란다.

2013年 7月 26日

大韓民國 民主平和統一 諮問會議 諮問委員  
大邱廣域市 參戰警察 國家有功者會 中央會 代議員  
大邱東區 參戰警察國家有功者會 會長 孫 鎮 漢

메 모

메 모

제6주제 : 다부동 전투의 실상 증언



성명: 김경한(金景漢)

생년월일: 1931년 5월 5일생

주소: 경북 안동시 금곡동 태성아파트 102동 1205호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 경상북도 지부장 2004년 - 2013년 현재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 회장 2008년 - 2011년

학력: 1952년도 안동고등학교졸업

1959년도 계명대학교졸업

자격증: 중등학교 (본) 2842호 1973년 5월

부교수 보이스카우트

상별: 교육부장관상 1974년 5월 4일

군수상 청송 1975년 청도 1977년

은상: (997호)한국보이스카우트 1977년

표창: (13154호) 국무총리 1990년

표창: (1025호) 대통령1996년

표창: (2006-0109호) 6.25회장 2003년

기타기장 다수 수여.

병력: 1950년 7월 15일 학도지원병으로 입대

1954년 8월 27일 의병으로 제대(상이군경)

60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의의와 나라사랑: PEACE FOREVER

경력: 계명대학교 총 학생회장 1957년

고교교사 임명 1959년

중등교장 임명 1973년

중등교장 퇴임 1996년



메 모

메 모

제7주제 : 원산상륙작전 증언과 경산시 참전상이군경회 보고



성명; **전성문**

생년월일; 1928년 9월 23일

입대; 1950년 8월 15일

제대; 1952년 9월 9일 명예제대

주소; 경산시 중방동 중앙초등길1 번지

경력; 성문당서점 운영(50여년)

1) 6,25전쟁 참가 동기

1950년 6월25일 북한괴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평온했던 이곳 경산지역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23세의 청년의 가슴에 피 끓는 분노와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바쳐야겠다는 신념으로 자진하여 부산 서면에서 UN군 지원병 심사를 본다는 사실을 접하고 영어라곤 ABC도 몰랐지만 1950년 8월 15일 UN군 심사에 통과 입대할 수 있었다.

2) 공격과 후퇴

처음으로 훈련을 받은 장소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2,3사단이 인천에 상륙하려고 했다. 하지만 먼저 간 사병들은 인천으로 상륙했고 우리부대는 10월 원산에 상륙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매일 미친 듯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포탄소리, 화약 냄새에 어지러워 쓰러지길 수차례 후퇴! 진격!을 반복하며 군사기밀이라고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었다.

동족끼리 서로 죽이려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 총에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에 울음을 삼키며 살기위해 죽어야 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생명은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끔찍하다.

그 후 북으로 진격하였지만 30만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동년 함흥항구에서 후퇴 다시 동해목호까지 1951년 4월 수도사단 26대에 배속 강원도 화천에서 방어 작전 참가

3) 부상과 명예제대

26연대 수색대 배치 동년 12월 중순 오대산전투 수색 중 북한군과 150명 분산 교전 중 왼쪽 눈 부상 화천 양진으로 후송 후 서울 수도육군병원으로 후송 1952년 경주18병원에서 동년 9월 9일 명예제대 함.

#### 4) 경산상이군경회 활동

제대 후 25세에 농사일만 하다가 경산시 상방동에 안주하며 서울의 유명 출판사 인 교학사에서 지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상경하여 면담 후 시작한 사업이 50년 넘게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본인의 이름을 딴 성문당서점 사업이다.

조금씩 재산을 모으며, 너무나 취약한 참전상이용사들의 생활이 피폐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1959년 6월에 대한상이군경회 경산지회장으로 취임하여 1994년 12월 20일까지 35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자활에 온힘을 다해 활동한 결과 1987년 6월 27일 매일신문사 주관 경북보훈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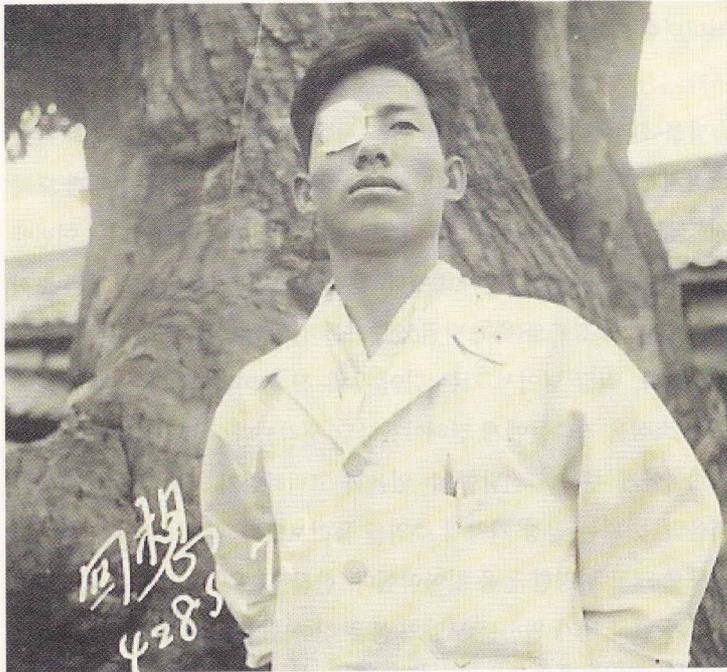
#### 5) 경산시보훈회관 기부

(이 부분은 본인이 경산참전용사가 모두 아는 것이라 다시 밝히는 것을 사양함-편집자 성기중이 정리함.)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나 쉼터가 없어 고심하던 중 경산시에는 예산을 핑계로 어렵다 해서 서점을 운영하며 마련한 경산시 서상동 46-2번지의 소유를 1984년 2월 24일 2층 건물을 지어 기증하였다. 그 후 보훈3단체가 입주하여 지내오다가 2003년 10월31일 현 보훈회관에 정착하였는데 단독 보훈회관이 아니라 경산시농어민회관 2층에 반토막 회관으로 지내고 있으며, 지금도 백방으로 보훈회관건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복수 지회장을 중심으로 상이군경회 631명 유족회 289명 미망인회 39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31명 중 60세 이상 478명이며, 육군출신 543명으로 다수를 이루며 무주택자 167명 생계곤란자 296명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2년 동안 소식 한 번 전하지 못했으니 우리 가족들에게서 나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버젓이 살아있었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생존여부를 알려야 할 이유도 있었다.

글자를 쓰는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꺾꺾 손에 힘을 주어 글자를 쓸 때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메 모

메 모

(사)나라사랑연구회 · 대한정치학회 국제학술세미나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의의와 나라사랑: PEACE FOREVER

제2부 : 주제 발표 및 토론

장소 : 마드리드 홀

사회 : 노동일(전 경북대 총장)

- 제1주제 Heo, Man-ho(Kyungpook Univ.)  
Historical Legacies in Changing the Korean Armistice Regime: Centering on South Korean POWs and Civilian Abductees(휴전체제 전환의 역사적 유제들: 국군 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 제2주제 Yun-sik Gang and Lee Jung Hun(Police Training Institute,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Entry into the Korean War by the Korean Police  
(한국전쟁에서 경찰의 참전 실태)
- 제3주제 Ok-jun Kim (Keimyong Univ.)  
Entry into the Korean War by the Chinese Army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참전)
- 제4주제 Yong Seong Choi (Korea Army Academy at Young Cheon /  
The Dean of the Department of Military War)  
Activities of the Korean Armed Forces in the Korean War(6·25전쟁에서 한국군의 활약상)
- 제5주제 Simone Chun (Suffolk Univ., United States)  
Trustpolitik and a Liber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 토론자 홍원표(한국외대), 김진봉(KBS), 김주삼(조선대), 박동찬(육군군사편찬연구소), 박 형(영남대)



## 휴전체제 전환의 역사적 유제들:

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 Historical Legacies in Changing the Korean Armistice Regime: Centering on South Korean POWs and Civilian Abductees

허만호(경북대학교)

Heo, Man-ho(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I. 서론

6·25전쟁<sup>1)</sup> 종전 후 4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오던 군사정전위원회가 1991년 3월 25일에 군정위 유엔측 수석위원에 한국군 장성 황원탁 소장이 임명되면서 파행을 걸다가 마침내 파국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자국 및 중국 대표단 철수,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 공동경비구역(JSA) 자국관할지역에 대한 접근금지 선언 등을 통해 휴전체제의 실질적인 기능종료를 유도해 오다가 마침내 1996년부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여러 차례의 무력시위를 통해 휴전체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 시켰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새로운 평화조치를 취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노무현 정부 하에 있었다. 그런데 2005년 ‘9·19공동성명’(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부터 2007년 ‘10.4남북 공동선언’(2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조치나 합의들 그 어디에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25전쟁 한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6·25전쟁이 60년 전에 종전되었으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포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1899년 Hague협약은 포로를 자국에 대항하는 군복무에 종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07년 Hague협약에서도 재천명되어 6·25전쟁 당시 국제관습법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군포로들을 북한 인민군에 강제로 편입시켜 전투행위를 강요했다. 이는 많은 증언으로 뒷받침되기도 하지만, 전쟁당시 유엔군이 생포한 인민군포로들 중 11% 정도는 국군포로 출신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자고 주장하자, 북한 측이 이를 “인민군 10만 명 이상을 납치하려는 음모다”고 했던 것으로 봐서 10만 명 이상의 남한출신 민간인이나 국군 포로가 강제적이었던, 자발적이었던 인민군에 입대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과제 “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불가역적 적대자들(Strident Antagonists) 간의 협상”(NRF-2011-327-B00062)의 일부분이며, 아직 미완성의 초고임일 밝힌다.

1) 1950년 6월 25일 북한 정규군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체결로 중단된 한국에서의 분류를 지칭하는 명칭은 ‘6·25전쟁’, ‘6·25사변’, ‘6·25동란’, ‘6·25전란’, ‘한국동란’, ‘The Korean War(한국전쟁)’, ‘朝鮮戰爭’, ‘抗美援朝戰爭’ ‘김일성의 亂’ 등 다양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 「한국정치학회」에서 논의하여 채택한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Heo Man-ho, "Les prisonniers de guerre sud-coréens retenus en Corée du Nord: LES HOMMES DANS L'HISTOIRE ?," in Yim Seong-sook, *La Corée, le peuple et ses valeurs culturelles: d'hier à*

생포된 국군포로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고문, 생체실험 등 각종 잔혹행위를 당하고, 살해되었다. 이는 1899년 헤이그협약과 1929년 제네바협약 등, 포로에 대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포로들에게 위험한 작업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도 불구하고, 한국군포로들을 폭격중인 비행장 복구, 철로 보수 등 위험한 전시작업(戰時作業)에 종사시켰다. 전쟁이 끝난 뒤, 이들 중 대부분이 한국으로 귀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되었다. 억류된 국군포로 대다수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생존자들도 비참한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다.<sup>3)</sup> 북한당국은 그들의 존재를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6·25전쟁 이후 납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결과로 6·25전쟁 이후 시기 납북자 3,824명 중에는 506명의 억류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귀환하였다.<sup>4)</sup> 그러나 6·25전쟁 당시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납북과 월북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50여 년이라는 세월의 경과를 이유로 제시하며 한국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6·25전쟁 시 피랍인사들의 가족들은 모임을 결성하여 전쟁 당시에 한국정부가 작성한 납북자 명부도 발굴하고,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과 피랍탈출자들의 관련증언들도 채록하며, “전시납북사건”에 대해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화” 작업을 수행해왔다.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들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근거 부족과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서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그리고 제한적인 상봉에 대한 노력만을 밝혀왔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과 ‘화해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시적 측면의 통일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매우 소극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해 온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의 종전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려면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억류 한국군포로 문제와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남한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일정 수준 이상의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지난 2010년 3월에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었다. 이 법률로 한국 내에서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정부의 협력이 없으면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사건에 대해 다각도에 걸친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6·25전쟁 휴전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협상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정부와 세인(世人)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본 사건의 실증자료들을 많이 발굴하였다. 현재까지 5종류의 전시납북자 명단이 확보되어 본 사안의 “사실화” 작업에 큰 기여를 했다. 이 명단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aujourd'hui* (Québec: LES PRESS DE L'UNIVERSITE DE MONTREAL, 2000), pp. 35-36.

3) 2001년 9월 9일에 파악된 생존자는 385명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 포로관련 자료집」, 2001년 10월 25일, p.20. 2004년 9월말 현재 한국정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생존 추정 국군포로는 538명이다. 국방부,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 2004, p. 15.

4) Park Young-ho et al.,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0), p. 461.

<표 1> 북한에 의한 6·25전쟁 납북자 관련 통계

구분	제목	조사·작성자	조사(발행)일시	조사대상지역	피납치자수(단위 명)	명부발견여부	비고
1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 12. 1	서울	2,438	O	서울지역에 국한, 유명인사위주로 작성됨
2	六·二五事變 被拉致人士名簿	六·二五事變 被拉致人士家族會	1951. 9.	서울 인근	2,316	O	서울, 인근에서 납치된 주요 인사위주
3	六·二五事變 被拉致者名簿	공보처 통계국	1952. 10.	전국	82,959	O	휴전회담 협상을 위해 전국 단위로 작성
4	625사변피랍치자	내무부 치안국	(1952.10)	전국	126,325	X	국무회의에서 숫자가 인용되었으나 실제 명부는 미발견
5	625사변 피랍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	전국	84,532	X	3번 명부를 추가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명부는 미발견
6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	전국	17,940	O	의용군 제외, 세대주 중심으로 작성
7	실향사민 등록자명단	대한 적십자사	1956	전국	7,034	O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안부의뢰를 위해 대한 적십자사가 2달간 가족 신고를 받아 작성
8	실향사민명부	국방부	1963	전국	11,700	1권 : O 2권 : X	국방부 작성, 제 1권 11,700명 수록 명단 발견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6·25전쟁 휴전회담회의록을 통해 살펴 본 - ‘전쟁 납북자 송환 문제,’” 2011년 9월, p. 4.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가장 자세하게 담고 있는 「실향사민등록자명단」 즉,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신고 받은 7,034명의 납북자 명단을 활용하여 민간인 납북사건의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총체적인 분석과 현황 파악 및 교차확인을 위해 상기 명단과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625사변 피납치자명부」, 「625 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 상의 112,627명 중에서 중복 등록된 사람들을 제외한 96,013명의 신상명세도 활용하겠다.<sup>5)</sup>

5) 이들 중에는 납북 된 뒤에 북한 공산군에 전투요원이나 전투지원인력으로 편입되어 전선에 배치되었다가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뒤 풀려나 귀환 한 사람들이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 보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명단 대조작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의 확인 작업을 거쳐 96,013명의 전시 민간인 납북자들 중에서 413명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풀려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활용 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동명이인(同名異人) 인지 아니면 동일인(同一人) 인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런데 납북 된 후에 어떤 형태로든 귀환한 사람들의 수는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의 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 납북자 수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납북의 양태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96,013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우선적인 연구 목적은 북한당국이 대규모의 남한 민간인들을 납북하고 한국군 포로들을 억류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 납북·억류사건들을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북한당국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며, 이런 납북·억류가 우발적·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 자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상론의 관점에서 본 사안에 대한 휴전협상을 재조명하여 귀책사유를 밝히고, 휴전체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될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납북·억류에 관한 쟁점들

### 1. 6·25전쟁의 한국군 실종자와 포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통계들을 비교하며 수치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장군(Mark W. Clark)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개략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그들은 전쟁초기에 5만 명의 한국군포로들을 전선에서 석방했다. 물론 그것은 이들이 인민군에 강제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포로였던 북한문제 전문가 이기봉 씨는 약 7만 명의 한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었다고 추정한다. 인민군으로 한국군포로들을 감시했던 북한문제 전문가 이항구 씨는 87,000~88,000명의 한국군포로들 중에서 8,341명이 송환되었고, 2~3만 명은 전쟁 중에 사망했고, 나머지 5~6만 명은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sup>7)</sup> 서울 국립묘지 위폐보안관에서 그간 미확인 전사 및 실종자로 게시되어 있던 사람들을 1997년 7~8월에 자체 실사(實査)를 한 결과, 102,384명이 그 대상자들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육군: 장군 1명, 장교 2,924명, 사병 92,213명; 해군: 장교 49명, 사병 1,173명; 공군: 장교 4명, 사병 68명; 종군자 및 군무원: 3,672; 경찰: 간부 352명, 비간부 1,578명; 경찰애국청년단원: 267명; 제1학도 의용군: 83명). 그런데 실무자들은 그들 중 반수인 약 5만 명 정도는 종전 후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8)</sup> 정전협상 의제 중의 하나로 포로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던 1951년 12월에 유엔군 측에서 파악한 한국군실종자 수는 8만8천 명 정도였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8일에 포로명단 교환 시 공산군 측은 한국군포로로 7,412명의 명단만을 제시하였다.<sup>9)</sup> 유엔군 측이

6)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 Brothers), p.102.

7)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북한억류 한국군포로들의 실태 보고서」, p.15. 본 보고서는 동일한 제목으로 다음에 요약 수록되어 있다. "북한억류 한국군포로들의 실태 보고서", 자유평론사, 『새물결』, 1995년 10월호, p. 101.

8) 한국정부는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유가족 신고, 내무부 자체조사, 경찰서 확인, 미신고자 특별 구제조치 등을 거쳐 총 88,466명을 전사처리 하였다. 이후 1974년 8월에 한국 국방부는 총 55,108명의 「실종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10월말까지 「실종자 명부」에서 이중등록자, 파견자, 전공상자, 형 확정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제외한 41,954명의 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후 재확인을 거쳐 1997년 10월에 41,971명을 「전사 및 실종자」로 정리하여 명부를 작성하였다. 다시 19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 계룡대 및 전국 7개 향토사단에 비치하여 관련자들이 열람하고 추가 신고토록 했다. 그 결과 264건이 신고 되어 이중등재, 전역, 탈영 등을 제외한 132명을 추가로 전사처리 하였다. 국방부,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 2004, p. 18.

9) 1951년 12월 18일 현재의 포로 현황으로 유엔군측은 공산군 132,474명(북한군 111,754명, 중공군 20,720명)을, 공산군측은 유엔군 11,559명(한국군 7,412명, 미군 3,198명, 영국군 919명, 터키군 234명, 기타 66명)을 체포한

실제적인 실종자의 수와 공산군 측이 제시한 포로명단 상의 수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 대해 항의하자, 공산군 측은 '나머지는 유엔군의 폭격과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포로는 전선에서 석방하여 본대(本隊)나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옹색한 변명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측은 강제로 북한군에 입대시킨 모든 남한 출신자들을 포로로서 송환할 것을 주장하며, 쌍방의 전체장병을 면담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산측은 전부가 자발적인 지원자라고 강변하며, 유엔군측 제안은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을 납치하려는 음모라고 매도했다.

그런데 625전쟁에 관한 중국의 공간사(公刊史)인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中國人民誌願軍 抗美援朝戰史)』에 따르면, 1950년 10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중공군에 의해서 만 37,815명의 한국군이 생포되었다.<sup>10)</sup> 이 문헌에서 중국측은 "살상", "포로", "투항"으로 전과(戰果)를 구분하고 있고, 이 37,815명은 포로와 투항인원을 합한 수치이므로 이 한국군포로들은 종전 시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북한군에 의해 포로가 된 한국군과 전쟁초기 4개월 간 특히, 개전부터 낙동강방어전선으로 후퇴하는 동안에 한국군포로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을 감안한다면, 공산측에 생포된 한국군포로는 한국 국방부가 1994년에 공식 집계 했던 수치인 19,409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1)</sup>

<표 2> 중공군의 포로획득 추이

작전 기간		한국군	유엔군	합계
유격전 시기	제1차 전역 (1950년 10월 25일 - 11월 5일)	4,741	527	5,268
	제2차 전역 (1950년 11월 25일 - 12월 24일)	5,568	3,523	9,091
	제3차 전역 (1950년 12월 31일 - 1951년 1월 8일)	5,967	367	6,334
	제4차 전역 (1951년 1월 25일 - 4월 21일)	7,769	1,216	8,985
	제5차 전역 (1951년 4월 22일 - 6월 10일)	5,233	2,073	7,306
진지전 시기	1951년 하계 방어작전 시기 (1951년 6월 11일 - 10월 30일)	652	334	986
	1952년 춘계 진지공고기간 (1951년 12월 1일 - 1952년 3월 31일)	834	124	958
	전술반격과 상감령 방어작전 기간 (1952년 9월 1일 - 10월 30일)	919	160	1,079
	1953년 봄 대 상륙작전 준비기간 (1952년 12월 1일 - 1953년 4월 30일)	555	134	689
	하계반격작전 기간(1953년 5월 1일 - 7월 27일)	5,577	250	5,827
합계		37,815	8,708	46,523

출처: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誌願軍 抗美援朝戰史』, 軍事科學齣版社, 1988.

것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p. 23.

10)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誌願軍 抗美援朝戰史』, 軍事科學齣版社, 198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서울: 세경사, 1991.

11) 한국정부는 1994년에 실종자들을 그들의 소속부대를 통해 집계검토를 한 후에 19,409명의 한국군이 공산군에 체포된 뒤에 사망하였거나 억류된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국방부, 『국군포로문제』, 1999, p. 17, p. 31. 한국 국방부는 행방불명자 신고와 병적부 확인을 거쳐 최종 집계한 19,409명의 「625참전 행불자(실종자)명부」를 1997년 10월에 공개하였다. 그런데 이 숫자는 행방불명자 신고를 받아 군적과 대조한 뒤에 정리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누락될 수밖에 없었고, 군적에 있는 인원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학도의용군이나 유격대원 등은 제외된 한계가 있다고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 2004, p. 13. 그런데 유엔군측은 1953년에 한국군 실종자를 총 82,319명으로 집계했다.

조사시점에서의 누락 가능성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인용된 통계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한국군 최종 실종자 102,384명에서 1951년 말까지의 실종자 8만8천명을 뺀 수치인 14,384명은 전선이 고정된 뒤에 실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중공군에 의해 포획된 한국군포로는 7,885명이다. 북한군에 의해 획득된 포로도 있을 것이므로 한국군실종자들 중에서 포로 발생비율은 60%가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통상 전선이 수시로 변하는 운동전(運動戰) 시기에 포로가 많이 발생하고, 북한이 부족한 전시인력을 한국군포로로 충당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51년 말에 파악된 실종자 8만8천 명 중에는 포로 발생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당시 공산측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공산군은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 측 포로를 1950년 6월 25일~12월 25일 사이에 38,500명, 1950년 12월 26일~1951년 3월 25일 사이에 26,865명을 각각 포획했다.<sup>12)</sup> 비록 발표된 포로의 수가 정치선전의 목적에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앞의 가정을 확인시켜 준다. 1951년 말까지 중공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11,000~12,000명의 군인과 북한 인민군에게 포로가 된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군인의 수를 개전 후 최초 9개월 동안 포로가 된 65,365명에 더하면, 유엔군 측의 99,500명의 실종자(MIAs) 중에 80,000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유엔측의 실종자 대 포로 발생비율에 따른다면, 한국군의 실종자(MIAs)들 중에서도 포로(POWs) 발생 비율은 80%를 넘을 것이다.

이 비율(운동전 시기의 실종자 80%, 진지전 시기의 실종자 60%)에 따라 10만여 명의 한국군 실종자들 중에서 80,000여 명은 포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sup>13)</sup> 이 포로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위험한 전시 복구작업 과정에서, 혹은 생체실험을 포함한 각종 비인도적 학대로 희생되었어도 50,000~60,000명은 종전 시에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sup>14)</sup> 그런데 유엔군(사실상 미군)은 미군포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절대다수를 이루었던 한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포로 송환방식에 주요쟁점이 형성되면서 한국군포로들의 존재와 그들의 송환 여부 그 자체는 등한 시 되어버렸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50,000명 이상의 한국군포로들은 세인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졌다.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많은 한국군포로들이 송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산측은 한국군포로를 전쟁포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 외상 박헌영은 1950년 7월 13일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문을 보내, 북한이 1949년 제네바협정의 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유엔 측 군인들을 '인민에 대한 전범'으로 간주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85조에 대해 유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12) 유병화, "북한 억류자 송환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한양대학교 통일전략연구소, 1997, p. 265.

13) 2012년까지 한국정부가 한국 내에서 발굴한 국군전사자의 유해는 6,996구이다. 「유해발굴사업정책고객소식지」, 2013, Vol.1.

14) 미국하원 국가안보위 군인소위원회에서 1996년 9월 17일에 개최된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 실종미군관련 청문회'에서 전 체코군 고위관계자 잔 사스나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군사보좌관이었던 필립 코로소의 증언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직후에 소련은 북한에 병원을 세워 포로들을 대상으로 각종 인체 및 심리실험을 했다고 한다. 소련은 심지어 한국군, 미군 등 각 국가별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인종들이 특정 약물, 생화학무기, 방사능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실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소련, 체코, 중국 등에도 실험용으로 집단적으로 보내졌으며, 6·25전쟁이 끝났을 때 북한에서 실험대상으로 쓰이던 포로들 중 약 100명 정도는 살아 있었는데, 체코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련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6년 9월 19일.

이념 투쟁의 책략과 인질로서 이들을 억류하여 대다수 한국군포로를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 하에 인도하지 않았다.

포로 석방방식에 대해 한·미간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승만 정부가 1953년 6월 18일과 19일에 반공 북한포로 33,206명 중에서 27,000명 이상을 일방적으로 석방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한국군포로의 미송환 문제에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산측은 전쟁포로 문제가 휴전협상의 쟁점으로 대두되기 이전에 이미 포로를 송환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명백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1951년 12월 18일에 양 진영 간의 포로명단을 교환했을 때 한국군포로의 수를 7,412명으로 축소했던 것이다.<sup>15)</sup>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포로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념투쟁과 휴전조건의 희생자들로써, 통일이 전제되지 않은 휴전에 반대하면서 휴전협상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던 한국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 2. 납북자 명부를 통해서 본 납북 규모 및 양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직전 시기까지 포함하여 전체 전쟁기간에 총체적으로 96,013명이 납북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충청도에서 23,664명이 납북되어 가장 많고, 서울시에서 22,348명, 경기도에서 18,270명, 강원도에서 11,375명, 전라도에서 10,853명, 경상도에서 9,503명이 납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당시 인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정확한 백분율(百分率)을 계산해 낼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추론적 사실규명은 해 낼 수 있다.

먼저, 지역별 납북자 수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산군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납북자가 발생했다. 둘째, 가장 인구가 많았을 경상도에서 공산군의 점령기간이 짧고, 점령지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납북자 수가 가장 적었다. 셋째,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즉, 개전 초기에 공산군이 점령했던 지역이며, 점령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지역에서 납북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 ‘민간인 납북은 북한정부의 총체적인 전쟁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북자들의 ①납치시기, ②납치가담자, ③납북과정, ④피랍인의 직업, ⑤예상되는 피랍인의 가치 및 납북목적은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일정한 추세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1) 북한의 납침계획 변화와 납북정책

인구수가 서울(1950년 4월말 현재 169만 명)보다는 많았을 것이지만 다른 도(道)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을 충청도에서 납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를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로

15) 한국군포로의 북한 억류 원인을 전쟁포로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찾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승자가 패자인 포로들의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을 승자 자신의 진영에 합류시킴으로써 ‘관용의 미덕’을 보이고, 자신의 정통성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생각했던 전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문광건 박사와의 인터뷰, 2002년 7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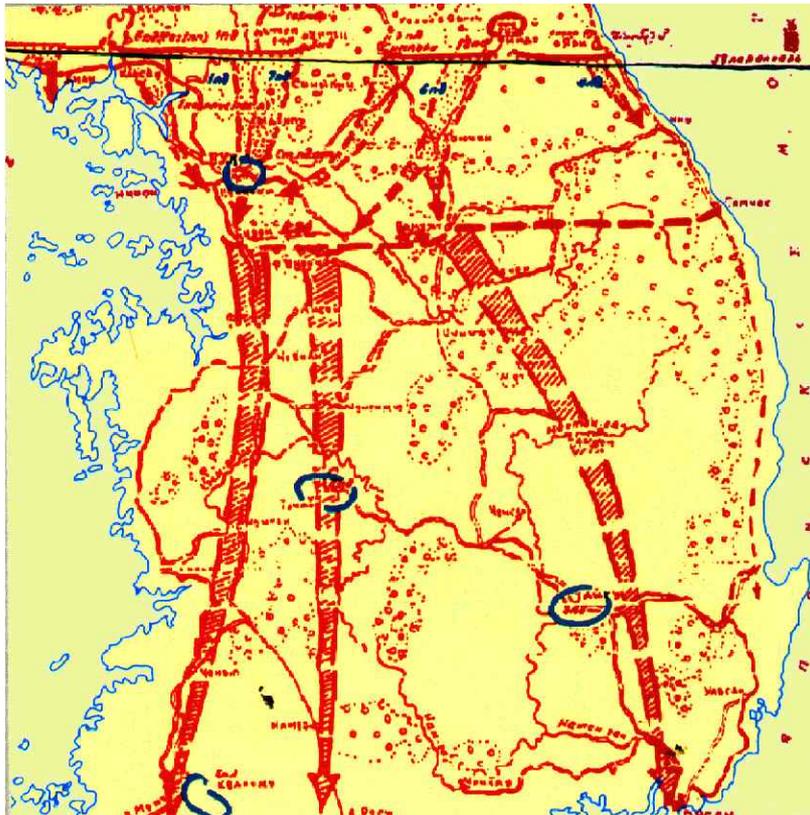
16)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006.9』, 2006년 9월, p. 1118.

설명하는 것은 힘들다. 이는 당시 공산군의 침략노선, 즉 진격로(進擊路)와 시간대 별 진격 지점, 납치방법 등에 대한 정교한 자료 분석이 있어야 적확(的確)한 설명이 가능 할 것이다.

충청도의 경우, 6·25전쟁이 발발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공산군이 진격·점령하여 납치해 갔으므로 전황이 반영된 전쟁정책 속에서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수 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령대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에 있어 충청도에서 납북된 사람들의 연령분포(82.67%: 16~20세 6,303명, 21~25세 8,927명, 26~30세 4,334명)가 서울시의 납북자들(61.19%)에 비해 청년층에 월등히 더 집중되어 있고, 이런 경향은 전국평균(74.83%)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직업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로 볼 때 농업이 19,56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즉, 충청도에서 가장 많은 납북자들이 발생한 것은 북한 공산군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전시인력 충원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산군의 초기 납치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1단계는 한국군의 방어선 돌파 및 주력 섬멸단계로 3일 이내에 서울을 점령한 후 서울(수원)~원주~삼척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는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단계로 군산~대구~포항까지 진출하고, 제3단계는 소탕 및 남해안으로의 진출단계로써 부산~여수~목포로 전개하는 것이었다.<sup>17)</sup>

<그림 1> 북한군 납치계획(선제타격계획)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卷, 1995, p.81.

17) 육군대학 교수부 중령 전종순, “북한군 서울 지체 3일의 미스터리,” <http://cafe.naver.com/nuke928/77061> (검색일: 2008년 4월 20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북한군의 1단계 작전목표가 서울 점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주력을 섬멸한 이후의 제2단계와 제3단계 작전은, 한국군이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하여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전과확대 및 섬멸 단계로 돌입해서 남해계선까지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전쟁이 개시되면 후방에 있는 한국군 사단들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투입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수립된 것인데, 실제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즉, 북한군 제1군단이 서부축선에서 내리밀면서 한국군의 전방사단들을 압박하자 서울방어를 위해 3일간에 걸쳐 후방의 제2, 3, 5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등 4개 사단 모두가 서울 이북지역에 투입되어 있었다.

이때 북한군 제2군단이 춘천과 홍천으로부터 수원 방향으로 우회기동(迂回起動)을 실시하여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게 되면 포위망 내의 한국군 주력은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적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한강은 적의 진출을 저지하기 보다는 아군의 철수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아군의 전력(戰力)은 더욱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을 점령한 이후 한강 이남으로의 작전은 한국군의 주력이 이미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전과확대 및 추격 단계로 전환하여 단숨에 남해계선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50년 6월 28일 당시 북한군의 전선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정부의 초기 침략계획이 실패하여 전쟁정책이 바뀌게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이해 할 수 있다.

먼저, 북한군 제1군단의 주공인 제3, 4사단은 6월 26일 저녁에 의정부를 점령하고, 6월 27일에는 이미 서울 외곽에 육박하였다. 북한군의 이 2개 사단은 6월 28일 05:00시에 서울 시내로 돌입하여 11시 30분경에는 서울을 점령하였다. 군단의 조공인 제6사단은 6월 25일에 개성을 점령하였고, 제1사단은 고랑포를 거쳐 임진강 북안(北岸)에 도착하였다. 개성을 점령한 제6사단은 한강을 도하한 후 김포반도로 진출하여 6월 28일에는 김포읍을 점령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임진강에 도착한 북한군 제1사단은 한국군 제1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쳐 타 사단에 비해 진출이 지연되면서 문산 일대에서 저지되고 있었다. 의정부 회랑지대를 내려온 북한군 제3, 4사단은 거침없이 진격하여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중앙돌파의 형태로 썰기를 박듯이 돌출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군의 서울 포위계획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이른 것이었다.<sup>18)</sup>

그에 비해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의 진격상황이 관이하게 달랐다. 당시 춘천지역 방어임무를 담당했던 한국군 제6사단의 선전(善戰)으로 인해 6월 25일 당일 내로 춘천을 점령하려 했던 북한군 제2군단의 계획은 공격개시 3일 만인 6월 27일해야 가능했고, 제1군단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까지도 홍천 일대에서 맴돌고 있었다. 한편 동해안의 북한군 제5사단 역시 한국군 제8사단에 의해 진출이 저지되었다가 6월 28일야 강릉을 점령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진출상황은 북한군의 초기 작전계획에 대비시켜 보면 엄청난 차질을 빚은 것이었다. 즉 한강 이남에서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한국군의 주력을 섬멸하려던 초기 계획은 한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의 진출을 저지시킴으로써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 이로

18) 앞의 논문.

인해 한국군은 북한군의 초기 작전계획과는 달리 포위망을 벗어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9)</sup>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한강 이남에서의 작전은 한국군의 주력이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전과확대 및 추격’을 하는 것이었으나, 북한군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서는 전투인력을 대폭 보강해야만 되었다. 서울이남 지역에서 청년층의 납북자들이 서울보다 많고, 특히 충청지역에서 그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전쟁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지역별 북한군의 진·퇴 시기 대 납북 시기 및 장소

전국적인 납북자들의 피랍 시기를 보면, 1950년 7월부터 1950년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납북된 사람들이 84,659명으로 전체 납북자들의 88.2%에 이른다. 1950년 10~12월에 납북된 사람들이 2,299명, 1951년 이후에 납북된 사람들이 3,172명으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북한 인민군의 지역별 진·퇴(進·退) 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납북자들이 해당지역에 공산군이 진입한 초기에 납치되었고, 얼마간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납치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숨어 지내다 뒤늦게 발각되거나 혹은 유인책에 이끌리어 나갔다가 납치된 것으로 보아서 납북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납치시점이 공산측의 전쟁정책에 납북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논거가 된다.

<표 3> 시도별 납북자들의 납치일 분포

납치일 \ 시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1950년 6월 이전	47	49	22	32	30	257	437
1950년 6월	708	310	188	95	23	142	1,466
1950년 7월	8,623	5,833	2,813	6,122	690	517	24,598
1950년 8월	8,559	7,492	5,393	10,795	3,739	4,302	40,280
1950년 9월	3,447	2,844	1,890	3,905	4,092	3,603	19,781
1950년 10~12월	39	455	348	169	175	1,113	2,299
1951년 이후	240	421	629	399	711	772	3,172
미기재	685	866	92	2,147	43	147	3,980
합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006.9』, 2006년 9월, p. 1128.

전체 납북자들의 납치 장소로 보면, 납북자들의 자택에서 납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72.1%,

19) 김일성은 이에 대해 '별오리 회의(1950년 12월 21일~12월 23일)에서 '적들의 유생역량을 소멸하는 것이 군사승리의 제1조건임을 망각하고 적들을 분산·도망 하도록 해서 적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적들이 다시 부대를 수습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하였다.

자택 근처에서 납치된 경우가 8.2%로 도합 80.3%에 이른다. 이는 북한 정부가 피랍자들의 인적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납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납북자들이 자택과 자택 근처에서 납치된 비율이 서울(75.35%), 경기도(54.61%)와 단기간에 제한적으로만 점령했던 경상도(76.34%)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비해, 초기의 남침계획이 달라진 이후에 점령한 지역들인 강원도(97.70%), 충청도(92.58%), 전라도(91.80%)에서는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정부의 남침작전 초기계획이 틀어짐에 따라 전쟁정책이 수정되면서 그에 필요한 전시인력 확보를 위해 수립된 총체적 계획(over-all plan)에 따라 납북이 자행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무서원들이 피랍인들의 거주지에서 직접 납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정책적으로 납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다. 특히, 789명(0.82%)은 주도면밀하게 직장에서 상사가 출근명령을 내리게 하여 출근하게 한 뒤에 납치하였고, 심지어 친구를 동원하여 유인한 뒤에 납치했던 것으로 보아서 납북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전체 납북자들의 납치 장소 분포

납치장소 \ 시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자택	16,417	9,145	9,612	18,643	6,109	9,256	69,182
자택 근처	422	832	1,501	3,266	1,146	707	7,874
직장	664	78	29	8	6	4	789
노상	966	338	10	11	13	14	1,356
기타	1,104	5,896	179	410	514	113	8,216
미기재	2,775	1,981	44	1,326	1,715	759	8,600
합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006.9』, 2006년 9월, p. 1129.

### 3) 피랍인들의 연령과 납북 목적

연령대별로는 군의 전투인력으로 징집 가능한 연령층인 16~20세가 20,409명, 21~25세가 32,357명, 26~30세가 19,079명으로 전체의 74.83%를 차지한다. 31~35세를 이 범주에 넣을 경우 백분율은 84.61%로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 납북자들의 전체적 연령층을 보면, 16세부터 30세까지가 가장 많고, 5세 간격 납북자 수가 2~3만 명에 이르는데 비해 31세~35세는 9,395명으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31~35세는 전투인력보다는 전쟁 노무자로 활용하기 위해 납북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짐작된다. 전쟁노무자의 연령층은 넓어서 적확하게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36~40세 5,378명, 41~45세 2,959명, 45~50세 2,497명인데 비해 50대는 800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30대와 40대를 전쟁노무자 즉, 후방 전

쟁물자 생산 및 이송 근로인력과 전방의 전투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납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은 1950년 8월에 납북되어 10년간 북한에서 억류생활을 하고 생환(生還)한 조철(趙澈) 씨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조철 씨는, 1950년 8월 말경에 (북한)인민군 경비대가 4만 명의 피랍인들을 5리 씩 간격을 두고 800명을 단위로 하여 해주시를 중심으로 벽성군(壁城郡) 서원리(書院里), 재령군(載寧郡) 부천면(富川面), 신천군(信川郡), 평산군(平山郡) 야산일대에 분산시켜 짚으로 막을 지어 기거하게 했는데, 이 피랍자들에게 주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방공호 굴착, 도로 교량 수리, 양곡 운반 등 중노동을 시켰고, 청년들을 뽑아서 신분조사와 사상검토를 한 뒤에 인민군에 편입시키고 있었다고 증언한다.<sup>20)</sup>

또한 상기 추정은 유엔군이 포획한 북한군 포로 중 11%가 남한 출신자였을 정도로 많았다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한다. 그리고 1951년 12월에 휴전협상의 한 의제로 포로문제를 다루면서 유엔군측이 파악하고 있었던 한국군 실종자 수는 8만8천 명 정도에 이르는데 비해, 공산군측은 한국군 포로로 7,412명의 명단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측은 강제로 북한군에 입대시킨 모든 남한 출신자들을 포로로서 송환할 것을 주장하며, 쌍방의 전체장병을 면담하여 본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자 공산측은 전부가 자발적인 지원자라고 강변하며, 유엔군측 제안은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을 납치하려는 음모라고 매도했다.<sup>21)</sup> 이는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남한 출신이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는 납북자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로, 「대구매일」 1951년(단기 4284년) 5월 1일에 보도된 「경북경찰국공보실발표」를 들 수 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공산군 점령 지역에서 잔류하여 강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한국의 군과 경찰, 유엔군에 의해 포로가 된 자들은 당시 부산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경북경찰국장이 직원을 보내 경북지역 출신 포로들을 조사하면서 명단을 작성하여 경북지역 관하 각 경찰서에 송부하였으니 “장시일 안부를 모르고 궁금하였던 관계 가족은 관할 경찰서에 생존을 문의해 달라”는 것이었다.<sup>22)</sup>

#### 4) 피랍인들의 직업과 납북 목적

피랍인들의 직업을 보면 납북목적은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96,013명의 납북자 중에서 농민은 58,373명(61%)으로 단일 직업으로는 가장 많으나 당시 80% 정도를 차지했던 전체 인구의 직업구성비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그들은 전시 노동력을 제공 받고자 납북해 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남한의 사회여건 상 전체 인구대비 전문 인력 비율이 높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수에 해당하는 행정공무원 2,919명, 법조인 190명, 교수 111명, 교사 752명, 의사 368명, 약사 158명, 기술자 2,836명 등, 다수의 전문인을 납북해 간 것은 북한의 소

20) 趙澈, 『죽음의 歲月』, 聖峰閣, 1964, pp. 41-42

21) 허만호, “북한억류 한국군포로의 송환: 법리적 판단과 협상론의 한계를 넘어,” 『省谷論叢』 제29집(1998), p. 438.

22) “慶北出身 拉致者 釜山收容所서 保護中” 「대구매일」, 1951년(단기 4284년) 5월 1일자.

위 ‘국가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 879명, 정당인 106명, 국회의원 63명은 정통성(legitimacy) 확보와 통일전선(united national front)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소앙 선생과 같은 정치인은 최우선적인 신변확보 및 납북 대상자로 선정하여 김일성 정권에 대한 정통성 보강과 통일전선 혹은 ‘사이비연립(Bogus Coalition)’<sup>23)</sup> 형성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민간인 납북은 전쟁준비 과정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정책의 일부로 판단된다.

정치적 탄압의 대상자들인 종교인(기독교인 178명, 기타 종교인 39명), 우익단체 단원, 친미파 특히 54명의 미(美) 군무원 등의 납치 목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 후 남부 우익인사들을 1, 2, 3급 반동으로 분류하여 정치범 수용소[노동개조장(Trai Cai Tao Lao Dong 강제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위한 집단수용소)]와 신경제지구로 보냈던 것으로 보아서 처벌 및 격리수용의 목적에 따라 납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경우, 전쟁 초기에 납북한 경우와 ‘9·28수복’으로 쫓겨 가며 납북한 경우로 나누어서 좀 더 면밀히 추적해 보면 공산측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도내 시군별 납북자 수와 백분율을 보면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 강제로 납치되어 간 것으로 읽어 낼 수 있다. 납북자들이 납북이 아니라 자진월북 한 것이라면 지역별로 고르게 발생했어야 될 것이다. 굳이 차별성을 보인다면, 해방 후 대구10·1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좌익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적게 발생 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시·군별 전체인구 현황과 공산군의 진입 시기 및 점령 기간이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공산군이 점령했던 지역에는 예외 없이 납북자가 일정 수 이상 있고, 공산군이 지나가거나 단기간 점령했던 지역에서는 납북자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은 ‘자진월북’이 아니라 납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성별 납북자 수를 통해서도 그들에 대한 북한정부의 ‘자진월북’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전체 남녀 성비(性比)가 100 : 1.96을 보이고 있어, 당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저조했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남녀 성비가 남성에게 편중된 것은 전시인력 수급을 위해 납북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으로 남녀 성비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100 : 2.64)의 경우,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의 거의 1.4배에 이른다. 이는 서울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여타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초기의 전쟁정책이 바뀌면서 여타지역에서의 납북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 소련이 자국에서 교육훈련시킨 중동부 유럽 특정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현지 정치세력들과의 역학구조 속에서 친소정부를 수립해 가는 과정을 시튼-왓슨(Hugh Seton-Watson)은 ‘화차정부론(baggage train government)’에서 3단계로 설명한다. 즉, 토착 우파 민족주의자들과의 순수한 협력(genuine cooperation) 단계, 중도 및 좌파 세력들과의 사이비 연립(bogus coalition) 단계를 거쳐 마침내 단일주 체제(monolithic regime)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Hugh Seton-Watso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New York: Praeger, 1961). 양호민, 김학준, 서대숙 등은 각자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화차정부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에서 여성 납북자들의 직업별 분류, 납치 시기 및 장소가 없어 정확한 의미 파악은 불가능 하지만, 평균에 비해 강원도 납북자들의 지나치게 낮은 여성비율(100 : 0.22)과 전라도 납북자들의 지나치게 높은 여성비율(100 : 5.13), 납북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했을 경상도(100 : 1.24)와 변화된 전쟁정책에 따라 전투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충청도(100 : 1.55)의 여성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초기의 유리한 전황(戰況)에 따라 원래의 납북정책이 적용되었을 경기도와 강원도 간에 여성 납북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직업-납치일 교차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공산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했던 초기에 납치가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지역의 전체 피랍자들 중에서 40.2%가 7월에, 39.4%가 8월에 납치되었을 정도로 7, 8월에 편중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국회의원, 정당인, 사회단체원, 행정공무원, 경찰, 판검사 등 소위 주동적인 “계급의 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납치 시기가 7월에 편중되어 있다. 공산군이 서울에 6월 28일에 진입하여 3일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도 국회의원 5명, 정당인 2명, 사회단체원 22명, 행정공무원 61명, 경찰 57명, 판검사 4명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남침전쟁 시작 전에 납치 계획이 명백히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인들, 기업체 임원, 상업 종사자들은 납치 시기가 8월에 편중되어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들은 공산군이 성공적으로 남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던 8월에 더 많이 납치되었는데,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여 납치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군의 점령 시기가 비교적 빨랐던 경기도의 경우, 납치된 국회의원, 정당인, 종교인의 수가 적어서 의미 부여를 하기 힘들지만, 여타 직업인의 경우 서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 납북자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납치 시기가 8월과 9월에 편중되어 있다. 이 지역들에 공산군이 진입하였다가 퇴각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점령초기와 후퇴를 하면서 전시(戰時)인력 확보를 위해 납치를 자행한 것이므로 민간인 납북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납치가 8월에 편중되어 자행되었으면서도 7월과 9월에도 여전히 많은 수가 납치되어 서울·경기 지역과 경상도·전라도의 중간 추세를 보이기도 있다. 즉, 납치의 지역별 발생시기와 직업이 공산군의 진입 및 퇴각 시기에 따라 일정한 양태를 보이므로 북한의 전쟁정책에 따라 민간인 납북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Ⅲ. 제4의제에 대한 협상

문제의 근원은 6·25전쟁이 기존의 전쟁과는 달리 이념대립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

는 내전(內戰)과 국제전(國際戰)이 혼재된 전쟁이었고,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민간인 납북’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을 공산측으로 부터 받아내지 못한 데 있다.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왜곡시킨 것은 정통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모든 비전통적·비인도적 행위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공산측의 이념투쟁의 결과이지만, 전쟁의 성격과 종결방식 특히, 휴전협상 과정에 본 사안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1. 양측의 휴전협상 전략과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의제화 실패

1951년 5~6월에 전선이 고정되고, NSC 48/5가 같은 해 5월 17일에 채택되면서 미국은 협상에 의한 전쟁종식을 추구하였다. 공산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sup>24)</sup> 휴전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규정한 정치적 목적은, 애치슨(Dean Acheson)의 표현을 빌리면, “침략을 저지하고, 한반도 통일은 시간을 두고 정치적 해결에 맡겨 두는 것”이었다. 하위차원의 군사전략 및 전술은 공산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가하면서 전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sup>25)</sup> 소위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라”는 식의 진지전과 소모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협상전략도 필요시 무력을 과시하여 조기에 휴전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일종의 ‘혼합전략’ 이었다.<sup>26)</sup>

그러나 공산측의 입장은 달랐다. 비록 다대(多大)한 인적·물적 자원의 손실을 입고 사태가 심각한 난국으로 표류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았지만,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만조기에 있었기 때문에 투지는 왕성하였다. 따라서 공산측은 “벽에 몰린 미제가 휴전제의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전하면서 “군사투쟁과 정치투쟁을 병행하며, 군사와 회담을 결합하고, 군사작전으로 회담을 재촉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초위에 조선문제의 해결을 쟁취한다”는 마오저동(毛澤東)의 지도방침을 채택했다.<sup>27)</sup> 이때 그들이 채택한 군사전략은 ‘지구작전(持久作戰)’과 ‘적극방어(積極防禦)’였다. 즉, “조선에서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한편으로는 적극방어의 수단으로 적군의 유생역량(有生力量)을 대량 살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장비개선과 훈련의 강화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켜, 점차, 적군과 아군의 전력대비를 바꾸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거나, 또는 적군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물

24) 한국전쟁의 제한과정과 요인, 당사국들의 입장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허만호, “한국전쟁의 제한요인들과 지정학적 잔영”, 『國防論集』, 1991년 가을 제15호, 한국국방연구원.

25) Library of Congress, *Soviet Diplomacy and Negotiating Behavior: Emerging New Context For U.S. Diplomacy* (Study Prepared by the Senior Specialists Divis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1979), p. 250.

26) 혼합전략(mixed strategy)은 복잡한 협상에서 요구되며, 정반대(antithetical) 전술을 사용해야 되므로 협상자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전술에는 일반적으로 대립전략에서 화해전략으로 변경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순차전술(sequencing in time), 공격으로는 대립 전략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화해전략을 추구하는 양면전술, 핵심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확고히 언명하지만, 실현방법에서는 융통성을 보이는 확고한 융통성 전술(firm flexibility) 등이 있다. 그리고 상호간의 이해와 욕구를 솔직하게 비교하여 문제해결 내지 양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실무관계(working relationship) 개발 전술이 있으나 상호 높은 수준의 신뢰가 필요하다.

2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991, 세경사, p.172; 본서의 원서는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軍事科學出版社, 1988.

러나게 한다”는 것이었다.<sup>28)</sup> 따라서 그들이 채택한 협상전략은 전쟁터에서 얻지 못한 것을 회담장에서 얻고자 하는 ‘대립전략’이었다.<sup>29)</sup>

공산측 휴전회담 최고 현장지휘자 리커농(李克農)은 휴전회담 첫 회의가 열리기 전 대표단 회의 연설에서 “담판(談判)은 곧 전쟁이다. 단 무력의 전쟁이 아니라 문(文)에 의한 전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0)</sup> 실제 공산측은 전장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을 휴전협상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 관철시키려 온갖 전술들과 기법들(devices)을 다 사용하였다.<sup>31)</sup>

김일성은 1951년 7월 2~3일 중 적에게 협상개시 시기를 제시하며 다음 6가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1) 전투행위 중지시기, 2) 38도선 남북으로 각각 5~10킬로미터씩 철수, 3) 전투중지와 함께 38도선 상공의 비행일경 금지, 4) 조선영해에서의 해군력 철수 및 봉쇄 해제, 5) 2개월 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6) 포로교환, 강제이주주민의 귀환.<sup>32)</sup> 즉, 북한은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국의 민간인 문제에 대해 ‘강제이주주민 귀환’이라는 항목으로 의제화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군 측과의 타결안에는 이 항목이 빠졌다. 유엔 측이 제17차 회담(1951. 12. 30)에서 처음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공산측 대표 이상조(李尙朝, 당시 북한인민군 경찰국장, 소장)가 먼저 민간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측이 북한주민 50만 명을 납치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제11차 회의에서 3회, 14차, 17차, 19차, 20차, 21차, 22차 회의에서 각 2회, 23차, 30차, 33차, 44차 회의 등)도 그 반영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성은 휴전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유엔군 측 대표단에 휴전회담에서 납북민간인 문제를 의제화 할 것이지만 납북 민간인 송환요청이 협상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지 말아야 하며, 이 주제에 대해 휴전 체결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논쟁은 삼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sup>33)</sup> 즉, 유엔 측은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갖고 협상에 임했던 것이다. 이는 교섭구도(bargaining set)에 대한 상대방 협상가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수단인 최초제안(initial offer, openers)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세력 균형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의 힘과 저항을 시험해 보는 주요기법들 중의 하나인 최초입지 강화(strengthening the start position)에 결정적으로 불리했던 것이다.<sup>34)</sup>

2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위의 책, pp.172-173.

29) 대립전략(confrontation strategy)은 욕구가 강하거나 감정의 끈이 깊을 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강할 때, 협상대안의 폭이 좁을 때, 지명권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때나 지명권자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때, 상대방과의 열망 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날 때, 협상이 영합(零和, zero-sum)의 특성을 가질 때 택하는 전략이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전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쟁’과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해 확고히 언명(commitment)하고, 상대방의 양보가 없으면 회담결렬 혹은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상대방의 위협에 대해 역위협(counter-threatening)하는 행위 등이다.

30) 시성문·조용진 지음, 운영무 옮김, 『판문점담판』, 한백사, 1991, p. 154.

31) 이병주, 「한국전쟁 휴전회담 신석: 중국 측 신 자료로 본 공산군 측 협상전략, 전술」, 『중소연구』 (통권 58호), 1993 여름, pp. 217-218; Admiral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국토통일원, 『공산측의 협상행태』, 1988.

32) 「북한주재 소련대사 라즈바예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 7. 1」 (모스크바 새증언 23), 『서울신문』, 1995년 7월 18일자.

33) 795.00/12-551; Telegram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1. 12. 5), F.R.U.S., 1951, Volume VII Korea and China Part 1; 이미일 (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9), pp. 986-987.

34) 최초입지 강화는 협상이 실제로 시작되기 이전에 입지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

## 2. 휴전협상의 구조와 대표단 구성의 문제

휴전협상 대표단 구성에서 공산측과 유엔 측은 대조를 보였다. 즉, 공산측은 중앙정부의 지령을 직접 접수받아 막후에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회담내용을 조종하는 지휘반과 회담장에서 공산군 대표로 실제 표면에 나서 협상을 진행하는 대표반을 현장에 모두 설치하여 협상의 정치적 목표와 전황 및 협상현장의 진행을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었다.<sup>35)</sup>

저우언라이(周恩来)는 마오저둥의 재가를 받아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 겸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 정보부장으로 있던 리커농(李克農)으로 하여금 지휘반 요원들을 선발하게 했다. 리커농은 1928년 이래 각종 국공회담에 참여하여 협상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조수로 국제문제에 밝았던 차오관화(喬冠華, 외교부 정책위원회 부회장 겸 국제신문국장)를 선발했다. 실무공작 담당자로는 하버드대학 출신 경제학 박사인 푸산(浦山)과 신화사의 덩밍(丁明), 천젠투(沈建圖)를 임명했다. 그리고 리커농은 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협상진행에 참고하고 연계시키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의 참모를 파견 받아 지휘반에 배속시켰다.<sup>36)</sup>

이와 같이 정치협상, 국제문제, 정보분야의 전문가를 배후에 배치하고, 군 지휘관 출신을 표면에 내세우는 2중 구조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정치, 선전, 군사를 긴밀히 배합함으로써 휴전협상을 정치목적에 이용하면서 군사적으로도 최대한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sup>37)</sup>

그에 비해 유엔군 측은 미국 행정부가 협상현장을 원거리에서 직접 통제하는 구조를 취했다. 심지어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회담 대표단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 무초(John J. Muccio)와 정치고문 시볼드(William J. Sebald)를 협상장에 상주시키려 하자, 워싱턴에서는 휴전회담이 군사적인 차원을 벗어난 정치적 회담이라는 인상을 공산주의자들에게 주게 되고, 시볼드는 당시 대일본 평화조약 문제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문제가 휴전회담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sup>38)</sup> 즉, 당시 미국정부의 입장은 공산측에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고, 협상의 범위를 ‘군사문제’에 한정시키기 위해 군 장교들이 협상을 전담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교적 경험이 없는 군 장교들이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위 당국에 협상단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회담통제체도를 개발하고, 유엔군 측 대표단의 모든 발언은 미국 대통령의 방침을 따르도록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sup>39)</sup>

---

된다. 첫째,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때로는 상대방과 함께 창출하는 방법. 둘째, 적절한 권력핵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정치적 접근과 정치적 직관. 셋째, 가시적인 성공, 비공식적인 권위, 계층상의 위치, 신뢰성이나 인간적인 매력을 활용하는 방법. 넷째, 협상가의 동맹자나 여타 유력인사(stakeholder)로부터 지원을 획득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5) 시성문·조용전(1991), pp. 128-133.

36) 이병주, 「공산군 측과 한국전쟁 휴전회담: 스탈린 모택동의 협상지도와 전략적 목표의 차이점」, 『군사』 (제5호), 2003. 6, pp. 85-87.

37) 시성문·조용전(1991), pp. 128-131.

38) 김원권·김병곤, 『한국전쟁 휴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43.

39)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저,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UME III THE KOREAN WAR PART II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와 국가정책 제3집, 한국전쟁 하권)』, Historical Division Joint Secretariat Joint Chiefs of Staff, 1991, pp. 38-39.

<표 5> 휴전회담 양측 초기 대표단

구성내용	개최기간	대표단		
		유엔군	공산군	
본회담	1951. 7. 10 ~ 1953.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 Turner Joy(수석대표, 1951.7.1~5.22): 극동지구 미 해군사령관</li> <li>○ Henry I. Hodes : 미 8군참모부장</li> <li>○ Arlergh A. Burke : 극동지구 미 해군 참모부장</li> <li>○ Sawrence C. Craigie : 극동지구 미 공군 부사령관</li> <li>○ 백선엽 : 한국군 제1군단장<sup>40)</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일(南日, 수석대표): 북한군 총참모장 겸 부수상</li> <li>○ 이상조(李相朝) : 북한군 육군소장</li> <li>○ 장평산(張平山) : 북한군 제1군단 참모장</li> <li>○ 덩화(登華) : 중국군 제15집단군 사령관</li> <li>○ 제팡(解方) : 중국군 북동군관주 선전주임</li> </ul>	
분과위원회	제2의제 분과위원회	1951. 8. 17 ~ 1951.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nry I. Hodes : 미 육군소장</li> <li>○ Arleigh Burke : 해군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조 : 북한군 육군소장</li> <li>○ 제팡 : 중국군 소장</li> </ul>
	제3의제 분과위원회	1951. 12. 4 ~ 1952. 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ward M Turner : 미 공군소장</li> <li>○ Henry I. Hodes : 미 육군소장</li> <li>○ Rutheven E. Libby : 미 해군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조 : 북한군 육군소장</li> <li>○ 장춘산 : 북한군 육군소장</li> <li>○ 제팡 : 중국군 소장</li> </ul>
	제4의제 분과위원회	1951. 12. 11 ~ 1952. 3.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utheven E. Libby : 미 해군소장 (보좌: G. W. Hichman 대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상조 : 북한군 육군소장 (보좌: 차이청원 중국군대좌)</li> </ul>
참모장교회의	1951. 11. 30 ~ 1952.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ames C. Murray : 미 해군중령</li> <li>○ Don O. Darrow : 미 공군대령</li> <li>○ Andrew J. Kinney : 미 공군대령</li> <li>○ A. M. Butler : 미 육군대령</li> <li>○ G. W. Hickman : 미 육군대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순관 : 북한군 해군대좌</li> <li>○ 장춘산(張春山) : 북한군 육군소장</li> <li>○ 오홍산 : 북한군 대좌</li> <li>○ 뿌산(浦山): 중국군 대좌</li> <li>○ 차이청원(柴成文) : 중국군 대좌</li> <li>○ 이평일 : 북한군 대좌</li> </ul>	
연락장교회의	1951. 7. 8 ~ 1953.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drew J. Kinney : 미 공군대령</li> <li>○ James C. Murray : 미 해군 중령</li> <li>○ Don O. Darrow : 미 공군대령</li> <li>○ 이수영 : 한국군 육군중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춘산 : 북한군 육군소장</li> <li>○ 김일파(金一波) : 북한군 중좌</li> <li>○ 차이청원: 중국군 대좌</li> </ul>	

출처 :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pp. 53-54

그러나 조이 제독(Admiral C. TURNER JOY)이 지적하는 것처럼 유엔 측의 이러한 중앙

40) 한국군 대표는 백선엽 이후 4명이 바뀐다. 1. 백선엽(1951. 7. 8 ~ 10. 24) 2. 이형근(1951. 10. 24 ~ 1952. 2. 6) 3. 유재홍(1952. 2. 6 ~ 5. 28) 4. 이한림(1952. 5. 28 ~ 1953. 4. 26) 5. 최덕신(1953. 4. 26 ~ 5. 16), 하재평,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사의 역할」, 『전사』 (제5호), 2003. 6, pp. 28-29.

통제적 의사결정 구조는 휴전회담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던 유엔군 대표들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워싱턴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 워싱턴의 지시는 일관성이 부족해서 유엔 측 대표들을 때때로 곤혹스럽게 만들었다.<sup>41)</sup>

그러나 휴전협상 대표단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한국 측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특히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다룬 제4의제 분과위원회의 경우, 공산측은 이상조가 대표였는데 반해 한국대표는 배석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sup>42)</sup> 그 결과 정작 납북피해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sup>43)</sup> 그리고 공산측 대표 이상조는 제4의제에 관한 분과위원회 제43차(1952. 1. 25) 회의에서 “그들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까지 할 정도였으며, 유엔 측은 비록 초기이기는 했지만 공산측 포로들을 분류하면서 남한 출신 민간인들을 포로로 분류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sup>44)</sup>

### 3. 공산측의 협상행태와 유엔 측의 3단계 실책

2년에 걸쳐 525회의 회담을 하는 동안 공산측은 다음과 같은 협상행태상의 특성을 보였다.

공산측은 협상을 주저하지도 않았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도면밀한 정지작업을 하였다. 체면유지와 유리한 협상조건으로 생기는 실제상의 이득을 중요시하여 회담이 개최될 외형적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 진력(盡力)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체제는 특정 협상가 개인에게 결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교리(doctrine)를 추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협상에서는 교리가 적용되지 않고 협상가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협상대표단 선발에 지극히 신중을 기한다. 그들이 협상대표단을 선발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지력(理智力)이고, 명성, 지위, 직위 등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휴전회담에 참석했던 공산측 대표들은 논리, 끈기, 냉정한 행동 면에서 탁월하였으며, 정식대표들 뿐만 아니라 참모장교들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들로서, 상관들보다 실질적인 협상을 더 많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협상과정에서 공산주의 교리를 추종함에 있어서는 중국 측 인물들보다 북한 측 인물들이 더 맹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중국 측 수중에 있으므로 그들은 창의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반해, 북한 측은 추종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산측은 사전정지작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후에 토의할 의제가 그들의 목표에 유리하게 결론 지워 질 수 있도록 짜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통상, 의제는 토의되어야 할 문제들

41) Admiral C. Turner Joy(1955) ; 국토통일원(1988).

42) 차이칭원은 그의 저서에서 “백선엽, 이수영은 두 사람 모두 미군이 길러낸 청년 장교로 순전히 결다리로 와 앉아 있었다. 백선엽은 죠이(C. Turner Joy) 바른 편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쪽지를 써서 의견을 구할 때는 왕왕 그를 건너서 호즈(Hodes)에 건네주곤 했다. 이수영은 더더구나 그들이 완전히 무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시성문·조용진(1991), pp. 155-156.

43)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2011), p. 9.

44) 위의 연구보고서, p. 10.

의 열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결과는 나중에 합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측은 협상상대방을 처음부터 수세에 몰아넣고, 실리를 취하려고 결론을 미리 삽입한 의제를 제시했다. 그 예로 남일(南日)은 회담 초에 다음 두 가지를 토의항목으로 제의했다. ① 38°선을 쌍방의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적대행위중지의 기본적 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 ② 한국으로부터의 전(全) 외국군 철수.

비록 10차례에 걸친 본회담에서의 설전(舌戰)을 통해 ‘결론이 내포된 의제’의 상정은 막을 수 있었으나, 공산측이 의제항목의 열거순위를 이용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즉, 분계선 설정에 관한 항목을 다른 항목에 선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인 남북문제를 포함한 여타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없이 사실상의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산측은 이 시기를 전선 안정에 이용하고, 자신들이 불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연전술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산진영 협상가들은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상대측의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일단 과업이 시작되면 이를 완수하려는 서구인들 특유의 성급함과 조급성을 공산주의자들은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 휴전회담에서도 그들은 미국인들의 성급한 기질을 자극함으로써 실리를 얻으려 했다. 실제로 그들은 확실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미국 행정부로 부터 축차(蓄次)적인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공산측은 유엔 측으로부터 남한 출신 민간인 송환에 관한 대부분의 핵심사항에서 양보를 받는 대신 외국 민간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제61차(1952. 3. 5) 회의에서 공산측은 외국 민간인 송환에 대해 약속하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특히 유엔 측이 외국 민간인 억류자들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을 간파한 공산측은 외국 민간인 억류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것으로 모든 민간인 문제에 대해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그 외 남북자 송환에 대해서는 끝까지 협상에서 배제시켰다.

공산주의자들도 협상행위의 본질에는 상대방의 어떤 제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속셈에서 약정(約定)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감시·감독 장치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기도 했다. 민간인 남북자들을 실향사민으로 호도하며 남북 당사자들의 귀환 의사를 묻고, 귀환 협조 의무 이행을 감시·감독할 제도적 장치 없이 휴전협정문에 실향사민 조항을 규정한 뒤,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진실이란 아무리 숨기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될 수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기법을 자주 사용했다. 그들의 진실왜곡기법은 하나의 과학이 될 정도로 세련되어 있었다. 기본적인 수법은 사실의 전체 중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해 내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논리에 따라 이들을 재조립함으로써 전체적인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새로운 결론을 유도해 내는 것이었다. 남한민간인 남북자들에 대해 친구와 친인척을 찾아 혹은 전쟁을 피해 약간 명이 자진 입북했다거나, 남한민간인을 강제 징집하고는 그들이 의용군이고 “인민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조국을 위해 진실로 싸우는 우리 인민군에 지원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시켰다(제4의제에 관한 분과위원회 제22차 회의, 1952. 1. 4). 그 뿐만 아니라 공산측은 월남한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유엔 측에서 납치하여 처참한 여건 속에서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고 매도하였다.

협상의 본질은 양보의 상호교환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의 양보를 협상력의 약화로 간주하고 더욱 완강한 태도를 취했다. 유엔 측은 남북 남한민간인 문제로 휴전회담이 난항을 거듭하자 공산측 지역에 있는 남한민간인들에 관한 어떤 정보를 준다면 민간인과 전쟁포로와의 교환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34차, 37차, 38차 회의에서 언급하고, 47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양보하였다. 유엔 측은 양보를 얻어낸 공산 측은 제61차 회의(1952. 3. 5)에서 중립조사팀의 조사와 감독,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빠진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제62차(1952. 3. 6) 회의에서 외국 민간인 송환만 포함된 개정안이 최종합의안이 되었고, 실향민간인 송환에 대해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문 제3조 59항에 ‘실향민간인귀향협조위원회’를 두어 귀향을 원하는 민간인들을 적극 돕는다는 조항을 두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실향민간인을 송환하기로 한 날 북한은 단 한명도 송환하지 않았다.<sup>45)</sup>

공산주의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요구조건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는 흔했다. 즉, 친편일몰적으로 단조롭고, 화가 날 정도로 우둔한 내용의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마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가 결국 바위를 깎아내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지치고, 세뇌 당하도록 하는 협상기법을 썼다.

휴전회담 기간 중 공산측은 ‘38선을 휴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 개성회담장 문제, 포로송환 문제 등에서 이 기법을 썼는데, 개별사안에서는 난관에 부딪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차후 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상대측이 이때 느꼈던 지루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유엔군 측은 ‘38선에 휴전선을 설치하자’는 공산측의 집요한 주장을 물리치기는 했으나, 중요한 현안들이 해결되기 전에 휴전선 설정에 동의하는 실책을 범했고, 지리 했던 포로문제에서 성공하는 대신에 비행장 건설 금지 및 공중정찰 조항을 포기하고 말았다. 즉, 공산측은 유엔군 측의 관심분야를 한쪽으로 경도 시키거나, 정책수립자들을 인내의 한계점까지 몰고 가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든 것이다. 1952년 2월 5일 제54차 회의에서 공산 측은 실향민의 자원적 송환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마저 반대하였고, 공산측의 지연작전과 거짓에 지친 유엔 측은 남북 민간인 송환협상을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런 공산측의 협상기법은 유엔 측으로 하여금 남한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회담을 결렬 내지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의제화 시킬 엄두도 못 내게 하였다.

민간인 납북자 송환문제는 이상 살펴본 일반적인 협상론과 공산주의 진영의 협상기법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민간인 납북자 송환문제가 협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즉,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휴전협상에 반대하며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남한민간인 납북자 송환문제를 의제화 시키려는 의지가 약해서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둘째, 휴전협상 초기에 의제를 설정하는 시점에서 남한민간인 납북자에 대한 한국정부나 유엔 측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논리적 주장이 약했다. 한국정부가 민간인 납북자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것은 공보처 통계국이 1950년 12월 1일에 한 것이다. 그런데

45)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2011), pp. 37-38.

이때 작성한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를 통해 한국정부는 고작 2,438명의 납북자들만 파악하고 전국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 1951년에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6·25피납치인사명부」를 작성하여 겨우 2,316명의 인적사항만을 확보하였다.

1952년에 접어들어 한국정부는 전국에 걸쳐 82,959명의 「6·25사변피납치자명부」를 작성하였다. 아직 문서의 실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초 대사가 1952년 1월 4일에 유엔전방사령부(CINCUNC ADVANCE)에 보낸 전문에 ‘126,325명(납치 36,472명 / 강제성 의용군 또는 청년대 73,613명 / 자원적 의용군 16,240명)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고, 복사본이 이 장군 [General Lee (ROKA)]에게 1952년 1월 8일 이후에 전달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52년 초에는 전국 규모의 실태 파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그러나 이 시점에는 이미 미국의 조속한 휴전방침이 확정되어 있었고, 남한 민간인 납북사실을 철저히 부정하는 공산측을 상대로 하여 휴전을 서두른 미국은 휴전회담이 결렬 될까 우려하여 ‘납치’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sup>47)</sup>

셋째, 전시 남한민간인 납북자 송환문제가 유엔 측의 전체 협상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유엔 측 협상가는 공산측에 강한 언명(firm commitment)도 하지 않았고, 공산측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도 만들지 않았다.

리지웨이 장군은 포로와 민간인 석방 목표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합참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합참은 리지웨이 장군의 질문에 어떤 결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합참은 포로보다 민간인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 리지웨이 장군은 민간인을 포로송환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반발도 의식하고, 미국 국내단체들과 유엔 회원국들의 압력을 받고 있던 미국정부의 지시로 민간인 교환 문제를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다. 그래서 리지웨이 장군은 민간인 납북자 문제들 중에서 외국 민간인과 한국 정부요원의 석방을 공산측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었다. 그러나 공산군 수중에 있는 다른 남한민간인 납북자들에게는 낮은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sup>48)</sup>

#### 4. 유엔 측의 협상과정 상의 3가지 과오

힘을 숭배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이다. 그들은 협상에 있어서 힘을 ‘알파’와 ‘오메가’로 보고 있다. 그들이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것은 ‘힘의 상관관계’라고 부르는 서구식의 ‘세력균형’으로서, 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모든 힘을 합친 총체적인 힘을 의미한다.<sup>49)</sup> 북한도 ‘대군주의(大軍主義)’로 불릴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장 중요시 하고

46) Telegram sent to CINCUNC ADVANCE by US Ambassador Muccio on Jan. 4, 1952, 이미일(2009), p. 984.

47) 795.00/12-1151, Memorandum by the Deputy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McClurkin) to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Johnson), TOP SECRET, [Washington,] December 11, 1951, Subject: Disposition of Korean Civilians under Item 4, 이미일 (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집 2, (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9), pp. 986-987.

48)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1991), p. 129.

49) Library of Congress, *Soviet Diplomacy and Negotiating Behavior: Emerging New Context For U.S. Diplomacy* (Study Prepared by the Senior Specialists Divis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있음을 6·25전쟁 후 전개된 남북대화의 단속(斷續)이 한반도 세력균형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sup>50)</sup>

이러한 힘의 승배는 협상의 모든 수준에서 적용되며, 매 협상에서 ‘힘의 작용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협상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힘을 승배하는 태도는 역으로 약자에 대한 경멸과, 불확실한 역학관계에서는 편집광적으로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1)</sup>

휴전회담에서 유엔 측은 민간인 납북자들을 2부류로 나누어 거론하였다. 먼저, 선교사 등 종교인, 외교사절단 등, 외국국적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55명의 명단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공산측에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이상조는 이 외국국적 민간인들에 대해 ‘그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custody (보호, 관리, 구금)” 하고 있는데, 군사회담의 주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석방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R. E. 럽비 (RADM Ruthven E. Libby, USN, 미 해군소장) 제독은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석방할 것’이라는 답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를 휴전협정문에 삽입하자고 제안 하였다.<sup>52)</sup>

그런데 남한 민간인 피랍자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hold(구류, 수용)" 하고 있는 약간의 대한민국 시민들의 문제를 이 의제(4번 의제: 포로문제) 하의 논의를 위해 내놓고 싶다.’ ... 민간인 문제를 귀측에서 거론했으므로 못 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이동한 민간인들 (displaced civilians)"이 휴전 중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자는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이상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민간인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회담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유엔 측에 떠넘겼다.<sup>53)</sup>

유엔 측은 민간인 납북자들에 대해 “납치되었다”는 표현은 안 썼으며, 외국국적인들과 남한인들에 대해 다소 다른 표현을 썼다. 1951년 12월 31일 회의에서는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외국국적의 이들을 “수인으로 억류한(took into custody as prisoners)"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남한 민간인 피랍자들에 대해서는 “구류” 혹은 “수용”을 의미하는 “hold”, “이동한 민간인(displaced civilians)"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1952년 1월 1일 회의에서는 남한 민간인들이 납북된 사실에 대해 전쟁의 여파로 많은 시민들이 “북쪽으로 쓸려갔다(many of these civilians were swept northward in what might be termed the backwash of war)"는 표현을 썼다.<sup>54)</sup>

이와 같이 남한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유엔 측의 협상태도에 공산측이 긍정적으로 임할 리 없었다. 특히, 전시(戰時) 월남인들을 유엔 측에 의한 ‘북한민간인 납남자(拉南者)’로 매도하며 공산측에 의한 남한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자는 유엔 측의 제안을 봉쇄하였다. 그 한 예로, 1952년 1월 1일 회의에서 럽비(Libby) 제독이 민간인 (“납북된 민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979), pp. 521-522.

50) 허만호, “북한의 협상행위의 특징 -이론적 괴리와 규칙성-,”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論叢』 제36집 2호(1996), p.207.

51) 허만호(1996), pp. 207-208.

52)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5권(휴전회담회의록 5: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 pp.303-305.

53)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5권, 위의 자료집, pp. 307-308.

54) 1952년 1월 1일 회의,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5권, 위의 자료집, pp. 331-332.

간인”이라는 표현도 못 쓴 채) 석방문제를 거론하자, 이상조는 “민간인 석방문제를 거론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데려간 5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석방하겠다는 말이냐”며 역공을 하였다. 이는 협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마타도어 전술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와 같이 전시 북한월남인들을 협상에 활용한 것은 휴전협상에서 유엔 측의 열망수준(level of aspiration)을 감소시킬 의도로 저수준의 호가(呼價, offer)와 고수준의 요구(demand)를 한 것인데, 공산측의 입장에서는 타결의 개연성은 낮아지나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 시도한 협상전술이다.<sup>55)</sup>

협상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유엔 측, 엄밀히 말해 미국은 전시(戰時)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협상전략 및 행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해 협상결과가 미흡하게 귀결된 것은 미국의 ‘실수’가 아니라 ‘과오’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저지른 실책의 첫 번째 단계는, ‘공산측 포로와 유엔측 포로를 1대1로 교환하는데, 유엔측 포로의 부족 인원을 민간인 납북자로 하자’는 초기 제안을 1952년 1월 6일에 개최된 휴전협상에서 포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적십자를 통해 포로들에게 송환여부를 묻는 절차도, 북한 포로들에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면서 “1대1 교환이 아닌, 자발적 결정에 의한 전원 교환”으로 입장을 바꿈으로써 공산측으로 하여금 민간인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극히 “소수의 민간인”이라고 지칭했던 납북자들의 의사도 왜곡 시키는 등, 상황을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였다.

실제, 휴전협정 제59항의 조문 중에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우려했던 것처럼 공산측은 선전방송을 통해 ‘귀향을 원하는 자는 1명도 없다’고 하며 민간인 납북자들을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는 “이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여니와 이에 대하여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인도를 주장하는 유엔측의 당연한 임무인 것이다. 처음부터 휴전협정 제 59항의 규정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것은 귀향을 “원하는” 자에 한하여 송환한다는 문자자체에 있었으니 즉 공산측은 “원하는”이라는 문자를 악용하여 하나도 “원하는”자가 없다고 주장할 것은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또는 공포정치 하에 있는 공산지역에서 아무리 형식상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고 손을 들 사람이 없을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59항의 규정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의 규정이었던 것이다”고 비판하였다.<sup>56)</sup>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납북자들이 송환을 원한다는 것을 공산측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자고 주장하였다.

듣건대 가족들의 주선으로서 일부 저명인사들의 명부는 이미 작성되어있다 한다. 그렇다면 유엔측 위원은 이 명부를 미리 적측에 제시하여 그 기재인사들의 안부정보의 제공을 강경히

55) 최초제안은 교섭구도(bargaining set)에 대한 상대방 협상가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협상의 요구와 결과는 역U형(逆U型) 그래프를 형성한다. 그런데 최초제안의 신뢰수준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저수준의 호가(offer)와 고수준의 요구(demand)는 상대방의 열망수준(level of aspiration)을 감소시킬 의도로 제안하며 타결의 개연성은 낮아지나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은 있다.

56) “민간인송환과 공산 측 태도,” 「동아일보」, 1면 사설, 1954년 02월 19일자.

요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송환 개시 전에 송환을 “원한”사람의 명부를 제출케 하여 이를 원 명부와 세밀히 대조하고 누락된 사람의 행방에 대하여 엄격히 추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공산측에서 납치인 일부가 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구실을 제공할 때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sup>57)</sup>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저지른 두 번째 실책은 공산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1952년 1월 10일에 개최된 휴전회담에서 북한이 전쟁포로와 사민을 교환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이 교전 시에 북으로 데리고 간 남한 사민들 즉, 납북자들을 풀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도 이에 대한 강제이행 조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납북자들에 대한 귀환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 1) 적십자사가 한국 사민들을 인터뷰하게 하면, 수만 명의 이런 사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할 것이고, 2) 북한이 경제적, 군사적인 용도로 강제징집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며, 3) 또한 군사잠재력으로 쓸 수 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싫어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 우려해서 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동아일보」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실향사민” 이외에 공산측이 강제로 납치한 비전투원의 송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피랍민간인은 “실향사민”이 아니라 비법(非法)적인 포로라고 규정하고, “그들은 전란에 쫓기어서 실향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산군 또는 공산경찰의 손에 체포되어 강제로 납치된 사람들이다. 비전투원을 강제 납치한 것이 국제법 위반의 만행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의미에서 피랍치자는 그 신분이 전쟁포로와 조금도 다른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체내바협정에 의하여 원주(原住) 측에 자연 송환되어야 할 것이며 백보를 양(보)할지라도 휴전협정의 정신에 의거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 되었어야 할 것이다. 휴전협정에 반드시 이 조목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강경히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확실히 유엔측의 중대한 과오다”고 비판하였다.<sup>58)</sup>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신들이 제안했던 사민귀환위원회(Civilian Repatriation Committee)에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으로 적십자사 국제위원회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과 중립조사팀(Neutral Inspection Teams)을 만들어 휴전협정 체결 후에 실향사민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협정내용을 이행 하도록 하는 것도 관철시키지 못한 실책을 범하였다.

#### IV. 결론

6·25전쟁의 휴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제1조 1~11항),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인 조치(제2조 12~50항), 전쟁포로 및 실향사민에 관한 조치(제3조 51~59항),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

57) “민간인 송환문제,” 「동아일보」, 1면 사설, 1953년 12월 08일.

58) “민간인송환과 공산 측 태도,” 「동아일보」, 1면 사설, 1954년 02월 19일.

의, 제4조 60항), 협정의 대체방법(제5조 61~62항).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휴전체제의 운영기구들의 구성과 역할 등, 평화조약에 포함될 내용이 많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6·25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평화조약의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 ‘손해배상’ 부분이 없으나,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보다 포괄적인 성격의 협정으로 대체될 개연성을 휴전협정 제62항에 기술하고 있으나, 현상타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큰 손색이 없다.

휴전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 미완결과 균열의 가능성을 지적하나, 이는 제도적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가 속해 있는 현상의 문제이다. 현상타파는 제도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휴전체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개전원인(casus belli)이 제거되지 않은 채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를 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 및 피 억류 한국군 포로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까지 ‘중전선언’ 안과 관련하여 전시 민간인 납북자 및 피 억류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전적으로 만들어지기 나름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현안들이나 그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규정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로 보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이어 받아 휴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중전선언을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협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 시킬 엄두를 못 낼 것이다.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 남북회담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및 피 억류 한국군 포로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한 것이나, 남북기본합의서를 남한 대표들이 거론하지 못한 것도 협상의 종류나 시기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주동성’을 추구하는 북한의 협상전략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은 북한이 설정하는 형식논리에 쫓겨 내용적으로 모순에 빠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평화정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반세기 이상 남북한 관계가 불가역적 적대자(Strident Antagonists) 관계를 형성하면서 합의들이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준수 혹은 폐기되어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들이 지속적으로 준수되어 제도적으로 안착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 및 피 억류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휴전협정 제59항과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와 제18조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행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완비되어 안정적으로 작동될 때, 남북한 양측이 이 기본합의서 체제로 휴전협정을 대체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현실성과 주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여타 북한의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 피 억류 국군포로 문제는 그것을 규정하는 국제적 규범과 남북한 간의 합의들로 해결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 규범과 합의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을 고려하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런 현실론을 고려할 때 여타 남북 현안들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보다 풍부한 협상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피 억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한 개별 사건이나 합의 가능한 사안 별로 나누어 접근하여 차차 일반적 규정력 (general binding force)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협상에서 각자가 갖게 되는 협상결과는 상대방에 의존하는 결과의존(outcome dependence)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어떠한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경우든 협상을 통한 가치나 자원의 증진과 재 배분은 상대방의 결정과 자신의 결정이 교차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합의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협상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상태도 상대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간의 협상은 관계증진과 상호 인식의 변화에 따라 협상일반론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군 포로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누리지 못한 20세기의 마지막 노예들이다. 그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념투쟁과 역대 한국정부 당국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의 희생양이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한국군 포로 송환문제와 전시 민간인 납북자 귀환문제에 대해 수동적이었다. 6·25전쟁 포로문제에 대해서는 1953년에 이승만 정부가 석방한 반공 북한군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북한이 맞대응 할 것을 우려해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월남민들을 '납남자'로 매도하며 맞대응 할 뿐만 아니라 해결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자포자기 하여 수동적이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이런 우려들은 극히 지엽적이며, 남북한 관계가 언제까지나 협상이 불가능한 '불가역적 적대자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당시 한국에 있던 미전향장기수들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군 포로들을 교환하는 방안을 공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전향장기수들은 이산가족 재회사업과 거래되었으며, 한국군 포로 문제는 여전히 원점에 머물러 있다. 그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가 남북한 간의 공식대화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 문제를 의제화 시키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국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게 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민간인 납북자들과 한국군 포로들은 하루를 단위로 하여 생존자들의 수를 달리 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있다. 김대중-노무현 2정부는 수 조원의 공적·사적 자금 지원을 북한에 했다. 이를 민간인 납북자들과 한국군 포로 문제 해결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기대와 국가책무'라는 명분과 '현실적 송환'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해결방안으로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Freikauf) 방식을 적용하여 본 사안을 해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그렇지만 협상가격을 낮추고 북한 위성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북지원에서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연계 시켜야 될 것이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휴전체제를 평화체

제로 전환 시키는 작업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 갈 것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제도적 틀의 변화가 아니라 평화를 공고히 하고 남북한 간의 새 역사를 여는 작업이라면, 본 사안들은 대북정책상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가 되어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에 접근하는 데 방향과 거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메 모

메 모

# 한국전쟁에서 경찰의 참전 실태

## Entry into the Korean War by the Korean Police

강윤식(경찰교육원)·이정훈(영남이공대)

Yun-sik Gang(Police Training Institute)·Lee, Jung Hun(Yeungnam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 I. 서 론

모든 전쟁은 총력전이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역량이 결집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사활을 걸고 국력을 쏟아 붓는다. 그러나 전쟁은 군에서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 전쟁에서 별 역할이 없는 것으로 통상 생각한다.

전쟁과 경찰. 이 또한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경찰이 전쟁 중에 하는 일이란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간첩색출 등 치안유지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6.25 전쟁기 현직 경찰관 24,558명의 사상자와 경찰 지원병력 8,5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군과 함께 전쟁피해국인 신생독립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켜냈다.

미국경찰이 179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순직자 수가 18,661명<sup>1)</sup>이고 1680년부터 2010년 사이 영국경찰 순직자 수가 1,600명<sup>2)</sup>인 것을 감안하면 무척 많은 순직자이다. 당시 경찰관의 1/2 가량이 전쟁으로 사상을 입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만큼 치열하게 군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다.

군의 전쟁수행은 비교적 소상하게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평가받는 반면 경찰의 희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면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 당시 경찰 희생자 수나 경찰의 전과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경찰이 어떤 의미의 작전을 수행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경찰역할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 의미, 한국전쟁 전 경찰의 역할과 현황, 전쟁 중 경찰조직 및 교육현황 분석, 그리고 경찰의 작전 현황을 살펴보고, 전쟁 초반기, 반격기, 유격기, 낙동강 사수기 및 공비토벌기 등으로 시기를 나누어 경찰의 작전수행 활동들을 분석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한국전쟁 전과 전쟁 중으로 나누어 각 시기별 경찰활동을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개전 초기 새벽에 적의 상륙작전에 맞서 최초의 전사자가 경찰에서 나온 동해안 정동진 초소의 방어작전, 38도선 일대에서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죽음

1) 미국 국립경찰관기념관(National Law Enforcement Officers Memorial) 순직자 각인 대리석 명판에 기재된 순직자.

2) 영국 국립순직경찰추모관(National Police Memorial) 순직자 각인 명판의 순직자 수.

으로써 적의 진격을 일시 저지시켜 아군의 지연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혈투, 지연작전 중 적의 한복판에서 과감히 펼친 반격작전, 개전 초기 군에서도 제대로 수행 못한 경찰서 단위의 일사불란한 적진 한복판의 유격전, 국방부와 육군본부마저 부산으로 철수한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를 사수한 내무부 1만 5,000여명의 치안국 병력의 대구사수작전, 제2전선이 전개된 후방에서 빨치산을 토벌은 물론 구레 화엄사를 비롯한 문화재를 지켜냈고, 휴머니즘을 발휘하며 전쟁 수행목적의 근본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라는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경찰작전 등 피가 튀는 격전의 현장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힘쓴 경찰작전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를 통해 6.25전쟁과 밀접한 시기에 발간한 내무부 치안국 발행의 ‘한국경찰사(1973)’과 이를 토대로 자료를 보강한 윤장호의 ‘호국경찰전사(1995)’, 6.25전쟁에 직접 참가한 참전경찰유공자회 발행의 ‘아~살아있다, 한국경찰의 혼(2003)’, 허남오의 한국경찰제도사(1998) 등을 참고하였고, 기타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여하였던 전투경찰지휘관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경찰종합학교 발간 ‘차일혁 총경 일대기(2008)’ 등을 참고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경찰역할의 역사적 변천

우리 나라의 근대적 경찰의 역사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관제직장」의 제정으로 한성부에 경무청이 신설되었고, 「행정경찰장정」에 따라 경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2: 319).

일제 강점기 시절에 경찰은 식민지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조선총독부의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명령권에 의한 각종 치안입법으로 전체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 및 특별고등경찰을 통하여 이념이나 사상을 통제하고 탄압하는데 이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그 폐해가 잔존하고 있다(조동운, :2).

미군정 시대에 있어서 1945년 10월 21일 경무국을 창설하고, 일제시대의 경찰 사무가 일반행정기관으로 이관되는 등 경찰사무의 비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통행금지 시간의 단축, 제복·제모·흉장·표찰의 착용, 경찰봉 휴대, 경찰가의 제정, 감찰조직의 강화 등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경찰개념이 강조되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역할과 활동이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에는 경무부를 치안국으로 격하되면서,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조기관, 1976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기까지 경찰의 역할과 활동은 시대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

해방이후 6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나라의 경찰체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열린 경찰,

투명하고 정직한 경찰, 친절한 경찰, 임무에 충실한 경찰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찰은 정부수립, 한국전쟁, 4.19혁명까지의 혼란기를 거쳤고, 남북분단에 따른 대간첩작전(간첩 및 무장공비 등이 육상, 해상, 공중으로 침투하는 것을 봉쇄하고, 침투한 적을 조기에 색출하여 섬멸하는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이만중, 2011: 150).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테러와 관련하여 대테러의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의 임무(박준석, 2009: 109)를 맡고 있다. 즉,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및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한 억제·예방·사후대응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남북한 평화정착 및 더 나아가 통일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찰에게도 부여된 중요한 임무와 역할 및 과제이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정착문제, 남북교류 활성화 및 대규모 민간인 왕래 성사 가능성 혹은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급작스런 통일실현 등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경찰의 치안확보문제가 새로운 임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한국경찰의 역할은 역사적 상황 및 발전과정 속에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다른 임무와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으며,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즉, 사법적·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신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했다(김진혁, 2004: 63-84).

## 2. 경찰의 역할과 분류

경찰임무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1991년 5월 31일에 제정된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와 1953년 12월 14일에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찰역할을 위하여 각 기능별로 범죄예방, 범죄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교통의 관리 및 단속,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보안·외사 경찰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적 치안행정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활동은 주로 사회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전문적 해결자로서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구원을 응원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이상안, 2005: 97)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을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보안경찰·사법경찰, 국가경찰·자치경찰, 비상경찰·평시경찰로 나눌 수 있고, 또한 보안경찰·사법경찰·교통경찰·소방경찰·해양경찰·전투경찰·풍속경찰·위생경찰·선거경찰·외사경찰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을 분류해 보면, 경찰이 평상시에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상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평상시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이고, 직무의 범위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단속의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역할과 활동에 있어 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으며, 치안행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2) 비상시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여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전국 또는 지방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의 목적에 따라 군사적 필요에 의한 군사계엄과 공안유지를 위한 행정계엄이 있는데, 행정계엄이 여기서 말하는 비상경찰에 해당된다. 이는 성질상 군령의 작용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다만 평시에도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비상경찰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다.

## Ⅲ. 한국전쟁 전·중의 경찰역할과 현황

### 1. 한국전쟁 전 경찰역할과 현황

#### 1) 경찰의 역할과 조직 현황

정부 수립 전의 경찰이 주요 임무는 좌익과의 투쟁을 통한 정부수립이었다. 미군정은 군대보다 경찰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경찰에게 보다 큰 임무를 부여하면서, 미국식 무기와 제복이 먼저 지급되었다. 국방경비대가 일본군의 제복을 입고 99식 또는 38식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던 반면에 경찰에게 칼빈 소총을 지급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경찰의 주요 임무는 보다 구체화되어 38선 경비와 신생정부의 준립을 위협하는 유격대 토벌과 좌익이 일으킨 각종 반란을 토벌하는데 있었기에 경찰의 전투는 당시 상황에서 특수한 임무로 받아들여졌고, 준군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48년 말부터 1950년 3월 말까지 유격대 토벌이 이루어 졌으며, 1949년 여름부터 북한군과의 38선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다.

광복과 함께 미·소 양군은 38선상에서 남북간의 주요 교통로를 차단하고 경비를 담당하였

는데, 경찰은 1949년까지 미 제6·7사단과 함께 38선 경비를 담당하였으나, 미군이 철수한 1949년에는 미군 대신에 국군과 함께 경찰이 38선을 경비하였다. 미군을 대신해서 38선을 경비하게 된 경찰은 경기도, 강원도의 경계선 부근의 경찰서와 지서를 보강하면서, 38선 지역에 지파출소 경비소를 증설하고, 1,200여명의 경찰관을 증원하면서 지서주임을 경위로 배치하였다.<sup>3)</sup>

1948년 10월 11일 강석천 내무부 차관보는 38선을 시찰하고 보고하면서 인민군 또는 보안대 등의 적 무장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의 수십명 또는 십여명의 경찰관은 양적으로 또는 장비로 보아 부족하므로 증원 경찰관을 저항부대로 편성하여 제2전선 지구요점에 작전 예비군으로 수백명씩 배치하여 서울을 주진지로 한 저항 경계지대 형태로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선 경찰부대에 대한 장비강화를 위해 중화기류에 속하는 기관총·박격포 등의 긴급 보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sup>4)</sup>

이에 경찰은 단지 카빈총으로만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소총을 보유한 인민군의 손쉬운 표적이 되므로 경찰에게 충분한 소총을 보급해 줄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여,<sup>5)</sup> 한국전쟁 직전에 카빈총 1만 8천여 정을 경찰이 보유하게 되었다.<sup>6)</sup>

한편 적 유격대 토벌도 정부수립기 경찰의 주요임무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 인민유격대의 침투는 1948년 11월 14일의 1차 침투를 시작으로 1950년 3월 28일 까지 1년 반 동안에 10회에 걸쳐, 2,345명이 침투하였다.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이중 2,000여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sup>7)</sup>

6.25전쟁 이전의 적 유격대 활동은 갓 설립된 남한 단독정부의 실질적인 존립의 위협요소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치안의 실지 완전 회복’을 위한 유격대 토벌작전을 군경 합동으로 전개하였다.

신생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유격대의 투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군사적 성격은 강화추세에 있었다. 경찰은 이미 여순사건의 발발당시인 1948년 10월 20일 치안국에 비상경비총사령부를 설치하고, 1949년 8월 1일에는 각도 경찰국에도 비상경비사령부를 두었다.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는 이안국장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치안국 기구를 전투편제로 전환하였으며, 각도 비상경비사령부도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시기 유격대 토벌은 호남 및 지리산 일대, 경북 일대 및 태백산지구, 오대산 방면, 제주도 방면 등에서 전개되었다. 경찰에서는 호남 및 지리산 일대의 유격대 토벌을 위해 1949년 3월 1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경북 일대 및 태백산지구에서는 1949년 9월 28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1949년 4월에는 철도경찰본대를 설치하여 주요 철도역에 철도경비대를 두어 철도치안의

3) 강혜경, 정부수립기 경찰의 형성과 성격, 1948~195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1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2, 30, 32~33면.

4) 施政月報 창간호, 1949년 1월 5일, 63~65면.

5) 자유신문, 1949년 5월 7일 자.

6) 경찰종합학교, 경찰종합학교 50년사-1945~1994, 89면.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자 카빈총은 6,000여정, 차량은 100여대, 기관총은 100여정 미만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대구방어전 당시 조병옥 장관이 미8군사령관에게 요청하여 7만여 정의 무기를 입수하였고, 1954년 7월 경에는 적에게 노획한 중화기류 등을 포함하여 13만 2백여 정의 무기를 확보하였다.

7) 윤장호, 호국경찰전사, 1995, 73.

확보와 함께 철로 인근의 적 유격대 토벌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50년에는 종래 군과 함께 수행해온 유격대 토벌작전을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22개 전투경찰대대로 구성된 총 1만명 규모의 전투경찰 편성을 계획하였으나, 자금과 장비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1950년 4월 15일에 간부 24명을 육군보병 학교에 입교·수업케 하고, 1개 대대 496명씩 제8·9대대 2개 대대를 편성하여 1950년 4월 20일 전투경찰대로 발족시켜 제8대대는 영월에 제9대대는 춘천에 배치하였다.<sup>8)</sup> 이 부대는 춘천지구 방어 작전과 영월 지구 방어 작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인민유격대를 남파함으로써 국군 4개 사단과 경찰병력을 후방지역에 분산 주둔케 하여 대유격전을 전개하게 만들어 38선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였다.<sup>9)</sup>

반면에 우리 경찰은 6.25 전쟁 이전에 전개된 38선 방어작전 및 후방에서의 대유격전, 군의 반란사건 등을 처리하며 전투경험을 쌓아 6.25 개전 초기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지연작전 및 반격작전, 유격전 등을 전개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 2) 한국전쟁 전 경찰의 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광복 후 갑자기 밀어닥친 혼란과 소용돌이는 군대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여 건국을 위한 치안과 질서유지가 경찰이 가장 큰 임무로 대두되었고, 그 임무수행에 통신은 필수적이었으나 기존의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구축되었던 유선망은 좌익의 파괴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파괴된 유선통신을 복구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였는데 당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일제시대 사용하던 무전기와 증계장치를 수리 혹은 개조 활용하고, 사정이 되는대로 무선통신 장비를 확충하기 시작했다.

1946년 이후 경찰무선통신시설계획이 수립되어 각 시도 경찰서 등 경찰관서에 무선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하였다. 이러한 무선통신은 좌익이 기도한 10.1 폭동사건, 여순반란사건과 제주 4.3 당시 경찰활동에 요긴하게 쓰였다.

이리하여 치안국을 위시하여 11개 경찰국, 182개 경찰서, 38개 지서, 2개 선박 등 234개소에 무선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고정용무선발전기를 서울경찰국 및 경찰서에 설치하였고, 경찰순찰차에도 이동용무선전화기를 장치·운영하였다. 6.25 전쟁 직전 충북경찰국 관하에는 송신기 14, 수신기 21, 발전기 13, 이동무선기 15, 무선사 36명, 발전기술자 7명을 비롯한 무선통신요원 50명이 있었다. 또한 경북경찰국 관하 24개 경찰서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6개서에 무선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최신의 통신망 구축이 한국전쟁 시에 신속한 후방으로의 후퇴와 지연작전, 반격전, 유격전 등에 이용됨으로써 큰 역할을 수행했다.<sup>10)</sup>

8) 강혜경, 전게서, 34~35면.

9) 윤장호, 전게서, 73면.

10) 치안국, 전게서, 11~114면.

## 2. 한국전쟁 중 경찰의 역할과 현황

### 1) 경찰조직 및 교육 현황

#### (1) 경찰조직의 현황

경찰은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쟁 전에 설치한 비상경비총사령부와 각도 비상경비사령부의 전투경찰대 조직을 살리면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쟁 전의 전투조직은 경찰의 일반조직과 별도로 설치된 것이어서 이 시기의 경찰조직은 이중구조를 띠게 되었다. 전쟁의 진전과 더불어 전투조직은 확대되고, 일반 경찰조직은 전투지원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전쟁 개전 당시 2만 5천명이던 경찰병력이 철수를 하며 전사·부상·낙오 등의 사유로 대거 이탈자가 발생해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된 1950년 7월 1만 3천명 선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1950년 7월 15일 백성옥 내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미군정 당시 경무부장 이었던 조병옥 박사가 내무부 장관에 취임하였다. 경찰력 재편에 착수한 조병옥 장관은 경찰력을 6만 5천명으로 증원할 것을 결정하고 1950년 7월 대구지구와 부산지구에 경찰훈련소를 설치하여 단기간에 훈련을 마치도록 하여 1950년 12월 말까지 강력한 경찰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1950년 말에는 4만 8천명 수준까지 증강될 수 있었고, 1951년에는 경찰력이 6만 3천명에 이르게 되었다. 전시 하에서 경찰관에게는 징집보류의 특혜가 주어졌으므로 경찰관의 충원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그러나 휴전 후 국군 증강의 논리에 밀려 전반적인 공무원 감축의 바람 속에 경찰관도 인원감축의 대상이 되었다. 1953년 1만 3천명, 1955년 과 1956년 걸쳐 1만 4천 명 정도가 줄어 총 4만 명 이하가 되었다. 경찰예산도 전쟁 당시 세출예산의 18% 선을 정점으로 1955년을 넘어서면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표 1> 한국전쟁 중 경찰인력 현황

시기별	경찰관 정원(명)
1950년 8월	48,010
1951년 말	63,427
1952년 말	63,427
1953년 말	50,731
1954년 말	50,731
1955년 말	47,520

출처: 이현희, 한국경찰사, 서울: 덕현각, 1979, 227면.

#### (2) 경찰교육의 현황

한국전쟁시 신규채용된 경찰관들은 교육 도중 미8군단장의 요청으로 7개 전투경찰대대로 편성하여 단기교육을 시킨 후 전투지구로 배치하였으며, 그 사령부를 경찰전문학교에 두었다. 경찰전문학교는 당시의 전황에 따라 대전, 대구, 서울, 부산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경위급 별과생과 간부후보생 양성에 주력하였고, 통신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신요원을 선발

하여 교육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전문학교에서는 전선이탈자 등 각지에서 후퇴한 경찰관들을 모아 전시경찰교육대를 편성하여 단기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렇게 교육받은 경찰관들은 청양에 1대대, 홍산에 2대대 등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전선에 다시 투입되었다.

대전에서 전시교육대를 편성하여 단기교육을 실시한 후 전선에 투입하던 경찰전문학교는 전선의 남하에 따라 대구로 내려갔다. 대구로 내려간 경찰전문학교에서는 후퇴해온 경찰관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새로 경찰관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때 경찰전문학교는 제1차 130명을 양성하여 대구근교 낙동강 연안에 배치하였고, 제2차로 539명을 청룡대대로 명명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3차 대한청년단원 330명을 모집하여 경찰관으로 임명하고 군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청룡대대 및 한청(한국청년단)대대는 교육 중 서울이 수복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인계되어 그 후 북진경찰대에 편성되었다. 이때 경찰의 북진계획에 따라 북한치안을 담당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대거 모집한 것이 경찰의 양적 팽창을 가속화 시켰다.

9.28 수복 후에는 중점적으로 단기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각 전선에 출동시켰으며 계속하여 8개 경찰대대의 편성 및 교육출동을 완수시켰다. 또한 이 무렵에 중화기가 경찰에 배치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각 교육대의 교관을 소집하여 중화기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재차 육군본부 병기대대로부터 교육장교 5명을 파견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엔군이 북진을 하자 경찰전문학교에서는 1950년 11월 22일 신입순경 500명을 채용하여 2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제1차로 순경급 200여명을 일선에 배치하였고, 다시 3개월간의 훈련을 끝낸 후 다음 2차로 경사급 300여명을 일선에 배치하였다.<sup>11)</sup>

### 3) 경찰의 작전 현황

#### (1) 전쟁초반 경찰작전

북한의 남침음모가 점차 현실감 있게 나타나던 1950년 6월 10일,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에서는 38도선 접경 경기·강원도에 대하여 비상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적의 유격대가 동해안 방면에서 3~5인 1조로 200여명 가까이 38선을 넘어 들어와 활발히 유격전을 개시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였다. 적의 주공부대는 동두천→의정부→서울 방향으로 침공해 왔으며 여타 조공부대는 웅진, 개성, 춘천, 강릉 방면으로 일제히 침공해 왔다.

수적으로나 장비 면에서 열세인 38도선 일대의 수비 군경대는 초전부터 악전고투하였다. 개성철도경찰대가 순국하고, 인제, 춘천, 강릉지역의 격전 등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하면서 남으로 후퇴하였다. 국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6월 27일 3시경 한강이북의 경찰대는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고 치안국도 수원까지 일단 후퇴하였다. 그러나 UN군 참전이 확실하다는 소식을 접한 치안국과 서울시경찰국은 오후 4시경 다시 서울에 복귀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용전하였다.

전세는 악화일로에 있어 6월 28일 오전 2시에 정부가 수도에서 철수함에 따라 치안국도

11) 강혜경, 한국경찰의 성격과 형성(1948-1953),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184~187면.

다시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이날 아침까지 한강을 도하한 경찰대는 수원의 집결지로 향했다. 한강교의 폭파로 철수하지 못한 경찰대원들은 적과의 육탄전을 감행하는 등 장렬한 전사로 최후를 마치는가 하면 9.28 수복 시까지 적진 한가운데서 유격전을 전개하는 등 후방교란에 전력을 경주하기도 하였다.

철수 중의 경찰력은 비상경비총사령부에 의해 즉시 재편성되어 UN군 진주 시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한 군의 지연작전에 가담하였다.

대체로 7월 15일까지는 군경합동작전과 군 주요보급로의 경비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아울러 피난민의 정리 및 구호조치, 중요시설의 경비, 후방게릴라의 소탕 등에도 전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영월·울진지구 공방전, 충주·대천지구 전투 및 금강방어작전,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 전투에서 경찰이 거둔 전과는 대단하였다.<sup>12)</sup>

<표 2> 경찰의 교전회수 및 손실(1950.6.25~9.30)<sup>13)</sup>

구분	교전회수	전사	실종	중상	경상	기관총	소총류	권총
	1,677	598	6,231	736	1,618	35	1,355	80

<표 3> 경찰종합전과(1950.6.25~9.30)<sup>14)</sup>

구분	사살	포로	야포	박격포	중기관총	경기관총	소총류	차량
	6,293	3,400	117	83	98	92	2,044	25

## (2) 낙동강 전선 고착기의 경찰 작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주공부대는 7월 3일 한강을 도하하여 경부가도를 따라 남하하였다. 춘천에서 서울 남쪽을 포위하려던 조공부대는 춘천에서 대패를 당하고 중부의 여주-충주로, 일부는 원주-제천으로 진출하였으며, 동해안에 상륙한 유격대들은 해안선을 따라 동부지역 산악을 헤치며 남으로 급진격하였다. 그중 4개 사단은 방어력이 취약한 서남부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경부축선으로 촉차 남하하던 군경수뇌부는 전방의 적 남진을 저지하는 임무와 후방의 위협에 대처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는 7월 3일 천안에 집결한 서울 경찰력 중 573명을 충주로 이동, 제천 방면 전투에 투입시키고, 경찰 580명을 대구로 보내 경찰지역 방어에 대처하게 하였다.

7월 6일, 진주와 남원에 전투경찰 1개 대대를 파견시켜 지리산지구 전투지휘소를 설치, 지리산 지역 일대의 공비준동에 대비케 하였다.

7월 9일 경부국도 상 김천에 편성사령부를 설치, 낙오경찰관을 수습하여 부대를 재편성하

12)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1998, 305~306면.

13) 윤장호, 전계서, 147면.

14) 윤장호, 전계서, 147면. 북한군에서 노획한 무기는 경찰작전에서 다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여 각 전선에 배치하였다.

7월 12일, 서남지구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군은 중부축선과 중동부축선에서 적의 남진 지연작전에 주력하여, 서남부지역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미 24사단이 금강선을 따라 지연작전을 전개했고, 서남부 지역으로 철수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경찰이 서남부지역 방어를 위해 적이 침입할 길목을 미군과 같이 차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동-김천 간 추풍령 제1방어선에 충북경찰을, 영동-무주 무풍면 민주지산 삼도봉을 제2방어선에 충남경찰을, 남원 운봉-함양 간의 울치 제3방어선에 전북경찰을 배치하였다. 아군이 지연전을 전개하며 이 선을 따라 축차후퇴, 낙동간 방어선을 편성하기까지 경찰의 지연작전은 지속되었다.

이후 적은 전북과 전남지역을 유린하고는 7월 30일, 하동고개를 지나 진주까지 진격했다. 8월 12일 적은 통영을 점령하려 공격을 하였다. 이후 낙동강 전선을 사이에 두고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sup>15)</sup>

1950년 7월 14일, 대구에 있던 정부는 미군정 당시 경무부장이던 조병옥 박사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전쟁 전 경찰 총병력은 2만 5천명이었으나 전쟁 초반에 불과 1만 3천명으로 감소하였다. 장비는 칼빈 소총 6천 여정에 불과하여 전시 하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경찰병력의 증강이 시급했다.

이에 조병옥 내무부 장관은 경찰병력을 6만 5천명 선으로 대폭 증강하기로 계획하고 대구와 부산지구에 경찰관 훈련소를 설치, 경찰병력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장비문제에 있어서도 미 제8군사령부에 무기지원을 요청, M1 소총·칼빈 소총·박격포 등 7만여 정에 달하는 무기와 피복 등을 보급 받아 전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1950년 말 경, 경찰력은 48,010명으로 증강되었다.

7월 23일, 미 제1기갑사단 일부 병력이 영동에서 적 게릴라의 기습을 받아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조병옥 내무부 장관은 재차 워커 제8군사령관에게 경찰로 하여금 유엔군을 도와 적 게릴라를 무찌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UN군 편제상 배속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7월 23일 미 제1기갑사단부대가 영동에서 적 게릴라의 습격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어 조장관이 재차 배속건의를 하자, 워커 사령관도 대유격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 국방성에 이를 건의, 경찰의 유엔군부대 배속을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1만 5천명의 경찰이 유엔군에 배속되어 적 게릴라 토벌과 아울러 소규모 전투를 군과 병행하게 되었다.

7월 25일, 전선이 낙동강으로 남하함에 따라 북한군 2군단의 5·8·12·15사단은 포항과 경주, 영천에 대한 정면공격을 시작했다. 2군단의 나머지인 1·3·13의 3개 사단은 대구를 목표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즉, 3사단은 왜관에서, 13사단은 상주-대구 간의 서측방으로, 1사단은 동측방의 능선을 따라 각각 대구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세가 위급하게 되자 대전에서 대구로 이전했던 육군본부는 국군 제2사단을 해체하는 동시에 육군본부 직할대로서 대구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에 제2사단장이었던 이한림 대령을 임명했다. 이 대구방위사령부는 기구만 창설된 것이고, 실질적인 병력은 없었으므로 대구방어를 위해서는 각 도에서 집결한 경찰병력과 1949년 창설된 예비군격인 청년

15) 참정경찰유공자회, 아 살아있다 한국경찰의 혼, 월간조선, 2003, 405~415면.

방위대, 일부 후방부대의 병력으로서 방어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 2군단의 1·13·15사단은 상주-함창 선에 이르러 낙동강을 눈앞에 두게 되었으며, 8·12사단은 낙동강 상류인 안동으로 진출했고, 동해안의 5사단은 영덕을 노리고 공세를 증가시키는 중이었다. 이 무렵, 북한군은 보병 10개 사단과 1개 전차사단이 있었으며, 유엔군과 국군은 8개 사단(미 24·25사단, 1기갑사단과 한국군 1·3·6·8·수도사단)으로 쌍방의 전투력은 백중지세였으나, 북한의 김일성이 전선사령부로 하여금 8월 15일 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산을 점령해야 한다고 독전함으로써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군이 전투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까닭에 전선은 압축일로에 있었다. 미 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계획을 수립, 전군으로 하여금 낙동강 내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안동지구에 진출하였던 강원경찰 제5대대는 영덕으로부터 중부전선으로 침습하고자 하는 적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장성경찰서 중대를 청송군 과천면에, 영월경찰서 및 전투경찰 제 8대대를 안동군 안동면에 각각 배치, 저지선을 설치했다.

적이 청송을 침공했으므로 이를 격퇴하기 위해 청송 외곽선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영양군 석보면 석보리에 진출했다. 석보리는 영양-청송과 영덕-안동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당시 아군이 확보해야 할 곳이었다. 강원경찰 제5대대는 군부대와 함께 각 중대를 영양 방면과 안동군 북후면 월전리 및 신전리 방면의 각 고지에 배치,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7월 27일, 은밀하게 대구로 급거 온 맥아더 원수는 전선을 시찰하고 미 8군사령관이 적의 접근이 빨라서 대구도 불안하기 때문에 통신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 8군사령부를 부산으로 후퇴시켰으면 하는 건의에 “한국으로부터의 철수란 있을 수 없다. 한국에서의 던케르크는 없다.”고 전선고수의 단호한 결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워커 중장은 “한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빼앗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이른바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라는 훈령을 발했다.

대구방위사령부는 대구방어작전을 위해 처음으로 군경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사령관 이한림 대령 등 군 간부들과 경찰 측에서는 내무부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 참모장 최치환 총경, 동원참모 이성우 총경과 박춘근 경감 및 경상북도 경찰국 보안과장 송관수 총경 외 2명이 참석했고, 청년방위대<sup>16)</sup> 고문인 장석윤 대령과 포병단, 통신대 외 각 부대 대표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대구방어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 결과 군경을 총동원, 전후방의 경비와 치안을 각각 분담키로 하는 대구방위계획을 수립했다. 즉, 군 주보급로 경비, 거점방어 및 주요 시설 경비, 피난민 구호와 통제활동 및 작전지구 주민 소개, 철도 및 교량 경비, 항만시설 경비 및 총기단속, 요인경호 및 적성인물 사찰강화, 교통정리 및 야간통행자 철저 단속, 간첩 색출 및 유언비어 단속, 매춘부의 흑인병사에 대한 권총요구, 흑인병사의 군경권총 탈취 방지 조치, 결인 퇴치 및 격리 수용 감시, 군·경·검 합동대공수사대 설치 및 포로 심문계획이 수립되어 경찰은 최치환 총경의 지휘 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첫째, 직접 전투에 임할 요원은 군대경력 보유자와 전투경험이 풍부한 자 및 대공투쟁 의식이 강한 정예경찰관으로 선발, 독립전투대대를 편성해 전투정면을 담당할 유엔군 및 국군

16) 현재의 예비군.

에 배속하거나 전략거점과 중요시설을 경비하게 하여 대구 지구에 제1대대(경기 병력)·제2대대(혼성병력), 현풍 지구에 제3대대(경기 병력), 팔공산 지구에 제5대대(경기 병력), 고령지구 에 제6대대(충남 병력)·제7대대(서울 병력) 등 6개 대대를 투입하였다.

둘째, 전투요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일반 경찰관 등은 철수한 각 시·도 경찰국장 지휘 하에 각 경찰서 단위로 부대를 편성, 방위상 필요한 지역에 고정 배치했다. 이리하여 총사령 부는 편성된 부대의 경찰병력을 무단 전용하는 것과 무저항 후퇴 및 임의 철수를 엄금토록 하고, 일사불란한 군경협동체제 아래 대구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자 지리산의 적 유격부대인 2병단은 피아의 주저항선의 진공지역을 누비며 낙동강을 도하, 경북 달성군과 청도군의 접경인 비슬산에 거점을 두고 달성·청도·창녕·밀양을 거쳐 양 산에까지 침투, 후방 교란작전을 펼쳤다.

8월 3일, 강원경찰 제5대대는 군부대와 함께 경북 청송군 진보면 동쪽 4km 지점인 청송 군 송강 방면을 거쳐 안동 길안 쪽으로 후퇴하다 전사 4명, 부상 10명 실종 4명과 차량 3 대의 손실을 입었다.

8월 6일, 전선이 낙동강 선에서 본격적인 대치상태에 들어가자 경찰도 각 비상경비사령부 단위로 전투지역을 설정, 각 지구에 예하 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투훈련과 경비임무를 강 화했다.

<표 4> 낙동강 전투 방어선 재배치도<sup>17)</sup>

도경별	전선지휘소	부대배치
서울시경	성북지서	성북 1개 대대, 칠곡 1개 대대
경기도경	와촌지서	청도 1개 대대, 와촌 1개 대대, 진량 1개 대대
충북도경	지천지서	지천 2개 대대
충남도경	공산지서	공산 2개 대대
강원도경	경주	국군 1군단에 배속
경북도경		신동·칠곡
전북도경	진동	미 25사단에 배속
전남도경	진동	미 25사단에 배속
철도경찰대	대구	철도호송임무
제주도경		제주도 자체방위
신부대	월배지서	화원·논공·가창 경비

적이 상주·안동을 유린하고 낙동강 도하를 시도했다. 그 가운데 일부병력은 비파산에 침입 하고 다른 적 1개 대대는 대구 서쪽 칠곡 지천면 칠전리에 침입, 대구 침공의 전기를 노리 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 당면한 경찰은 비상 전투태세에 돌입, 대구 시내 및 외곽에 주둔하고 있는 전 경찰부대를 비상대기하여 시내 및 외곽 검문 수색에 주력케 하고, 경 찰전문학교 전 학생부대를 출동준비케 하는 동시에 경북 경찰국장을 대구 방위기간부대 지휘 관으로 임명했다. 지천면 칠전교 부근 고지에는 칠전에 침입한 적에 대비해 충북 제11대대

17) 윤장호, 전계서, 130면.

가 증원되었다. 선산·장천으로부터 칠곡 동명동 755고지에 침공 중인 적을 격퇴하기 위해 도덕산 일대에 경북경찰 1개 중대를 배치하고 지산동과 용곡 동쪽 2개 고지에 경찰 1개 중대와 함께 국군 제2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했다.

8월 14일, 적은 대구-부산 간의 철도 차단을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경찰대대는 급히 철도 연변 산악지대에 대한 탐색전을 벌이면서 경북과 경남 경찰 각 1개 대대씩을 청도와 밀양에 진출시켜 철도경비를 담당토록 하여 적의 차단기도를 좌절시켰다. 비파산에 적이 침공하여 충남 경찰 1개 대대와 경북 경찰 1개 대대가 합동작전을 벌여 대구 서남쪽 기습을 기도하는 적을 견제했다.

경남 창녕 방면에 적 1개 대대가 침공하여 밀양으로 밀고 들어오려 하므로 경남 경찰·전남 경찰이 합동작전을 하여 적의 기도를 분쇄하고 대구-부산 간의 중요거점을 확보하여 군수송작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경찰전투대대가 전투정면을 담당하는 전투로 돌변하자 대구 외곽을 방위 중이던 국군 병참단·대전차 포단·통신대대가 이동하여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는 해당부대의 작전구역을 인수하여 담당했다.<sup>18)</sup>

### (3) 수복 시기의 경찰작전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원수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낙동강 전선의 전 병력은 총반격작전을 전개하여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되고, 동월 말경에는 38선 이남을 거의 수복하게 되었다. 이때 경찰은 각 전선에서 군의 진격작전에 호응하여 실지수복작전에 힘을 기울였다.

경찰은 각 도경 전투경찰부대 중 정예병력을 차출하여 전투경찰 1개 대대를 편성하여 화랑부대라 명명하였다. 화랑부대는 일본에서 약 1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은 뒤, 9월 15일 미 제7사단 제32연대와 함께 인천에 상륙하였다.

9월 20일 경북 영일경찰서 수복을 필두로 차례로 수복이 이루어졌다. 24일에는 경인지구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파견할 선발대(치안국 116명, 서울시경 809명, 경기도경 1,057명)이 편성되어 그 다음날 대구를 출발하였다. 이들은 해로를 통하여 10월 1일 오전 2시 인천에 상륙하여 탈환지구에 진입하였으며, 뒤이어 치안국의 일부도 10월 4일 서울에 진입하였다.

화랑부대는 서울탈환작전에 참여하고,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각 시도경찰국도 수복되게 되었으니, 9월 30일에 충남, 10월 1일에 서울·경기·충북·전북과 철도경찰대 본대가, 10월 3일에 전남, 10월 4일에 강원지역이 수복되었다.

수복 이후 경찰은 아군의 총반격작전에 의하여 퇴로를 차단당한 상당수의 잔존 공비의 소탕과 그들에 대한 자수귀순공작 등 후방지역의 치안확보에 노력하였다.

한편, 군의 북한수복작전에 따른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치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에서는 경찰대의 실지진주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강원도 북부지역에 강원도경찰 일부를, 황해도에 제201대대를 평안남도에는 제 202·203대대를, 함경남도에는 제205대대를 각각 편성하여 진입케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 화랑부대는 서울탈환 후 부산으로 이동하여 10월 16일 미7사단과 함께 함경남도 이

18) 참전경찰유공자회, 전계서, 402~403면.

원에 상륙작전에 참여하였다. 이원에서 압록강 혜산진으로 북상, 10월 29일 북청을 거쳐 11월 1일에는 풍산을 점령한 다음 진격을 계속해 미 제7사단 제17연대와 함께 11월 19일 압록강 혜산진에 도착했다.

이후 화랑부대는 중공군을 만나 후퇴를 거듭했다. 12월 24일 장진호에서 미군 철수부대의 혈로를 뚫었다. 황도령-고토리-진흥리-부평리-유담리-덕동고개-비약간-하갈우리를 거쳐 상통에 도착, 함흥을 거쳐 흥남에 이르러 마지막 선단으로 철수대열에 합류하였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경찰의 북한진주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제201·202대대는 철도기동부대로, 제203·205대대는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로 개편 발족하게 되었다.

10월말, 중공군이 개입하고 국군이 후퇴하여 39선까지 철수하게 되자 그 동안 태백산·지리산 지역에 숨어 있던 적의 패잔병과 부역도피자달은 다시 준동하기 시작하여 후방지역의 경찰관서 및 중요기관을 습격하거나 군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후방치안을 교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12월에 제202·207대대로 태백산지구전투경찰대를 편성하고, 제203·205대대로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를 편성하여, 그 사령부를 영주와 남원에 설치하고 공비를 소탕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서울·경기·강원도의 경찰은 1951년 1월 중공군의 제1차 공격 이래 피난민의 호송 조치 및 자체철수와 더불어 3월 15일 제2차 서울 수복 때까지 32개 대대로 편성하여 군 주요보급로 경비와 잔비토벌에 임하였다.<sup>19)</sup>

#### (4) 공비토벌 시기의 경찰작전

제2차 서울수복을 전후하여 전세는 아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태백산·지리산 지구 등 후방지역의 공비는 끊임없이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에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에서는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3차에 걸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 하였다.

1951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정한 제1단계에서는 그 동안 치안력의 미흡으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수복하지 못한 지역의 완전수복과 그 지역의 공비토벌을 완수하는 데 작전의 주목표를 세워 시행하였다. 그 결과 총 54,206명의 공비를 사살 또는 생포하거나 귀순시켰으며 각종 화기 8,475정을 노획하였다.

이어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제2단계에서는 나머지 공비의 섬멸을 목표로 세우고 수행한 결과 총 8,670명을 사살 또는 생포, 귀순시켰으며 916점의 무기를 노획하였다.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의 마지막 3단계에서는 총 4,260명의 공비를 소탕하고 1,520점의 무기를 노획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뒤이어 군에서도 지리산지역의 공비를 완전 소탕할 목적으로 남원에 야전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동년 12월 1일을 기해 지리산지구를 중심으로 공비의 출몰지역인 충북 영동군, 전북의 내륙 전지역, 전남의 고흥을 제외한 내륙 전 지역과 경북의 금릉군과 고령군, 그리고 경남의 진양·산청·하동·함양·거창·합천 등 제군에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공비소탕전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군의 주 작전에 적극 협조하여 지리산지구와 태백산지구의 전투사령부와 각 도 전

19) 허남오, 전계서, 308~310면.

투경찰대 및 비상계엄지구 내의 전 경찰을 총동원하여 본 작전에 참여케 하였다. 그리고 각 전투경찰대의 지휘 및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해 치안국 및 각 도경찰국에서 파견된 연락관으로 구성된 치안국 연락처를 동년 12월 1일자로 남원에 설치하고, 지역 내의 전 경찰작전을 통할하기 위해 치안국장 대리관을 상주케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비소탕작전은 끊임없이 전개되었지만 상당수의 공비가 잔존하여 계속 후방치안을 교란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과거의 전투경험에서 체득한 바를 토대로 태백산 및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내포하고 있었던 모순과 결함을 제거하고, 전투경찰의 기본조직을 혁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부대운용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였다. 1953년 5월 1일 서남지구전투경찰대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여 예하에 4개 전투경찰연대를 두었고, 전북·전남·경남의 1개 시·12개 군의 경찰행정과 지역 내 전투임무 일체를 관장케 하였다. 이 기구는 휴전 후 공비토벌을 계속하다가 1955년 7월 1일을 기해 해단식을 가졌다<sup>20)</sup>. 이후 잔존공비 토벌을 위해 전투를 전담하는 경찰기동대를 설치 운영하다 치안상태의 호전에 따라 1956년 9월 7일 해체하고 그 인력은 각 시도에 배치하였다.

<표 5> 공비토벌 종합전과(1951. 1~1955. 7)<sup>21)</sup>

구 분 연 도	사살	포로	귀순	야포	박격포	중화기	소총류	수류탄
1951.1~12	53,444	8,831	44,145			1,011	19,602	11,717
1952.1~12	7,647	2,026	1,149			190	4,929	1,188
1953.1~12	1,190	409	131	12		41	1,488	
1954.1~6	373	228	120			878	96	
1954.7~1955.7	83	74	28			263	48	

<표 6> 연도별 잔여 공비수 변화

연도	공비수(명)
1951. 1. 31 <sup>22)</sup>	12,557
1951. 11. 26 <sup>23)</sup>	9,247
1952. 3. 31 <sup>24)</sup>	2,431
1952. 1. 5 <sup>25)</sup>	4,840
1952. 1. 22 <sup>26)</sup>	4,793
1952. 3. 10 <sup>27)</sup>	3,026
1952. 8. 4 <sup>28)</sup>	1,830
1952. 11. 6 <sup>29)</sup>	1,388
1953. 12월 말 <sup>30)</sup>	805
1954. 3월 말 <sup>31)</sup>	584
1954. 5.25 <sup>32)</sup>	144
1956. 12. 31 <sup>33)</sup>	43
1963. 11. 12	소멸 <sup>34)</sup>

20) 허남오, 전계서, 310~311면.  
 21) 윤장호, 전계서, 381면.  
 22) 한국경찰사 II, 313면.  
 23) 윤장호, 전계서, 256면.  
 24) 윤장호, 전계서, 278면.  
 25) 한국경찰사 II, 438면.

<표 7> 공비토벌 중 경찰피해(1951. 1~1955. 7)<sup>35)</sup>

연도 \ 구분	교전회수	전사	부상	실종	중화기	소총
1951.1~12	8,336	1,388	2,729	900	85	1,114
1952.1~12	3,827	473	474	85	6	388
1953.1~12	1,483	209	194	36	10	460
1954.1~6	226	10	8	9		24
1954.7-55. 7	159	17	17			16

(5) 한국전쟁 기간 중 경찰의 피해 현황

6.25 전쟁 기간 중 경찰에서는 전사자 9,848명(국군: 137,899명), 실종자 7,158명(국군: 19,392명), 부상자 7,652명(국군: 450,742명), 포로 337명(국군: 8,669명)과 경찰을 지원한 애국단체원의 전사 6,980명, 부상 1,579명이 피해를 입었다.<sup>36)</sup>

<표 8> 한국전쟁 중 경찰피해 현황

연도 \ 구분	전사자	실종자	부상자	포로
경찰	9,848	7,158	7,652	337
국군	137,899	19,392	450,742	8,669
애국단체	6,980	-	1,579	-

Ⅲ. 한국전쟁시 경찰의 주요 작전 활동

1. 초반 지연작전

경찰의 개전 초기 북한군과의 접전은 서부전선의 경기도 개성·파주 등지와 중부 전선의 강원도 춘천·홍천, 동부전선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 기습남침으로 인한 전선 붕괴 상황에서 경찰은 투혼을 발휘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1) 한국전쟁 최초 전사자 全大旭 순경

26) 한국경찰사 Ⅱ, 446면.  
 27) 한국경찰사 Ⅱ, 448면.  
 28) 윤장호, 전계서, 309면.  
 29) 한국경찰사 Ⅱ, 474면.  
 30) 윤장호, 전계서, 338면.  
 31) 윤장호, 전계서, 349면.  
 32) 윤장호, 전계서, 375면.  
 33) 윤장호, 전계서, 384면.  
 34)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이 경남 산청에서 체포됨으로써 잔존 공비는 완전히 소멸.  
 35) 윤장호, 전계서, 383면.  
 36) 국방군사연구소, 1950~1953,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0차에 걸친 인민유격대의 남침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적은 전면 남침을 위해 위장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직전까지 양성한 4,000~6,000명의 유격대로 제766부대를 창설하고 전면 남침의 일환으로 유격대 상륙작전을 위해 1950년 6월 중순 강원도 간성지구에 집결 대기시켰다.<sup>37)</sup>

오진우 총좌(대좌)가 지휘하는 이 부대는 1949년 가을부터 중공에서 반입한 미제무기로 무장하고, 전투경험이 풍부한 병력으로 구성하였다.

북한은 전면남침을 위한 초기작전계획에 따라 6.25를 10여일 앞두고 이들 비정규전 부대를 200여명으로 30여개의 분조(5~7명 1조)로 나누어 오대산·계방산·방대산 일대의 동해안 일대로 침투시켰다. 남파된 비정규전 부대들은 동해안의 국군 제8사단 병력을 분산시키고, 후방지역을 교란시킬 임무를 부여받았다<sup>38)</sup>.

이들의 계획에 말려 한국전쟁 발발 당시 동해안에는 육군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대령)의 2개 연대(제10, 제21연대)가 38선 경비와 아울러 오대산-태백산으로 침투하는 남침유격선을 격멸하며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제8사단의 본부는 강릉에 있었고 제10연대가 38선을 담당, 제21연대가 속초에서 공비를 토벌 중에 있었다. 당시 아군의 38선 경비상태는 경계부대의 초소배치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때 경찰은 주로 해안선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일부 병력은 태백산지구의 공비격멸을 위해 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적은 양양에 집결한 제5사단(사단장 마상철 소장)과 유격부대인 제766부대 및 육전대(우리의 해병대)인 제549군부대 등으로서 그 병력의 격차가 컸고, 사전에 마련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수륙양면의 협공작전을 수사하여 아군은 동해안에서 절대적 열세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적의 포격이 개시된 다음, 04:30에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먼동이 틀 무렵에는 38선에서 10km 떨어진 양양군 남해까지 북한군 5사단이 남침하였으며, 이와 같은 적 주력의 정면공격에 병행하여 동해안의 3개소에 적 유격대와 육전대가 상륙, 아군의 배후를 협격하였다.

즉, 주문진서 관내의 서림에서 잔교에 이르는 아군정면에 적 제5사단이 남진을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제766부대가 강릉 안인진리에, 제549부대가 옥계면 정동진에, 제200지대가 삼척 임원항에 각각 상륙하였다.<sup>39)</sup>

1950년 6월 초순 속초에 집결한 북괴군 제766부대와 제549부대는 어뢰정 4척과 1,000t 급 무장수송선 1척의 엄호 아래 발동선 30척, 범선 40척, 견인용 화물선 4척 도합 79척으로 2개 선단을 편성했다. 6월 25일 새벽 03:00경 제549부대의 선발대가 명주군 옥계면(과거 강릉시에 인접한 군의 지명, 현재 강릉시에 편입) 정동진리 등명동 해안에 상륙하여 해안 교두보를 확보한 후 주력부대도 같은 장소에 상륙하고, 삼척군(현재는 시 단위이나 6.25 동안 당시는 군 단위) 원덕면 임원항에는 새벽 5시에 적 200지대가 상륙했다. 적 766부대는 강릉 안인진리에 상륙했다.<sup>40)</sup>

37) 이 부대는 한국전쟁 발발 시 동해안으로 상륙하여, 울진, 청송, 영덕 방향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며 작전을 하였다.

38) 윤장호, 전개서, 69~73면.

39) 한국경찰사 II, 내무부 치안국, 1973, 254면: 아 살아있다~대한민국경찰의 혼, 참전경찰유공자회 편, 월간조선사, 2003, 378면.

40) 심재기, 6.25와 민간항쟁, 1993: 제766부대는 강릉 안인진리에, 제 549부대는 옥계면 도리에, 제200지대가 삼척

6.25전쟁 발발시간을 새벽 3시로 본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이다.

·1950. 6. 25.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에 당직장교로 근무 중이던 김종필 중위는 새벽 3시 직후부터 전선에서 인민군의 남침을 전하는 보고가 육본 정보국 상황실로 쏟아져 들어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sup>41)</sup>

또한 경향신문 기사는 “1950. 6.25 해안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766부대와 제549부대 1천여 명의 병력이 새벽 3시 정동진 해안에 상륙하였으며, 이 마을 심경섭씨(당시 35세)가 북괴군에게 학살되어 한국전쟁 첫 민간인 피살자로 기록되었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sup>42)</sup>

김종필의 기억과 경향신문기사, 심재기의 의견을 취하여 정동진리 등명동 상륙시간을 03:00으로 채택하였다.

이때 정동진의 해안초소에 파견된 강릉경찰서 卍大旭 巡警이 적 1개 중대가 상륙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아군이 상륙훈련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관망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의 사격을 받고 전사하였다. 군과 경찰 중 경찰 측에서 6.25 동란 최초의 전사자가 03:00 경 정동진리 등명동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은 곧 제8사단에 적의 해안상륙을 알리고 적의 상륙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각 제대 간에는 통신이 두절되고, 협격하는 적의 공격을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경찰병력과 제8사단의 일부병력 및 해안경비부대 병력 등이 정면의 적을 격퇴하는 일방, 상륙하는 적도 유격하였는데, 이때 주문진서장 정복희 경감을 중대장으로 한 주문진서 부대는 소재지 북쪽 4km인 명주군(과거 행정지명, 현재는 강릉시) 향호리와 양양군 인구에 상륙한 적의 함류부대를 맞아 고군분투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25일 밤에 강릉 사천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강릉과 삼척 일대에 상륙한 적과 접전케 된 각 서 병력은 군과 합동작전 끝에 대관령으로 집결하였다. 삼척서는 25일 23:00 군 作命에 따라 전 병력을 평창군 진부면으로, 주문진서는 27일에 대관령으로 철수하였다.

이리하여 천험의 요새지인 대관령을 중심으로 아군과 경찰은 다시 2일간의 지연전을 전개, 성공적으로 적을 저지하였으나 서울 함락으로 인해 29일 19:00에 대관령에서 철수하였다.

## 2) 개성철도경찰대 부대의 혈투

1950년 6월 25일, 개성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요충지대로서 적의 제1차적인 공격목표가 되었다. 개성철도경찰대 부대는 빗발치는 적의 대규모 포화 속에서 4시간 동안 불퇴전의 결의를 다지며, 철수 대신 죽음으로써 개성지구 함락을 지연시켰다.

개성지구에는 백선엽 대령이 지휘하는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연대장 전성호 대령)가 38선을 경비하고 있었다. 25일 개성은 장병들의 외박으로 인해 적의 침공에 무방비 상태나 다

임원항에 상륙하였다고 ‘한국경찰사 II, 내무부 치안국, 1973, 254면’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한국경찰사는 새벽 4시 포격이 개시되고, 새벽 4시 30분부터 본격적인 공격이 감행되었다고 기술만 되었을 뿐 상륙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다.

41) 조갑제 칼럼, 1950년 6월 25일의 박정희와 김종필, 뉴데일리, 2011. 6. 26.

42) 경향신문 22면, 1996. 9. 19.

름없었다.

북한군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은 1개연대로 웅진반도를, 2개 연대로 개성을 침공하였다. 개성의 방어병력은 1개 대대에도 미치지 못하여 적 2개 연대의 불시공격으로 삽시간에 개성은 잿더미가 되었다. 적 1개 연대는 개성시를 감제하는 송악산에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1개 연대는 열차로 경의선을 따라 개성역으로 우회침입, 협격을 시도하였다.

04:45 적의 공격이 시작되어 국군 제12연대 병력과 경찰이 1시간 가까이 이에 응전하였으나, 제12연대는 문산 쪽으로 이동하고, 일반 경찰서 병력도 해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개성철도경찰대장<sup>43)</sup> 감봉용 경감은 이날 05:30에 50여명의 본부대원을 비상소집하여, 본부를 최후 사수할 결심으로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내리고, 대원을 요소에 배치, 임전태세를 갖추어 본부건물을 중심으로 사주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부대 대원들을 본부 뒷산과 본부 및 철도건물을 경비하면서 적과의 교전을 준비했다.

이러는 동안에 적은 시내로 돌입하여 07:30 유선이 두절되고 부대본부는 포위되었다. 전 대원은 전투에 돌입하여 죽음을 무릅쓴 不退轉의 기세를 보이자 당황한 적은 여러 겹의 포위망으로도 이를 제압하지 못하자 급기야 전차까지 동원하였다. 적이 경찰대에 대전차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차와 야포까지 동원한 것이다.

08:00 5대의 전차가 시가 동쪽으로부터 부대본부의 측면을 공격, 전차포와 자동화기로 부대 본부건물을 폭파시켰다.

이에 부대원은 일시 방공호로 대피하자, 적은 포위망을 압축하여 수류탄과 자동화기 세례를 퍼부었다.

이리하여 대원 전원은 옥쇄할 비장한 결의 아래 서장 이하 결연히 적의 포위망을 향하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돌격전을 감행, 잠시나마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08:30에 적의 집중사격 속에 본부대원 대부분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09:30 개성이 완전히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전사 43명, 부상 8명의 피해를 본 가운데 3명만이 구사일생으로 포위망을 탈출하였다.<sup>44)</sup>

### 3) 장단경찰서 부대의 문산지구 혈투

문산지구에는 적 1사단과 6사단 일부 병력이 침공하였다. 국군의 13연대 1개 대대가 적 정면을 담당하였으며, 장단경찰서가 합동하여 적의 공세를 18시간 막아냈다.

6.25 05:00 적이 임진강을 도하, 남하했다. 장단경찰서장 홍은식 경감은 적 1개 대대 규모 600여명이 전차 2대를 앞세우고 고랑포 방면으로 진격하자 특공대 21명을 조직하여 직접 지휘, 고랑포 지서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였다. 당시 현지 지서원은 15명이었다. 총 36명이 고랑포 지서에서 적 전차포·박격포 등 중화기를 앞세운 공격에도 5시간 동안 방어하다 15명이 전사하고, 21명은 철수했다. 이후 국군과 함께 수차례의 교전을 합동으로 수행하다 21시경 철수했다.<sup>45)</sup>

43)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일반 경찰서 외에 철도 경비를 전담하는 철도경찰대가 존재하였다.

44) 한국경찰사 II, 전계서, 249~250면.

45) 한국경찰사 II, 전계서, 251~252면.

#### 4) 춘천경찰서 내평지서의 혈투

6. 25 춘천의 정면경계는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대령)의 예하 제7연대 2대대가 맡고 있었다. 6.25 04:15 적의 제2사단이 공격을 개시하여 국군의 경계진지를 격파하고 춘천으로 진격하였다. 춘천 전투에서 인민군 2사단(사단장 이청송 소장)은 6월 25일 오전 중에 서울 동북부 거점인 춘천을 점령하는 것이었고 인민군 7사단은 당일에 홍천을 점령하여 춘천에 주둔중인 한국군 제6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춘천지역 진공부대인 적 2사단에게 차질이 생겼다.

춘천 북방 화천을 돌파해 2사단 병력이 내평리로 들어왔는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내평지서(지서장 노중해 경위)는 철수할 기회를 놓치고 적의 대병력에 포위되었으나 결사 저항의 태세를 취했다. 지서는 마을 한복판인 46번 도로변의 고지에 위치해 있었다. 적이 춘천으로 진격하려면 반드시 46번 도로를 통과해야 했는데 내평지서가 그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평지서 주위를 마대자루로 둘러싸 진지화하였다. 지서장 이하 12명의 경찰관과 대한청년단 3명이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통신도 두절되어 있어 고립무원 상태가 되었다. 전원이 결사항전을 했다. 북한군은 1개지서의 전투력을 과소평가 했다가 1시간 이상을 진격하지 못했다. 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적은 82mm 박격포까지 투입해 지서를 불태우고서야 내평지서를 점령할 수 있었다. 12명이 전사하고 3명만 탈출했다. 적 20여명이 사살되었다. 경찰 15명에게 적 주력이 막힌 상황이었다. 춘천 내평지서의 1시간 이상의 성공적인 지연전투로 적은 진격의 타이밍을 놓쳤고 그 사이 국군 제6사단 7연대 2대대는 신속하게 소양강 남쪽 원나루에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sup>46)</sup>

적의 전략은 서부전선을 돌파하는 동시에 춘천·홍천 방면의 중부전선을 뚫어 수원 이남으로 진출, 수도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이었다. 서부전선에 있던 1사단과 7사단이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었고, 동해안 강릉에는 적이 상륙해 국군 8사단이 대관령으로 밀리고 있었다. 버티고 있는 것은 춘천과 홍천의 동부전선 밖에 없었다.

춘천 외곽에 진출한 인민군 2사단은 국군 6사단의 주력인 6연대의 저항에 부딪혀 목표된 시간 안에 춘천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다. 6연대의 성공적인 포격으로 6월 25일 적 2사단이 패퇴했고, 홍천으로 향하다 6월 26일 기수를 돌려 춘천으로 진격한 적 7사단이 춘천 옥산포 전투에서 패퇴했다. 적들은 40% 이상의 전력을 상실한 채 진격에 실패하고 말았다. 적의 시체가 너무 많아 인민군 탱크가 기동하지 못하여 강 속에 쓸어 넣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어 무한케도로 깔아뭉개고 넘어와 소양강을 도강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군 제6사단은 5일간 북한군과 대치하며 춘천을 확보했으나 6월 29일 오후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충주로 작전상 후퇴를 하여, 북한군은 애초 작전 계획보다 한참 뒤인 6월 29일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춘천을 점령했다.<sup>47)</sup> 이 결과로, 한국군을 한강 이북에서 포위하겠다는 북한군의 작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춘천경찰서 내평지서에서 사수하며 벌여준 소중한 1시간이 국군의 성공적인 춘천지구 방어작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46)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전계서, 375~377면.

47) 경찰종합학교,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안병하 경무관 일대기, 2008, 18~23면 요약.

## 5) 한강도하 저지 작전

서부지역에서 경찰은 북한군의 서울 입성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적이 의정부를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자 서울 경찰은 7,105명을 배치하고 북한군과 대치하며 철수과정에서 76명이 사망하였다.

북한군의 서울 함락 그리고 한강 도하와 관련하여 당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미 고문관은 “미군이 한강 선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3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만일 3일 이내에 적이 한강을 도하하여 추격해 온다면 전략상 부산에 상륙하는 미군도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대한민국의 존망은 한강을 3일 이상 고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쟁 초기전투에서 경찰은 서부전선의 요소요소에서 국군과 함께 북한군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국군의 전열 정비와 미군의 참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sup>48)</sup>

특히 서울시내 9개 경찰서 중 적의 주공격로인 의정부 방면에 가장 근접한 성북경찰서장 최병용 총경은 혼란의 와중에도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성북경찰서 관내의 전 차량과 휘발유를 징발, 경찰서에 집결시켰으며 경찰서원들을 가두에 배치, 군인은 무조건 돈암동 전차 종점에 집결하여 전방으로 보내려 했으나 군인들은 경찰관들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차츰 군인이 돈암동에 집결하자 최서장은 징발한 트럭을 이용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장병들을 수송하였고, 돈암동 일대 청년을 동원하여 삽과 팽이로 장위동에서 미아리 공동묘지에 이르는 지역에 개인 산병호를 구축하는 등 교전준비를 하였다.<sup>49)</sup>

한강교의 폭파로 말미암아 경찰의 철수병력이 분산되어 수원에 집결한 병력은 4,500명이었다. 치안국 비상경비사령부의 작전명령으로 경찰병력은 전원 재편성을 위해 수원에서 천안으로 남하, 이동했다. 이때 군 당국으로부터 군장비의 태부족으로 경찰보유무기를 군에 이양토록 요청을 받아 경찰은 소지했던 칼빈 소총 등 무기를 군에 이양하고, 맨손으로 간첩색출과 정보수집 및 철도경비 등의 업무에 임하게 되었다.<sup>50)</sup>

## 2. 반격작전

### 1) 강원도경 부대의 영월 반격작전

강원도 삼척경찰서 부대는 6월 25일 23시 평창군 진부면으로 이동했으며, 강릉경찰서 부대는 6월 27일 대관령으로 철수하였다. 경찰부대는 군과 함께 대관령에서 2일 동안 지연작전을 벌이다 서울 철수에 따라 6월 29일 대관령에서 철수했다.

7월 1일 강원도 경찰은 영월과 울진을 제외하고는 군의 작전에 따라 남하하게 되었다. 강원도 경찰비상경비사령관 윤명운 경무관은 1일 제천에서 경찰병력을 수습하여 우선 영월을 방어하기로 결심하였다.

영월은 남한 최대규모의 화력발전소(10만 Kw)가 있었고, 상동에 세계 굴지의 중석광산이

48) 오문균, 한국전쟁 시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군사 40, 국방군사연구소, 2000, 63면.

49) 참전경찰유공자회, 전계서, 379~380면.

50) 참전경찰유공자회, 전계서, 2003, 375면.

있었으며, 마차면(현재 영월군 북면)에 탄광지대가 있어 당시 전략산업의 요지였다. 특히 당시 발전소는 영월화력이 10만 Kw, 전북 정읍의 칠보수력발전소(현재 섬진강 수력발전소)가 1만 4천 Kw, 당인리 화력발전소(현 서울화력발전소)가 1만 2,500Kw 등 빈약하기 이를 바 없어 영월화력발전소의 전략적 가치는 무척 큰 상태였다. 영월지역은 당시 최대규모의 연탄산지여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가 있었던 것이다.

윤명은 경무관은 전선에서 후퇴한 전투경찰 8대대 경력과 홍천·인제경찰 100여명의 경력으로 영월방어부대를 편성하여, 당일로 현지에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7월 2일 원주를 점령한 적은 제천 북방 봉양을 위협하고, 평창방면과 동해안에 상륙한 766부대가 영월을 압박하였다. 경찰부대는 7월 3일 새벽에 단양으로 후퇴했다.

윤 경무관도 제천에서 단양으로 사령부를 이동시켜 영월부대와 정선경찰 및 전투경찰 제 8, 9대대를 수습하여 다시 영월 탈환을 결심하고, 직접 부대를 지휘하여 영월로 반격작전을 펼쳤다. 7월 3일 15:00 선두중대가 접전없이 영월에 돌입하였다. 적은 이미 남하한 뒤였다. 적의 뒷편에서 경찰부대가 영월을 확보한 형국이었다. 7월 4일 03:00 영월 북방 4km 지점 동동산 고개에 배치된 전초가 적의 선두를 격퇴했다. 그러나 적 후속병력의 증원과 우회한 적의 영월 진입으로 7월 5일 새벽에 다시 영월을 포기하고 후퇴하였다.

윤 경무관은 영월 탈환의 집념을 버리지 않고 7월 7일 아침, 영월 상동으로 후퇴한 전투경찰 제8대대 1중대(중대장 김해수 경위)에게 영월 공격을 명령하였다. 중대는 김해수 경위 이하 47명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차량 편으로 영월을 향해 출발하였다.

7월 8일, 천안이 적에게 점령된 날이다. 14:00 전투경찰 제8대대 제1중대 특공대는 영월 녹전리 송현치에 진출했다 전방에서 병력을 만재하고 올라오는 적의 트럭과 조우했다. 아군 특공대는 정차시켜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해 적을 와해시키고 돌진하여 근접전을 전개했다.

적은 후속 대병력으로 포위 공격하여 김해수 경위를 비롯해 24명이 전사하고, 7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경력이 상동으로 원대 복귀했다.

7월 9일 새벽, 특공대의 급보를 접하고 전투경찰 제8대대는 2개 중대를 급파했으나 적이 이미 춘양방면으로 남하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영월 일대의 반격전을 끝내고 경북 영주로 철수하였다.<sup>51)</sup>

7월 1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벌어진 9일간의 적 한복판에서 경찰의 영월지역 3차에 걸친 반격작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 2) 강경경찰서부대의 반격작전

한국전쟁 초기 대전을 방어하기 위해 미 제24사단의 19 및 34연대로 하여금 금강선을 따라 방어선을 형성 추격해 오는 적 제4, 6사단을 저지하려 금강 방어선이 전개되었다.

금강은 전체 폭 300~500m에 유수 폭이 70~100m로 평균수심은 2~5m로 대전을 가로막는 천연의 장애물이었다. 이는 영남과 호남의 분기점인 대전의 관문으로서 지리적인 가치

51) 참전경찰유공자회, 전계서, 380~384면, 윤장호, 호국경찰전사, 1995, 117~119면.

를 지닌 것 외에 지연전을 벌이고 있던 아군에게 긴요한 방어선이었다.

1950년 7월 12일, 미 제24사단이 금강 남안에 본격적인 저지선을 펴게 되었는데 이 구역에서 영동-옥천-신탄진-대평-공주-강경-장항 등의 도시를 연한 선이 연결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경찰병력도 장항과 강경, 논산 지구에서 북괴군과 충돌하여 격렬한 일전을 전개했다. 이때 평택을 침공한 적 일부 병력이 아산-대천을 거쳐 장항을 노리고 서천에 쳐들어왔다.

금강 어구의 장항은 당시 서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7월 13일 미 제24사단 34연대가 방어하고 있던 공주를 점령한 적 제4사단은 일부 병력을 강경, 논산으로 우회시켜 대전 공략을 기도하였다.

7월 14일, 적이 금강에서 도하를 강행하여 미 제24사단의 금강방어선을 돌파해 미군은 대전으로 후퇴했다.

7월 15일 10:00경 미군으로부터 후퇴 명령을 받고 강경경찰서장 정성봉 총경 이하 220명의 경찰관들은 쓰리쿼터 자동차에 무전기·무기·탄약을 싣는 한편 화물자동차 4대에 식량과 보급품을 싣고 저녁 야음을 이용하여 전북 임실까지 후퇴하여 작전명령을 기다리다가 7월 16일 전주로 올라와 전주초등학교 교정에 1박 하던 중 전주에 주둔, 경비를 하고 있던 국군 측으로부터 강경을 사수해야 한다는 작전지시를 받고 긴급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성봉 경찰서장은 부대를 재편성하여 3개 중대로 나누고, 7시간에 걸쳐 전투훈련을 실시한 뒤, 같은 날 17:00 경 서장의 진두지휘 하에 강경으로 진격, 강행군 5시간 만에 전북 도계인 강경읍 채운동에 도착하였다. 연일 거듭된 격전과 강행군으로 서원들은 피곤하였으나 도착 즉시 적정을 탐색해 본 결과 적 주력부대는 보이지 않고 지방 좌익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고 있어 이들을 격퇴하고 경찰서를 탈환하였다. 1중대는 경찰서 자체경비, 2중대는 강경 채운산을 중심으로 강경읍 외곽 경비, 3중대는 강경읍내 경비를 각각 분담하여 철야 경비근무에 임하였다. 시가를 배회하면서 지방공비 5명을 검거하고, 7월 17일 13:00경 강경읍 사교동에 있는 성동교에서 무장괴한 10명을 포착, 신원을 확인한 바 대한유격대증을 제시하며 “우리는 남침 북괴군에 항전하여 강경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므로 이들을 강경경찰서 부대에 편입하였다. 이들은 북괴군의 정찰대원으로 유격대로 위장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강경경찰서의 연락과 보급을 차단하여 강경경찰서 부대를 고립에 빠뜨린 후 7월 17일 18:00경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경찰부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강경을 포위한 적 1,000여명과 내통하여 함정에 빠뜨려 7월 18일 18:00에 강경읍 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그들의 소련제 기관총으로 경찰서에 집중사격을 신호로 강경 외곽에 포위한 적군과 더불어 사방에서 공격하며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경경찰서 전투대의 전력이 의외로 강하자 정전할 것을 요구하여 양측 최고 책임자가 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2차에 걸친 회담은 결렬되었고 전투가 격화되었다. 7월 19일, 강경경찰서 부대의 실탄은 바닥이 나고 정성봉 서장 외 82명의 경찰관들이 강경경찰서를 사수하다 산화하고 몇 명의 대원만이 탈출하여 이후 팔공산 전투 등에 참가하였다.<sup>52)</sup>

52) 충청남도경찰국, 충남경찰사 상권, 1986, 755~757면 참조.

### 3. 유격작전

국군이 후퇴하면서 우리 국토가 적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자 반공청년을 중심으로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전쟁 초기 국군 후퇴시기에 유격대가 활동하였고, 국군과 유엔의 북진시기, 그리고 중공군의 공세로 서울을 빼앗기고 이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유격전이 전개되었다. 북진 시기는 아군의 승리에 고무되어 국군을 지원하여 북한군 패잔병이나 빨치산 토벌에 참가한 경우가 많아 순수 유격대로 보기는 어렵다. 중공군 공세기에도 국군과 경찰을 지원한 경우가 많아 순수 유격대로 보기 어려워 유격전 개념으로 볼 때는 전쟁 초기 국군 후퇴기를 순수 유격대 활동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53)</sup>

이 시기 국군의 유격대는 주로 낙오병 위주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0. 6. 28 결성되어 서울 불암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육사 1기생·2기생도와 제9연대 낙오병이 조직한 ‘호랑이 부대’가 있고, 1950년 7월 15일 헌병사령부 문관 김관철이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양원리에서 지역주민들과 낙오병을 조직해 만든 ‘의혈단유격대’가 있다. 이들의 활동은 포로가 된 아군 구출, 북한군 자동차 기습 등 제한적 활동을 하는 등 비교적 소규모의 전투를 전개했다.<sup>54)</sup>

그러나 경찰 유격부대는 1개서 이상의 단위를 이루며 대규모의 조직적 경찰력으로 적과 전투를 벌여 적의 진격을 상당시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1) 6.25 동란 초기 전주형무소 애국지사 석방작전

일방적으로 밀리던 숨 가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반격을 시도하던 경찰과 구국유격대의 합동작전이 전개되었다.

개전 초기 북한군이 서해안 방향으로 집중 침공해 움에 따라 전북경찰대는 크게 둘로 갈리어 전북의 동부지방으로 물리고 있었다. 그 하나가 인월에 본부를 설치한 전북경찰국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진안으로 후퇴한 전주·금산경찰서원들이었다. 이곳은 경남으로 후퇴하는 통로였다.

진안에 집결한 경찰부대는 전주형무소에 갇혀 있을 애국인사 및 군경가족들을 구출해야겠다는 뜻을 모았다. 전주가 북한군에 점령된 지 5일째 되던 7월 25일, 경찰부대와 차일혁 대위의 7사단 구국유격대 합동부대는 전주형무소 탈환계획을 세웠다. 경찰부대는 임시본부를 진안에 설치하고 작전지휘소를 소양지서로 하고, 구국유격대는 임실 경각산 용골연에 설치하여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소양지서를 경유한 경찰부대는 전주인근에서 구국유격대와 합류하여 전주로 저항 없이 진입할 수 있었다. 먼저 전주형무소를 중심으로 하여 기린봉에서 우아동 왜막실 쪽으로 송정규 소대를, 성황당 고개 쪽으로는 백희수 부대를, 서학동 전주교 쪽으로는 구국유격대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북한군은 전주사범학교와 신흥학교에 대부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으며 전주 곳곳은 이미 북

53)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23면.

54) 조성훈, 전계서, 82면.

한군의 앞잡이 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합동부대의 전주진입은 사전에 적군들에게 발각된 상태였다. 북한군은 경찰부대가 배치된 기린봉 방향으로 박격포와 전차부대의 포격을 전개하였다. 합동부대는 북한군의 박격포 및 전차부대와 2시간 동안의 격렬한 전투를 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주형무소 탈환을 포기하고 후방으로 후퇴하였다.<sup>55)</sup>

## 2) 전남 곡성서 부대의 곡성 태안사 및 백운산 일대 유격전

한국동란 개전 초기 북한 공산군이 전북으로 진입해 오고 있던 무렵인 7월 19일, 곡성경찰서장 한정일 경감 이하 경찰관 120명, 의용경찰 370명 도합 520명의 인원이 경찰서 내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일 서장은 곡성 사수 결심을 피력하고 불가피하게 전투에 참가할 수 없는 인원 13명은 열외하게 한 후, 전투준비를 시키는 한편, 상황이 불리할 경우 전면전보다는 유격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입산할 경우를 예상해 비상식량 등을 준비시켰다.

7월 2일 오후 도경에서 지원 병력을 보내오면서 전북 남원에서 순천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전선에서 적의 남하를 저지하라는 작전명령이 하달되어 도경지원병력 포함 820명이 곡성군 압록면 부근 산속에 포진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매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23일 새벽 1시 순천 주암지서가 적에게 습격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빨치산으로 판단, 한정일 서장이 100명을 인솔하고 출동하여 총격전 중에 있는 주암지서를 구출하였으나 특별한 전과는 없이 적이 전남으로 들어왔다는 정보만 입수했다.

한 서장은 압록으로 돌아가 일부 병력만 잔류시키고 전원 본서로 귀서 시킨 상태에서 이미 광주를 점령해 버린 전군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적의 광주진입사실을 확인, 입산을 결심하고 7월 24일 의용경찰 중 장기전 부적격자 200여명과 경찰가족 100여명을 제외시킨 520명을 인솔하여 곡성군 죽곡면 소재 봉두산 태안사로 입산했다. 본부는 태안사 경내에 위치시키고 전투준비를 완료하여 전투중대 4개 중대, 유격대 1개 중대, 정찰대 1개 소대 등으로 전투부대를 편성한 후 이들을 각각 인근 산악지대에 배치하여 주변의 죽곡·석곡·황전·월등·삼지면 등 4개 지역에 대하여는 어느 곳이나 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일체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7월 27일에는 돌발사고로 인하여 연락이 불가능했던 치안국과의 교신이 가능하게 되어 무기, 탄약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다. 적은 이미 경상도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곡성을 경유하여 하동으로 침입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소규모 부대를 산발적으로 기습,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현재까지 곡성을 경유하여 침입하고 있는 적은 500명 정도에 불과한 숫자임을 확인하고 기습 후 부산으로 철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휴대용무전기의 불비, 아군 호주기의 오폭우려 등으로 포기하였다.

7월 28일 오후, 생포한 포로로부터 순천에 침입한 적의 6사단 병력이 일부 남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29일 정오경에 압록을 통과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공격계획을 수립하고 29일 새벽에 압록철교를 중심으로, 철교하부 및 구레와 곡성 양쪽 숲속에 매복을 완료시켰다. 매복 완료 4시간 후, 적 3개 중대를 발견하여 전투개시 3시간여에 걸친 전투 끝에 52명 사살, 싸이카 5대 노획 등 괄목할 만한 전과를 올렸으며, 이 전투로 뜻하지 않게 치명적 손실을 입은 적이 같은 날 14 : 00에 1개 중대의 증원 병력으로 반격을 해오므로 다시 공방

55) 전북지방경찰청, 전북경찰 60년사, 전북지방경찰청, 2005, 55면.

전을 벌인 후 태안사로 철수하였다. 8월 5일 식량과 탄약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 8월 6일자로 보급물자를 공수하겠다는 치안국의 통지를 받고 대기하던 중 8월 6일 未明에 적 1개연대의 포위공격을 받게 되었다. 북한군이 기습을 당하고도 전투병력의 실체를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을 즈음, 경찰서장과 함께 태안사에 올랐던 젊은 경찰관 한명이, 두고 온 연인을 잊지 못하여 한 밤에 하산하여 연인과 밀회를 하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연인은 젊은 경찰관이 은거하는 장소를 밀고해야 할 입장이었고, 태안사가 인민군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곡성경찰은 유리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적을 유인, 격파함으로써 적에게 많은 타격을 가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퇴, 48명의 전사자와 200여명의 중·경상자를 내고 태안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태안사에서 철수한 한정일 서장은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관에게 전투상황의 보고와 함께, “금후의 무전통신 여하는 이번 전투의 승패를 결정함. 대한민국 동지들의 건투를 기원함.”이라는 비장한 최후의 무전을 타전하고 잔여 서원을 이끌고 전남 광양 백운산으로 잠입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전 서원들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적의 보급로를 기습하여 전선으로 수송되는 적의 군수물자에 많은 손실을 주는 동시에 적의 집결지 혹은 거점을 기습공격하는 등 아군의 총반격 시까지 백운산을 근거지로 유격전을 반복하여 적의 배후를 교란,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sup>56)</sup>

6.25 이후 경찰의 후퇴, 지연작전을 통하여 적지 후방에서 1개서 단위가 일치단결하여 유격전을 감행한 아주 드문 예이다.

### 3) 전남 도서지역의 유격전

하동으로 철수하려다 차단 당해 고립된 전남 서남부지역 경찰은 7월 27일 조석원 경감이 지휘한 강진서 부대에 이어 8월 1일 심재순 경감이 통합지휘한 장흥·보성·화순서부대가 완도로 철수하여 도서지방의 해상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완도에는 완도서장 김두천 경감 이하 200여명의 대한청년단원<sup>57)</sup> 100여명과 함께 치안을 확보하고 있었다. 완도에 상륙한 전남경찰부대는 완도병력 300여명과 나주병력 270명, 화순병력 60명으로 본부의 방비를 담당토록 하고, 나머지 병력으로 청산도를 비롯한 인접 각 도서를 방어하고자 청산도에 주둔시켰다. 영광경찰서 40명과 무안경찰서 선박부대 90명을 부산으로 보내어 후방지원을 담당케 하고 강진·장흥서 병력은 유격활동으로 적정 수집을 하게 했다.

8월 3일 강진부대 150명은 완도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마량포에 진출한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고금도에 상륙했다. 4일 미 공군기 3대가 청산도 상공을 정찰비행 하다가 경찰부대를 적군으로 오인, 기총 소사하여 부두의 모든 선박이 격파되고 완도의 선박 6척이 격침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8월 5일 강진서 병력은 마량포에 작전 상륙을 감행하여 적 10명을 사살하고, 대원 3명이 전사하였다.

56) 전남경찰사, 전남지방경찰청, 1992, 573~575면.

57) 이승만 대통령이 조직한 청년단체로 현재의 예비군에 준하는 조직.

심경감이 지휘하는 장흥부대 180여명은 노화도에 상륙한 적을 섬멸하기 위해 노화도·소안도·포구도에 각각 상륙하여 적 10명을 사살하고, 주민 300명을 구출 그중 50명을 청산도에 소개하였다.

8월 8일, 강도 부근에서 적 선박 1척을 격침시켰고, 8월 15일에는 금당도에 상륙작전을 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평일도에 상륙한 적을 격퇴했다. 8월 25일, 적 1개 대대가 우수영에서 진도로 침공하자 진도를 포기하고 청산도로 철수하였다.

경찰은 총본부를 청산도에서 완도로 이동하고, 고금도, 신지도, 조락도, 청산도 등에 경찰 병력을 재배치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을 모르고 있는 적들은 완도에 상륙한 400여명의 대원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9월 20일 완도를 재탈환하였다.

도서지역을 발판으로 한 유격전에서 적 293명을 사살하는 등 적의 배후를 집요하게 괴롭혔다.<sup>58)</sup>

#### 4. 낙동강 사수작전

1950년 8월 18일 새벽 북한군은 대구 인근 가산산성에 들어왔다. 북한군은 가산산성으로 진출하면서 대구를 향해 박격포를 쏘았다. 적이 집중적으로 겨냥한 곳은 대구역이었다. 적이 82mm 박격포 7발을 발사해 대구역에서 근무 중이었던 직원 한 명이 순직하고 민간인 7명이 부상당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정부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전시(戰時) 수도를 다시 옮기는 날이었다. 대구에 떨어진 적군의 포탄 7발은 이상하리만큼 거대한 파급효과를 낳고 말았다. 소문이 소문을 만들고, 다시 큰 소문으로 끝없이 번져가는 식이었다. 말하자면 ‘대구도 곧 적의 손에 끝장나고, 대한민국은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전선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동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국군과 미군의 분전으로 전선은 잘 지켜지고 있었고, 미군의 막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민심은 크게 동요했다. 대구는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대구 주민과 피난왔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다. 대구는 전쟁발발 직전 인구가 30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남하한 피난민으로 8월 초순에 70만 명에 이르고 있었다. 남자는 지고 여자는 머리에 짐을 인, 남부여대(男負女戴)의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부산 등 남쪽 지역으로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섰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구역이나 남쪽으로 향하는 국도 쪽으로 몰려들었다. 적의 포탄 몇 발로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벌어질지도 모를 순간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하면 군인만을 연상하며 경찰은 후방 지역에서 치안유지만 하면 그 임무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6.25 동란에서 우리 경찰은 그렇지 않았다. 조병옥 내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전투경찰은 대구 일대에서 군부대와 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때로는 최일선의 책임지역을 담당, 전투를 수행했다. 그리고 일반경찰은 시·도 경찰국 단위로 책임구역을 분할, 치안유지는 기본적으로 실시하면서 적의 불순분자 침투방지와 색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때에 피난민의 대구탈출 러시가 이어진 것이다.

58) 윤장호, 전계서 142~144면.

조병옥 박사가 대구역에 나타났다. 광복 뒤에 미 군정 기간 동안 경무부장을 맡았고 신생 대한민국에서 내무장관으로 줄곧 경찰을 총지휘해온 분이다. 그는 당시로서는 아주 드물게 미국에 유학해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셈이다. 늘 위엄이 넘쳤고, 경찰의 지휘계통을 완전히 장악해 해방 뒤의 혼란기와 전쟁을 맞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유지했다.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그가 직접 대구역의 피난민 대열 앞에 나선 것이다. 그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더 내려가려는 피난민들을 향해 일장연설을 했다. 국군과 미군, 경찰을 믿고 피난가지 마라고 연설을 하였다.

조 박사는 대구역의 연설에 그치지 않고 몸소 거리를 누볐다. 가두에서 그는 피난민들을 향해 계속 설득을 벌였다.

해방 뒤의 한국 사회는 이념적으로 좌우가 충돌하는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다. 조 박사는 그 혼란기 속의 치안을 담당했던 최고의 주역이었다. 당시 경찰은 미 군정 아래에서 ‘법과 질서(Law and rule)’의 원칙을 확립했다. 미군은 경찰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국군보다는 경찰을 더 후원했다. 미 군정 아래에서 경찰은 카빈과 M-1 소총으로 무장한 반면, 군대는 일본이 남긴 38·99식 소총을 들었다. 기관총도 경찰에게만 줬지, 군의 몫은 없었다. 초기 병력 수준에서 보면 경찰이 군에 비해 몇 수 위였다.

그런 막강한 조직을 이끌고 해방 뒤, 건국 초의 혼란기를 잘 헤쳐 왔던 분이라 조 박사의 대구 공황 상태 진정 노력은 금세 효과를 나타냈다. 경찰이 전면에서 대구의 민심을 가라앉혔다. 조 박사는 경찰 병력을 직접 진두에서 지휘하면서 피난민과 대구 시민들을 계속 설득했다. 게다가 미 8군 사령부가 대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점도 대구의 시민과 피난민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끌어 앉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거리로 몰려 나왔던 피난민들이 다시 제 거주지로 돌아갔고, 혼잡했던 길거리도 점차 질서를 잡아갔다.

진실이 자리를 잡으면 소문은 그저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 거듭되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군과 미군은 튼튼하면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방어막을 펼치고 있었다. 적군이 오히려 조급한 심리에서 발악적인 공세를 펴붓고 있었다. 이게 진실이다. 엄연한 이 사실 앞에서 공황을 부르는 헛소문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뒤에도 적군의 포탄이 대구에 또 떨어졌다. 8월 19일과 20일에도 적의 포탄 몇 발이 대구에 날아들었다. 그러나 피난민은 더 이상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구역에 짐을 이고 진 남녀들이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았다.<sup>59)</sup>

포탄이 날아오는 등 대구 인근에 전선이 형성되자 정부기관과 국회는 부산으로 이동했다. 국방부와 내무부, 미8군 사령부만이 대구에 남았다.

8월 23일, 강원도 경찰 비상경비사령부 예비대로 사령부와 같이 행동하던 독립 7중대는 국군 수도사단 헌병대에 배속되어 안강전투에 참가해 간첩 색출과 군 주보급로 경비에 임했다.

8월 24일 대구 인근 가산에 적 1개 대대가 침투해 작전 배치된 경찰과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와 합동작전을 전개, 제압했다. 미 제1기갑사단과 국군 제2군단 전면에서 공방전이 전개되어 경찰도 이 전투에 참여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 이에 경찰은 팔공산지구 전투

59) 백선엽, 대구에 떨어진 포탄, 중앙일보, 2010. 3. 16.



사령부를 구성하여 칠곡군 봉무동에 설치했다.

9월 1일 새벽 야음을 이용해 적 1개 대대가 현풍 지구를 기습, 현지에 배치된 경찰대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그 적을 격퇴했다.

9월 2일, 경기도경 1개 대대가 대구 서북방 동명지구에서 미 제1기갑사단과 합동으로 격전을 치렀다.

9월 4일, 적의 공세가 시작되어 미 제1기갑사단의 전선이 압축되고 적이 영천을 기습하였다.

전황의 악화로 대구방어가 불안하게 됨에 따라 미 제8군 사령관 위커 중장은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부산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신 국방장관은 조병옥 내무부장관에게 내무부도 국방부와 함께 부산으로 이동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조재천 경북지사실에서 신성모 국방·조병옥 내무장관을 비롯하여 김활란 공보처장·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병옥 내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대구철수를 단호히 반대하였다.

“현재 대구 주위에는 수천의 경찰관이 적의 오염(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찰망을 펴고 있으며,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시내의 통행마저 금지한 채로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팔공산, 가산산성 일대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에 각각 경찰이 배속되어 있는 관계로 경찰부대는 원래 전투가 그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만, 이 위국에 처하였으니 만큼 국군과 유엔군의 지휘 아래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협동하여 공수양면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내무부의 부산이동이란 이 사람 한 몸의 안전은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 한 몸의 안전보다 각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의 안전과 그 분전을 위하여 본인이 최후까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대구철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다. 이제 만일 경찰이 맥없이 철퇴하게 된다면 국군과 유엔군에게도 작전상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구가 적에게 피탈될 경우에는 제 아무리 기동과 화력이 탁월한 유엔군일지라도 마침내는 부산마저 고수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유엔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이 당한 던케르크 철수의 비극을 다시 맛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은 한국을 포기하고 말 것이므로 경찰의 대구철수는 매우 중요한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본인은 내무부의 부산 이동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다.”

조 내무장관의 대구사수론에 대하여 국무총리서리를 겸하고 있던 신성모 국방장관은 “미

8군사령관이 대구철수를 요청하므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조 장관은 즉시 위커 사령관을 방문, 대구에서 경찰이 철수한다는 것은 곧 유엔군이 부산을 철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인은 내무부 장관으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 안녕과 전투경찰의 사기를 위하여 내무부의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역설하여 위커 사령관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내무부와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는 대구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으나, 정작 국방의 중임을 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신성모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9월 5일 24 : 00 군용열차와 각종 수송차량 편으로 대구를 떠나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조병옥 내무장관은 경감 이상의 경찰간부들을 경북도청 광장으로 소집하여 경찰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대구시내의 사찰·경계를 철저히 하고 경찰부대는 전선에서 국군 및 유엔군과의 합동작전에서 단 한 명도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엄중히 지휘·감독할 것을 명령하였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철수한 뒤 경찰은 한편으로 적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대구의 민심 수습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9월 5일, 영천을 적이 일시적으로 점령하면서 현실화된 대구위기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9월 8일 미 제8군사령관은 대구방어의 실질적 책임을 치안담당 책임을 진 경찰이 맡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국장으로 하여금 대구방위사령관직을 맡도록 하였다. 경북도경국장 조준영 경무관은 이 날 사령관에 취임하여 사령부를 도경으로 이전하는 한편, 송관수 총경을 참모장으로, 곽상영 경감을 작전·정보참모로 하는 참모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틀 뒤인 9월 10일, 위커 8군사령관은 대구방어에 대한 지휘체계를 단일화한다는 이유로 대구방위사령관을 전시특명검열보좌관 민기식 대령으로 교체하였다. 3일 동안 대구방

어사령관직을 경북도경국장이 수행하였다. 대구사수전에서 대구시내 5,800명의 경찰관과 전투경찰 1만 명이 자리를 지켰다.<sup>60)</sup>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단행됨으로써 9월 18일 끈질기게 대구를 공격하던 적이 북상, 패주하여 2개월에 걸쳤던 낙동강 공방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sup>61)</sup>.

수많은 전투경찰이 치열한 공방전을 국군·유엔군과 함께 치르며



우리나라를 지켜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국회, 군의 핵심인 국방부와 육군본부도 후방으로 후퇴한 대구에서 유엔군의 후퇴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이 최후의 보루로서 대구를 사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점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0) 참전경찰유공자회, 전계서, 402~403면.

61) 윤장호, 전계서, 133~135면.

## 5. 빨치산 토벌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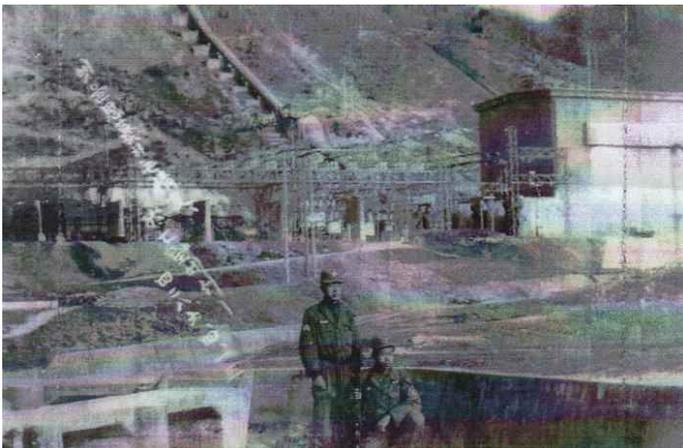
### 1) 치열한 빨치산 토벌 작전

1950년 12월 10일 전주에서 제18전투경찰대대가 창설되어 지역유지와 전주 주둔 군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전투경찰대 대대장(경감)에 취임하였다.

1951년 1.4 후퇴 와중에 군 병력이 전방에 집중된 틈을 타 남한 유일의 정읍칠보발전소 일대를 빨치산 2,500여명에 포위하자 포위된 경찰을 구출하기 위해 전투경찰 75명을 이끌고 돌진해 빨치산들을 격퇴시키고 발전소를 탈환하여 송전을 재개, 호남과 충남일대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75대 2,500 고금의 예가 거의 없는 전투비율이었다.

당시 칠보발전소는 강원도 영월수력발전소가 적에게 점거된 직후라 마산 미군 발전함과 같이 남한일대의 송전을 나눠서 했던 곳이다. 마산 미군 발전함에서 2만 kw, 칠보발전소에서 1만 3천 kw를 공급하고 있었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칠보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충남과 전남·전북 등 지역에 송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적의 포위로 송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호남일대 평야부근의 관개에 큰 역할을 하는 동진 수리조합의 저수지까지 적의 수중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었다.



치안책임자의 문책과 전남북 군사령관에게 탈환하라는 특명까지 있었던 만큼 칠보발전소의 탈환여부는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차일혁이 75명의 병력을 이끌고 완수해낸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1개 중대의 절반도 안 되는 병력으로 공격하여, 1개 연대 수준의 방어 병력을 격퇴했다. 통상 낮은 곳의 공격자가 고지의 방어자를 상대로 전투를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1개 연대 2,000여명의 병력으로 공격을 해도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차일혁의 부대는 통상적인 작전으로 하면 성공가능성 거의 없었으나, 총알이 눈앞에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 정면 돌진하는 담대한 작전과 아군의 숫자를 몇 십배 부풀리게 보이는 기만전술로 탈환작전에 성공했다. 동서고금에 유례가 거의 없는 전투 중 하나가 될 것이다.<sup>62)</sup>

이후 연이은 전북 일대 빨치산 토벌작전에 성공하였고 용맹무쌍한 차일혁 부대가 나타나면 빨치산들은 도주하기 바빴다고 한다. 이후 전북 일대의 주요 빨치산 토벌작전에 예외 없이 참전하였다.

1952년 12월에는 전북 임실시장 재직 중 악명을 떨치던 빨치산 외팔이부대장 이상운을

62) 경찰종합학교, 차일혁 총경 일대기, 2008, 77~87면.

사살하여 임실 일대의 치안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1953년 5월 서남지구전투경찰대 2연대장(총경)으로 취임하여 그해 9월 18일 빨치산 남부 군사령관 이현상을 토벌하여 토벌작전 사실상 종료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2월 특별 담화를 발표, “지리산 평정 없이 남한의 평화가 없고, 이현상의 생포 없이 지리산의 평화 없다.”고 단언하고, 이현상을 잡는 부대원 전원의 특진을 약속할 정도로 비중이 큰 인물이었다. 차일혁 총경의 부대가 그를 토벌하여 빨치산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현상의 숙부 조차 시신인수를 거부하자 차일혁은 연대본부가 있던 하동 섬진강변에서 이현상의 시체를 화장하고 그의 권총으로 조총 3발을 쏘주는 등 적장의 예로 장례를 치뤄 주었다<sup>63</sup>). 역사에 보기 힘든 감동적인 장면이다.

## 2) 문화경찰활동

### (1)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화유산 보존

1951년 5월 경, 국군 8사단과 전투경찰 지휘관들의 합동회의가 있었다. 차일혁은 이 회의에서 화엄사 소각 지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sup>64</sup>) 녹음기를 앞두고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만한 사찰이나 암자를 소각하라는 지시는 작전상 당연한 것이었지만 모두들 난색을 표하고 있었는데 차일혁이 질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를 한 것이다. 당시는 군이 주도권을 가진 때여서 차일혁의 반대는 묵살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전투경찰지휘관들이 별도로 모였다. 그들은 내심 사찰 소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공비토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차일혁은 화엄사 지역을 책임을 진 동료 경찰대대장과 같이 사찰의 문짝만 태우는 기지를 발휘해 소실 위기에서 구해냈다. 작전명령을 이행하면서도 슬기롭게 문화유산을 보호하였다<sup>65</sup>).

차일혁은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는 말을 하며 구례 화엄사·천은사, 고창 선운사, 장성 백양사, 하동 쌍계사, 김제 금산사 등 사찰을 보존하였다. <sup>66</sup>) 또한 고은 시인이 1998년 쓴 차일혁 총경 화엄사 공덕비문에는 덕유산의 수많은 사찰을 보존했다는 기록이 있다.<sup>67</sup>) 1951년

말부터 1952년까지 무주경찰서장으로 재직 중 보존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토벌대장 차일혁의 노력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이 오늘날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다.

63) 참전경찰유공자회, 전계서, 713면.

64) 차일혁의 18대대 부하 박기환의 증언.

65) 차길진,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의 수기, 도서출판 보안기획, 2002, 130~132면.

66) 1958년 5월 5일 초대 조계종 종정 효봉스님이 수여한 감사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

67) 공덕비는 화엄사에 설치.

## (2) 다양한 문화활동 전개

전투경찰대대장 시절에 1953년 최대 히트작인 영화 애정산맥 제작에 참여하였고, 학도병가, 18대대 돌격가, 토벌대의 노래 등을 작사하여 부하들의 전투의식을 고취하였다.

충주경찰서장 재직 중 國唱 임방울을 서장 관사로 초청하여 판소리 녹음하였다. 임방울은 권력을 싫어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판소리를 해달라고 하여도 거절하던 사람인데 뜻이 맞았던 차일혁 총경의 부탁에 판소리를 녹음하였다. 임방울의 판소리는 거의 음반이나 녹음본이 거의 없는데 차일혁의 녹음 진본 릴테이프 8개가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임방울 국악진흥재단에 기증되어 국악계에서는 그 가치를 아주 높게 보고 있다.<sup>68)</sup>

그는 평상시 “문화를 잃으면 우리 마음을 잃고, 마음을 잃으면 우리나라를 잃는다.”는 말을 하는 등 문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었으며 ‘문화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경찰도 문화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지론을 실천에 옮긴 ‘문화경찰의 표본’이었다.

## 3) 인본경찰활동

### (1) 관용과 포용으로 빨치산 귀순 유도

빨치산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였으나 가족도 그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자 사람의 죽음은 누구나 똑같다고 하며 이현상의 시신을 敵將의 禮로 화장, 섬진강 물에 뿌려 주고 조총 3발을 쏘 주었다. 이 일로 인해 공산주의자가 아니냐고 의혹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sup>69)</sup>

차일혁은 생포한 공비가 있으면 양민으로 많이 돌려보냈다. 첫 전투인 구이면 전투 때부터 이러한 방법을 써보았는데 그를 배신하는 경우는 없었다.

차일혁이 생포한 공비들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방법은 “살고 싶은가? 죽고 싶은가?”라고 질문하는 방법이다.

가끔 가다 죽고 싶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념무장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경우는 법적 절차에 맡겼다. 이러한 사람들을 붙잡고 아무리 설득해도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념보다는 주위 환경에 의해 공비들에게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법적 처리할 경우 한순간의 잘못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차일혁은 생각하여 과감하게 귀순자 처리를 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가끔가다 악랄한 행위를 한 사람이 살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하들이 먼저 심문을 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가? 죽고 싶은가?’하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경중은 가려져 있어서 실수할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중 귀순으로 처리해서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 전투능력이 뛰어나거나 생계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차일혁의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여 빨치산 토벌할 때 산으로 올려 보내 산에 있는 옛 동료들을 귀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68) 한국일보, 2010년 1월 18일 보도.

69) 경찰종합학교, 전계서, 268~169.

다른 방법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가?”라고 질문하는 방법이다.

이념무장이 철저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 방법을 썼다. 아무리 이념무장이 철저히 되어있어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쯤은 생각할 것이다. 생포된 사람으로서 부모님에 대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할 것이다. 이념무장이 철저히 된 사람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물어보아 그 마음이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귀순의 기회를 주었다.<sup>70)</sup>

## (2) 주민들에 대한 보복 방지

총을 쏘는 빨치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비를 토벌한 다음에는 선무공작을 잘 해서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같은 주민들끼리 헐뜯고 밀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마을 주민 전체가 걸려들게 될 것이고 원한과 증오는 더욱 깊어질 것이 분명했다. 차일혁은 밀고하는 주민들을 혼내서 돌려보냈다. 이웃간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고 싶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역자들이 차일혁의 부대에 속속 자수해 왔다.<sup>71)</sup>

1951년 10월 15일 무주구천동 작전을 나간 차일혁의 18대대 1중대원 중 68명이 현지 주민들의 거짓말에 속아 순식간에 전사했다. 일단 후퇴했다가 다시 무주구천동을 탈환한 부하들은 주민들을 그냥 둘 수 없다며 당장 죽여 버려야 한다고 흥분한 부하들을 만류하고, 주민대표에게서 8개월 전 군인들이 이곳에 진주하여 아녀자들을 유린했으며, 토벌대를 보면 여자들 걱정을 해야 하고, 빨치산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짐꾼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어 토벌대에게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하소연을 듣고는 마을주민들에게 일체의 보복행위를 하지 않았다.<sup>72)</sup>

## (3) 약자(피난민)에 대한 온정

차일혁은 토벌작전이 끝나고 부대정비를 할 때는 전쟁 고아원을 방문해 대원들이 푹푹히 모은 위문품과 작전 중 노획한 일용품들을 전달하곤 했다.<sup>73)</sup>

작전성공으로 부대에 포상금과 성금이 기탁되면 이를 전액 기부하여 피난민 구제하는 과격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무주서장 재직 중인 1951년과 1952년 초, 겨울에 움막집에서 동사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한국동란 초기 미군 제24사단이 무주읍내를 거쳐 철수하면서 미공군의 엄호폭격으로 무주읍내 1,200가구 중 1,000여 가구가 파괴되어 주민들이 땅을 파고 겨울을 나다가 얼어 죽게 된 것이다. 참호용으로 지급된 자재를 우선 주민 주택복구에 투입하여 주민을 동사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용기와 휴머니즘을 발휘하였다.<sup>74)</sup> 사실상 도시를 재건한 것이다.

빨치산 토벌작전 중 노획물을 획득하면 부대소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전북일보에 노획한 소 2마리 찾아가라’고 광고 계

70) 차일혁 경무관이 서남지구전투경찰사령부 2연대장 시절 부관 재미동포 박덕영 씨의 증언.

71) 경찰종합학교, 전계서, 68면.

72) 경찰종합학교, 전계서 195~204면.

73) 경찰종합학교, 전계서, 107~108면.

74) 경찰종합학교, 전계서, 206~209면.

재하여 주인을 찾아 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sup>75)</sup>

## V. 결 론

평시 경찰의 임무는 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이다. 그러나 전시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의 임무로 등장한다. 그러나 평시와 마찬가지로 경찰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임무 역시 전시에도 매우 중요한 임무로 부과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찰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최전선에서 세력비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옥쇄의 정신으로 곳곳에서 성공적인 지연작전을 전개했다. 개성지역의 경우 적 침공로 상에서 4시간이나 시간을 지연시켰으며, 춘천 내평지서의 경우 도로상의 요충지라는 군사전략상의 핵심지역을 끝까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버텼다. 소양강이라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군 주저항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전쟁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서울이 점령된 이후에도 경찰은 무기를 군에 양도하고 맨손으로 철수하며 간첩색출 등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지연작전의 와중에도 국가기간시설인 화력발전소와 자원의 보고가 있던 영월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반복작전을 전개하였고, 강경경찰서에서도 적이 점령하지 않은 강경지역으로 반격하여 작전을 하다 거의 전원이 전사하기도 하였다. 호남지역에서는 경찰서 단위의 유격대를 조직해 조직적인 유격전을 적 한복판에서 전개하여 적 후방을 교란시켜 낙동강 전선 방어작전에 일조를 하였다.

빨치산 토벌작전 중에는 죽을 힘을 다해 적과 싸웠고, 전쟁이 휩쓸린 단순가담자들에게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으며, 구폐 화엄사를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를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구해내는 업적을 이루기도 했다.

전시엔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켜냈고, 보복행위가 일삼는 살육의 현장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를 지켜낸 경찰작전은 우리 전사에서 특이한 작전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전쟁시 경찰작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나, 경찰의 구체적인 작전성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 같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75) 차길진 전계서, 136면.

## 참고문헌

- 강혜경. (2002).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1948~1953)」.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경찰종합학교. (2008). 「살아있는 한국경찰의 혼, 차일혁 총경 일대기」.
- 경찰종합학교. (2008). 「안병하 경무관 일대기」.
- 국방군사연구소. (1950~1953).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 김진혁. (2004). 한국경찰제도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7: 63-84.
- 내무부 치안국. (1973). 「한국경찰사 II」.
- 대한민국참전경찰유공자회. (2003). 「아~살아있다! 대한민국경찰의 혼」. 서울 : 월간조선사.
- 박준석. (2009). 뉴테러리즘의 대응방안과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4: 93-120.
- 심재기. (1993). 「6.25와 민간항쟁」. 서울 :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
- 오문균. (2000). 한국전쟁 시기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방군사연구소, 「군사 40」 : 63.
- 윤장호. (1995). 「구국경찰전사」. 서울 : 제일.
- 이만중. (2011). 북한의 안보위협과 경찰의 역할.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연구」, 10(2): 149-173.
- 이상안. (2005). 「경찰행정학」. 서울 : 대명출판사.
- 전남지방경찰청. (1992). 「전남경찰사」.
- 전북지방경찰청. (2005). 「전북경찰 60년사」.
- 조동운. (2011). 치안행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활동.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63-778.
- 조성훈. (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차길진. (1990).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혁의 수기」. 서울 : 후암.
- 충남경찰국. (1986). 「충남경찰사(상, 하권)」.
- 한국경찰사편찬위원회. (1972). 「한국경찰사(I)」. 서울 : 내무부 치안국.
- 허남오. (1998). 「한국경찰제도사」. 서울 : 동도원.
- 경향신문. 22면, 1996년 9월 19일.
- 뉴데일리. 조갑제 칼럼, 1950년 6월 25일의 박정희와 김종필. 2011년 6월 26일.
- 중앙일보. 대구에 떨어진 포탄. 2010년 3월 16일.
- <http://polinlove.tistory.com/5952>
- <http://epolaris.tistory.com/230>

메 모

메 모

## 6. 26자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과정 : 북한의 지원요청부터 참전결정까지를 중심으로

김옥준(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목 차

- I. 머리말
- II. 전황의 악화와 북한의 지원요청
- III. 중국 지도부의 참전논의
  - 1. 10월 1일 서기처 회의
  - 2. 10월 2일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
    - 1) 마오의 참전 결심
    - 2) 모순되는 두 개의 전문
- IV. 참전결정의 당론 확정과 통보
  - 1. 10월 4일 회의: 찬반의 논쟁
  - 2. 10월 6일 회의: 당론 확정
  - 3.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참전결정 통보
- V. 참전보류와 최종 참전결정
  - 1. 조우·스탈린 회담과 참전보류
    - 1) 조우·스탈린 회담
    - 2) 참전보류 결정
  - 2. 10월 13일 회의: 최종 참전결정
- VI. 맺는말: 참전결정과정에서의 마오저똥의 역할

### I. 머리말

중국은 북한의 남침에 동의하였으나 사실상 남침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 전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남침준비단계에서부터 전쟁과 관련된 모든 일을 스탈린과 협력하여 결정하고 스탈린으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탈린의 전략적인 계산아래 스탈린에 의해 주도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탈린은 전쟁 준비단계에서부터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직접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 들이는데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였다. 따라서 당시 남침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곧 중국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유사시 지상군의 파병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오의 지원약속은 상당히 이념

적·제한적인 지원약속이었다. 지상군의 파병도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라는 조건부 약속이었을 뿐이다.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북한의 남침 전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마오로서는 충족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자 미국은 신속하게 그것도 아주 깊숙이 전쟁에 개입하였으며, 8월 이후의 전쟁전개 양상은 마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발전되고 있었다. 당초 한반도의 전쟁에 직접 참전할 의도도 필요도 없었던 중국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나타나자 참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된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전세가 급격히 역전되기 시작하고 서울이 탈환되면서 중국 역시 미군의 38선 돌파의 우려와 함께 위협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동안 참전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전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황이 급속하게 불리해지자 9월 30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고 스탈린은 즉각 마오저똥에게 북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에 동의하면서 스탈린과 마오가 한 약속이었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남침에 동의하면서 참전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미군의 38선 돌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미 38선을 넘고 있었고 미군의 위협이 현실화 되어가자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지원 요청을 받은 10월 1일부터 중국 지도부는 참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논의과정이었던 10월 8일 미군은 38선을 넘게 된다.

본 논문은 마오가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을 지원해 달라는 전문을 받아 본 10월 1일부터 사실상 참전이 최종 결정된 10월 13일까지 마오와 중국 지도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 참전결정에 도달하였는지를 당시 개최된 주요회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 지도부가 한국전쟁 참전 논의한 13일 동안의 5차례의 주요회의를 각 회의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10월 2일 회의 이후 스탈린에게 보낸 모순되는 두 개의 전문에 대한 견해, 조우은라이와 스탈린과의 흑해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회의 전 과정에 걸쳐서 나타나는 마오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다만 참전 결정과정에서 논의되고 거기서 추론할 수 있는 참전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 II. 전황의 악화와 북한의 지원요청

한국전쟁은 전쟁 초기 북한의 일방적인 공세에 밀려 낙동강 전선을 형성한 이후 미군과 유엔군의 저항이 증가되기 시작하여 50년 8월에 이르러서는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8월 7일-11일 국군과 미군이 북한군 정예사단인 제6사단을 마산 근처에서 격파함으로써 이러한 교착상태도 무너지기 시작하여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sup>1)</sup> 9월 15일 새벽, 드디어 마오저똥(毛澤東)이 우려하고 있었던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어 한미연합군은 인천항 우측 전방의 월미도를 점령한 후 당일 오후 만조 시부터 인천 남부고

1)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전쟁(상)』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325-332 참조

지를 따라 상륙하였다. 또한 9월 16일부터는 미 제8군의 주도하에 낙동강전선으로부터 총반격이 시작되었다. 인천지역으로 상륙한 13,000명의 미군 선발대는 인천지역의 북한 인민군을 격파하였으며, 이어서 미군의 주력부대가 인민군의 인천방어선을 돌파하여 상륙지점을 확대하여 저녁 무렵 인천 전 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서울, 수원 쪽으로 진격하여 18일 김포비행장을 점령하였고 20일에는 한강을 넘었다. 계속해서 26일에는 미 제10군단과 낙동강전선에서 반격을 개시해 북상해 온 미 제8군의 예하부대와 최초로 오산부근에서 합류하여 28일 마침내 서울 탈환에 성공하였다.<sup>2)</sup> 한미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이은 서울 탈환으로 한국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으며, 전쟁의 주도권은 미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국군과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의 대대적인 반격과 함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뒤이은 서울 탈환으로 주력부대의 퇴로를 차단당한 북한군은 38선을 방어할 수 있는 병력조차 제대로 배치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9월 27일, 김일성은 니즈랑(倪志亮) 중국대사를 회견하는 자리에서 “38선 및 그 이북지역에서는 수비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29일 조우은라이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과 한국군은 북상중이고, 남부에 있는 조선인민군은 봉쇄되어 있으며, 38선 이북에는 방어부대가 없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적은 곧장 평양까지 진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3)</sup>

당황한 김일성은 9월 29일 박헌영과 연명으로 스탈린에게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였으며, 30일 슈티코프를 경유해 다음과 같은 전문이 10월 1일 새벽 3시경 스탈린에게 전해 졌다.

그로미코:

박헌영 동지가 직접 본직에게 전달한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동지에게 보내는 서한임.  
존경하는 스탈린동지

(전략) 적들은 서울을 완전히 점령한 후 바로 북조선에 향해 진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침략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중략)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우리는 동지에게 특별원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적군이 38선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원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들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중국과 다른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 국제의용군부대를 만들어 우리의 투쟁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 박헌영

슈티코프

1950. 9. 30<sup>4)</sup>

김일성으로부터 다급한 지원요청을 받은 스탈린은 10월 1일 북한에 주재하고 있던 군사고문 마트비에프와 슈티코프에게 전문을 보내고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이 38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38선 이북에서 적과 투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소련군의 직접개입은 불가능하고 국제의용군의 결성과 파견이 가장 적절한 방식인데 이러한

2) 서상문, 『모택동과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129-130

3) 『周恩來軍事文選』 第4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p.58

4) 이 전문은 10월 1일 새벽 2시 50분 스탈린에게 보고되었다. АВІРФ, ф.45, оп.1, д.347, лл.41-45(1950. 9. 30)

부대는 장가장중국 군대가 조직할 것이므로 중국 지도부와 논의하도록 김일성에게 전달하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원조할 책임을 마오에게 전가하였다.<sup>5)</sup> 또입은 불에 주재하고 있던 소련 기관으로써 북요원들을 철수시키자는 슈티코프의 건의를 승인하였다. 스탈린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소련군을 직접 파병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탈린은 마오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어 중국의 직접파병을 촉구하였다.

평양, 소련대사:

즉각 마오저똥이나 조은라이에게 전달바람

(전략) 본인은 만일 귀하가 당면한 상황인식에 근거하여 조선을 위해 지원군을 파견할 수 있다면 5,6개 사단정도를 즉각 38선으로 보내 조선동지들로 하여금 귀하의 부대의 엄호아래 38선 이북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부대는 지원군의 신분으로 출동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중국지휘관이 통솔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하여 본인은 조선의 동지와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귀하의 답신을 바랍니다.

필리포프

1950. 10. 16<sup>6)</sup>

이와는 별도로 김일성은 10월 1일 밤 니즈량(倪志亮)중국대사와 무관겸 정무참사인 차이청원(柴成文)을 급히 초치하여 중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 인민군의 작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압록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제13병단을 파병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sup>7)</sup> 또한 같은 날 김일성은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위해 박일우를 베이징(北京)에 급파하여 “적들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해 오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니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출동하여 우리군의 작전을 도와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신을 마오저똥과 조우엔라이(周恩來)에게 직접 전달케 하였으며,<sup>8)</sup> 박일우는 10월 3일에야 베이징에 도착하여 마오를 만나 이 서신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당시 전시인 점을 감안하면 평양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체되었을 것이다.<sup>9)</sup> 또한 당시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육로를 이용해야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 III. 중국 지도부의 참전논의

5) 국사편찬위원회(2006), p.559

6) АВІРФ, ф.45, оп.1, д.334, лл.97-98(1950. 10. 1)

7)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北京: 解放軍出版社, 1991), p.71, 또한 일부 주장에 의하면 9월 30일 김일성이 평양의 중국대사관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니(倪)대사와 차이(柴)참사를 만나 중국의 출병을 요청하였다는 견해 도 있지만(楊風安·王天成, 『駕馭朝鮮戰爭的人』(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p.63) 그날 밤 리셉션에 참석한 인물은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인 김두봉이었고, 김일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김일성은 10월 1일 따로 이들을 만났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주지안룡 지음, 서각수 옮김,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서울: 도서출판 역사넷, 2005), p. 213 참조)

8) 주지안룡(2005), p.163, 그러나 박헌영이 베이징에 파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楊風安·王天成(1993), pp.66-67. David Tsui,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X)", 『전략연구』 통권 44호 (2008), p.223 참조. 그러나 10월 1일 밤 니즈량대사를 만난 자리에 박헌영이 외상의 자격으로서 분명히 배석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일 베이징으로 간 사람은 박일우라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9) 주지안룡(2005), pp.225-227, 이 서신이 마오에게 전달된 시간은 10월 2일 밤이라는 주장이 있다. 서상문(2006), p.163

## 1. 10월 1일 서기처 회의

10월 1일 새벽 북한의 위기를 구원하라는 스탈린의 과병요청 전문을 받아본 마오는 저녁 9시 30분 경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서기처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회의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이 회의에는 마오와 조우은라이, 주더(朱德), 류샤오치(劉少奇), 런비스(任弼時) 등 당시 서기처 서기(지금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하였다.<sup>10)</sup> 10월 2일 새벽에 전달되었다고 전해지는 니즈랑 대사로부터 온 김일성의 지원요청 전문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회의에 대한 자료는 찾기 힘들지만 마오는 이 회의에서 이미 한국전쟁 참전에 마음을 굳혔으며, 참석자들도 참전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에 무리는 없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마오가 회의가 끝난 직후 동북변방군 가오깡(高崗)과 덩화(鄧華)에게 보낸 전문을 들 수 있다. 마오는 첫 회의가 끝난 10월 2일 새벽 2시 당일 오후 중공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개최를 지시하면서 가오깡에게 전문을 보내 즉시 북경으로 와서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동시에 덩화에게 동북변방군은 원래의 계획에 따라 새로운 적들과 전투하기 위하여 명령만 내리도록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과 준비상황과 함께 즉시 출동가능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sup>11)</sup>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참전 쪽으로 기울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은 왜곡된 보고였지만 미군이 38선을 넘었다는 보고였다. 네룽전(聶榮臻)은 “당시 10월 2일 새벽, 즉 회의가 끝나기 전 미군이 대규모의 병력으로 38선을 넘었다는 왜곡된 보고를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조우은라이도 “10월 1일과 2일의 소식에 의하면 미군이 이미 38선을 넘었으며, 남조선의 군대는 38선 이북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 이었다”라고 출병 후인 10월 24일 전국정협 18차 상무위원회 보고에서 언급하였다.<sup>13)</sup> 이는 국군의 38선 돌파를 미군으로 잘못 오인한 것으로서 실제로 미군은 10월 8일 38선을 넘었다. 그러나 비록 왜곡된 정보였지만 당시로서는 미군이 38선을 넘을 경우 참전하겠다는 중국의 참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전황이 악화되면서 미군이 38선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은 중국 지도부에게는 이미 상당히 보편적인 사실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북한정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었고, 마오의 주장과 주도로 참전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긍정적으로만 평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까지 마오가 주도해 온 모든 군사준비는 한반도 전황의 변화에 따라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서울 탈환 이후 참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의 단계까지 와 있었을 뿐, 의문시 되는 세계 최강의 미 제국주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전의 가능성, 그리고 참전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참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참전에 불리한 조건들이 제

10) 이 회의는 중난하이 이넨탕(中南海 頤年堂)에서 열렸으며, 런비스는 병으로 불참했다는 주장도 있다.

11)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3), p.106

12) 聶榮臻, 『聶榮臻回憶錄』 (解放軍出版社, 1986), p.736

13) 『周恩來文選』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p.52

기 되었음이 분명하다. 참석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마오만이 참전을 원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마오와 조우 두 사람만이 참전을 원했고, 나머지는 참전에 부정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sup>14)</sup> 따라서 10월 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된 이 회의는 참전을 원하는 마오의 입장과 즉각 참전에 대한 신중론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당내 온건파의 신중론에 부딪힌 마오는 이후 참전문제를 상당히 고심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마오가 참전을 주저하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기보다는 참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했을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sup>15)</sup>

## 2. 10월 2일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

### 1) 마오의 참전 결심

당시 마오가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10월 1일 서기처 회의에서 참전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 이상 자신의 의사를 순조롭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참전에 적극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즉각 참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하여 신중론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월 1일 회의 이후 계속 지도부의 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10월 2일 회의에서 마오는 자신이 이미 참전 결심을 굳힌 것을 감추려하지 않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이는 전날 소수의 서기들만 참석한 서기처 회의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었지만 거의 참전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국 확대회의를 거치면서 마오는 참전 신중론자들이 자신의 예상외로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월 2일 오후 3시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마오는 전체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외교사 연구실에 의하면 마오는 이때 이미 참석자들에게 중국 인민해방군을 ‘항미원조 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북한으로 파병한다는 결정을 담은 ‘내부지시’를 돌렸다고 한다.<sup>16)</sup> 마오는 이 회의의 서두에서 “조선에서의 상황은 심각하다. 따라서 금일 토의할 사항은 조선전쟁에서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파병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파병하는 것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호전시키는 핵심적인 관건일 것이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시급한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파병 일 시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지휘관에 임명할 것인가이다.”<sup>17)</sup>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회의가 한국전쟁 참전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을 실행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임을 밝혔다. 이러한 마오의 언급은 참전의 결심을 이미 굳힌 상태임을 말해준다.

14) Chen Ji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94), p.281

15) 서상문(2006), p.189

16) 外交部外交史研究室, 『當代中國使節外交生涯』 第1輯,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5), p.94, 서상문(2006), p.191 재인용

17) 『彭德懷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1981), p.257

이 회의에서 ‘미군과 미국의 괴뢰 이승만 군대와 싸우기 위해 조선에 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보내는 결의’를 통과시켰고, 10월 15일을 출병일로 정했다.<sup>18)</sup> 누구를 지원군 사령관에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오는 당초 린뱌오(林彪)를 가장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린뱌오는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최정예부대인 제4야전군을 지휘해 왔고, 지원군의 주력부대인 제13병단도 그의 휘하에 있었다. 그러나 린뱌오는 병을 빙자하여 그 직위를 고사하였다. 사실 린뱌오는 파병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마오는 차선책으로 마오는 시안(西安)에 있던 쩡더화이(彭德懷)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즉시 상경을 지시하였다.<sup>19)</sup>

이 회의에서 참전 일시와 참전 지휘관이 결정된 것 등을 볼 때, 마오의 참전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확실하게 표명되었던 회의였으며, 이 회의에서의 정치국 결의는 중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회의의 정황뿐만 아니라 마오의 지위와 중국 지도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회의에서 한국전쟁 파병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격론이 벌어졌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이 회의에서 마오는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스탈린에게 다음절에서 언급되는 잠시 출병을 보류한다는 전문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sup>20)</sup>

## 2) 모순되는 두 개의 전문

10월 2일의 회의를 마치고 마오는 스탈린에게 보내는 두 개의 상반된 전문을 작성하게 된다. 그 하나는 파병하기로 하였다는 전문(이하 A전문)이고 다른 하나는 파병을 유보한다는 전문(이하 B전문)이었다. 그런데 A전문은 중국 측 자료에서만 발견 될 뿐 소련 측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B전문은 중국 측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소련 측에서만 발견된다. B전문은 당시 로신 소련대사가 마오와의 회견 결과를 정리하여 주중 소련대사관에서 보낸 것이어서 중국 측 자료에서 발견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A전문이 소련 측에서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전문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sup>21)</sup>

이 두 전문을 놓고 마오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밝혀보기 위하여 두 전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A전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2)</sup>

1) 중국은 지원군의 이름으로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동지들을 도와주고 미국과 그 앞잡이 이승만의 군대와 싸우기로 결정하였음. 한반도 전역이 미국에게 점령되면 조선의 혁명세력이 철저히 패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략자가 기세등등하여 동양 전체가 불리하게 될 것임.

2) 미군 등을 섬멸하고 몰아낼 준비를 갖추는 문제 해결해야 하고, 중국 군대가 조선에서

18) 張希, “彭德懷受命率師抗美援朝的前前後後”, 『中共黨史資料』 第31號(1989. 10), p.127, 세르게이 곤차로프,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반 옮김,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서울: 일조각, 2011), p.327 재인용

19) 『彭德懷傳』 (北京: 當代出版社, 1993), p.400

20) 이러한 주장은 주지안롱(2005), pp.2250228 참조

21) 이러한 견해에는 David Tsui, 주지안롱 등이 동의하고 있으며, 선즈화는 A전문만을 주장하고 있다.

22) 세르게이(2011), pp.327-329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임.

미군과 충돌하면 미국의 선전포고에 이어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중국의 연안도시를 폭격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임

3) 중국 군대가 조선에서 미군을 섬멸하고 조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섬멸할 수 있으면 정세는 혁명진영과 중국에 유리하게 바뀔 것임.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전쟁은 대규모로 확대되거나 장기전이 되지 않을 것임. 가장 불리한 것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 때문에 중국의 경제 재건계획이 방해를 받아 인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임

4) 남만주에 배치되어 있는 12개 사단에 대해 10월 15일에 출동명령을 내리기로 결정 하였음. 초기 단계에서는 방어 전투만 수행하면서 소련의 무기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릴 것임.

5) 미군에 비해 우리의 무기와 장비는 극도로 열악함. 적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우리는 겨우 조종사훈련을 시작하였으며, 51년 2월까지 300대의 항공기를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임. 미군과 싸우기로 결정을 내린 이상, 적의 1개 군단을 섬멸하기위해서는 적보다 4배 이상 많은 부대와 2배 이상 우세한 화력을 필요로 함

6) 24개 사단을 이동 중임. 이들 부대들을 내년 봄과 여름에 조선으로 투입할 예정임.

다음으로 마오가 로신을 통해 스탈린에게 보낸 B전문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sup>23)</sup>

베이징 발, 1950년 10월 3일 12시 15분 접수

필리포프:

4581호 전문(10월 1일 스탈린의 전문)에 대한 마오저퉁의 답신은 다음과 같음

1950년 10월 1일 전문을 잘 받아 보았음. 당초 우리는 적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해 올 때 수개 사단의 지원군을 북조선으로 이동시켜 조선동지들을 지원하는데 동의하였음. 그러나 다시 신중하게 고려 해본 결과,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극도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함.

첫째, 수개 사단으로는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우리 군의 장비는 낙후되어 있으며, 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음), 적군은 우리군의 퇴각을 압박할 것임.

둘째, 미국과 중국과의 공개적인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소련 역시 이로 인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됨.

중공중앙의 많은 동지들은 이 문제는 필히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당연히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하지 않는다면 당장 곤경에 빠져 있는 조선동지들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이고 우리 자신 또한 대단히 불안함. 그러나 만약 우리가 수개 사단을 출동시킨 후 바로 적군에게 밀려 퇴각해 와 버리고, 또한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공개적인 충돌이 야기 되면, 우리의 평화건설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은 전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표시 할 것임(전쟁은 인민들에게 상처와 불안을 가져다줄 것이, 인민들은 평화가 필요함).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자제하고 출병을 잠시 보류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임 좋음. 그렇게 해야만 적과의 작전에서 좀 더 유리해질 것임

당분간 수세에 처하게 되므로 조선은 투쟁의 방식을 전환하여 유격전을 전개해야 할 것임. 우리는 당 중앙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이 회의에는 중앙 각 부문의 책임자들이 참석 할 것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이것은 우리의 초보적인 전문이며, 우리는 귀하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함. 만일 귀하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즉시 조우 온라인과 린뱌오동지를 귀하의 휴양지로 예방하게 하여 귀하와 이 사안에 대한 토론과 중국

23) АВПРФ, ф.45, оп.1, д.334, лл.105-106

및 조선의 상황을 보고하게 할 것임

모택동  
1950. 10. 3

위와 같은 마오의 입장 표명에 주중대사 로신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달았다.

1. 본직의 생각에는, 모택동의 회답은 중국지도자들의 입장이 초기의 입장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 회답의 내용은 이전의 모택동과 유딘, 코토푸, 코노프, 그리고 유소기와 본직의 수차례 회담 중 표명했던 태도와는 모순이 있음. (이러한 회답의 정황은 즉시 보고한 바 있음). 그들은(모택동 등) 회답에서 중국인민과 인민해방군은 조선인민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으며, 인민해방군의 사기가 높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그들은 미국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임. 왜냐하면 미국군대는 일본군대보다 약하기 때문임.

2. 중국정부는 의심할 바 없이 조선에 작전능력을 구비한 5,6개 사단을 파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이 파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중국군대가 대전차무기 특히 대전차포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함. 중국인들의 입장변화의 원인은 우리도 지금까지 분명하지 않음. 추측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복잡한 국제정세, 조선상황의 악화, 영미동맹이 음모를 꾸며 네루(Nerhu)를 통하여 중국인들에 대해 불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인내와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 등임.

로신  
1950. 10. 3

결과적으로 마오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은 참전유보를 통보하는 B전문이었다. 그렇다면 중국 내부적으로는, 특히 마오가 이미 한국전쟁 참전에 결심을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에서 스탈린에게 참전결정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반대로 참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참전 유보의 뜻을 담은 전문을 보낸 것인가. 이러한 이유에 대해 데이비드 쉰이는 A전문 초안을 작성한 후 미군이 아직 38선을 넘지 않았다는 새로운 정부를 입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이의 근거로 “그는 미군이 38선을 넘을 때까지 한국전쟁에 군사력 개입을 한다는 이라고 실행하지 않고 한 번 더 억지에 의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중국 측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번 더 억지는 10월 3일 새벽 인도대사 파니카를 만나 미군의 38선 돌파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다는 것이다.<sup>25)</sup> 또한 주지안룡은 그 이유를 2일 중왕에 서양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참전에 이러한격론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마오가 동 회의에서 강력러한참전반대의견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26)</sup> 먼저 데이비드 쉰이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과 모순된다. 즉 “미군이 38선에서 멈출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면 중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나 중국지도부는 미군이 그곳에 머물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명백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역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군의 38선 돌파 여부는 마오에게 있어서 이미 참전결정의 주요변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된다. 또한 2일 회의에서 강력한 반대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는 주지안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일 회의는 신중론이 제기 되었다 할지라도 마오의 확고한 참전결심을 기반으로 참전

24) David Tsui(2008), p.229

25) 李越然, “我在周總理身邊工作的偏斷回憶”, 外交部外交史編輯會編, 『新中國外交風雲』(北京, 1990), p.97

26) 주지안룡(2005), pp.217-227 참조

일시와 참전 사령관을 결정한 회의였다. 따라서 2일 회의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찬반의 의견이 비교적 자유롭게 개진된 회의는 4일 회의에서였다.

1일과 2일 회의에서 당시 참전반대자 혹은 신중론자들의 의견이 일부 개진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무기 장비가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과의 대적은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를 주로 제기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해 마오는 스탈린의 지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참전과 소련의 지원을 면밀히 연계시켜 소련으로부터 최대한의 참전 이익들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두 전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두 전문 모두에서 공통된 마오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참전의 조건으로 소련의 무기와 장비를 충분히 지원받고, 특히 소련공군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전문은 참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목적은 같은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 한다면 A전문은 참전 할 테니 무기와 장비, 공군지원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고, B전문은 중국 군대가 무기와 장비가 낙후되어 있어 참전할 여건이 안 되니 중국이 참전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위의 두 전문 모두에서 스탈린의 역할을 요구하고 스탈린의 역할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미 참전을 결심하고 있었던 마오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전에 긍정적인 A전문과 부정적인 B전문 중 전략적으로 B전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입장 표명이 소련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가를 저울질 한 협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마오가 B전문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한국전쟁에 파병하고자 하는 결심을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아니다. 또한 당시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결정과정을 고려해 볼 때, 참전반대자와 신중론자를 설득하는 것이 참전결정에 필요조건을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었다.

## IV. 참전결정의 당론 확정과 통보

### 1. 10월 4일 회의: 찬반의 논쟁

10월 4일 오후 3시 또 다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이 회의는 5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5일 오후 또 다시 속개되었다. 이 회의에는 주더, 류샤오치, 조은라이, 런비스, 천윈(陳雲), 강성(康生), 가오깡, 평진(彭眞), 동비우(董必武), 린버취(林伯渠), 덩샤오핑(鄧小平), 평더화이, 린바오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마오는 주저하고 있는 일부 정치국원들을 토론을 통해서 한국전쟁 참전에 확신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오는 먼저 한국전쟁 개입 일자가 10월 15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참석자들에 대해 한국전쟁 참전의 불리한 조건과 파병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자유롭게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27)</sup>

참전 반대의견으로 주로 제시된 것들은 국공내전으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토지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국민당 잔당을 여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 일부 인민해방군과 민중이 전쟁에 지쳐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미군에 비해 무기와 장비가 질적·양적으로 현저히 뒤져있고, 제공권과 제해권도 없다고 지적하였다.<sup>28)</sup> 특히 린바오는 미군과 대적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 그것도 타국에 출병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당시 중국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참전에 신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sup>29)</sup> 마오와 조우가 참전에 적극적이었다면 네룽전과 린바오가 대표적인 참전반대자였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참전 신중론과 참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회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파병에 반대하면서 각종 어려움을 열거하였으며, 회의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전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sup>30)</sup>

이에 대해 참전 적극파들이 주장하였던 이유들은 미국이 3개의 방향(한반도, 타이완,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중국을 침공하는 전략을 타파하지 않으면 중국본토까지 위협받을 것이며,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빠를수록 좋고, 적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면 방어선이 길어지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참전해야 대의명분이 있고, 미국과 유엔군 역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을 청취한 후 마오는 “여러분들이 언급한 것 모두가 이유가 있으나 다른 사람이 국가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어쨌든 마음이 편치 않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파병결심이 확고함을 내비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더화이가 참전지지에 결정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2일 회의에서 참전 사령관으로 지명된 평더화이는 오후 4일 오후 5시경 회의장 도착했으나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5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마오가 평더화이에게 발언을 요청하자, 평더화이는 “조선을 지원하기 위한 출병은 필요하다. 큰 손해를 입더라도 해방전쟁을 몇 년 늦게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 압록강변과 대만에 미군이 버티고 있으면 그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구실을 찾아 침략할 것이다”라고 적극 참전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sup>32)</sup> 발언이 끝나자 마오는 “어떠한 위협과 곤란이 있더라도 미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전에 즉시 출병해야 한다. 평더화이 동지를 지원군 총사령관에 추천하며, 출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회의 후 평더화이 동지와 함께 논의할 것이다”<sup>33)</sup> 사실상 마오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5일 저녁 마오는 조은라이, 가오깡, 평더화이와 만찬을 가지고 한국전 파병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여기서 마오는 가오깡과 평더화이에게 선양에 도착하는 즉시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중앙의 의견을 전달하고, 10월 15일 북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sup>34)</sup>

## 2. 10월 6일 회의: 당론 확정

27) David Tsui(2008), p.232

28) 『彭德懷軍事文選』(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pp.320-321

29) 楊風安·王天成, 『駕駛朝鮮戰爭的人』(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 p.81

30) 師哲, 『在歷史巨人身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 p.494

31) 주지안룽(2005), pp.239-240

32) 彭德懷, 『彭德懷自述』(北京: 人民出版社, 1981), p.258

33) 위의 책

34) Chen Jian, p.185

10월 5일, 참전유보입장을 밝힌 마오의 10월 3일 전문에 대한 스탈린의 회답 전문이 접수되었다. 이 전문에는 스탈린이 마오를 최대한 설득하여 한국전쟁에 참전시키려 하였다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스탈린은 동 전문에서 4가지의 이유를 들어 중국이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5-6개 사단을 한반도에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첫째, 조선 사태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미국은 현재 대규모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일본은 군국주의세력이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소련의 동맹국인 중국에게 한반도문제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문제에 대한 조건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러한 조건은 조선에 유리할 것이며, 적은 조선군을 군사기지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은 이유로 결국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단독 강화조약체결을 거절당할 것이며, 일본제국주의의 부흥과 일본을 극동지역에서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기도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스탈린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만일 중국이 한 번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겨루어보지 않고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면 중국은 이러한 이득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이득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 역시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대만을 자신의 기지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승산 없는 장개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이나 미래의 일본제국주의를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해야한다. 그때가 되면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여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있고 이승만이 한반도 전체를 손아귀에 넣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대륙에 교두보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sup>35)</sup>

위의 전문에서 보듯이 스탈린은 마오와 중국인을 자극하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구사하면서 마오의 참전을 이끌어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마오는 이 전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무렵 마오에 있어서 스탈린의 반응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더 시급한 문제는 당내 참전반대파와 신중론자들을 설득하여 한국전쟁 참전을 명실상부한 당론으로 결정하는 일이었다.

10월 6일에는 두 회의가 열렸다. 그 하나는 조우은라이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신분으로 소집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였고, 다른 하나는 오후 늦게 개최된 중앙정치국회의였다. 10월 6일 아침 조우는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소집하였으며, 이 회의에서는 참전을 전제로 한반도 파병을 위한 동북변방군의 이동, 노후된 무기와 장비의 교체, 병참문제 그리고 평덕화이 지휘부 구성 등에 관하여 논의되었다.<sup>36)</sup> 이 회의에는 주더, 평덕화이, 네룡전, 린바오 및 참전과 관련된 부문의 관계자들이 거의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린바오가 여전히 참전 반대의견을 피력하자 조우은라이는 “정치국회의의 결정은 따라야 하며,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적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정부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출병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당 중앙, 마오저똥 주석이 결정을 내린 이상 집

35)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탈리아 바자노바, 김광린 역,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pp.121-123

36) 『彭德懷傳』 (北京: 當代出版社, 1993), p.23

중하여 생각할 것은 출병 후 어떻게 승리를 거둘 것인가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마오, 주더, 펑더화이, 가오강이 협의한 안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는 순조롭게 결론을 내려 네룽전 총참모장 대리를 실행책임자로 결정하고 폐회되었다.<sup>37)</sup>

이어서 오후 늦게 속개된 중앙정치국회의의 의의는 4일 회의에서 나타난 반대의견과 신중론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져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오는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금 개입하는 것이 가장 적기임을 강조하였고, 펑더화이는 마오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전에 신중론을 펴고 있던 주더,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이 주전파의 전략과 승전 가능성 제시에 공감함으로써 ‘즉각 출병’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때까지 소극적인 입장과 신중론을 펴고 있던 여타 정치국원들이 참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sup>38)</sup> 따라서 한국전쟁 참전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 다시 말해 중국 지도부가 참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다.

회의가 끝난 후 밤 10시 30분경에 마오는 로신 소련대사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로신은 다음날인 7일 마오의 결정을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마오는 8일 북한대사 니즈랑을 통해 김일성에게 중국이 군대를 보내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 3. 김일성과 스탈린에게 참전결정 통보

10월 6일 밤 마오에게 중국의 참전결정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 받은 로신 소련대사는 다음날인 7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문을 스탈린에게 보냈다.

[2318호 전문]

필리포프:

본직은 북경시간 10월 6일 22시 30분 모택동을 예방하였으며, 귀하의 답전을 전하였으며 본직의 말을 듣고 난후 모택동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1. 그(모택동)는 현 국제정세와 그 발전전망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동의하였음.
2. 그는 귀하가 답전 중에 중국과 소련이 연합하여 미국을 타도하여야 한다는 언급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말함. 그는 만일 전쟁을 하려면 의심할 바 없이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고 강조함. 또한 그는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이러한 생각을 제의하였다고 언급함.
3. 중국군대의 조선과병에 대해서, 모택동은 5,6개 사단이 아닌 최소한 9개 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기술 장비가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108문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더구나 전차는 1대도 없다고 언급함. 그는 조선동지들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1개 군단(3개 사단)은 1500문의 각종 대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모택동은 중국이 미국군단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미군 병력의 4배와 미군 장비의 2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모택동은 예비부대가 있으므로 보병의 문제는 그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나 군대의 장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소련의 지원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현재 그들은 훈련받은 포병, 전차병 및 기타 기술병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임.

중국인 조선에 파병하는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모택동은 그들은 가까운 시일내에 부대를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으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군으로 하여금 조선

37) 주지안룡(2005), p.255

38) 서상문(2006), pp.210-211

의 북부에 깊숙이 들어오게 하여 그들의 역량을 분산시키게 하는 것이 중국이 더욱 쉽게 그들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음

4. 모택동은 공군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표명하였음. 그는 조선동지들의 정보에 의하면 미군은 조선전장에서 약 1000대의 항공기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직 자신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모택동은 어떻게 하든 공군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왜냐하면 공군은 1)조선에서의 중국지상군 엄호 2)최전방(전선)에서의 전투참가 3) 수 곳의 중요한 공업지역(상하이, 톈진, 베이징, 선양)엄호를 할 수 있기 때문임

모택동은 미국이 먼저 공습으로 중국의 공업기지를 파괴하여 경제생활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며, 교통망을 파괴할 것이라 보고 있음. 모택동은 이러한 상황은 국내의 강렬한 불만을 야기시킬 것이며, 특히 민족자산계급의 불만을 야기시켜 인민정부는 대단한 곤경에 빠질 것이라 언급함. 모택동은 중국정부는 부대와 공업지역에 대한 공중엄호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소련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표명함.

5. 모택동은 조선의 교통망이 파괴되어 군대의 물자보급이 극도로 곤란함에 주목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소련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6. 모택동은 중국정부는 공군에 필수적인 무기와 탄약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이 없음을 표명하였으며, 1951년의 총예산 22억불 중 2억불만이 군 장비 구입에 쓸 수 있을 뿐이라 언급함.

7. 위의 원인으로 모택동은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조우은라이와 린바오를 파견하여 귀하에게 중국의 정황과 이러한 생각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조우은라이와 린바오는 10월 8일 출발할 것임. 북경을 이륙한 비행기는 그들을 이르쿠츠크까지, 이르쿠츠크부터는 우리의 전용기를 이용하게 될 것임

회담 참가: 주은래, 우슈첸(伍修權), 페도렌코, 회담시간 1시간 45분

로신

1950. 10. 7<sup>39)</sup>

필리포프 :

이 전문은 북경시간 22시 30분 접수한 모택동이 귀하에게 보내는 내용으로 2318호 전문의 보충임

필리포프 동지:

본인은 귀하의 회신을 받고 대단히 기뻐함. 본인과 당중앙전회 모두는 귀하의 의견에 동의함. 본인은 이미 평더화이동지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및 정치위원으로 임명하였음. 가오강동지가 지원군의 보급을 책임질 것임. 그들은 이미 오늘(10월 8일) 새벽 비행기로 봉천으로 떠났음. 부대는 10월 15일 전에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임.

본인은 이미 중국지원군의 조선파병을 김일성동지에게 통보하였음.

주은래동지와 임표동지는 이미 오늘 아침 8시 비행기로 귀하의 소재지로 출발하였음. 그들의 임무는 비밀로 해주시기 바람.

모택동

1950. 10. 8<sup>40)</sup>

위의 첫 전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부분은 위의 첫 전문 3항, 4항은 앞의 2절에서 언급한 A전문, 즉 참전하겠다는 전문의 4항, 5항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마오가 참전을 위해서는 소련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

39) РГАСПИ, ф.558, оп.11, д.334, лл.126-128(1950. 10. 7)

40) РГАСПИ, ф.558, оп.11, д.334, л.132(1950. 10. 8) 이 전문에 로신은 조우은라이 일행이 17시 43분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였다고 첨언하고 있다.

며, 조우은라이와 린바오를 파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스탈린에게 참전결정사실을 통보한 당일(8일) 오후 마오는 주북한대사 니즈랑에게 김일성에게 참전결정사실을 통보하는 전문을 보냈다. 김일성은 10월 1일 니즈랑 대사에게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후 그때까지 중국의 참전결정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동 전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면의 정세아래 귀국의 침략자에 대한 투쟁을 원조하기 위해 우리는 지원군을 조선 영내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음. 2) 평더화이 동지가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임명되었음. 3) 동북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 가오깡이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 지원업무 및 만주 영내의 조선 원조관련 업무의 모든 책임을 질 것임. 4) 동지께서 곧 바로 박일우 동지를 선양(沈陽)에 파견하여 평더화이와 가오깡 두 사람을 만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에서의 작전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바람. (평더화이, 가오깡 두 동지는 오늘 베이징에서 선양으로 출발함).<sup>41)</sup>

니즈랑과 차이칭윈이 마오의 전문을 김일성에게 전하자 김일성은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과 조선공산당과 인민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마오저똥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에 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sup>42)</sup> 이는 그 전까지 김일성이 중국의 참전결정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10월 8일 스탈린 역시 중국의 참전 사실에 관하여 김일성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위의 정황으로 보아 스탈린의 전문보다 마오의 전문이 김일성에게 먼저 전달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동 전문에도 역시 구체적인 출병일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은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구원요청을 하였던 10월 1일 이후 8일까지 내부적으로 이미 참전이 결정되었던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김일성에게 귀 뚝 조차 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지만 일부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주지안룡은 중국이 10월 8일에야 비로소 북한에 참전결정사실을 알려준 진짜이유는 1)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였지만 마오는 내심 미국의 함정에 빠져버린 김일성의 무모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중국 지도부의 참전반대파와 소극파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2) 북한지도부는 전쟁 수행과정에서 중국의 충고를 무시하였다. 3) 미군이 38선을 넘는 것을 참전시기로 설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평양에 설명할 수는 없었다. 4) 중국 지도부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정식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알려줄 수 없었다. 5) 이른 시기에 참전의향을 알게 되면 미국에 대한 즉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북한이 이를 선전하고 나온다면 비밀참전의 돌연성이 훼손되어 승리의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할 것, 또한 중국이 파병하기 전까지 북한인민군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등을 들고 있다.<sup>43)</sup>

그러나 주지안룡이 제시한 이유들은 상당부분 비이성적, 감성적인 차원에서 도출된 것이며, 과연 국가의 중대결정을 앞둔 마오가 그러한 판단을 하였다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게 참전결정 사실을 8일에야 통보해 준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소련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련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려는 마오의 전략에서 볼 때 여전히 소련과의 협상을 앞 둔 상황에서 자신의 참전 결정 사실을

41) 『毛澤東軍事文獻』 第6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3), P.111

42) 柴成文·趙勇田, 『板門店談判』, (北京: 解放軍出版社, 1992), p.84

43) 주지안룡(2005), pp.264-265

북한에 먼저 통보 해 준다면 북한은 바로 이 사실을 소련에 알릴 것이고 그렇다면 협상태이블에서의 자신의 참전 결정 유보라는 협상카드와 소련을 대신하여 직접 참전한다는 대소련 우위적인 입장이 훼손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결국 마오는 중국의 참전결정 사실을 8일 거의 같은 시간에 소련과 북한에 각각 통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V. 참전보류와 최종 참전결정

### 1. 조우·스탈린 회담과 참전보류

#### 1) 조우·스탈린 회담

조우은라이와 린바오는 스탈린에게 중국의 참전결정사실을 통보한 8일 베이징을 출발하여 11일 흑해 크림반도에 있는 스탈린의 별장에 도착하였다. 조우와 스탈린의 회담에 대해서 언급할 때, 먼저 논쟁이 되고 있는 조우은라이가 어떠한 입장과 전략을 가지고 동 회담에 임했는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조우은라이가 스탈린과 회담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해 왔다. 그 하나는 조우은라이가 베이징을 떠나기 전 중공중앙정치국은 여전히 통일된 견해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조우은라이는 파병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견해를 가지고 출발하였다는 것이고,<sup>44)</sup> 다른 하나는 조우은라이의 소련방문 목적이 소련에게 중국의 파병결정을 통보하고, 동시에 지원군의 무기 장비를 소련제로 대체하며, 소련공군과 협력하여 작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sup>45)</sup>

여러 연구자들이 이러한 두 견해를 참전과 불참전이라는 ‘상반되는 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sup>46)</sup> 필자가 보기에는 이는 결코 상반된 증언은 아니다. 이는 오히려 조우은라이의 협상전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증언이라 생각한다. 즉 회담 통역을 담당하였던 스저(師哲)는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파병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스탈린을 설득하는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이를 통역하였을 것이고, 이는 스저에게는 ‘파병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을 조우은라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sup>47)</sup>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행정국 기밀담당비서였던 강이민(康一民)은 이번 회담의 주요목적이 스탈린으로부터 파병에 필요한 무기 장비의 지원과 특히 공군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이미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스저의 증언과 강이민의 증언은 모두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나온 부분적인 기억이며, 이를 종합해 본다면 모두 협상전략이라는 맥락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회담 당시 조우은라이는 중국지도부의 참전 반대의견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전이 어려운 이유들을 설명함으로써 최대한의 군사적 지

44) 이 견해는 당시 조우은라이의 통역을 담당했던 스저(師哲)의 기억을 근거로 하고 있다.

45) 이 견해는 당시 중공 중앙위원회 행정국 기밀담당비서였던 강이민(康一民)의 기억을 근거로 하고 있다.

46) 주지안룡(2005), pp. 217-222, 선즈화, 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 2010), p.293 등 참조

47) 스저, 『在歷史巨人身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5), p.496

원, 특히 공군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마오가 2일 스탈린에게 보낸 참전유보입장 전문과 8일 보낸 참전결정 전문의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후일 조우은라이는 자신은 파병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출발했었다고 언급했으며, 그러나 주요 목적은 중국군대가 조선에 들어가 작전을 진행할 때 소련이 공군을 파병해 지원해 줄 것인지의 문제였다고 밝힌바 있다.<sup>48)</sup>

조우은라이는 중국이 당론으로 이미 파병 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자신은 파병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의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회답에 임했다는 의미는 소련의 공군지원이 중국의 파병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소련의 공군지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어렵다는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2일 참전을 보류하겠다는 전문을 스탈린에게 보낸 것을 시작으로 마오는 스탈린과의 협상을 준비하였고 조우의 소련방문 역시 모두 계산된 협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이 이미 참전을 결정 해놓고도 흑해회담에서 조우은라이가 파병에 따르는 어려움을 먼저 거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일 전문을 포함한 참전 불가의 이유를 제시한 모든 중국의 행동은 하나의 협상전략이었을 뿐이며, 그 목적은 한국전 참전의 조건으로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고, 특히 소련 공군의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는 스탈린과의 회답에서 조우은라이가 관철시켜야 할 사안이자 마오의 훈령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스탈린은 이 회답에서 주로 두 가지에 관하여 얘기하였다. 그중 하나는 소련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이유였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이유였다. 스탈린은 “우리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차 대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때문에 조선을 원조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미국은 조선과 중국 두 전선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중국동지들은 조선에 대한 원조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 두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였다.<sup>49)</sup> 또한 스탈린은 중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중국동북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을 향해 공중, 지상, 해상에서 도발해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50)</sup> 스탈린은 중국에게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동북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주고 있었다.<sup>51)</sup>

하지만 조우은라이와 스탈린의 흑해회담의 최초의 결과는 중국이 잠시 북한에 파병하지 않으며, 김일성에게 북한으로부터 철수를 건의한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국의 직접파병 지원을 주장하고 있었고 더구나 5일 전문에서 중국의 파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스탈린이 조우와의 회답에서 주도적으로 중국의 파병 불가를 제안하였을 리는 없으며, 또한 이미 파병을 결정하였고 이를 스탈린과 김일성에게까지 통보한 중국으로서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을 리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 측 모두의 기존입장에 반하는 회답

48) 力平, 『開國總理周恩來』(北京: 中央黨校出版社, 1994), p.252

49) 위의 책

50) 위의 책, pp.496-497

51) 세르게이(2011), p.347

결과는 파병조건에 대하여 양 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양 측 모두가 양보할 수 없었던 쟁점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파병할 경우 소련의 공군지원문제였다.

조우은라이의 공군 지원요청에 대해 스탈린은 “중국의 참전에 필요한 비행기, 대포, 전차 등의 군사장비 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소련 공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민지원군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군의 출동은 2개월 또는 2개월 반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중국이 곤란을 겪고 있다면 출병하지 않아도 좋다. 북조선을 잃어도 우리는 사회주의를 이어나갈 것이며 중국도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sup>52)</sup>

스탈린이 이렇게 북한을 포기하더라도 공군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스탈린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공군기의 타 기지로의 전개 곤란 등 소련 공군의 출격준비 미비 때문에 인민지원군에 대한 공중 지원이 2개월 혹은 2개월 반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소련 극동공군은 전투기 2,800대, 전폭기 1,700대, 수송기 500대, 정찰기 300대 등 총 5,3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랴오둥(遼東)반도의 뤼순(旅順)과 블라디보스톡에 공군기지가 있었고, 동북지역에도 일본군들이 사용하던 비행장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타기지의 전개문제를 해결하는데 2개월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sup>53)</sup> 따라서 그 진정한 이유는 미군과의 직접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4)</sup> 스탈린은 소련 공군기가 한반도 전선에서 미군기와 교전하여 격추됨으로써 포로가 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였으며, 이러한 미군과 직접충돌 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은 극력 회피하였다.<sup>55)</sup>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준비 단계부터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위하여 중국을 이용하려고 하였지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를 생각은 없었다. 더구나 북한 정권을 위해서 미국과 직접충돌의 모험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반면에 중국은 당시까지 진정한의미의 공군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참전을 하게 되면 공군력은 소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참전결정 이후 인민지원군 일선지휘관들에게 있어서 소련공군의 지원은 매우 절박한 문제였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당시까지의 중소조약에 근거한 소련공군의 동북지역 진주를 포함한 소련의 공군지원은 한반도 출동을 포함한 중국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전면적 지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에서 동북군구의 간부들은 중국 지상군 출동에 ‘소련공군의 보장’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sup>56)</sup>

결국 회담이 끝난 후 11일 늦은 밤<sup>57)</sup> 조우와 스탈린은 연명으로 다음과 같은 출병보류를

52) 『周恩來傳(3)』, p.1019,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編著,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pp.165-166 등 참조

53) 沈志華, 『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廣州: 廣州人民出版社, 2003), p.257

54) 13일 마오의 최종 참전결정 사실을 통보받기도 스탈린은 2개월 혹은 2개월 반 이후에도 조선영내에 들어가 전투에 참가하기는 어렵다고 당초 입장에서 또 한걸음 후퇴했다.

55) 9월 말 전황이 극도로 불리해지자 스탈린은 북한에 소련공군의 Yak-9 전투기 연대를 주둔시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공중전시 관제가 소련어 무선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첫 공중전이 있는 직후 북한에서의 소련 공군의 활동은 불가피하게 미군에게 발각될 것이라는 지적에 이를 철회한바 있다. АВІРФ, ф.3, оп.65, д.827, л.л.81-82(1950. 9. 23) 참조

56) 중소조약에 근거하여 중국 영공방위와 중국 공군의 현대화에 협력하는 것과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공군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57) 이 전문의 발송시간이 11일 새벽이라는 주장(주지안룡(2005), p.277)과 마오가 받은 시간이 12일 밤이라는 주장

의미하는 전문을 마오에게 보내게 된다.

주북경 소련대사관은 즉시 마오저똥 동지에게 전달 바람

귀국 대표는 이미 오늘 도착하여 우리 소련공산당 지도자들과 귀국대표와 함께 귀국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 논의하였음. 의견 교환 후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견을 같이함

1. 파병하고자 하는 중국지원군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낙후된 장비로 무장하고 있으며, 대포도 부족하고, 전차는 한대도 없음. 엄호임무를 수행할 공군은 최소한 2개월 이후에나 배치될 것임. 중국지원군의 장비운용 및 훈련기간도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될 것임.

2. 만일 1개월 이내에 상당 수량의, 최신장비로 무장한 군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면 38선 이북의 조선군대는 지탱할 힘이 없으므로 조선은 미국의 침략에 의해 점령당할 것임.

3. 따라서 조선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군을 파견하는 것은 반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조선은 이미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이므로 조선이 이미 지원군이 필요 없어질 때 겨우 파병준비가 완료된다는 것임.

위와 같은 이유와 주은래동지가 보고한 참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중국국내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국제정세가 유리하더라도 중국군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의 국경을 넘지 않음

2. 만일 부대가 이미 국경을 넘었다면 국경지역 산악지대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야 함

3. 일부 조선군대는 평양과 원산 이북의 산악지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나머지 군대는 적의 후방에서 유격전을 전개해야 함

4. 전시에 징병된 조선인중 우수한 자와 지휘관은 비밀리에 만주로 이동시켜 만주에서 조선사단을 편성함.

5. 평양과 북조선 산악지대 이남의 기타 중요거점에 대한 신속한 소개작전을 진행

중국동지들이 중국군을 새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차, 대포, 항공기 등은 소련측이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임

귀하의 결정을 기다림

필리포프, 조우은라이

1950. 10. 11<sup>58)</sup>

## 2) 참전보류 결정

조우은라이와 린바오가 소련으로 출발한 다음날인 9일 평더화이와 가오깡은 인민지원군 군단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련의 공군력 지원여부가 참전의 중요변수로 떠올랐다는데 있다. 동 회의에서 각 군단의 간부들은 참전하였을 때 공군의 지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요성을 느낀 평더화이와 가오깡은 연명으로 마오저똥에게 “우리 군이 출동 참전할 경우 중앙 군사위는 어느 정도의 폭격기와 전투기의 공중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언제 공군을 출동시킬 것인가, 또 누가 그 지휘 책임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 빨리 알려주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덧붙여 “2-3개월 사이에

(David Tsui(2008), p.139)이 있으나 로신이 스탈린에게 전문을 전달한 시간이 12일 15시 30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을 발송한 시간은 11일 밤이라고 보아야 한다. 베이징시간으로는 12일 새벽(모스크바와 베이징은 4시간의 시차)

58) РГАСПИ, ф.558, оп.11, д.334, лл.134-135(1950. 10. 11)

새로운 장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특히 공군의 출동이 가능하면)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민지원군의 출동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sup>59)</sup>라고 언급하였다.

참전군 일선 지휘관들의 이러한 요구는 조우은라이와 스탈린의 회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마오에게는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 왔음이 틀림없다.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공군의 엄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마오가 모를 리 없었다. 이에 마오는 10일 늦은 밤 마오는 원래 김일성과의 회담을 위해 북한으로 가고 있던 평더화이를 김일성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베이징으로 와서 중앙 정치국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11일 새벽 1시 네룽전이 전화로 안둥(安東: 지금의 丹東)에 있던 평더화이에게 이 지시를 전했다.<sup>60)</sup> 이는 일선 지휘관들이 제기한 공군지원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sup>61)</sup>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는 위에서 언급한 조우은라이와 스탈린 연명의 전문을 받아보게 된다. 동 전문은 12일 15시 30분 로신에 의해 마오에게 전달되었으며, 마오는 그 자리에서 로신에게 “당신들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스탈린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sup>62)</sup> 참전군 일선 지휘관들의 공군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받아 본 ‘소련공군 지원 불가’의 전문에 마오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지원 없이 미군과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무모하기 까지 한 것이었다. 이에 마오는 12일 21시 평더화이, 가오깡, 덩화, 홍쉐즈, 한센추, 세팡 등에게 출병정지를 명령하는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게 된다. “10월 9일의 명령(10월 15일 출병)은 잠시 실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니, 제13병단 각 부대는 이전과 같이 현 위치에서 훈련을 계속하고 출동할 필요는 없다. 가오깡과 평더화이는 내일이나 모레 북경으로 오라”<sup>63)</sup>

21시를 기해 출병정지를 명령한 마오는 22시 직접 소련대사관을 통해 스탈린에게 아래와 같은 전문을 보냈다.

필리포프동지와 조우은라이동지:

본인은 10월 11일 전문의 의견에 동의함

우리 군대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음. 본인은 이미 중국 군대에게 조선에 진입하는 계획집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음. 조선동지들이 정황에 따라 병력배치를 다시 해야 하는 것과 새로운 임무계획은 본인이 이미 가오깡을 통해 조선동지에게 설명하게 하였음.

마오저퐁

1950. 10. 12<sup>64)</sup>

여기서 마오가 출병중지명령을 내리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련의 공군지원 불가’였다. 조우은라이와 스탈린이 보낸 11일의 전문에서 스탈린의 메시지는 마오로 하여금 참전을

59) 주지안룽(2005). pp.269-270

60) 杜平, 『在志願軍總部』(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 p.34, 주지안룽(2005), p.273 재인용

61) 주지안룽은 이러한 조치가 조우은라이로부터 소련 공군지원이 없다는 것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라 주장하는데 동 전문을 받은 시간은 12일 15시 30분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주지안룽(2005), p.273 참조)

62) РГАСПИ, ф.558, оп.11, д.334, л.140(1950. 10. 12)

63)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7), p.552

64) РГАСПИ, ф.558, оп.11, д.334, л.141(1950. 10. 12)

보류하든가, 그렇지 않고 즉각 참전하겠다면 소련 공군의 엄호 없이 북한 진입을 결행하라는 것으로서 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과 공중의 엄호 없이 적어도 2개월 이상 작전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했다. 참전의 결심을 이미 굳히고 있었던 마오였지만 예상되는 일선 지휘관들의 격렬한 반응을 고려할 때 아무런 조치 없이 출병을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마오로서는 일단 출병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련공군의 지원 없이는 출병을 재고려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 문제를 다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논의하게 함으로써 일선 지휘관들을 무마하고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마오가 참전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오는 처음부터 한국전쟁 참전을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각적 다차원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sup>65)</sup>

스탈린은 마오가 이미 참전의 결의를 굳힌 상태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스탈린은 전문의 마지막에 “중국동지들이 중국군을 새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전차, 대포, 항공기 등은 소련 측이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귀하(마오)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 덧붙이면서 참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마오의 의중을 알고 있던 스탈린이 사실상 마오를 전쟁으로 내몰고자하는 의도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즉 소련 공군은 미군과의 직접 충돌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지원할 수 없지만 기타 무기와 장비들은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니 참전하라는 압박 혹은 강요와 같은 것이었다.

11일 조우은라이와 연명으로 마오에게 ‘참전 보류’의 전문을 보낸 스탈린은 12일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중국이 파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평양 등 주요거점에서 소개 작전을 진행하고, 방어와 퇴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산악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만주로 들어가서 새로운 조선인사단을 창설하고 훈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sup>66)</sup> 또한 12일 마오의 출병정지를 통보 받은 스탈린은 13일 김일성에게 다시 전문을 보내 “저항을 지속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함. 중국동지들이 참전을 거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지(김일성)는 중국과 소련으로 완전히 소개할 준비를 하여야 함. 모든 병력과 군사장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극도로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 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투쟁할 수 있는 잠재역량이 보존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지시하였다.<sup>67)</sup> 이 전문은 당일 전달되었으며, 김일성과 박헌영으로서는 뜻밖의 내용이었다. 김일성은 “자신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니 이를 따를 것”이라 말하였다.<sup>68)</sup> 이러한 스탈린의 지시는 다급한 한반도 전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출병중지 결정에 스탈린 역시 상당히 다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2. 10월 13일 회의: 최종 참전결정

65) 주지안룡(2005), pp.282-283 그러나 주지안룡은 같은 책 274쪽에서는 ‘이 전문은 마오로 하여금 출병 날짜뿐만 아니라 출병 그 자체를 다시 고려하게 하였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지가 모순되고 있다.

66) РГАСПИ, ф.558, оп.11, д.334, лл.142-144(1950. 10. 12)

67) 예프게니(1998), p.99

68) 김일성의 반응은 슈티코프에 의해 모스크바 시간 14일 7시에 보고되었다 АВВРФ, ф.45, оп.1, д.335, л.3(1950. 10.14)

10월 12일 밤 마오는 조선에 대한 출동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평더화이와 가오깡에게 상경하라는 지시와 함께 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sup>69)</sup>

당일 15시 30분 인민지원군에 대한 소련공군의 지원은 없으며, 중국도 참전을 보류한다는 조우은라이와 스탈린 연명의 전문이 도착하였고, 베이징에 있던 정치국 간부들은 거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회의 초점은 중국의 참전문제를 재검토하고 최종결정하는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회의에서 비록 소련이 한반도에 대한 공군력 지원을 지연시키더라도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한다고 최종결정하였다. 회의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지도 않았다. 평더화이가 소련공군의 지원이 없다는 데 대해 불만을 터트렸으나 마오의 참전 결정을 지지하였다. 조우은라이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조우은라이는 그 당시 모스크바에 있었으므로 성립되지 않는다.<sup>70)</sup>

이 회의에서는 주로 군사전략적 측면과 국가 전략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참전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논의의 초점은 소련 공군의 지원이 없어도 단독으로 파병하여 작전이 가능한가의 문제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일선 지휘관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국의 지상군 파병을 위한 소련의 공군지원이 실제로 불확실한 것지휘관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사실 한국전 참전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9월 중순이전까지의 소련의 중국공군력 강화지원은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무관한 것이었다.과는 달리 중국의 는 소련 공군이 중국 영공의 방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소조약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한반도로 휘관이동과는 직접관계가 없으며, 인민지원군의 한반도 출병에 대한 소련공군의 지원에 관한 교섭은 10월 초 베이징에서 참전결정이 내려지자 비로소 제기된 것이었다. 이러한 내막을 마오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잘 알고 있었다.

69) 13일 오후에 열렸다는 주장도 있으나 12일 늦은 밤 혹은 13일 새벽이라는 주장이 보편적이다.

70) 레도프스키 목단강 주재 소련 총영사의 보고, 예프게니(1998), pp.126-127,

메 모

메 모

## 6·25전쟁에서 한국군의 활약상

-초기, 지연전, 낙동강방어선전투를 중심으로-

최용성(육군3사관학교 교수)

### 목 차

- I. 서론
- II. 초기전투에서 한국군은 이렇게 싸웠다.
  - 1. 춘천전투에서 활약
  - 2. 대한해협해전에서 활약
- III. 지연전에서 한국군은 이렇게 시간을 벌었다.
  - 1. 동락리전투에서 활약
  - 2. 화령장전투에서 활약
- IV. 낙동강방어선전투에서 한국군은 방어선을 이렇게 지켰다.
  - 1. 다부동전투에서 활약
  - 2. 영천전투에서 활약
  - 3. 포항전투에서 활약
  - 4. 장사상륙작전에서 활약
- V. 맺음말

### I. 서론

올해로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일반사회에서 6·25전쟁에 관한 연구가 무수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정치적 및 국제관계적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이와 관련 있는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선 선생님들도 그러한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17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Voltaire)는 역사가의 책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는 중상하지 말란 것이고, 둘째는 지루감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평갈르 받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지나가고, 두 번째 것은 역사가 개인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감히 언급을 한다면 역사의 현학적인 부분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이야기 식으로 충분히 기술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6·25전쟁에서 한국군 장병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고 또 왜 싸웠느냐 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이야기 식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보다는 군사적 차원에서 그 중에서도 전략적인 차원보다는 작전술적 및 전술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전쟁보다는 전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구범위에 있어서는 6·25전쟁 전체에서 이루어진 전투는 너무 방대하므로 전쟁의 진행과정을 일반적으로 구분해 놓은 여러 단계 중 일부 단계로 제한하였다. 또 한국군의 활약상을 알아보는데 있어서는 선정한 전쟁 단계에서 한국군이 패배한 전투보다는 승리한 전투, 그러면서 그 전투가 전쟁의 전체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투에서 한국군이 활약한 모습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6·25전쟁을 이루고 있는 주요 단계 중에 초기전투, 지연전 그리고 낙동강방어선전투의 단계에서, 또 그 단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전투 중에 의미 있는 전투, 그리고 한국군이 승리한 주요전투, 즉 춘천전투, 대한해협해전, 동라리전투, 화령장전투, 다부동전투, 영천전투, 포항전투, 장사상륙작전 등에서 한국군이 활약한 모습을 그려보려는 것이다.

## Ⅱ. 초기전투에서 한국군은 이렇게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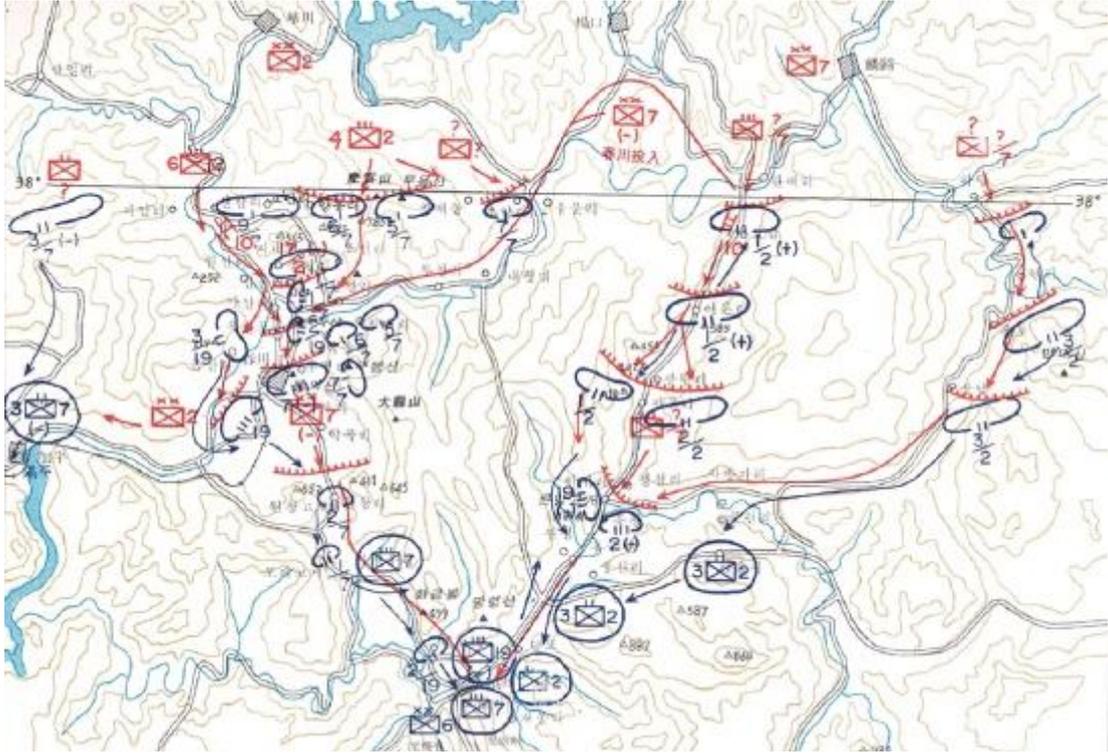
### 1. 춘천전투에서 활약

한국군 제6사단(김중오 대령)은 제7연대(임부택 중령)를 춘천 정면에, 제2연대를 홍천에서 인제 사이에 각각 배치하고, 제19연대는 원주에 배치하여 예비대로 집결 보유된 상태에서 부대교육훈련을 하고 있었다. 특히 사단의 좌측 전방에 있는 제7연대는 춘천에 지휘소를 두고 그 예하 제2대대는 우측 전방을, 제3대대는 좌측 전방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 중 제11중대와 제12중대는 연대의 예비부대인 제1대대와 함께 춘천에 있었다.

1950년 6월25일 새벽에 북한군 제2군단이 중부전선에서 남침을 개시하자, 한국군 제6사단은 원주에 있는 예비대를 제7연대 지역으로 투입하여 춘천지역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북한군 제2군단 예하부대인 제2사단이 춘천을 공격하여 점령하지 못하자, 그들은 인제 방면으로 남하하고 있었던 제7사단을 춘천지역으로 역행군 시켜 공격하였으나 한국군 제6사단 장병들의 공세적인 방어와 제16포병대대(김성 소령)의 활약으로 춘천지역을 3일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는 한국군은 병력과 장비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한군과 싸워 승리한 전투이다. 당시 한국군 제6사단의 병력은 7,300여명(예비역 포함)이었다. 반면에 북한군 제2군단은 3만6,000여명이었다. 병력면에서 북한군이 5배 우세하였다. 또 장비면에서 북한군은 122mm 곡사포 22문, 37mm 대전차포 12정, 76.2mm 대포 70여문이 있었고 SU-76 자주포도 8문이나 갖추고 있었다. 반면에 아군은 105mm 야포 15문, 박격포 90여문, 대전차포 12정뿐이었다. 따라서 장비면에서도 북한군이 약 10배 정도 우세하였다. 그러나 전투결과에 있어서는 북

한국군이 6,800여명, 한국군은 360여명의 사상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춘천전투에서 피아배치

이처럼 이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온 한국군의 활약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①전쟁 전, 진지구축에 민·군 활약

우리는 대체로 이 전투에서 아군이 승리한 것은 제16포병대대 장병들의 활약과 제1대대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전장에서 활약(후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춘천시에 있었던 학생들과 제7연대장병들이 구축했었던 방어진지가 없었다면 그 공훈과 가치는 감소되었을 것이다.

먼저 방어진지 구축에 관하여 알아보면, 방어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5월경에 육본 작전국(강문봉 대령)에서 사단에 전달되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육본에서 판단해 보니 전반적으로 북한군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각 부대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어진지를 잘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은 1949년 4월경에 춘천지역으로 이동하여 방어하면서, 특히 제7연대는 5월3일에 춘천에 있는 현 진지를 제8연대로부터 인수 받았고 3개월 뒤인 8월6일에는 신남으로 침입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섬멸한 전투경험도 있었다. 또 1950년 6월에 제7연대에 결

1) 송요태·최용성, 『한국전쟁사』, 선코퍼레이션, 2008, pp.85~87.

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여 남침이 임박했다고 진술한 내용<sup>2)</sup>을 확인했기 때문에 육본이 하달한 명령에 민감하였다. 따라서 사단장은 적의 주력 공격부대가 화천에서 춘천으로 이어지는 접근로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하여 포병화력을 춘천지역에 집중하도록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접근로를 방어하고 있었던 제7연대<sup>3)</sup>는 그 지역에 개인 진지 및 대전차진지 등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164고지 능선에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다. 적은 진지전방 옥산포로 진출하였다.

이에 진지공사는 50년 봄에 제1대대 지역인 옥산포의 승리를 가져온 164고지 낮은 구릉 지대<sup>4)</sup>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대장은 연대 자체병력만으로는 공사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므로 당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춘천 시내 중고등학교(춘천고, 춘천사범학교, 춘천농고)에 배치된 배속장교<sup>5)</sup>들이 학생들에게 호국

2) 귀순병은 “자신은 전차 40대와 함께 야간행군으로 화천에 도착했고 그 곳에는 많은 병력과 포가 집결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30여 명의 수색대를 잠입시켜 귀순병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단장에게 적정을 보고하고 작전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예하부대에 지시하였다.  
 3) 제7연대는 1949년 2월20일 청주에서 원주로 이동하여 2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5월3일 춘천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8연대로부터 책임지역을 인수받고 3개월 뒤인 8월6일에는 신남을 침공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포착 섬멸하였다. 당시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연대는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충돌을 통한 전투와 후방지역에서의 공비토벌작전 등으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병사들의 자질은 우수했으며, 병력·장비가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선 방어와 산악지대의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4) 이 지형은 길이 4km 정도의 낮은 구릉형 산맥으로서 남북으로 뻗어 있다. 그 당시에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어서 산 능선 좌우 쪽의 시야가 아주 좋았다. 이 야산 산맥을 점령하면 서쪽으로는 옥산포 쪽으로 남하하는 적을 공격할 수가 있고 동쪽으로는 샘밭 쪽에서 공격하는 적을 공격할 수가 있다.

교육을 시킬 겸해서 장병들의 진지공사에 협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지원해 왔다.<sup>6)</sup> 이것은 연대가 현 진지에서 13개월 동안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을 파악하여 숙지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과 관과의 협조도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대 병력과 학생들이 협동하여 이루어진 진지공사는 164고지 능선, 2대대 지역인 소양강 남안, 연대본부와 포병지휘소가 있던 우두산, 사단사령부 전방 지휘소가 있었던 봉의산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공사는 전쟁이 일어나기 2개월 전에 완료되어 연대는 전쟁 전에 진지투입 훈련을 할 수 있었다.

## ② 후방으로 포탄 운반한 민·군 활약

북한군 제2사단은 전쟁이 시작된 후 춘천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모진교<sup>7)</sup>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였다. 그 이유는 적이 춘천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강을 도하해야 하는데 그곳에 모진교가 있어 그것이 아군에 의하여 폭파가 될 경우에는 춘천을 점령하는 것이 지체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군은 적의 공격으로 모진교를 피탈 당하였다.

당시 북한군 제2군단 공병부부장이었던 주영복은 그들이 모진교를 점령한 직후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당시 북한군 제2군단 지휘부에서 보고를 듣고 모진교를 정말 점령했느냐, 그것이 폭파되지 않고 남아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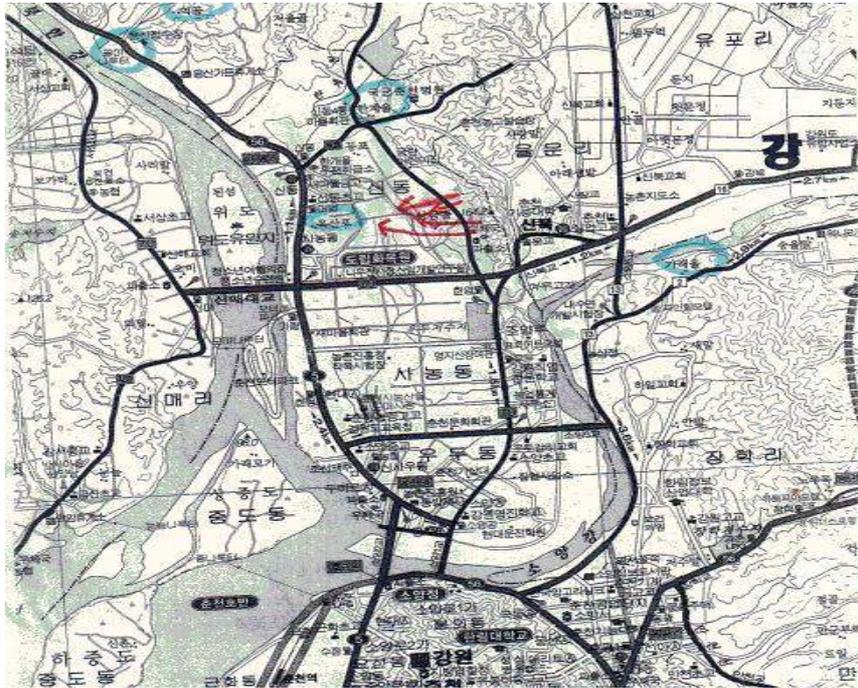
이와 같이 북한군이 모진교를 쉽게 점령한 것은 뜻밖의 전과이었고 반면에 아군으로서는 모진교를 피탈 당함으로써 폭 47km에 이르는 제6사단 7연대 방어 정면이 일시에 무너졌다. 더욱이 제7연대는 38선으로부터 춘천시 외곽까지는 방어병력이 배치되어있지 않아 적은 춘천 외곽에 위치한 역골과 지내리 일대까지 일거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후방에 배치된 포병부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의 제16포병대대가 있는 최초진지는 먼저 대대본부는 사우동(현 쌍용회관)에, 제1포대진지는 사우동 근처에, 제2포대진지는 문정리(현 신북과출소)에, 대대관측소는 우두산 정상(현 현충탑)에 위치하고 있었다. 즉 모든 부대가 소양강 북쪽 위치하고 있었다.

5) 육군은 각 중고등학교 체육선생들 중에서 선발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육사 분교를 설치하고, 이들을 5주간 훈련시켜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켰다. 임관 후 이들은 각 학교에 1-2명씩 배치하여 안보 및 호국교육을 하였다. 이들이 배속장교로 근무할 때는 군 장교와 똑 같은 계급장과 군복을 착용하였고 전쟁 발발과 동시에 모두 현역으로 동원되었다.

6) 전쟁 발발 당시 춘천고, 춘천여고, 춘천농고, 춘천사범학교 등 춘천지역 500여 명의 학생은 제16포병대대, 수색대 등에 자원으로 입대하여 장병을 지원하였다.

7) 모진교는 38도선 남쪽 300m에 위치한 폭 4m, 길이 250m의 교량이다. 이 교량은 화천과 춘천을 연결하는 도로의 중앙에 위치한 중요한 교량이었다.



포병부대 진지

전쟁이 일어난 날 사단은 모진교를 피탈당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후퇴하여 소양강 남안에서 방어할 계획이었다. 이에 제16포병대대도 소양강 남안 옥천동(현 춘천시청)과 학곡리 일대로 진지를 변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야포와 포탄을 신속히 옮기는 것이었다. 먼저 야포는 차에 견인하여 이동하면 되는데, 포탄의 경우 그 당시 제사 공장(사우동 대대본부 근처)에 5,000발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소양강 남쪽으로 신속히 옮길만한 운반수단이 없었다.

이에 포병들은 주민들에게 포탄을 소양강 이남으로 운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춘천농업고등학교 호국단, 공장 직공, 우두 초등학교 교사 및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 협조대가 지원하였고 특히 춘천농고 농장과 제사공장에서 사용했던 손수레 각 10여대가 동원되었다. 시민 봉사대는 3개 조로 나누어 제1조는 창고에서 도로(5번)까지, 제2조가 소양교 북방까지, 제3조가 다리를 건너 소양강 이남까지 옮기는 릴레이 방식으로 운반하였다. 또 운반수단별로 지게는 포탄 1-2발, 손수레는 3-4발, 우마차는 4-5발, 자동차는 8-10발을 싣고 소양교를 건너 운반하여 쌓아 놓았다. 그러면 소양강 남쪽에서는 춘천사범학교(현 춘천교대)의 학생들이 동원되어 운반해온 포탄을 학교로 운반하였다. 그 결과 포탄이 북한군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다.<sup>8)</sup>

### ③심일 중위의 5명의 특공조의 활약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군이 모진교를 적에게 탈취 당하자, 제7연대장은 먼저 연대 예비

8) 당시 제16포병대대의 보급장교로 참전했었던 김운환 장군의 증언이다.

부대인 제1대대를 25일 07:00경에 소양강 북안에 위치한 164고지에 배치시켰다. 그 후 12:00경에 북한군이 옥산포에 도달했을 때 제1대대는 화력을 옥산포로 집중하여 사격하였다.



심일 중위의 5명 특공대 격파한 북한군 SU-76 자주포

그 결과 적은 옥산포에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고 후퇴하였다. 14:00경에 적 제6연대는 SU-76 자주포 10대를 앞세우고 다시 옥산포를 공격하였다. 그 당시 아군 장병들은 적 자주포를 전차로 오인하여 막연한 공포감에 억눌려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아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인 심일 중위<sup>9)</sup>는 중대장 송광보 대위에게 적의 공격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하면서 용감한 부하 1개 분대를 선발해 주면 적을 격멸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우리는 중과부적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러나 심일 중위는 현재 급박한 상황에서 적을 지연시키려면 우선 적 전차의 진출을 저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공작전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망설였으나 심일 중위에게 1개 분대를 선발하여 특공대 5명을 편성해 주었다.

심일 중위는 특공대원들에게 수류탄과 휘발유병(화염병)을 휴대토록 하고 적의 전차가 오는 접근로 상에 매복하였다. 그 때 선두 전차 2대가 다가오고, 그 전차를 후속하여 일정 거리를 두고 여러 대의 전차가 진출하는 모습이 보였다. 적 보병도 일정 거리를 두고 전차 대오 후미를 따르고 있었다. 심일 중위는 선두전차가 애로지역인 근거리까지 진출했을 때 57

9) 심일(1923~1951)중위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 재학 중 육사에 입교하여 1949년 육사 8기로 임관하였다. 그는 춘천전투 이후 충북 음성지구 전투, 경북 영천 304고지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제7사단 수색중대장으로 근무하던 1951년 1월26일 영월 전투에서 정찰 도중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산화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 이었다. 정부는 1951년 10월 심일 소령(당시 대위)에게 위관급 장교로는 처음으로 태극무공훈장과 함께 1계급 특진을 추서하였다.

mm대전차포를 발사하였다. 그리고 신속히 일부 분대원을 인솔하여 곧바로 전차 위로 뛰어올라가 뚜껑을 열고 수류탄과 휘발유병을 투척하였다. 그 다음 전차는 분대장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순식간에 전차 두 대가 화염에 휩싸였고 적 전차병이 전차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육박전으로 제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 전차 1대를 파괴되었다. 이를 본 후미 전차는 방향을 전환하였고 뒤따르던 보병들은 황급히 산속으로 흩어졌다. 이러한 광경을 후방에서 관측하고 있었던 제16포병대대는 그곳으로 일제히 포격을 실시하였다. 이 광경을 164고지와 봉의산에서 바라보고 있던 제7연대 병사들은 환호하였다. 그 후 이와 같은 보·포병 협동작전의 승전보가 일시에 전선에 있는 장병들에게 알려지자, 진중의 사기는 높아졌고 불안에 떨던 장병들도 자신감을 갖고 움직였다.

이와 같이 한국군은 전쟁이 일어날 때 부터 북한군의 자주포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처음에 아군은 적의 자주포 공격에 맞서 57mm 대전차포와 야포를 이용하여 포격했지만 그것을 파괴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군은 육탄으로 적의 자주포를 공격하였다. 이 전투는 적의 전차 및 자주포 그리고 우세한 장비는 개전 초기에 전술적·심리적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는 만들어주지만, 결국 전투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전투원들의 정신력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 ④ 제16포대장 김성 소령(16포대장)과 제7연대1대대장 김용배<sup>10)</sup>소령의 활약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은 분산 배치되어 있던 포병중대들을 소양강 이북 우두동에 집결시켜 주야간훈련을 반복하였고 대대 군의관까지도 포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에 대대 장병들은 불평이 많았지만 그 결과 포병들은 적의 예상 집결지에 포탄을 신속히 발사할 수 있었다.

전쟁이 일어난 날, 포병 제1중대와 제2중대는 적의 사격으로 옥산포 북방에 위치한 진지에 투입하지 못하고 옥산포 남쪽 1km 지점에 위치한 사농동에서 포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병 3중대는 전선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었다. 즉 포병 제1중대와 제2중대는 적이 공격해오는 접근로 전면에 있었다.

25일 07:30경에 북한군 제2사단 6연대가 옥산포 남방 사농동에 배치된 포병 제1중대와 제2중대 전방에 나타났다. 이에 사농동의 포병들은 일제히 포격을 하였다. 09:30경에는 적이 역골 방면에 있는 도로를 따라 SU-76 자주포가 전방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관측에 따라 포병 2개중대는 그 방향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 제6연대의 선두 중대가 아군의 일제 사격에 격멸되었고, 그 후속으로 진출한 적 주력 2개 대대는 공격이 아닌 급편방어를 실시하였다,

12:00경에 제16포병대대는 적의 주력인 제6연대가 다시 옥산포를 지나 넓은 보리밭에 나타나자, 일제히 포격하였다. 이에 적은 대혼란 속에 많은 시체를 남기고 도주하여 아군은 북

10) 제6연대 1대대장 김용배 (1921~1951)소령은 1951년7월2일 제7사단 5연대장으로 강원도 양구군 군량리 지구에서 중공군 제5군단과 교전중 전사하였다. 사후에 준장으로 1계급 특진했으며, 태극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쪽에 위치한 지내리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7연대는 제16포병대대의 분전으로 연대를 재편하여 소양강 북쪽 164고지 일대를 점령 방어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북한군의 압박으로 제16포병대대는 우두동에서 신속히 철수하여 춘천시내로 진지를 옮기고 연대 전술지휘부는 봉의산으로 옮겼다.

26일 북한군은 아침 일찍 옥산포 일대를 점령하고 춘천시로의 진격하려던 중에 제7연대장은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제1대대에 하달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주력을 164고지 북방 능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옥산포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능선에서 돌격을 준비하였다.

먼저 10:00에 제16포병대대는 30분간 옥산포에 집중적으로 포격하였다. 이어 10:30경 제1대대는 "돌격 앞으로!"라는 함성과 함께 공격개시선을 넘은 1.5km를 달려 옥산포에 접근할 때쯤 16포병대대의 사격이 멈추었다. 북한군은 30분간의 정확한 포격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1대대 병사들을 보자, 아연실색 했으며 이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제1대대는 옥산포를 순식간에 점령하였으며 후방 한계울과 역골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북방 지내리 선까지 다시 회복하였다. 그리고 북한군은 다급히 퇴각하는 과정에서 SU-76 자주포 5대를 옥산포에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 중 1대는 북한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도주하던 승무원 2명은 사살 당하였다.



한국군의 M-3 곡사포

18:30경 제1대대장은 제2대대 7중대장 이건옥 중위로부터 북한군이 164고지 우측 접근로인 양구 방면에서 내평을 거쳐 춘천시로 진격하기 위하여 오늘 밤에 샘밭을 거쳐 우두동 여우 고개까지 진출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럴 경우 제7연대는 양구로 부터 내려오는 북한군에 의해 후방이 차단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연대장은 26일 예하부대에게 일몰과 동시에 우두동 남동에 있는 네다리 여울을 건너서 소양강 남쪽 석사동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날 저녁에 제1대대는 연대장 명령에 따라 일몰과 동시에 점령확보하고 있던 방어진지를 포기하고 철수 작전을 개시하였다.

## 2. 대한해협 해전에서 활약

해군은 1945년11월11일에 창설한 해방병단으로 출발하여 1948년8월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해군으로 창설되었다. 그 당시 해군은 군함 한 척 없었다. 이에 해군은 1949년6월1일 '함정건조기금각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이 위원장을 맡아 모금을 시작하였다. 즉 장교에게는 10%, 병조장에게는 7%, 하사관과 병에게는 5%를 매월 각출하여 모금하였다. 이렇게 4개월 동안 모은 1만5,000달러와 정부지원금 4만5,000달러를 추가하여 백두산 함, 금강산함, 삼각산함, 지리산함 4척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해군은 1949년10월17일 첫 번째 함정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그 함정을 1949년12월26일에 백두산 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대한해협해전에서 맹활약한 해군 백두산 함

이 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에서 사용한 450톤급 초계정(함번은 USS PC-823)이었다. 이 초계정은 1944년1월에 미국에서 진수하였고 미국 대서양 연안에 출몰하는 적의 잠수함을 공격할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이 초계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무장이 해제되어 민간선박(해양학교 실습선)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군은 백두산 함은 구입하자 즉시 하와이 군항에서 76mm 함포를 설치했고, 꺾에서 포탄 100발을 구입하고 1950년4월10일에 진해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4월27일 그 함정에 PC-701이라는 함번을 부여하고 해군 제1전대에 배치하였다. 그 후 6월24일 밤 대한해협 즉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백두산 함은 북한군 전투병 약 600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침투하는 북한 수송선을 발견하고 치열한 교전을 펼친 끝에 격침시켰다. 그리고 1959년7월1일 퇴역하였다. 이 해전에서 한국군의 활약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 12월26일 열린 백두산 함 명명식에서 손원일(가운데) 초대 해군참모총장이 함명 명명 문서를 낭독하고 있다.

#### ①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방위 의지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모윤숙에게 서신을 주면서 뉴욕의 존 스태거씨에게 꼭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 내용은 '진해를 미군에게 맡길 테니 군사원조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 그는 일제가 만든 군항에 미군을 주둔시켜 안보도 다지고 달러를 받아 군대까지 무장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독립운동 시절 진주만 기지에서 본 미국 함대와 해군에 대한 감명 때문에 항상 '육·해·공'을 '해·육·공'으로 바꾸어 불렀다. 그때부터 그는 강력한 해군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당시 우리에게겐 함정이 36척 있었지만, 그것은 미제 소해정(掃海艇) 몇 척을 제외하면 어선이나 다름 바 없었다. 따라서 전함을 보유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염원이자 해군의 바람이었다.

#### ② 조타수 김창학 삼등병조 등 투철한 군인정신 발휘

##### - 백두산 함 출동

6월25일 10:00경 통제부사령장관 김성삼 대령은 정박 중인 백두산 함을 방문하여 당직사관 김종식 소위에게 다음과 같은 해군본부의 작전명령 즉 "진해 통제부사령장관은 백두산 함을 기함으로 그 예속된 함정 2척을 동해에 급파하라! 백두산 함장은 통제부사령장관으로부터 YMS-512정과 518정을 인수한 후에 그것을 지휘하여 즉시 동해안으로 출동하고, 적을 포착하는 대로 격침하라!" 는 내용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12:00경 모든 출동태세를 완료한 백두산 함장 최용남 중령은 통제부사령장관에게 출항준비 완료를 보고하고, 15:00경 그는 YMS-512정을 지휘하여 진해항을 출항하면서 518정은 보급물자를 적재하고 그것이 완료되는 즉시 출항하도록 지시하였다.

##### - 북한 수송선 발견

18:30경 백두산 함 대원들은 부산앞 바다에 있는 오륙도 등대로부터 2km 북쪽으로 북상

하였다. 20:12경 등대로부터 약 7km 되는 수평선상에서 피어나는 검은 연기를 목격하였다. 백두산 함은 최대속도로 접근하면서 후속하는 512정을 신속히 복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무렵 보급품을 적재한 518정은 7km 후방에서 복상하고 있었다.

백두산 함이 검은 연기가 일어나는 쪽으로 접근하자, 괴선박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함장은 전투배치 명령을 하달하였다. 괴선박은 국적을 표시하지 않은 채 10노트로 남하하고 있었다.

21:30경 백두산 함은 공해상을 향해하고 있는 괴선박의 선체를 완전히 볼 수 있었다. 이에 백두산 함은 괴선박과 거리 3km를 유지하여 남하하면서 국기를 게양할 것과 국적을 제시할 것, 그리고 출항지와 출항시간 및 목적 항을 제시할 것을 국제발광신호로 30분간 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에 함장은 적의 선박임을 의심하면서 그것을 재확인을 위하여 정지명령을 수차에 걸쳐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적선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함장은 15노트의 속도로 적선에 접근하여 신호등으로 빛을 비추었더니 그 선박의 갑판 뒤쪽에 증기관총 2정과 무장한 수병복을 착용한 수많은 인원이 있었다. 함장은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이 북한군 정규해군 및 육전대의 복장임을 확인한 후 해군본부로 “확인된 선박은 북한의 1,000톤급 수송함정이며, 약 600명의 북한군이 승선한 채 남하 중에 있음. 상륙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보고하였다.

#### - 북한 수송선 격침

함장은 적선을 영해 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군본부에 보고 후 적선을 격침하기 위하여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6월26일 00:30경 백두산 함은(북위 34도 56분, 동경 129도 30분) 좌현에서 적선과 3km의 거리를 두고 3인치 주포(포술장 유용립 중위)를 발사하였고 그 포탄은 적함의 돛대를 통과해 좌현해상에 떨어졌다. 이에 적함은 급선회하였고 백두산 함은 1km까지 접근하여 함포사격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후속하던 YMS-518정도 백두산 함의 좌현 후미 1km 위치에서 37mm포로 사격을 개시하자, 적함은 57mm포와 증기관총 및 경기관총 등으로 대항하는 등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동시에 백두산 함은 계속 포격하여 그 포탄이 마침내 적함의 중앙하부에 명중했고, 그 후 적함은 좌현 난간이 해면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기관실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이때 35발의 포탄을 계속 포격한 백두산 함의 3인치 주포가 고장을 일으켰다. 즉 격발장치의 고장으로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를 인지한 적함은 최후의 반격을 시도하였다. 백두산 함과 적함과는 약 1,000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적함은 침몰되어 가는 와중에도 발악적으로 400m까지 백두산 함에 접근해 왔다. 적탄이 백두산 함의 선체에 집중되는 순간 적함의 후갑판에 장치된 포가 백두산 함의 조타실 중앙하부를 강타하였다.

이에 조타수 김창학<sup>11)</sup> 삼등병조는 적탄을 맞아 내장이 밖으로 튀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 김창학(?~1950)은 경기도 양평군 팽성면 노양리에서 태어났다. 전쟁 발발시 2조(하사)로써 해군 제1함대 백두산 함의 조타수로 참전하여 당일에 부상을 당하였고 6월28일 전사하였다. 정부는 그에게 1953년1월20일 을지무공훈

끝까지 키를 잡고 임무를 수행하여 적 선박에 성공적으로 접근하였다. 또 주포 전화수 김춘배 삼등병조 역시 다리 관통상을 입고도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김종식 소위도 적탄의 파편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쌍방의 치열한 포격전이 끝날 무렵 적함은 서서히 침몰하여 드디어 26일 01:25경에는 완전히 침몰하였고 그 결과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던 600여 명의 무장된 인원도 수장되었다. 이 해전에서 백두산 함은 적의 포격으로 조타실 일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2명의 병사가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해전에서 아군이 승리함으로써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던 부산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남한의 항구 중에 접안(接岸)시설을 갖춘 항구는 부산항 뿐이었다. 그래서 부산항은 군수물자와 증원 병력이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주요 항구였다. 만약 백두산 함이 없어서 부산항이 적에게 점령되었다면 아군에게 증원 병력과 보급물자가 지원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한국군은 후방에서도 적의 공격을 받아 전멸하여 대한민국이 사라졌을 것이다.

### Ⅲ. 지연전에서 한국군은 이렇게 시간을 벌었다.

#### 1. 동락리전투에서 활약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한국군 제6사단 7연대는 춘천을 포기하고 충주와 음성 지역까지 철수하였다. 7월3일 저녁 충주에 있었던 사단장은 북한군이 장호원까지 침입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7연대장에게 장호원을 탈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7연대는 7월4일부터 장호원에서 음성지역 사이에서 북한군 제15사단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던 중 7월6일 밤 제3대대(소령 이남호)은 정찰활동을 통해 장호원에 진출한 적 제48연대의 주력부대가 음성을 점령하기 위해 생극과 주덕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7월7일 05:00경 제3대대는 가엽산 310고지(동락리 후방)에서 매복하고 있던 중 적의 차량대열이 매복지점에 이르자, 대대는 6:00경에 기습공격을 하여 적을 크게 격멸시켰다. 제2대대(소령 김종수)는 7월6일 부용산 정상에 진출하여 경계하고 있었다. 그다음 날에 대대는 적 연대병력이 동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앞 도로에 집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한편, 동락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던 김재옥(여, 당시 19세)교사는 북한군 제15사단 예하 48연대에게 한국군은 후방으로 철수하고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여교사가 진술한 허위 정보를 믿고 경계를 소홀하였다. 그 후 여교사는 학교에서 4km이상 떨어져 있는 가엽산에서 매복하고 있던 제2대대장에게 3,000여 명의 적들이 동락초등학교와 그 주변 마을에 있다는 사실과 적 연대의 배치상황을 알려 주었다. 이에 대대는 7월8일 06:00경에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적을 대부분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sup>12)</sup>

장이 수여하였다.

## ① 제2대대장(김중수 소령)의 독단활용

이 전투에서는 제2대대장의 독단적으로 부대를 활용한 것이 승리의 주요인 이었다. 지휘관이 부대를 독단활용할 때는 상황이 시간적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상황이 변화하여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지형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등 이다.

그 당시 제2대대장은 여교사가 제공한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다음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그 구체적인 활약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군 제7연대장은 북한군 제15사단 48연대가 장호원에서 남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극리-음성간 도로와 644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은 7월7일 15:00경 그 지역 일대에서 적을 관측하던 중 동락초등학교 일대에 있는 적 연대병력과 수 십대의 차량, 포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호기를 포착한 대대장은 연대에 보고한 후에 특별한 지시를 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의 병력은 400명 정도였고 중화기는 81mm 박격포 1문과 기관총 1정이었고 나머지는 소총뿐이었다. 대대장은 제6중대를 적의 우측방에, 제7중대를 적의 퇴로방향에, 제5중대를 정면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1개 소대의 병력은 주둔지인 644고지에 잔류시켰다. 공격시간은 17:00 정각으로 설정하고 각 중대는 은밀히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적 제48연대는 주민들로부터 무극리 일대에는 한국군이 철수하고 없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락리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17:00에 한국군 제6중대가 먼저 적에게 집중사격을 하였다. 이때 적은 한국군 제7중대를 향하여 포격하였으나 포탄은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졌다. 만약 북한군이 다시 일제사격을 했다면 한국군 제7중대는 전멸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제7중대에 박격포 포탄이 도착하였다. 이에 중대는 적으로부터 300m 정도 전방에서 직접 조준하여 제1탄을 발사한 것이 정확하게도 운동장에 방열된 적 포진지 중앙에 명중하였다. 그후 북한군은 사방에서 한국군의 집중 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도주했으나 이곳에는 제7중대가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포위망 속에서 섬멸되었다. 한국군의 사격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북한군들은 퇴로를 타개하기 위해 산 속으로 퇴각하였다. 8일 아침에 각 중대는 수색과 소탕작전을 하여 적은 08:00경에 완전히 섬멸되었다.

이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습은 승리의 중요한 요소이고 방심은 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독단활용은 명확한 상황판단에 따라 호기를 포착하여 실시해야하고, 각급 지휘관들의 독단활용은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 ② 대대 장병들의 활약: 전쟁발발 이래 최대의 전과

이 전투에서 한국군 제7연대는 불과 40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연대가 올린 전과는 적 사살 2,186여명, 적 생포 132명이었고, 장비는 곡사포 122mm 6문, 76mm포 4문, 직사포 7문, 반전차포 5문, 82mm박격포 14문, 61mm박격포 18문, 구경50 기관총 6정, 중기관총 12정, 경기관총 14정, 자동소총 37정, 소총 919정, 장갑차 4대, 2.5톤 트럭60대, 1/4톤 지프차 15대, 사이드카 4대, 무전기 4대, 전화기 12대, 마필 24두 등 이었다. 반면에 한국군

12) 송요태·최용성, 앞의 책, pp.124~125.

의 손실은 전사 9명, 부상 53명뿐이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제7연대 전 장병에게 최  
초로 전 부대 1계급 특진을 부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올린 "적 1개 연대 섬멸" 이라는 승전소식은 한국군 장병들에게 큰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주었으며 노획한 장비는 충남 대전에서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아군이 패배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군이 노획한 무기 중에 일부  
소련제 무기가 발견되어 소련이 전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이들 무기를 유  
엔에 보내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화령장전투에서 활약

한국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퇴각하던 시기에 대승리를 거둔 화령장 전투는 1950년 7월 17일  
과 7월 20일 양일간에 경북 상주군 화령장 인근 상곡리와 동관리에서 아군 제17연대가 적  
제15사단을 격파한 대첩을 의미한다.

이 지역의 좌측을 방어하고 있던 한국군 제1사단과 우측의 방어부대인 제6사단 사이에 약  
30km 정도 공백이 발생하였다. 즉 화령장 일대에는 한국군이 한 명도 없었다. 이를 북한군  
은 인지하고 제15사단을 충북 괴산에서 상주 방향으로 도로축을 따라 투입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은 7월 7일 동락리전투에서 한국군 제6사단 7연대에게 대패하였다. 이 전  
투에서 김치구 중좌가 지휘하는 제15사단 48연대는 궤멸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2주 후에 재  
편성하여 다시 남침의 선봉에 서서 화령장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대가 경북 상주군  
화북면에 진출하자, 주민들은 신속히 한국군 제1군단과 제2군단 그리고 정보 부서에 신고하  
였다. 이에 양 군단은 정찰 부대를 내 보냈다.<sup>13)</sup> 그 결과 아군은 북한군 제15사단이 공백지  
대를 이용해서 은밀히 남하 중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1군단은 제17연대<sup>14)</sup>를 제2군단으로  
배속 변경하여 이쪽으로 급파하였다. 제17연대장 김희준 중령은 00:00경 먼저 보은에 있는  
제1대대(이관수 소령)를 신속히 화령장으로 파견하였다.<sup>15)</sup>

### ① 상곡리에서 제17연대 1대대 장병들의 활약

7월 17일 오전 07:00경 제1대대가 도로를 따라 화령장 부근에 진입했을 때 한 주민이 차  
량 행렬을 가로 막고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 선발대가 이미 지난밤에 이 길을 따라 상주  
쪽으로 갔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대대는 적의 부대 중간에 끼게 된 것이었다. 연대장은 적의  
후속 부대를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괴산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갈령 남쪽에 있는 상곡리 일대  
에 대대 병력으로 매복진지를 구축하였다.

매복 부대는 상주 쪽에서 자전거로 북상하고 있던 북한군 연락병을 잡아 이미 선두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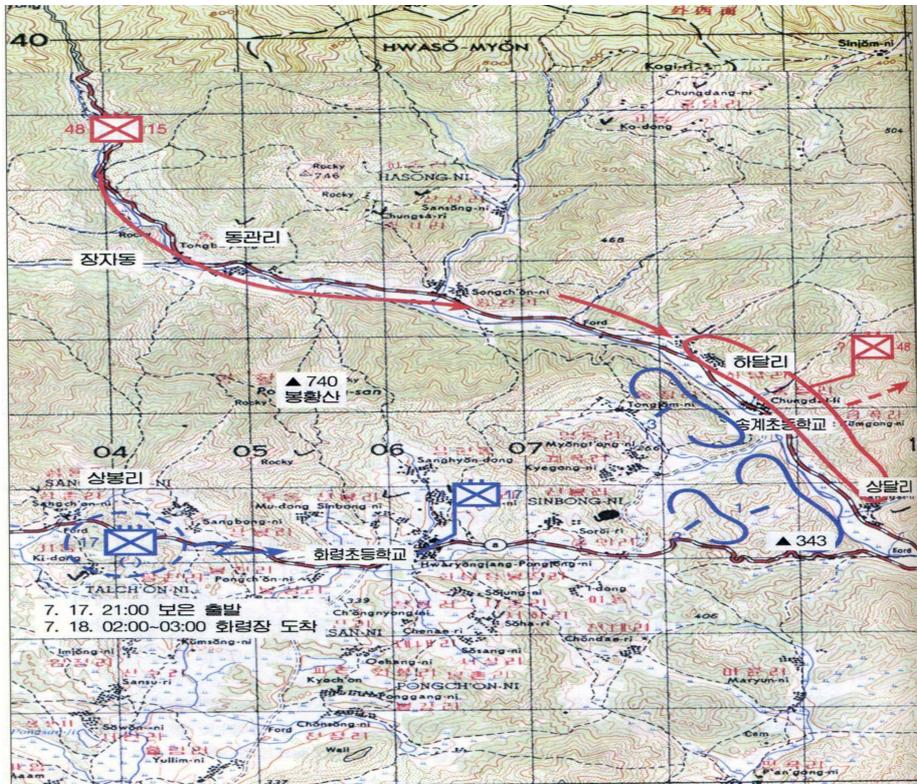
13) 제1군단 정찰대는 방원철 소령이, 제2군단 정찰대는 배상록 대위가 지휘하였다

14) 이 연대는 웅진반도에서 철수한 후 대전에 집결했다가 진천과 청주 등에서 전투를 한 후 보은에 잠시 주둔  
하고 있었다.

15) 송요태·최용성, 앞의 책, pp.145~147.

주로 내려간 부대가 제15사단장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확보하였다. 대대는 이 통신 보고서에서 적 제48연대가 곧 후속할 것이며 우리 매복진지 앞에서 숙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6:00경 북한군이 갈령에서 남하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보부대와 그 후속부대들이 각종 포와 탄약을 실은 40여 대의 우마차를 끌고 대대 정면에서 휴식하였다. 즉 이들의 일부는 매복 정면 북쪽인 하송리의 송계 초등학교 부근에서 휴식하였고, 일부 병력은 상곡리 일대에서 휴식했는데 이들은 학교 교정과 도로가에 사총(斜銃)한 후 경계는 소홀히 한 채 일부는 옷을 벗어 던지고 개울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가 하면 일부는 낮잠을 자거나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상곡리 기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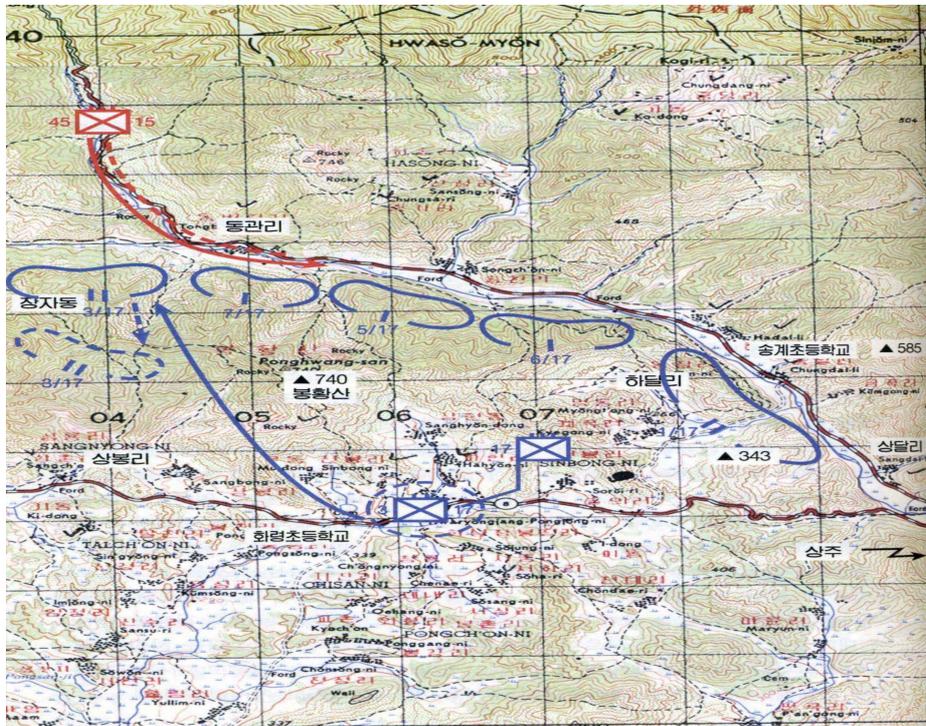
제1대대 장병들은 북한군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19:30경 흘러져 목욕하던 북한군 병사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이 상황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한 대대장은 사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00여 명의 총구에서 일제히 불을 뿜었고 박격포와 기관총도 사격에 가담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불의의 집중사격을 받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었다.

제1대대가 1시간 가까이 적을 섬멸하는 사이에 연대장이 전투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는 소탕 작전보다는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은 적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매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후방 진지에서 예비대로 있었던 제2중대를 북한군이 행군해

왔던 도로의 후방을 차단해서 도주자를 색출하였다. 연대장은 어제 16일 밤에 청주 전투에서 고전을 하고 철수하여 보은에 집결하고 있던 제2대대와 제3대대를 화령장으로 급파하였다. 이 상곡리 전투에서 아군은 포로 30여명, 사살 250명, 박격포 20문, 45mm 전차포 7문, 소총 1,200정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 ②동관리에서 제17연대 2대대 장병들의 활약

연대장은 18일 적의 후속 부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참모(유창훈 소령)를 지휘관으로 한 정보부대를 전방으로 보냈다. 이 부대는 전투 현장에서 북쪽인 갈령을 넘어가서 잠복했다가 자전거를 타고 고개를 올라오는 두 명의 북한군 연락장교를 잡았다. 아군은 두 연락장교로부터 제15사단장 박성철은 이미 궤멸된 제48연대(김치구 대좌)에게 보고하지 않음을 질책하고 제49연대가 곧 후속함을 알리는 통신문을 입수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적을 기습하기로 하고 제2대대(송호립 소령)를 파견하였다.



동관리 기습전

18일 20:00경이 대대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제1대대가 대첩을 거둔 상곡리와 갈령 사이에 있는 동관리 계곡에 매복진지를 구축하였다. 제7중대를 적이 들어올 입구인 좌측 갈령 쪽, 제5중대를 중앙, 제6중대를 적이 나가는 방향인 우측 상주 쪽으로 배치하였다.

7월19일 16:00경 말을 탄 적 장교 두 명이 인솔하는 우마차 20대와 적 20여명이 제7중대 매복 망에 들어왔다. 한 병사가 선두 기마 장교를 우발적으로 사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

7중대는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이 우발 사격을 크게 질책하고 대대 관측소를 전방의 제7중대 지역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의 실수가 없도록 중대를 직접 통제하였다.

7월 20일 새벽 선두 제7중대장(조경학 중위)은 대대장에게 피아 식별 불능의 대병력이 갈령에서 도로를 따라 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적이 제7중대를 통과하여 좌측 제6중대 지역으로 진입하자, 제6중대장(곽성범 중위)은 이들의 선두가 중대 정면을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사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보고하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고 대대가 동시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보냈다. 그 결과 전 대대의 화력이 도로에서 행군하던 적에게 쏟아져 동관리 계곡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하면서 아비규환이 되었다.

대대는 적 후미인 갈령 방향에는 81mm 박격포로 견제사격을 하고 중대간의 중기관총으로 교착사격을 하며 도로 건너편 개활지와 산으로 도주한 적에게는 중대의 60mm 박격포로 제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화기로는 도로에 있는 적을 소탕하였다. 기습사격을 받은 북한군은 대부분 쓰러져 갔고 일부 병력은 논바닥에 엎드려 저항하였으나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이 당시 제5중대에 탄약 추진하러 갔다가 전투를 관전하게 된 하송리의 박무진은 “적이 길 위와 논바닥에 새카맣게 쓰러져 있었는데 7-8명이 하천 직경 70cm의 배수관 속으로 기어 들어가자 소탕 작전을 하던 한국군 한 명이 배수관 속으로 사격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군들은 참 용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전투는 14:00에 종료되었다. 제2대대는 적 사살 356명의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투 후에 주민들이 논과 도로에서 모아다가 매장한 적군 시체는 600구가 넘었다. 노획 무기로서 박격포 16문, 반 탱크 총 2문, 기관총 53정, 소총 186정 이었다. 동관리 전투에서 아군은 전사 4명에 부상 30명의 피해를 입었다.

### ③마을 청년단원들의 활약

이 전투에서 적15사단의 두 개 연대를 섬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군 정보부대의 민활한 활동에 크게 힘입은 바가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현지 주민들의 협조가 그것에 크게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화령장 주민들은 첩보 부대인 방원철 부대나 배상록 부대가 화령장에 파견되었을 때부터 한국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즉 대한 청년단원들은 단장 김기영을 중심으로 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마을을 경비하며 보급 추진 업무를 도와주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탄약 운반이나 취사 업무 등은 우리가 맡을 테니 군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장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탄약 운반, 취사 등을 자원했으며 박삼덕(청년 단원 38세)은 자신의 약방을 치료소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약품을 지원하고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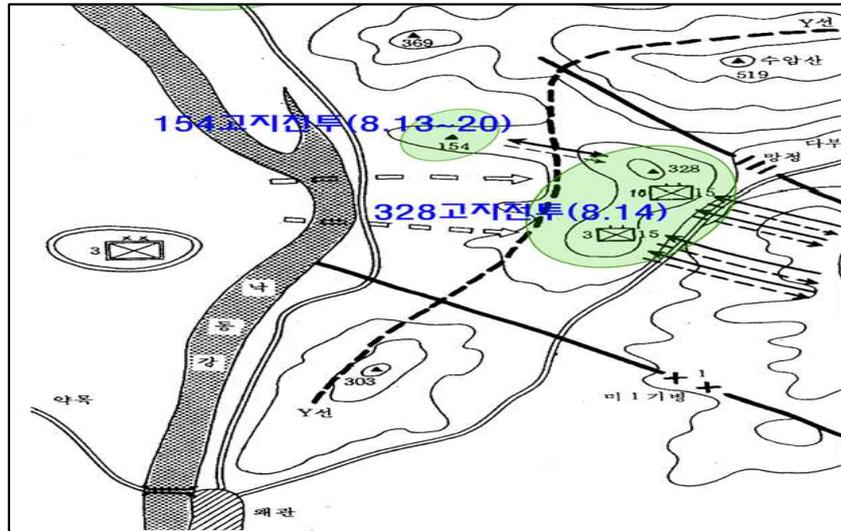
화령장 전투는 당시 아군이 계속적으로 후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적의 약점과 작전지역의 특수성을 잘 활용한 성공적인 매복 기습작전이다. 아군은 수적으로 열세하고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가용한 적에 대한 첩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의 사단 주력을 격멸하여 연대 전 장병이 1계급씩 특진하였다. 또한 이 전투는 작전적 측면에서도 후방에 있는 대구 및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 IV. 낙동강방어선전투에서 한국군은 방어선을 이렇게 지켰다.

##### 1. 다부동전투에서 활약

8월초 낙동강방어선이 형성되면서 한국군 제1사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13사단, 제15사단, 제3사단이 공격을 가해왔다. 북한군 제13사단은 낙동리에서 강을 건너 왜관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진출을 시도하였고, 제15사단과 제3사단은 낙동강의 서쪽에서 강을 건너 측면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한국군 제1사단은 협공을 받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328고지 공방전

다부동은 왜관과 군위·대구에 이르는 교차점이 있으며, 바로 이 지역의 북방 고지군을 연결하는 Y선<sup>16)</sup>은 대구에 이르는 중요 접근로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대구 방어의 성패가 이곳 전세에 달려 있다<sup>17)</sup>. Y선이 무너지면 사실상 대구도 적에게 내어놓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적은 최초 8월15일까지 부산을 목표로 하였지만 대구만이라도 점령하려고 마지막 공세를 서두르고 있었다.<sup>18)</sup>

한국군 제1사단의 좌일선 부대인 제15연대<sup>19)</sup> 정면으로는 북한군 제3사단이 공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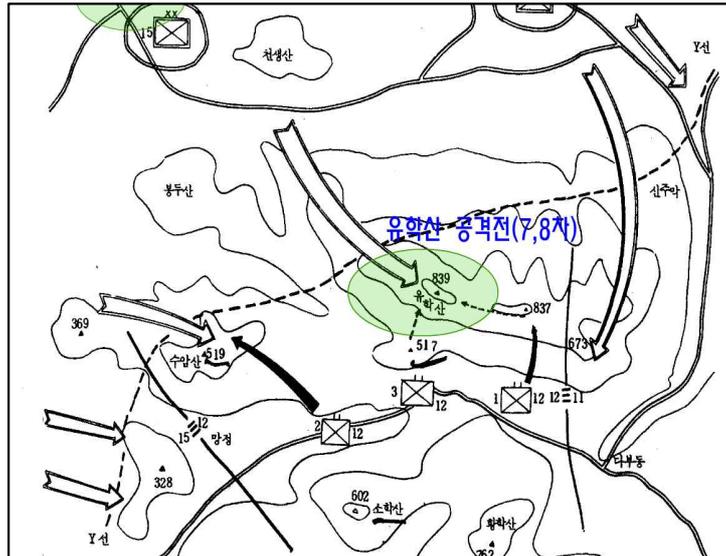
16) 미군이 선정한 방어선 중에 한국군이 자체 선정한 최후저지선이다.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김기옥), 『다부동전투』, 1981, pp.30~80.

18) 국방군사연구소(채한국 외 2인), 『한국전쟁(상)』, 1995, pp.295~298.

19) 1905년7월5일 한국군은 제1군단을 창설하였다. 이때 제5사단이 해체되면서 예하 제15연대 2개 대대를 제1사단 제13연대 1대대와 통합하여 제13연대로 호칭하였다. 그러나 제15연대장이 제13연대장에 임명되었고, 이에 제15연대장병들의 불만이 표출되자, 연대장은 부대 명칭 개선을 건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8월25일부로 제13연대는 제15연대로 개칭되었다.

제15연대는 2개 대대의 병력으로써 적 제3사단과 328고지에서 9차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하여 서로 간에 많은 손실을 보았으나 끝내 진지를 고수하였다.



유학산·수암산 전투

한편 아군 제12연대 정면으로는 북한군 제15사단이 공격해왔다. 적은 8월13일에 수암산과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유학산을 확보함으로써 대구에 이르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아군 제12연대는 대구 방어의 관문이라 할 Y선상의 유학산과 수암산을 탈취하기 위해 치열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8월20일에 상황 변화로 북한군 제15사단이 영천 쪽으로 이동해가고, 인접 제3사단과 제13사단이 이 지역을 각각 나누어 맡자, 아군은 8월22일 공격해서 처음으로 야간공격을 실시하여 드디어 유학산을 탈취하고 곧 수암산도 확보하게 되었다.



지금의 천평 일대에서 피아 전차전이 있었다.

① 병사, 학도병, 노무자 등의 활약

아군의 용단 폭격(20)에도 불구하고 적은 신주막~다부동 축선으로 집중공격하고 있었다. 8월16일에는 가산으로 침투하려는 적은 다부동 바로 서측 466고지를 공격하는 등 아군은 큰

위기에 놓였다.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미 제8군은 즉시 군 예비인 미 제25사단 27연대를 다부동으로 투입하였다.

8월18일 새벽에는 가산에서 침투한 일부의 북한군이 대구역 부근으로 향해 박격포 사격을 가함으로써 대구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 충격으로 이날 정부는 부산으로 이동하고 피란령을 하달하였다. 한국군 제1사단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8일에 지원된 미 제27연대와 합동으로 적진을 돌파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군 제15연대는 328고지에서 적과 수차례의 수류탄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쟁탈전을 거듭했고, 한국군 제12연대는 쌍방 간에 많은 손실을 낸 채 19일 수암산을 재차 빼앗기고 유학산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반복했으나 대체로 적의 돌파 확대를 저지하고 있었다. 이날 미 제8군 명령에 따라 미 제2사단 23연대가 두전동 일대에 배치돼 방어력을 보충하였다. 육군본부에서도 한국군 제8사단 10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시켜 가산 일대에 배치하였다. 이처럼 다부동 일대는 한국군 1개 연대와 미군 2개 연대가 지원될 만큼 상황이 위급하였다.

또한 사단의 전투 병력은 매일 평균 600명~700명의 손실이 발생하여 사단에서는 이를 신병과 학도병으로 보충하였다. 당시 사단의 각 연대에서는 신병이 도착하면 명단을 작성할 겨를도 없이 중대에 보충하였다. 누가 전사하고 후송됐는지 파악할 새가 없을 정도로 전황이 급박하였다. 심지어 중대장과 소대장도 자기 부대의 현재 병력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룻밤 격전을 치르고 나면 총원의 30~40%가 손실되고, 다음날 또 신병으로 교체되었다. 나중에는 분대장이 분대원 얼굴과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치열한 전투에서 단 1명의 병력도 아쉬웠다. 이에 사단에서는 군인 신분이 아닌 노무자들을 모집하여 1개 대대에 평균 50~60명을 배치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전투원의 식사를 비롯한 탄막과 기타 보급품을 지게로 최전방까지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것이었다.

당시 각 연대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도 있다. 육군본부 고급부관실에서 한국군 제1사단이 일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이에 육본의 어느 중령을 반장으로 한 조사단이 사단사령부에 도착하자마자 행정 규정을 따지는 그들에게 해당 작전지역 대대장은 “직접 가 보시면 안다”고만 말하고 제15연대 전투 현장인 270고지 위로 안내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고지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자 조사단은 아무 말 없이 되돌아갔다. 그 후로는 육본에서 는 사단에 일보를 제출하라는 독촉이 없었다.

## ② 제11연대지역에서 사단장의 구국정신으로 발휘: “내가 선두에 설테니 후퇴하면 나를 썩

20) 1950년8월16일 왜관 일대에 용단폭격이 있었다. 이날 일본 요코다와 가네나 비행장에서 출격한 B-29 전략폭격기 98대가 11:58부터 26분간 400~900kg 폭탄 960톤을 투하하였다. 당시 북한군 제2군단 통신대 소속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했던 북한군 김윤문 소좌는 용단 폭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언하였다. “B-29의 용단 폭격으로 북한군의 손실은 매우 컸다. 약목 부근 낙동강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제3사단과 제15사단의 예비대·지원 포병 그리고 공병·전차·탄약을 비롯한 각종 보급품이 파괴되고 유선이 모두 절단돼 대혼란이 빚어졌다. 북한군 제2군단장 김무정을 비롯한 군단 간부들은 이때부터 동요되어 승리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북한군 제2군단에서는 B-29 120대가 출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말도 못하게 하였다.”

라”

사단 정면의 우일선을 담당한 제11연대 지역으로는 북한군 제13사단이 공격해왔다. 이 지역에서는 8월14일부터 적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다음날에는 야간에 적이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하여 신주막과 수정까지 진출했는데 이후에는 신주막과 가산 부근에서 피아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미 제 8군사령부에서는 다부동 지역의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8월17일 경산에 있던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이 지역에 증원하였고, 8월19일에는 한국군 제8사단 10연대가 제1사단에 배속되어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13사단 주력은 신주막까지 진출한 다음 다부동 우측 고지를 확보하여 일단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후로 적의 저항은 점점 미약해졌고 공격의 징후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북한군 제15사단이 영천방면으로 이동함으로써 제13사단의 공격 정면이 넓어진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전투 결과 아군 제11연대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적 제13사단을 격멸하고 Y방어선상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대구의 위기를 구하게 되었고, 적은 가간에 입은 손실로 말미암아 보충과 재정비가 없이는 새로운 공격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사단장이 제11연대지역에서 구국정신을 발휘하면서 활약한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전투에서 한미 양국군에게 서로의 신뢰를 깊이 심어 준 사건이 있었다. 8월21일 아침, 아군이 반격할 계획이었는데 적이 먼저 공격하였다. 그때 사단장에게 제11연대 1대대 병력이 유학산 우 전방에 있는 466고지에서 적군에게 쫓겨 후퇴하는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11연대와 인접해 있던 미 제27연대도 위기를 인지하고 미 제8군사령부에 “한국군이 후퇴하고 있어 퇴로가 차단당하게 되었다. 우리도 늦기 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하고 후퇴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미 제8군사령부에서 사단장에게 항의 전화가 왔다. “도대체 한국군은 싸울 의지가 있는 군대냐”고 질책하였다. 사단장은 즉시 지프차를 몰고 제11연대 전방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제 11연대 병사들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후퇴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1대대장(김재명 소령)을 불러 “도대체 어찌 된 일이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대대장은 “병사들이 밤낮없이 계속되는 전투에 지쳤습니다. 거기다 보급이 끊겨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습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사단장은 병사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여 그들을 집결시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내 말 잘 들어라.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후퇴할 곳이 없다. 물러서면 바다뿐이다. 후퇴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와 같이 싸우는 미군들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먼저 후퇴하다니, 이 무슨 꼴인가? 대한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앞장서겠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쏘아라!”

사단장은 권총을 세워 들며 돌격명령을 내리고 장병들 선두에 서서 앞으로 나아갔다. 용기를 얻은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내 뒤를 따랐다. 한번 기세가 오른 병사들은 거짓말처럼 용감하였다. 그 결과 방어진지가 있는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마이켈리

스 대령은 후에 사단장에게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하였다. 그러면서 사단장이 직접 앞장서는 한국군은 신병(神兵)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한·미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그날(18일) 야간에 다부동 계곡에서 전쟁발발 이후 최초로 피아 전차전이 전개되었다. 적은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조공을 제11연대 방향으로, 주공을 미 제27연대 정면으로 대규모 야간역습을 감행하였다.

미 제27연대는 사용가능한 모든 포를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적 전차와 보병을 분리시키고 아군 전차를 추진하여 적 공격에 대응하였다. 다부동 계곡에서 쌍방 간에는 전차포에 의해 발사된 철갑탄이 5시간 동안이나 교차되면서 불꽃을 튀겼다. 당시 이 광경을 바라보던 미 제27연대 장병들은 철갑탄이 어둠을 뚫고 좁은 계곡의 도로를 따라 메아리치며 상대방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직선으로 날아가는 모양이 마치 볼링공이 맞은편에 세워진 목표인 핀을 향해 재빠르게 미끄러져 가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 전투를 볼링장(Bowling Alley) 전투라고 하였다.

날이 밝자 진전에는 적 전차 9대와 자주포 4문과 여러 대의 트럭 그리고 1,300여 구의 시체가 확인되었다. 더구나 다음날인 19일 오전 적 제13사단 포병연대장(정복옥 중좌)이 제11연대 지역으로 작전 지도를 갖고 귀순함으로써 적의 전투의지는 극도로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제12연대는 이날 밤 최초로 야간기습을 시도해 마침내 유학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군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쟁발발 이후 최초로 다부동 전투에서 한·미간의 실질적인 연합작전이 이루어졌고 그 실제적인 사례가 볼링장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연합작전에서 비록 미군 2개 연대가 한국군 제1사단에 배속되거나 작전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들 미군 부대가 한국군 제1사단의 작전 책임 지역에서 공동의 작전 목표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했다는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그 연합작전은 성공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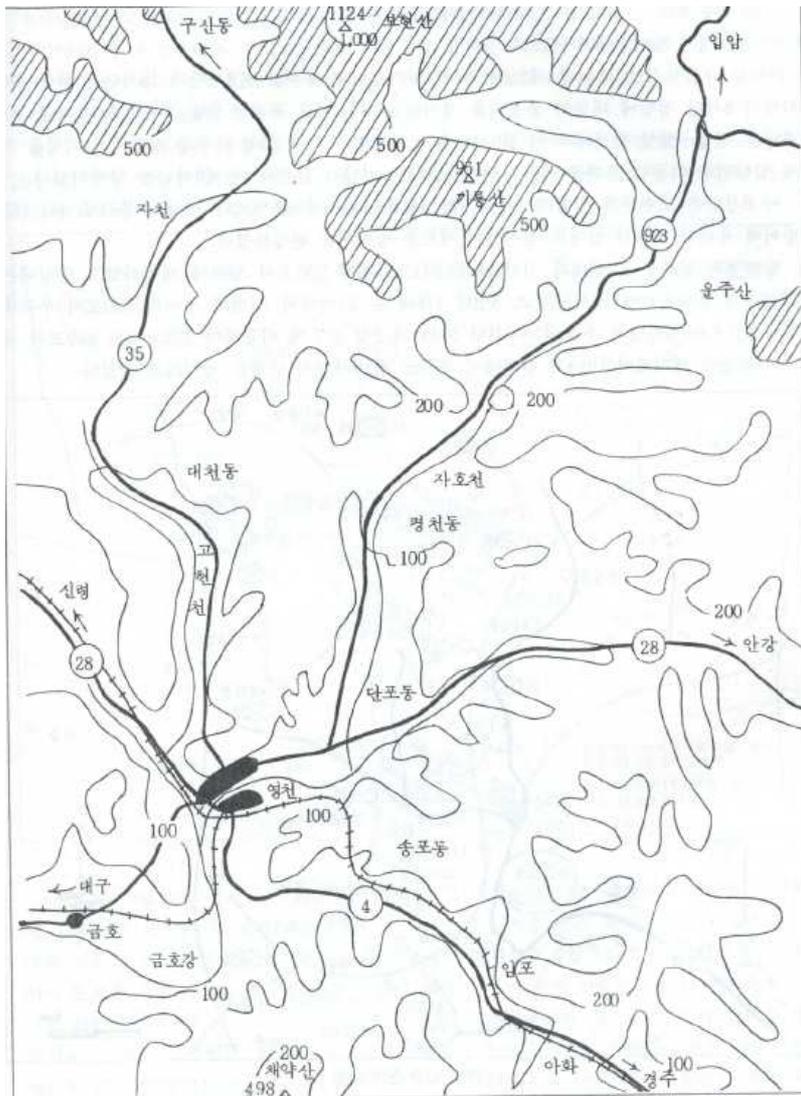
한국군 제1사단은 9월12일에 38도선 상에서 북진작전을 준비할 때 한국군 사단으로는 최초로 미 제1군단에 배속되어 북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도 사실은 다부동 전투에서 보여 준 제1사단의 전투수행 능력과 사단 전투력에 대한 미군 지휘관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사단장 백선엽 장군은 이 전투를 통해 작전 및 전투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 2.영천전투에서 활약

영천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앙선·대구선·동해남부선 등 철도의 분기점인 동시에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도로가 대구·경주·포항·안동·청송으로 뻗어 있다. 따라서 적이 영천을 점령할 경우 대구와 경주 방면으로 융통성 있는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중부와 동부전선을 담당한 북한군 제2군단은 김무정의 지휘 아래 8월 한 달 동안 최종목

표인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했으나 한국군의 철통같은 방어작전에 의하여 점차 그들의 진출이 저지되자, 이제는 주공방향을 영천-경주-부산 선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제15사단을 영천 북방으로 이동시켜 9월부터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였다.



영천지역

영천 지역의 아군 제8사단은 보현산과 입암리 선에서 9월2일까지 적을 저지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9월4일에는 기룡산 좌우 능선의 새로운 방어선으로 후퇴하였다. 이때 사단은 좌로부터 제21연대, 제16연대 제1대대, 제18연대가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받고 안강 방향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인접 사단 간에 약·15km의 간격이 발생하였다.

한편 제8사단이 기룡산에서 철수하자, 육본에서는 제7사단 제8연대를 신녕에서 영천으로 이동시켜 제8사단의 예비대로 운용했으며, 또 9월5일에는 제7사단 공병대대 병력 200명을 추가로 영천에 투입하였다. 이 무렵 적 제15사단 주력은 영천을 점령할 기세로 새벽 우중과 야음을 틈타 공격을 개시하여 아 제16연대 방어선을 돌파하였다. 또 좌측의 제21연대도 적

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군의 사단 방어선의 중앙은 완전히 돌파당하여 영천 읍내가 적의 사격권 안에 들어갔으며 우측방을 담당했던 제5연대도 완전히 고립상태에 빠지는 등 상황은 전반적으로 불리하였다.

9월6일에 적의 주력은 조교동 부근에서 병력을 증원받아 1개 연대 병력으로 영천 읍내에 침입하여 영천읍을 점령하고 경주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그러나 적은 경주 북방에 있는 아화리 북쪽에서 아군 제5연대에 의하여 저지당하였고, 영천 북쪽에서는 아 제21연대와 제19연대에 의하여 후방 보급로가 차단됨으로써 포위될 위기에 놓였다.<sup>21)</sup>

한편 아 제8사단장은 적이 경주 방면으로 남하하자, 철수한 부대들을 즉시 대구 방면에 있는 금호강 북안에 배치하고 적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이에 9월 7일 사단은 북쪽에 있는 제21연대로부터 시작하여 낚싯바늘 모양의 방어선을 형성하였는데 여기에 제8사단 10연대가 포항에서 복귀하여 가세하였다.

이로써 아군은 5일간에 걸친 용전 끝에 공세로 이전하여 9월9일에는 부대를 좌로부터, 제21연대, 제19연대, 제16연대, 제11연대, 제8연대, 제10연대순으로 배치하여 반격하였다. 이에 적 제15사단은 극심한 타격을 받아 거의 재기불능상태에 이르렀고 반면에 아군은 구전동-자천동-삼매동 북방-인구동 남쪽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하여 병력을 재정비하고 장차 다가올 총반격전에 대비하였다. 영천전투에서 한국군은 적 3799명을 사살하였고, 309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전차 5대 파괴, 장갑차 2대, 차량 85대, 소화기 2327정 등의 장비를 노획하는 대전과를 달성하였다.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부산을 점령하려던 그들의 기도는 9일간에 걸친 영천에서의 공방전에서 실패하여 분쇄되었다. 북한군은 영천을 점령한 것을 ‘6·25전쟁의 전환점’으로 보았고, “영천을 점령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상실하자 패배하였다”고 할 정도로 이 전투에서의 실패가 그들에게 미친 충격은 심대하였다. 반면에 아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낙동강방어선이 붕괴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에 실시된 인천상륙작전과 더불어 반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전투에서 한국군의 활약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① 제2군단장(유재홍 준장)의 과감한 결심의 전투력 집중운동

9월초 영천, 기계-안강 그리고 포항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군 제1군단은 적 제12사단의 공격으로 안강지역의 정면이 돌파되자, 정일권 총참모장은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영천 정면은 제2군단장이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후 영천지역을 담당한 아 제8사단의 중앙이 적에게 돌파당하자, 제2군단장은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 부대와 적의 전의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우세한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해야 하고 이것은 절약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개념 하에 과감한 결심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군단장은 9월5일 전선을 직접 시찰하고 하양에 있는 사령부에 돌아올 때 작전참모로부터 급보를 받았다. 그 내용은 아 제8사단의 방어진지가 돌파 당했으며 전황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만일 적에게 영천을 점령당한다면 적은 대구로 또는 경주 방면으로 진격할 가

21) 육군대학(교육참고 2-1), 『한국전투사』, 1997, pp.219~236.

능성이 있고 그 중에 적이 대구방향으로 공격한다면 한국군 제2군단뿐만 아니라, 미 제1기병사단의 후방까지 차단당할 위험이 있었다. 또 적이 경주방향으로 공격한다면 적제8사단은 포항을 공격중인 제12사단과 합세하여 부산으로 직접 진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군단장은 적이 어느 방향으로 공격하든지 전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적을 영천에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군단장은 병력문제에 있어서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 예하 제1사단장과 제6사단장 그리고 참모들을 소집하여 군단작전회의를 열었다. 군단장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영천은 오늘 밤이 고비인데 전세는 우리에게 불리하며 육본도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만일 영천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부산교두보선으로 후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나는 현 방어선을 한 자 한 치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굳게 믿는다. 따라서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씩을 선발하여 병력을 영천지역에 집중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니 나의 최종 결의에 동의해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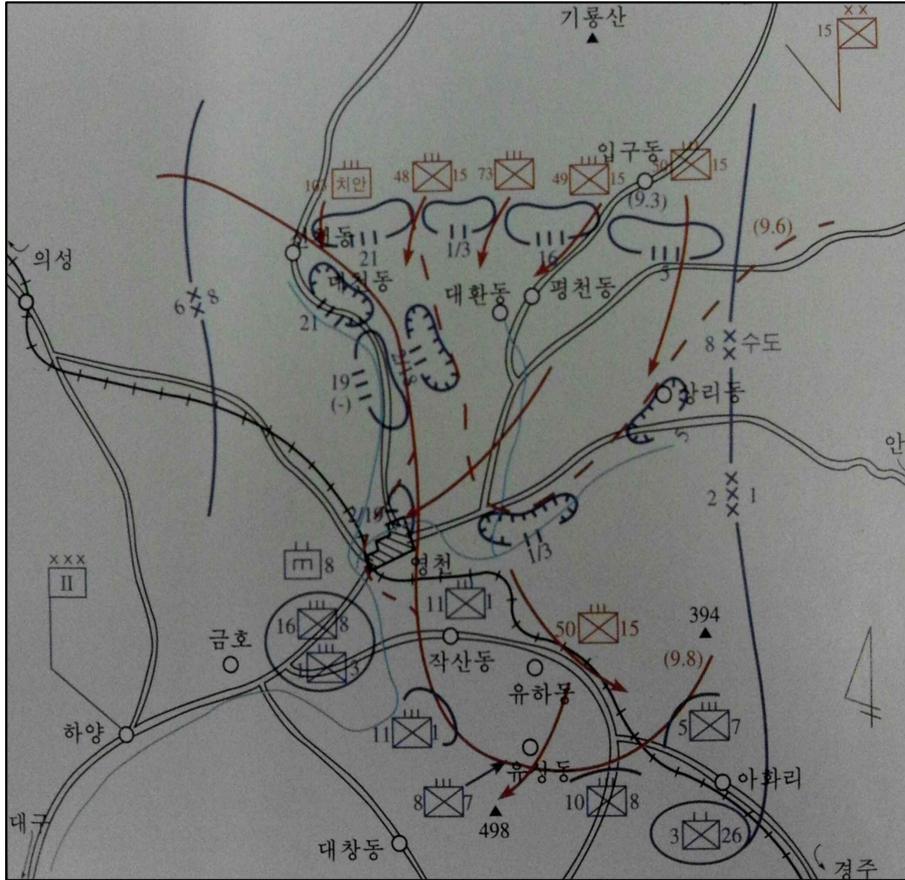
이러한 군단장의 결심에 대해 사단장들은 “우리 사단 정면에도 병력이 모자라서 적을 막아내기가 힘든 상황에서 1개 연대를 차출한다는 것은 전 전선의 위기를 자초하는 도박”이라며 병력 차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군단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나는 적의 주공이 영천 정면에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다. 만일 적이 영천을 점령한 후 대구 혹은 경주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간에 우리의 급선무는 영천을 확보하는 것이다. 양개 사단에서 1개 연대씩 병력을 차출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다. 적은 이번 공세에서 이미 약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력을 전용하여 영천에 집중적으로 운용한다면 기필코 적을 격파할 수 있다”

한편 군단장은 2개 연대 차출 결정을 내린 후 다음 문제는 장비, 즉 전차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였다. 군단장은 우리에게 전차 1개 소대(5대)만이라도 있다면 적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아군의 사기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미 제1기병사단장(케이 소장)을 만나 전차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는 미군 사정도 다급했기 때문인지 ‘그것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면서 귀 군단은 후퇴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군단장은 “더 이상의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군이 전차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직접 선두에서 싸우겠다”고 말하자, 미 제1기병사단장은 “신중히 생각해 보자”며 약간은 함축성 있게 대답을 하였다.



적 후방증원부대인 제103연대와 제73연대가 공격하는 것을 격파함으로써, 전선의 견부(肩部)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21연대는 적의 선두부대를 지원하는 후방증원 부대를 차단하였고, 병참선을 차단하였으며 또 적이 돌파구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영천 반격전: 제19연대 기습공격

또 아 제19연대는 중심 깊게 들어온 적 후속부대의 보급부대를 기습 공격하여 완전 섬멸함으로써 영천 남쪽으로 진출한 적 제15사단 주력의 병참선 차단시킴으로써 아 군단이 총반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sup>22)</sup>.

이 전투가 6·25전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정도는 아래에서 언급할 신한국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영천전투에서 영천지역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고 철수 하는 것 검토하고 있었다. 당시 미 합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포함하여 62만 명을 미국령 사모아 제도에 재배치하여 신한국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인 신한국계획(New Korea Plan)을 승인하였다. 그들은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9월7일 영천을 방어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이 철수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일권 참모총장이 다시 영천을 탈환한다면 이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미 제8군사령관은 “물론이다. 영천만 되찾는다면 이 계획을

22) 육군본부(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 대회전』, 1995, pp.190~220.

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포항, 안강·기계, 다부동, 왜관, 창녕, 마산 등 모든 지역에서의 전투가 이곳 영천만 회복한다면 다 무사해진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 영천전투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3. 포항전투에서 활약

포항전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 이유는 포항에서 작전하는 아군은 포항이라는 항구를 통해 병참 물자를 용이하게 지원 받을 수 있었고 동해에 떠있는 함대의 함포 지원을 많이 받았고 인근에 영일비행장이 있어서 항공기 지원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만약 적이 포항 지역을 점령한다면 아군은 동해안의 최대 병참 지원 항구를 상실하게 되고 비행장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북한군이 8월 초까지 동해안을 따라 계속 공격해 내려오는 것을 한국군 제3사단이 저지해 왔다. 그러나 적은 8월10일 기계를 점령하였고 아군의 후방인 흥해와 포항 지역을 우회하여 점령함으로써 아군은 영덕과 강구 일대에서 고립되었다.<sup>23)</sup> 이에 아군은 이곳에서 분투하다가 장사동에서 포위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 제8군사령부는 해상 철수를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군 제3사단은 8월16일 밤부터 아침까지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적이 점령한 포항시는 아군의 민기식 부대에 의해 탈환되었고 곧 제3사단이 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9월1일에 포항 북쪽에 있는 적을 공격하였다. 그 다음 날 북한군의 9월 공세로 포항 북쪽지역에서는 혼전이 전개되었고 인접한 수도사단의 전선이 무너짐으로써 제3사단도 방어선을 형산강 이남으로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적의 공세도 한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포항을 점령한 후 동해안을 따라 부산으로 남진하려던 적의 기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학도의용군

#### ① 사단 후방지휘소 방어전에서 학도의용군의 활약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김기옥), 『안강·포항전투』, 1986, pp.21~25.

학도의용군 또는 학도병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학업을 중단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자진하여 참전하였던 의병들이다. 어린 학생들은 북한군이 남침하자, 즉시 꺾기하여 전국 학도의 힘을 모아 풍전등화 속의 조국을 구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의 일부는 학생 집단만으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편성하여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군번 없는 학도병으로서 개인적으로 군부대에 예속되어 활동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대하여 정규군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학도의용군은 전쟁이 발발하여 휴전 조인까지 육·해·공군 및 유엔군에 예속되어 각종 전투에 참가하거나 군무를 지원하였다. 이들은 비상학도대, 대한학도의용대, 전국학련구국대, 서울학도포병대, 용진학도유격대, 태극단학도의용군, 여자학도의용군, 각 사단 학도의용군, 지방학도의용군 등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국내 학생조직뿐만 아니라 재일교포 민단 학생들로 구성된 재일교포학도의용군도 있었다. 이들은 일선에서 활동과 아울러 후방에서는 가두선전, 피난민 구호, 전황보도, 치안유지, 선무공작 등에 활동하기도 하고 일부는 적 후방에서의 유격부대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최초 학도의용군의 결성은 북한군 남침 직후 각 학교의 학도호국단 학생들이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을 찾아가 참전 결의를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을 받아 학도의용군의 모체인 '비상학도대'를 발족시키게 된다. 그 구성원은 주로 학도호국단 학생들이었으며, 정훈국장 명의의 신분증도 발부 받아 최초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전투대를 우선 편성하여 노량진전투에 참전, 북한군의 한강 도하작전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지연작전 시기 대전에서 편성된 '의용학도대'와 더불어 대구에서 통합 편성되어 50년 7월 19일부로 '대한학도의용대'란 이름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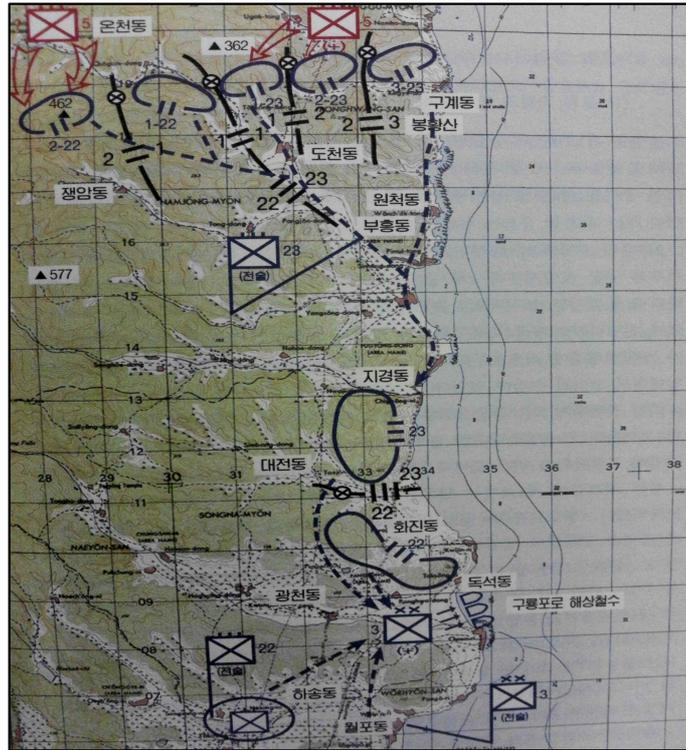
당시 학도의용군은 개별적으로 군에 자원입대한 학생도 상당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대한학도의용대를 거쳐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군 10개 사단과 그 이하 부대에는 거의 대한학도의용대 대원이 배속되어 직접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쌍방이 치열하게 접전한 낙동강방어선 전투에서 아군이 북한군의 맹렬한 공세를 꺾는데 학도들의 공헌도 매우 지대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8월 초에 북한군 제5사단은 영덕에서 해안 지역을 따라 계속 남진하였다. 적이 8월9일 강구를 점령할 때까지 일일 평균 진출속도는 2.3km 정도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단의 평균 진출속도 보다 7km 정도 느린 속도이었다. 그 이유는 미 공군의 폭격과 미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인하여 주로 야간에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군 제3사단의 후방지휘소는 포항 여자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수도사단에서 종군했던 학도병 71명이 8월9일 저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8월11일 새벽에 북한군 제12사단의 1개 대대 이상의 병력과 제766부대의 일부 병력이 포항 시가에 침입하여 제3사단 후방지휘소를 공격하였다. 이에 제3사단에 소속된 학도병 1개 중대는 M1소총과 실탄 250여 발씩 지급받고 포항여자중학교에서 적을 저지하라는 긴급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미 적 제12사단 일부병력은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인 학교 건물 뒷산에서도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불과 71명의 학도병들은 11시간에 걸쳐 네 번이나 적의 파상공격을 처절하게 막아내었다. 학도병은 지근거리까지 접근해온 적을 향해 최후의 결전을 의미하는 피비린내 나는 백병전까지 전개하였다. 학도병들은 최후의 일인까지 모두 쓰러질 때

까지 적을 저지하였으나, 최후의 총성이 멎었을 때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전투에서 김춘식 외 47인의 학도들은 못다 핀 젊은 한을 안고 산화하였으며 부상을 당한 13명이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 이 접전에서 학도병 48명이 전사했으며 제3사단 후방지휘소와 포항은 적에게 점령당하였다.<sup>24)</sup>

## ② 제3사단 독석동 해안철수작전 성공



독석동 해상철수

한국군 제3사단의 본대는 8월10일 오후 장사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북한군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이 포항에서 북쪽으로 8km정도에 위치한 흥해를 점령함으로써 사단은 포위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일에 포항에 위치한 사단의 후방지휘소가 적의 기습을 받아 포항이 실함되면서 완전히 후방이 차단되었다. 이후 적은 야간을 이용하여 아군 진지를 맹렬히 공격해 왔기 때문에 사단의 방어 지역은 점점 축소되었다. 이에 아군은 2개 연대와 1개 독립대대 및 강원도 경찰대를 투입했으나 그들 부대에 보급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고 탄약마저 거의 소모되어 지속적으로 저항하기가 곤란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현 상태에서 포항 쪽으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것도 많은 손실이 예상되므로 쉽지 않았다.

8월15일에 제8군사령부로부터 해상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이 명령을 받은 사단장 이하 참모들은 독석리 해안에서 조사리 사이의 약 1km 해안선으로 철수지점을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곳이 수심과 해안선의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철수지점과 철수시간(8월 16일 21:00부터 익일 새벽 사이)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김기옥), 앞의 책, pp.68~99.

적에게 철수 의도를 은폐하면서 순조롭게 철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병부대와 보병의 박격포부대는 남아 있는 모든 포탄을 사용하여 요란사격을 하였고 라이트를 켜 5~6대의 차량들로 하여금 해안도로를 계속 왕래케 하여 마치 부대가 증원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각 대대는 21:00부터 1개 중대씩 야간 공격을 하면서 주력을 해안 집결지로 철수시켰고 최후 엄호 중대는 다음날 신호에 의해 마지막으로 철수하였다.

이러한 철수작전으로 그동안 부상자를 포함한 사단 병력 9,000여명, 경찰대 약 1,200명, 지방 공무원과 노무자 및 피난민 등 1,000여명이 대기 중인 상륙함(LST)에 승선하였다. 그리고 모든 차량과 포 등 각종 장비도 실었으며 심지어 피난민의 송아지도 실었다. 적은 날이 밝은 후에 아군의 철수작전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사격을 가해 왔으나 아군의 철수부대는 피해 없이 해안을 떠나서 도착지인 구룡포로 향진하였다.

### ③ 민기식 부대 활약으로 포항 탈환

적이 포항을 점령하면 그 남쪽에 있는 영일비행장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비행장은 F-51 전폭기의 출격기지이고 지상군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브래들리(Bradley)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급히 그 곳으로 출동시켰다. 그리고 육군본부에서는 8월 10일에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신설하여 그 사령부와 제3사단이 협조하여 안강과 포항 일대에 침입한 적을 포착하여 섬멸하려고 하였다. 특히 포항전투 기간 동안에 아군은 미 공군의 근접지원과 포병, 그리고 전차소대의 지원을 받아 적을 공격하였다. 또 8월 15일 민기식 부대(민부대)<sup>25)</sup>는 터널고지 전투에서 적 제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여 포항을 탈환한 후 그 작전지역을 제3사단 23연대에게 인계하고 낙동강 북부에 위치한 의흥으로 이동하여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적은 9월 공세를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에 제3사단은 9월 1일 사단 정면에서 일제히 반격하였다. 따라서 피아는 포항 북쪽 외곽지대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난전이 전개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단 좌측의 수도사단 정면이 적에게 돌파됨으로써 수도사단과 제3사단 간에 약3km의 간격이 발생하였고 이에 적은 제3사단 후방으로 침투하여 사단은 형산강 이북에 고립되었다. 따라서 사단장은 9월 5일에 전 부대를 형산강 이남으로 철수시켰다.

이 전투에서 아군이 획득한 전과는 적 사살 1만 5,343명, 생포 3,722명, 귀순 115명 외에 전차 4대 야포 4문을 파괴하였고 많은 무기 및 장비를 노획하였다. 아군의 피해로는 전사 2,301명, 부상 5,908명, 실종 4,040명 등 다수의 무기 및 장비를 상실하였다.

## 4. 장사상륙작전에서 활약

장사상륙작전은 아군이 낙동강을 최후방어선으로 하여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9월15일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결심하였다. 이에 아군은 인천

25) 민기식대령은 전쟁의 초기전투인 의정부전투와 한강방어선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7사단장에 보임되어 전주에서 학도의용군 500명을 보충 받고 제3연대와 제9연대를 기간으로 재편하였다. 7월14일 그는 재편한 제7사단을 민부대로 개칭하고 전주, 남원, 함양 등으로 철수하면서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우회 공격을 저지하면서 김으로써 낙동강방어선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하여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장사동으로 상륙작전을 하였다. 즉 장사 상륙작전의 목적은 아군이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을 기만함으로써 경인지역으로의 적 병력이 증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 중이던 한국군 제3사단이 포항 남쪽에서 반격할 때 적의 후방을 교란하여 아군의 전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사해안지역

이 작전을 담당할 부대는 1950년 8월 24일 대구에서 긴급히 모집한 722명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이었다. 이 부대는 8월 27일 이명흠 소령을 대장으로 밀양 지역으로 이동하여 31일까지 기초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다시 부산 지역에 위치한 육군본부 청사로 이동하였다. 이 부대의 명칭은 9월10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74호에 의거하여 제1유격대로 명명하고 그리고 9월11일까지 기본적인 유격교육을 받으면서 유격부대로써의 부대편성을 완료하였다. 이 유격대의 1개 연대병력은 약 180명이었고 지휘관의 계급은 대령 혹은 중령으로 임시로 부여하여 사단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일반 사병들도 임의대로 계급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 부대편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사령관:이명흠(현역소령), 전술고문:전성호(육군대령), 참모장:백운봉(현역대위), 본부사령 :조수경, 인사참모:이수희, 작전참모:김응록, 정보참모:이승삼, 군수참모:이태호, 정훈부장: 서상덕, 의무부장:이봉구, 통신부장:권찬두, 연락관:이홍배(현역중위), 제28연대장:이영훈, 제29연대장:문학경, 제32연대장:이원직, 제37연대장:오운환



좌초된 문산호 함선

## ① 이명흠(명부대)유격대의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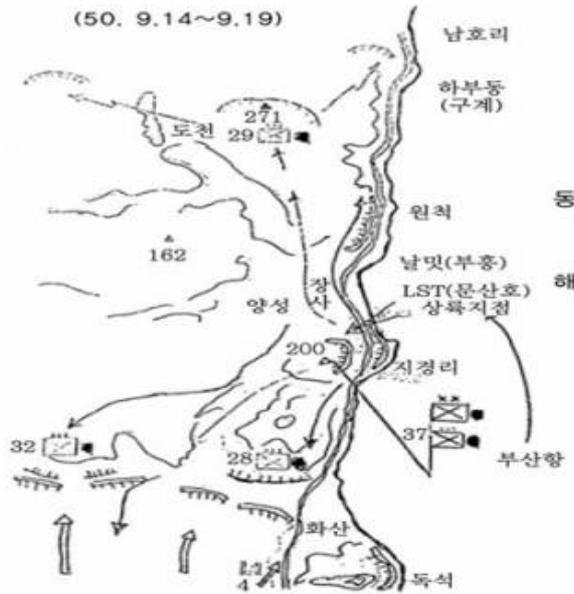
유격대는 9월13일 오전에 육군본부 연병장에서 출정식을 거행한 후 부산항으로 이동하여 14:00에 2,700톤급인 문산호(LST)를 타고 상륙지점인 장사리 앞바다로 출발하였다. 9월 14일 04:30분경 장사리 해안에 도착한 제1유격대는 적의 경계가 소홀한 일출 전에 상륙작전을 완료하기로 하고 문산호를 해안으로 접근시켰다. 그러나 해안지형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였고 태풍 “케이아”의 영향으로 4~5m에 이르는 높은 파도 때문에 문산호는 수중의 모래턱에 좌초되었다. 이에 대원들을 좌초된 문산호에 간헐 적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한편 북한군 제5사단은 형산강 일대에서 아군 제3사단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들의 후방지역 즉 장사리 일대에는 적 제101치안 연대가 배치되어 해안경비와 점령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형산강 일대에서 피아간 치열한 공방전이 있어서 적의 정예부대의 대부분은 여기에 투입되었고 후방지역인 영덕지역 및 장사리에는 소수의 경비 병력만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들은 아군의 상륙작전을 염두에 두고 해안의 모래사장을 따라 토치카를 구축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남산(200m)과 부흥리 뒤편의 야산과 봉황산(271m)에 설치해 놓은 박격포와 직사포는 아군에게 위협이 되었다.

아군은 상륙함이 좌초되었어도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하고 우선 특공대를 선발하여 상륙함과 해안에 있는 소나무와 밧줄을 연결시켰다. 특공대에 의하여 밧줄이 연결되자, 먼저 제28연대가 상륙하여 해안지역을 완전히 평정하였으나 연대장 이영훈을 비롯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상륙한 연대는 제29연대, 37연대, 32연대가 순조로이 상륙할 수 있도록 엄호하였다.

한편 해안지역에서 아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하던 적들은 해안의 바로 뒤에 위치한 200고지 및 220고지로 퇴각하였다. 이에 유격대는 해안선에 교두보를 완전히 구축한 후에 3개 연대(28,29,32연대)를 투입하여 포위망을 좁히면서 200고지를 공격하였다. 적들은 완강히 저항했으나 마침내 서남방으로 도주하였고 아군 32연대는 9월 14일 14:50경 200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유격대는 4개 연대에서 각 2개 대대를 선발하여 장사리 일대에 산개된 적의 포진지와 잔여부대를 공격하여 완전히 소탕하였다. 그 후 지휘부는 제29연대에게 영덕에서 지원되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장사리 북쪽에 위치한 봉황산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결과 아군의 유격대는 장사리에 상륙하여 포항지구에서 한국군 제3사단과 접전을 벌이고 있었던 북한군 제5사단의 배후를 공격하여 그들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이에 당황한 북한군 제2군단장 김무정은 포항지구에 배치된 그들의 정예부대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차출하여 북쪽인 장사리 방향으로 이동시켜 유격대를 공격하였다. 이에 장사리남쪽에 배치된 제28연대장과 제32연대장은 9월 16일 19:00경에 적의 대부대가 북상한다고 지휘부에 보고하였다. 유격대장은 17일 03:00경에 제28연대를 125고지 좌측능선으로, 제32연대는 219고지 우측능선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271고지에 있던 제29연대에서 3개 대대를 차출하여 지휘소 옆에 위치한 220고지 능선에 배치하여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장사상륙작전

북한군은 17일 05:00경에 아군 제32연대가 배치된 219고지 전면으로 공격했으나 아군의 분투로 그들은 후퇴하였다. 이에 적은 125고지에 배치된 제28연대를 공격했으나 연대는 집중적으로 사격하여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아군은 적의 북상공격을 일단 격퇴하였으나 상급부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이었다. 그 이유는 유격대가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인 장거리 무선기(SCR-694)가 상륙할 때 파괴되었고 또 통신반장, 전술고문인 전성호 대령, 문산호 선장 등이 상륙 당시에 전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격대장은 2명의 연락병을 선발하여 상급부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휘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7일에 제28연대와 제32연대에 연락하여 각 1개 대대 병력만 잔류시키고 전 인원을 지휘부가 있는 200고지로 이동시켜 재배치시켰다. 아울러 지휘부는 18일 02:30경 좌초된 문산호로 이동하였다. 지휘부의 이러한 조치는 만약 적이 200고지 뒤편 능선을 타고 동대산에 잠입하여 아군을 공격할 경우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것도 불가능하면 좌초된 문산호와 함께 장렬히 산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9월 18일 07:40경에는 남아있던 제28연대와 제32연대의 잔류부대 마져 200고지 주변에 포진시켜 적과의 최후의 일전을 기다렸다.

북한군은 09:00에 선발대를 앞세우고 200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고자 하였다. 아군의 맹렬한 사격으로 적의 공격은 일단 멈추었으나 아군은 남아있는 실탄으로 적의 공격을 더 이상 저지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해안선을 따라 후퇴하기로 결정하였다. 아군은 12:50경에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제28연대, 제29연대, 제37연대, 제32연대순으로 도로를 따라 남진하여 약3km 정도 행군하였다. 그때 마침 미 순양함으로부터 날아온 헬기에 의하여 미 해군 및 육군본부와 연락이 되어 육상철수는 취소되었고 19일 일출 전까지 장사리 해안에서 해상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유격대는 다시 장사리 방면으로 북상해야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은 아군이 철수한 200고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아군의 북상을 저

지하였다. 그래서 16:00경부터 아군과 접전이 시작되었으나 이때 공중과 해상에서 아군을 엄호하는 폭격과 함포사격이 있어서 아군은 18:50경에 장사리 해안의 좌초된 문산호 부근에 집결하여 철수준비를 할 수 있었다.



동해에서 함포사격 하는 미 해군

19일 05:15경에 해상철수는 미 해군 소령 1명이 그들의 상륙함(LST)에서 보트로 문산호에 와서 유격대장과 철수작전을 협의하였다. 이때 중경상자, 제28연대, 제37연대, 지휘부, 제32연대, 제29연대순으로 철수순서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높은 파도로 인하여 철수용 상륙함은 해안접근이 불가능하므로 해안으로부터 약200m지점까지 접근하면 밧줄을 이용하여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철수시간은 06:30으로 결정하였다.

06:30부터 함포의 엄호사격과 동시에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파도가 높아 완전무장한 대원들이 파도에 이기지 못하고 물속으로 휩쓸려 익사하는 대원이 속출하였다. 이것을 지켜보던 미 해군 소령의 제안으로 유격대원들은 군장을 벗어 던지고 간편한 복장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높은 파도와 200고지에 포진한 적의 맹렬한 사격으로 아군의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철수작전도 예정시간을 초과하였다. 즉 12:00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이 15:00가 되어도 끝나지 않아 아직도 해안에는 약 60여명의 유격대원이 승선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의 박격포 탄이 구출용 상륙함 주위까지 떨어지자, 미 해군 소령은 철수작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륙함을 후진하였다. 이때까지 약 30여명의 유격대원이 해안의 모래톱 위해서 적의 총탄 사이로 승선대기하고 있었으나 결국은 철수하지 못하고 최후의 1인까지 적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1950년 9월 14일 새벽부터 19일 15:30경까지 6일여 동안 장사리 일대에서 활약한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유격대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적 사살 270명, 포로 4명, 토치카 파괴 11개소, 적사포 3문, 포탄 450통, 지프차 1대, 기관총 4정, 로켓포 1문, 따발총 5정, 소련식장총 12정, M1소총 9정, 교량 파괴 2개소, 도로파괴 6개소이다. 아군 피해는 전사 139명(LST 선원 및 잔류대원 30명 포함), 부상자 92명(LST 선원 17명 포함), LST 문산호 1척(2,700톤급)의 손실이 있었다.

## V. 맺음말

6·25전쟁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세로 낙동강방어선까지 밀리면서 주요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즉 아군은 초기전투단계인 춘천전투에서, 지연전단계에서는 동락리전투와 화령○장 전투에서, 낙동강방어선전투에서는 다부동전투와 영천전투 포항전투, 장사상륙작전에서 활약하여 승리하였다. 이처럼 한국군이 주요 전투에서 활약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춘천전투에서는 당시 의정부 전투의 패배와 서울 피탈의 상황에서 한국군 제6사단 장병들의 투철한 전투의지와 민·군이 합심한 공세적 방어(파쇄공격)으로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6일간 지연시켜 승리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 제2군단이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하고 한강이남으로 우회하여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섬멸하려는 그들의 작전기도를 분쇄하였다. 아울러 이 전투는 서부전선에서 한국군이 한강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전쟁 초기 국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② 대한해협해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방위 확고한 의지로 백두산 함을 구매할 것과 해전에서 조타수 김창학 삼등병조 등의 활약으로 아군이 승리함으로써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던 부산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③ 동락리전투에서는 제2대대장 김종수 소령의 독단활용과 대대 장병들의 기습공격으로 전쟁발발 이래 아군이 최대의 전과를 올린 통쾌한 승리였다. 그 결과 북한군이 음성으로 진출하는 것을 1주일간 지연시켜, 한국군이 진천-음성-충주로 이어지는 저지선을 형성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④ 화령장 전투에서는 제17연대 1대대와 2대대 장병들이 적의 약점과 작전지역의 특수성을 잘 활용한 매복 기습작전으로 적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그 결과 아군이 낙동강방어선을 형성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⑤ 다부동전투에서는 제1사단 장병들은 물론이고 학도병과 노무자 등의 활약과, 제11연대 지역에서 사단장의 구국정신등 한국군의 강력한 전투의지를 발휘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쟁발발 이후 최초로 한·미 간의 실질적인 연합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여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⑥ 영천전투에서는 제2군단장(유재홍 준장)이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 것과 영천피탈 후 제21연대와 제19연대 장병들의 활약으로 적의 증원부대와 병참선을 차단한 것이 주효하여 승리하였다. 그 결과 이 전투는 한국 망명정부 설립의 계획인 신한국계획을 백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⑦ 포항전투에서는 학도병들의 활약과 적에게 포위된 제3사단을 독석동에서 구룡포로 해안철수시키는데 성공한 것과 민기식부대 활약 등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군이 보유한 유일한 전략적인 영일비행장 즉 F-51전폭기의 출격기지이고 지상군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행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⑧ 장사상륙작전에서는 이명흠(명부대)유격대의 활약으로 아군이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을 기만함으로써 경인지역으로의 적 병력이 증원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아울러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 중이던 한국군 제3사단이 포항 남쪽에서 반격할 때 적의 후방을 교란하여 아군의 전진로를 개척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6·25전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계 중 일부 단계 즉 초기전투, 지연전, 낙동강방어선전투 단계만 다룰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전쟁의 나머지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요전투(북진작전단계에서의 평양탈환작전과 장진호전투, 새로운전쟁단계에서의 용문산전투, 전선의 교착단계에서 벌어진 승호리철교폭파, 고지쟁탈전단계에서의 백마고지전투와 장단·사천강 전투 등)에서 한국군이 활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김기옥), 『38도선 초기전투(서부)』, 198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김기옥), 『다부동전투』, 198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김기옥), 『안강-포항전투』, 1986.  
국방군사연구소(채한국 외 2인), 『한국전쟁(상)』, 1995.  
송요태·최용성, 『한국전쟁사』, 2008.  
육군대학, 『한국전투사』, 교육참고 2-1, 1997.  
육군본부(이성가 장군 참전기), 『영천 대회전』, 1995.

메 모

메 모

메 모

DRAFT: Please do not cite or circulate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Trustpolitik and A Liber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hat belongs together can at long last grow together”<sup>1)</sup>**

Paper to be delivered at the Peace Forever International Seminar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July 26, 2013, Yeungnam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Simone Chun, Ph.D.  
Government Department  
Suffolk University, USA

Fellow, Korea Policy Institute, USA  
Simonechun@gmail.com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South Korea's current policy of Trustpolitik toward the North will require more than a narrow focus on trust-building in order to yield sustainable results. What is required is a seamless integration of the three components of liberalism—liberal internationalism, institutionalism and economic integration. The latter of these three components,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developed to a significant degree, and at this point has the potential to serve as powerful catalyst for the overall success of Trustpolitik.

Introduction: The Korean War and the 60-year-old armistice

Even to a world that had just begun to recover from the vast devastation of the Second

---

1) Former West German Chancellor Willi Brandt commenting on his policy of *Ostpolitik*, which focused on improving relation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ransforming the seemingly intractable reality of a divided Germany. *Ostpolitik* relied on a two-pronged approach of restoring shared Germany identity and emphasizing liberal internationalism to bring about European integration.

World War, Korea was a man-made hell with a place among the most violent excesses of the 20th century.<sup>2)</sup>

In August 2011, Park Geun-hye, then head of South Korea's ruling Grand National Party (GNP) and a leading candidate for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s, introduced "Trustpolitik", as the foundation of her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Park suggested that South Korea's relations with the North demanded a shift toward "an alignment policy buttressed by political consensus; one that will remain constant in the face of political transitions and unexpected domestic or international events." Such a policy would separate the nuclear issue from other asp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would entail "assuming a tough line against North Korea as necessary, but maintaining a flexible policy toward negotiations" (Park, 2011). As President, Park's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is in notable contrast to the Lee Myong-bak administration's hardline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and is all the more significant in view of the recent serious escalation of tensions in the region. The previous year in particular marked an especially troublesome period in inter-Korea relations, characterized by fear and uncertainty over the renewed prospect of armed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Will Trustpolitik succeed?<sup>3)</sup> Does liberal theory apply to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nalyzes Trustpolitik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that have the potential to support the intended objectives of this policy. It applies liberal theory to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among the Six-Party nations from 2000 to 2011.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ultimate success of Trustpolitik's will require more than a narrow focus on trust-building between two Koreas, and will depend on a systemic incorporation of three components of liberalism: liberal internationalism, liberal institutionalism, and neoliberal economic integration.<sup>4)</sup>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the latter component of neoliberal economic integration has already developed to a considerable degree in Northeast Asia. Second, this substantial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

2) See Engler on the degree of destruction caused by the Korean war (2013): "Two million North Korean civilians, 500,000 North Korean soldiers, one million Chinese soldiers, one million South Korean civilians, ten thousand South Korean soldiers and 95,000 UN soldiers... died in the war. The fighting on the ground was ferocious as was the UN air campaign. US General MacArthur instructed his bombers "to destroy every means of communication and every installation, factory, city and village" in North Korea except for hydroelectric plants and the city of Rashin, which bordered China and the Soviet Union, respectively... At one point the Americans gave up bombing targets in the North when their intelligence reported that there were no more buildings over one story high left standing in the entire country ... the overall death toll was staggering: possibly as many as four million people. About three million were civilians (one out of every ten Koreans)."

3) By "success" this paper means the reduction of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conomic, social, humanitarian and political engagement between two Koreas in the short run and the development of a peace regime, a peace treaty and reunification in the long-run.

4) See Ikenberry (2001) for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Open markets, international institutions, cooperative security, democratic community, progressive change, collective problem solving, the rule of law."

mult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serving 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rustpolitik. The paper is divided into four parts: (1) A “New Cold War” vs. Trustpolitik; (2)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3) economic integration and Trustpolitik; and (4) Conclusion.

### **I. A “New Cold War” vs. Trustpolitik**

On March 26, 2010, the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suffered a critical hull breach as the result of an explosion and sank in the West Sea, killing 46 sailors. A multinational investigation revealed that a North Korean torpedo was responsible for sinking the Cheonan, a charge vehemently denied by Pyongyang. The US, the EU, Great Britain, Japan, Canada, and Sweden joined South Korean in condemning the attack, while China refused to endorse the investigative team’s findings. Russia conducted its own independent investigation, but chose not make the findings public.

Eight months following the Cheonan incident, another deadly crisi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ook place. On November 23, 2010, the ROK and the US staged the annual Hoguk (National Defense) exercise, a large-scale joint military drill involving ROK and US forces. On the morning of November 23, the DPRK issued a communication to Seoul inquiring whether the exercises signified “an attack against the North”, warning that Pyongyang would not tolerate live fire within what it regarded as its territorial waters. ROK forces proceeded with live-fire exercises off Baengyeong and Yeonpyeong islands, which lie within South Korea-held territory below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ccording to the ROK Defense Ministry, shells fired as part of the military exercises were targeted at waters in the South, away from North Korea. In response, on November 23, 2010, DPRK artillery attacked Yeongpyeong Island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artillery barrage killed 4 South Koreans, wounded 18 others, and caused widespread damage on the island. The incident quickly escalated into an international crisis, triggering widespread condemnation and prompting the United States to declare it one of the most serious incident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Cheonan and Yeongpyeong incidents, which occurred in the wake of the discontinuation of the SPT in 2009, characterized 2010 as one of the most unstable periods in the Korean peninsula in recent years. In spite of efforts by China to revive the SPT in the aftermath of these crises,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For their par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have demanded a North Korean apology for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and the sinking of the Cheonan as a precondition for the resumption of negotiations. These developments have led scholars such as David Kang to claim that a New Cold War was underway in the Korean

peninsula. In his analysis of the sinking of Cheonan and DPRK's artillery attack on the Yeongpyeong Island, Kang (2010) argues that the incident signals a New Cold War on the peninsula. Kang attributes the New Cold War in great part to the domestic politics of the principle par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the United States, the DPRK and South Korea:

The new Cold War benefits the domestic politics of every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President Obama can sound tough and resolute on an issue where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agree that North Korea is at fault. In South Korea, both President Lee Myung-bak and the military faced both criticism and embarrassment for not being better prepared to deal with contingencies such as the shelling at Yeonpyeong. Hawkish rhetoric and symbolic military actions not only confirm for his supporters that his tough approach has always been the correct approach, but also is a means for President Lee to call for all South Koreans to "rally around the flag" and support him in the face of an external threat. The Cold War also works for North Korean domestic politics. The latest incidents have quite likely raised the mora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Given this analysis, we are left with a decidedly unsexy policy option: the standard Cold War strategy of deterrence, patience and hope for internal change in North Korea.

## **II.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at future possibilities can be imagined, which possibility is desirable and obtainable, and where is the present situated in that imagined desirable future? From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by and large, two contrasting futures can be conceived: a Realist and a Liberal path.<sup>5)</sup> The Realist path would entail a revival of Cold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 Cold War-style set of anti-Chinese military pacts, the U.S.-Japan-South Korean alliance against China, arms race, a revival of Japanese nationalism and military expansi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int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hat were banned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keeping up with its military build-up including nuclear power, series of localized wars in the Korean peninsula, clashes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a permanent state of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e Liberal path would encompass a reduction of tension and hostilities between nations in Northeast Asia, a gradual approach towards a Korean unification within an integrated East Asia, creation of a multilateral and collective

---

5) Thinking about the future possibilities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can help us achieve dual objectives: a) locating our inquiry within a bo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iterature; and, b) analyzing research problems systematically.

security regime in the region, building a plethora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reating web of relationships.

While there appears to be ample evidence of an escalation of crises plausibly amounting to a “New Cold War”, there are also emergent signs of thawing tensions, including recent developments that may signal the potential resumption of the SPT.<sup>6)</sup> North Korea has in recent months expressed its intentions to return to the talks; and, Russia and China want to resume them immediately without preconditions. The heightened tension in the region notwithstanding,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has been the most steady and resilient force in the region. The long-term trends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evince a clear pattern of increased multilateralism,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security cooperation. In what follows I provide a brief discussion of theoretical underpinnings that help understand the evolution of interdependent Northeast Asia.

Liberal-hegemonic theory stresses the continuing importance of global multilateralism under US hegemony, arguing that the post-World War II global order led by the United States has been multilateral in nature and beneficial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to the rest of world. Implied in this claim is that even if a particular US administration seeks a unilateral approach (e.g., the Bush administration), the multilateralism deeply embedded within the existing global order makes unilateralism difficult in practice. Liberal-hegemonic theory also holds that the rise of new powers such as China has been in great part due to the multilateralism fostered by the liberal-hegemonic US order. For instance, Ikenberry and Moon (2008)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regional realignment, and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the US hegemony in the East Asia.

The way in which liberal order evolves will hinge in important respects on the United States—and its willingness and ability to make new commitments to rules and institutions while simultaneously reducing its rights and privileges within the order. The United States is deeply ambivalent about making institutional commitments and binding itself to other states—ambivalence and hesitation that has been exacerbated by the end of the Cold War, American unipolarity, and new security threats. But the United States still possesses profound incentives to build and operate within a liberal rule-based order. Just as importantly, that order is

---

6) See Cha (2011) “Several recent developments signal that Washington is interested in going back to the table with North Korea.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invited the North's vice minister Kim Kye-gwan for official, direct talks in New York in August. This was followed by the disaster assistance that Washington delivered to Pyongyang in the wake of severe flooding. This month, Washington is reengaging with the North Korean army concerning the return of POW/MIA remains from the Korean War, and there is talk among insiders that another set of US-North Korea talks about nuclear issues is likely to be announced after the state visit next week.”

now not simply an extension of American power and interests—it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American power may rise or fall and its foreign policy ideology may wax and wane between multilateral and imperial impulses—but the wider and deeper liberal global order is now a reality that America itself must accommodate to.

They argue that US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and the geopolitical organization of the region itself—has remained remarkably constant in the postwar period due primarily to the influence of the US as a regional hegemon. Moreover, they foresee the continuation of this hegemonic order under the U.S, regard it as preferable to any other security arrangement, and recommend a policy of engagement, rather than containment, in Northeast Asia (Ikenberry, 2008; Kang 2005; Cha and Kang, 2003). This school of thought makes a strong case for the utility and resilience of multilateralism that the United States helped create in the post-WWI period.

With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neoliberalism focuses on the effects of China's rise in fostering greater regional integration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this view, potential for regional cooperation has been most significantly enhanced by the recent rise of China, rather the long-term effects of US-fostered multilateralism. Accordingly, in contrast to those who tend to view China's rise a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this school contends that China's rise has not only been economically beneficial on both a global and regional level, but has also fostered conditions for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Kang (2003, 2009) points out that the relatively peaceful rise of China, its ability to integrate into regional economies without appearing to pose a great threat, and a sense of shared identity among East Asian nations are all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a creating positive regional perception of and support for the growing power of the Chinese state. Neoliberals stress that the economic aspects of China's rise support the neoliberal theory of interdependency, pointing out that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vast foreign trade has made it more interdependent with regional economies, as well as with the United States. They suggest that economic integration and business relationships have proven very effective in enhancing regional stabilization, and that East Asia as a whole has drawn significant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 from increased interaction with China.

The foremost and driving force of interdependence and multilateral relationship is the rise of China which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shaping the patterns of regional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Since Richard Nixon's historic visit to Beijing in 1972, China has taken its place as the world's fastest growing economy, and is now vying with the US as the most influential regional player in Northeast Asia. Currently,

China has surpassed the US as the principal trading partner to Japan, Korea and Taiwan, and is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over a proces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sup>7)</sup> that extends to North Korea, arguably the most isolated economy in the world.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USSR, China has served as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s its primary supplier of energy and food. South Korea has also established an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North, serving as it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while both Japan and Russia have established economic ties of their own with the North.

In fact, an analysis of events since 2000 evinces a growing trend towar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with North Korea being drawn steadily closer into this evolving current of multilateral interdependence. In 2000, China and South Korea met to establish a mechanism for promoting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later that year, the two Koreas held a historic summit during which they committed to working towards economic and cultural integration. This summit was followed by then-US Secretary of State Madeline Albright's historic visit to North Korea, signaling an initial warming of US-North Korea relations that was quickly abandon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While US-North Korean relations flip-flopped, the two Koreas strove to maintain their cultural and commercial ties, and Kim Jung-il traveled to China to explore Chinese free-market policy. In 2002,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establish an autonomous capitalist investment zone near its border with China, and sought investment capital from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 well as Western nations. Subsequently, the two Koreas agreed to create an industrial complex at Kaesong in North Korea,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China and the two Koreas continued to deepen.

By 2004, China had replaced the US as South Korea's predominant trading partner, with increased Sino-Sou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exerting a growing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Northeast Asian regional economic interdependence was further fueled by another critical development, the far-reaching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FTA), first conceived in 2004 by South Korean and US trade representatives. Chinese and South Korean economic representatives agreed to explore means of enhancing cooperation in agricul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Bilateral trade volum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s grown significantly, reaching nearly \$160 billion in 2011. These developments indicate a growing web of economic interdependence not only

---

7) Between 1979 and 2006, China's GDP growth has averaged 9.7% per year. In the first half of 2007, China overtook the US as Korea and Japan's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is also the second largest US trading partner as well as the second largest holder of US Securities, and thus has a certain amount of economic leverage over the US.

among regional economies in East Asia, but between the US and East Asian economies.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analytical outlooks paint the image of Northeast Asia that is contrary to the popular view, i.e., a relatively stable and economically interdependent region. In what follows, I substantiate my claim with empirical data. I will examine how multilateral economic interdependency has influenced the landscape of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 **III. Economic integration and Trustpolitik**

I will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multilateralism in Northeast Asia. This analysis will include a discussion of (a) A gradual trend towards engag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 China's increasing contribution to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region, (c) Russia's increasing involvement in bringing about a multilateral world, and (d) A gradual increase in the level of engag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le each relationship has its own unique attributes and is driven by different political factors, the common underlying trend is a web of economic interdependency and development of multilateralism that has strengthened over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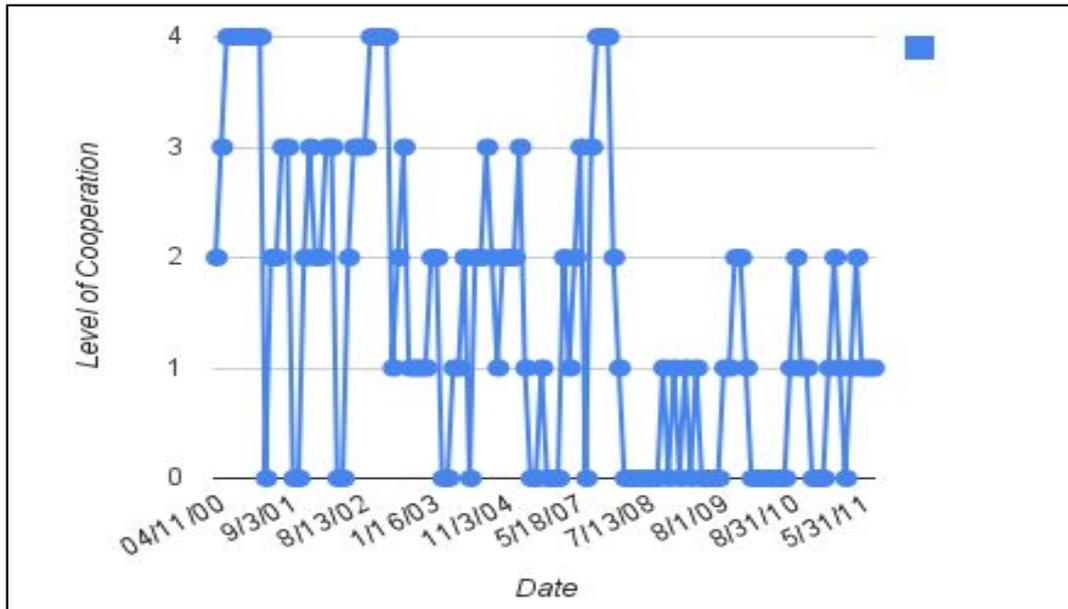
#### **1. A gradual trend towards engag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considering the overall trend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ee dimension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 the two nations are technically still at war; (b) they share a common national identity and a desire for reunification, and (c) they maintain quasi-interstate relations as two independent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se aspects of the North-South relationship frame the stop-and-go progress that has defined the gradual thawing of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n 1987, Roh Tae-woo, declared North Korea "not an enemy but a counterpart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in 1991, the two Koreas joined the UN simultaneously and sign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order to decouple socio-economic relations from the politics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In 1998, Kim Dae-jung implemented the Sunshine Policy and Reconciliation and Prosperity Policy, culminating in the historic summit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s in 2000. Trade relations deepened, and exchanges of non-governmental personnel, religious leaders and civil workers were initiated and maintained in spite of the ongoing military incidents. Cultural and economic ties inched along until a recent deterioration in the relationship following North Korean nuclear tests in 2006. Regardless of the volatility of the relationship, South Korean aid to the North continued until the Lee Myong-bak administration's

assumption of power in 2007.

Figure 1: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2000–2011



Th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characterized as a volatile yet resilient engagement that has encompassed periods of both high and low cooperation. Investigation of these variations in the level of cooperation evinces a relatively constant level of economic engagement that contrasts with political and ideological factors that work to disrupt the relationship. Although the political dimension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remain unstable, data from the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shows that economic, political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slowly and continuously developed over time, evincing a stable growth trend.

Moreover,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research finds three “reverse V type” corrections, signifying drastic changes stemming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The first spike occurred between 1991 and 1993, following the signing of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the wake of global collapse of socialist bloc, followed by a rapid decrease in 1993 as the result of Kim Young Sam’s firm stance toward North Korea following the first nuclear crisis. The second occurred between 1999 and 2001 with a peak in 2000 (figure 3), when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was held in Pyongyang under the Sunshine Policy. This peak was maintained through the victory of Roh Moo-hyun in the 2000 elections. The third reverse V change occurred between 2006 and 2008, peaking in 2007 with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and promises of substantial financial support to North Korea. In each of these cases, political

engagement was followed by economic agreements, which persisted even after political relations had sou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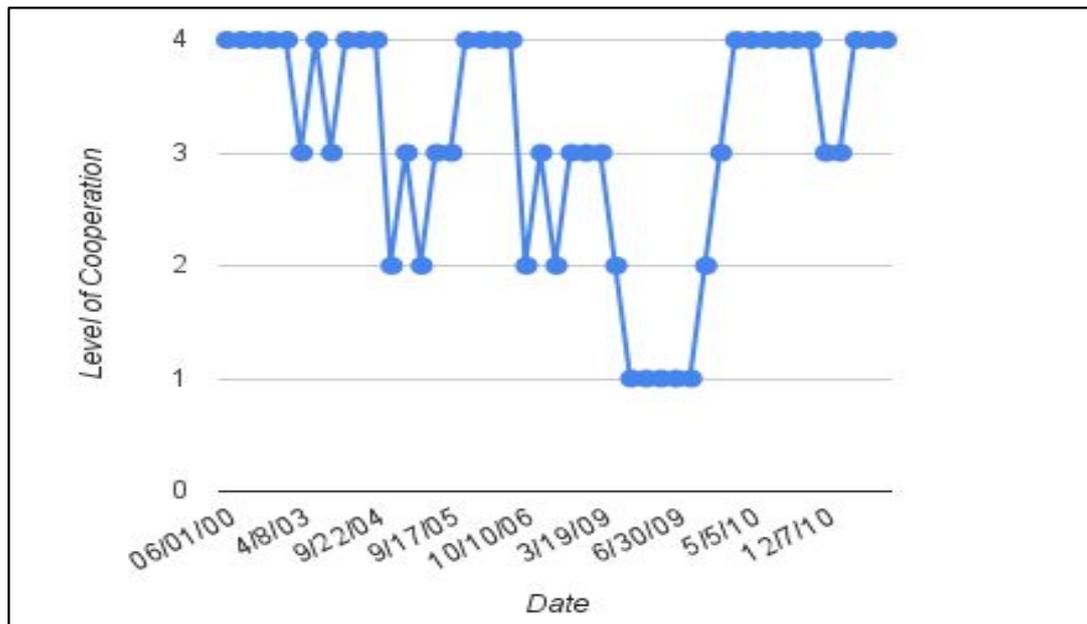
Engagement between the two Koreas maintained a certain momentum until 2007, when the government of Lee Myong-bak began to institute a hard-line policy towards the North. Over the past decade, the lowest levels of inter-Korean cooperation—and the most serious regional security crises—have occurred under Lee, who had advocated an abandonment of the Sunshine Policy even before formally assuming the presidency. This policy shift caused a sharp departure from existing trends, beginning with Lee's 2007 declaration that no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ould be signed until Pyongyang ga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2008, Lee proposed eliminating the Unification Ministry, stating that it was too soft in dealing with North Korea. This stance contrasted sharply with the policy of the previous two administrations, which had allowed the Ministry to exercise greater power in managing inter-Korean relations. Subsequently, on January 20, 2008,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stated that his government would not rule out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North. Pyongyang considered this statement an open declaration of war, and threatened immediate reprisals. This hard-line pattern, which was firmly established in beginning of Lee's administration, prompted North Korea to adopt a more belligerent stance toward inter-Korean relations, which has persisted to the present day. On March 7, 2011, in response to planned military exercis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North Korea threatened to renoun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that ended the Korean War and to proceed with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summation, the data shows that economic engagement has long been a critical component helping to susta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that in spite of its stop-and-go progress, a resilient pattern of interaction and engagement between two Koreas continues to exist, as do prospects for future rapprochement.

## **2. China's increasing contribution to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region**

While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demonstrates many ups and downs,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s remained relatively stable and steady, and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never reached the lowest level on the cooperation index. China has served as the principal mediator in the SPT, has played the recurrent role of mediator through much of the discussions, and has frequently exerted a stabilizing and moderating influence on the government of Kim Jong-il.

Figure 2: China–North Korea Relations, 2000–2011



Economic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China'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Beijing is the chief supplier of foodstuffs and energy to North Korea, supplying 90% of its oil and accounting for more than 30% of its food imports. It has used its economic influence to alternately protect the North from efforts to isolate it and to bring i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01 marks high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oinciding with a period during which North and South Korean levels of cooperation were at their highest. When inter-Korean relations began to erode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remained fairly high, and between 2010 and 2011, whe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hit its lowest ebb,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maintained the highest level of cooperation, even in the wake of serious security crises such as the sinking of Cheonan. In other words, China'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been largely independent of South Korean political changes.

Notwithstanding the general pattern of steady cooperation between two nations, periods of serious discord have occurred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ith the lowest recent levels of cooperation occurring in 2005, 2006, and 2009. In 2005, China expressed its displeasure with North Korea's announcement that it possessed nuclear weapons, and its refusal to return to the SPT. In 2006, China strongly denounced North Korean nuclear tests, and Chinese banks halted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help pressure Pyongyang into abandoning its nuclear weapon program. In 2009, China condemned North Korea's second round of nuclear tests, demanding that the North abide by its denuclearization promises and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China also supported the toughened 2009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strengthened the arms embargo on the DPRK and authorized maritime searches of vessels suspected of trafficking in illegal trade with Pyongyang. While supporting these measures, China stressed that it did not authorize the use of force against North Korea, and by the end of year, China and North Korea pledged their strong relationship. While the overall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not varied greatly, the underlying factors that have shap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re relevant determinants of the influence exerted by economic interdependence on the development of security relationships. In what follows, I present definitive pattern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ne of China's foremost foreign policy objectives is the maintenance of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regime stability within the DPRK. This consideration makes it difficult for Beijing to support tough measures intended to push the DPRK toward denuclearization. For instance, China's response to Pyongyang's 2009 nuclear test was similar to its reaction in 2006, when it "firmly opposed" North Korean nuclear testing and consistently pushed for an early resumption of the SPT. However, the North Korean reaction to the strong international reaction against its nuclear tests was far stronger in 2009.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UNSC Presidential Statement in April 2009, Pyongyang vowed never to participate in or be bound to the SPT, and with the passing of Resolution 1874, vowed that abandoning nuclear weapons is an absolutely impossible option. Such statements by the North directly challenge Beijing's long-term efforts towar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s most recently embodied in the joint statement issued by China and United States in January 2011, which affirms that "both sides oppose all activities inconsistent with the 2005 Joint Statement and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calls for "concrete and effective steps to achiev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sup>8)</sup> in the Korean penin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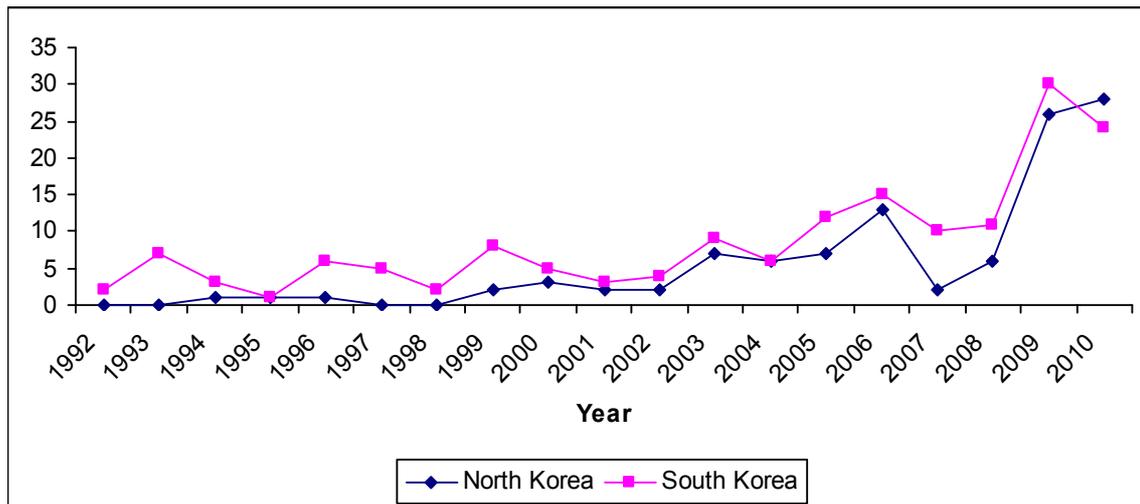
Unprecedented US-Japan-ROK coordination had taken place in December 2010 (see graph 7), when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re tightened and broad-based military exercises were held in the wake of the Cheonan and Yeongpyeong incidents. However, China has opposed holding further negotia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without North Korean participation (as had been suggested by the Lee administration) and has insisted on a resumption of the SPT, consistent with its pattern of insisting on the application of softer, diplomatic tools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s opposed to harsher regional approaches. Moreover, China's role has evolved from mediating US-DPRK relations to taking an active role in the coordination of regional affairs. A considerable increase in high-level Chinese diplomatic exchanges has been made, and

---

8) See Chun (2008).

North Korea's growing dependence on China has led to Chinese calls for inter-Korean dialogue, such as the January 2011 joint US-China statement.

Figure 3: Chinese Diplomacy with North and South Korea, 1992–2010



**Source:** *Comparative Connections*, Pacific Forum CSIS; Foreign Ministry of the PRC

Lastly and most importantly, China tends to focus on trade and investment levers to affect DPRK behavior, nudging Pyongyang toward implementing reforms conducive to China's commercial and strategic interest in strengthening its economic presence in North Korea. This "reformist" strategy, which stresses Chinese economic model, has been spurred by bilateral exchange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since 2008, and encompasses taking a more pragmatic, reformist approach toward building a comprehensive China-DPRK strategic partnership based on mutual benefits. The Chinese investment along the DPRK border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cross-border trade, which is part of a long-term national effort to develop China's northeast region, and is driven by strategic and provincial interests.

Figure 4: China–North Korea Trade Levels, 199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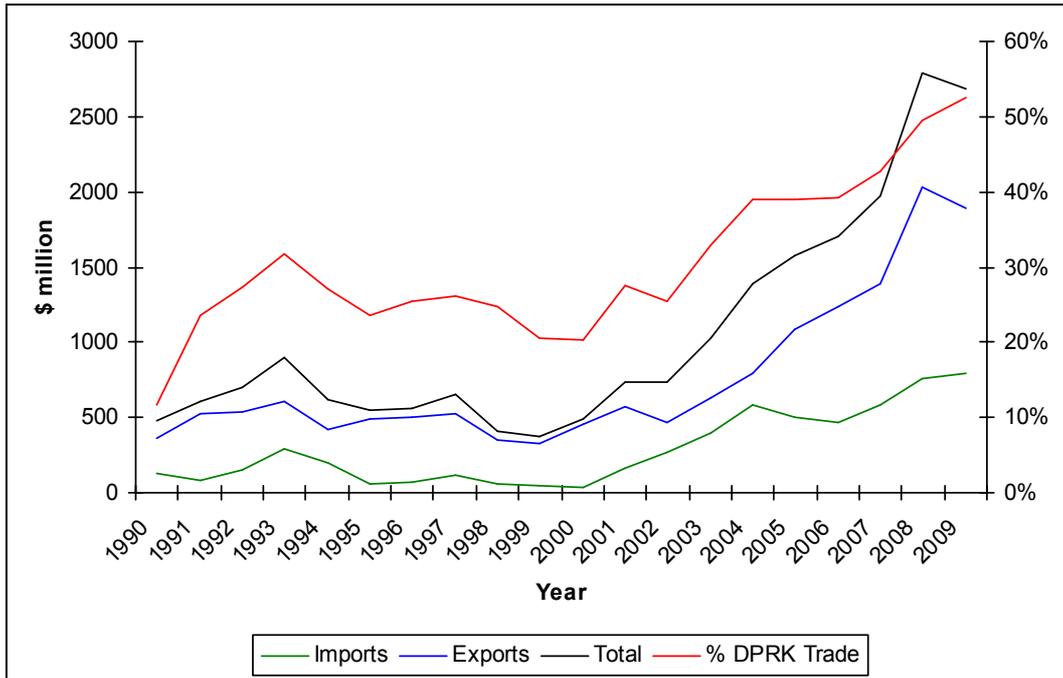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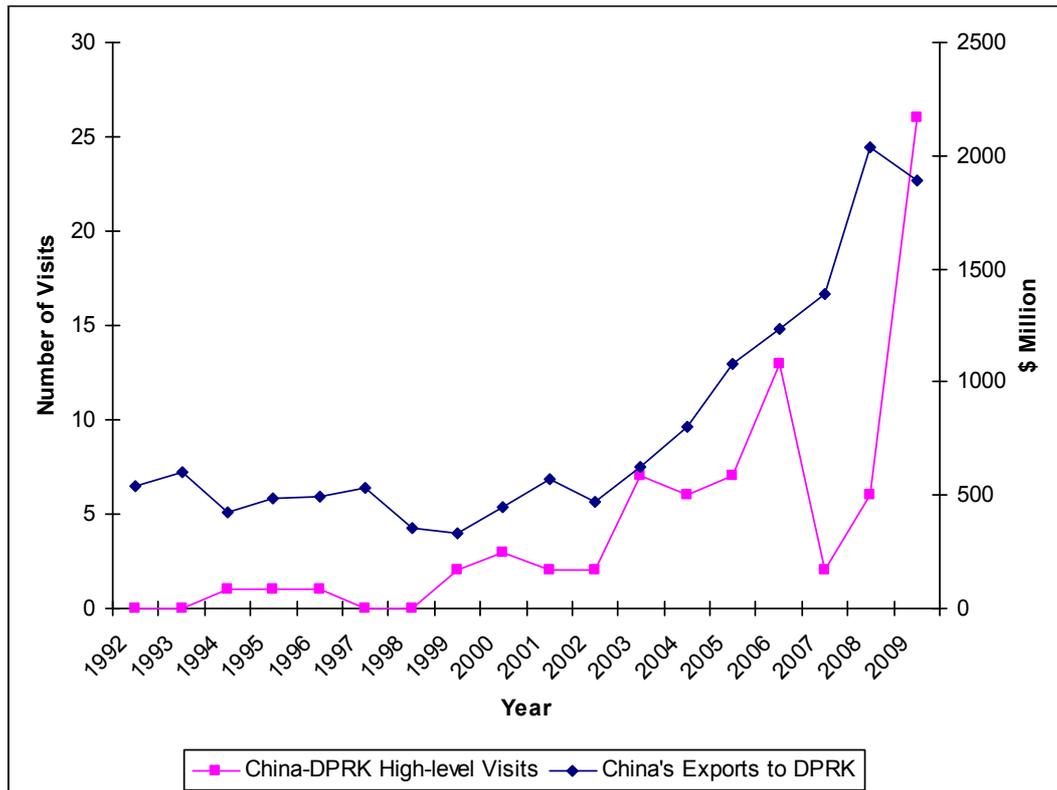


Figure 5: China–North Korea Diplomacy and Trade, 1992–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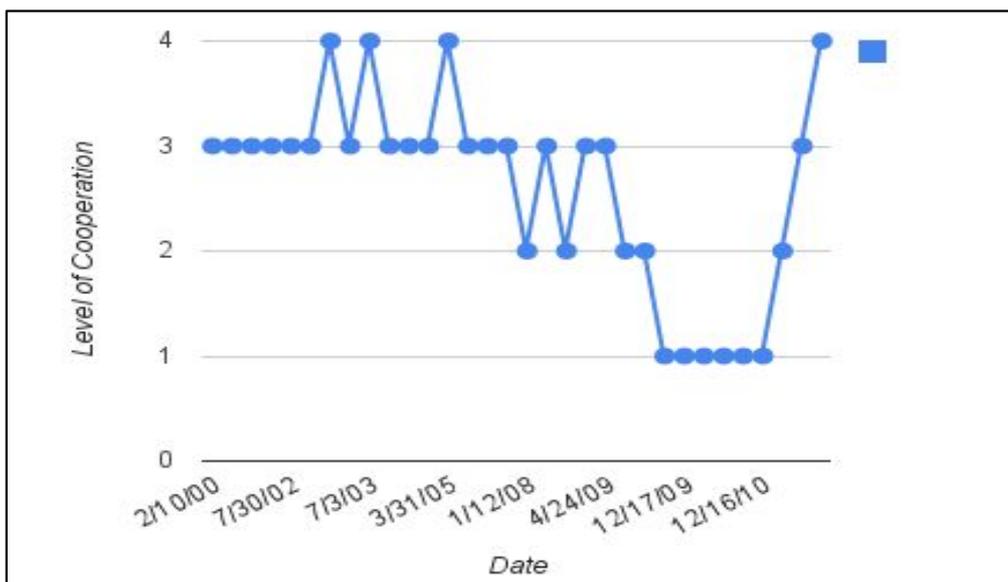
Source: KOTRA; Pacific Forum CSIS, Foreign Ministry of the PRC

In summary, China-North Korea relations evince the significance of economic interdependency in shaping bilateral as well as multilateral security relationships in the region.

### 3. Russia's increasing involvement in bringing about a multilateral world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collapse of the USSR,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 remained fairly stable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two nations have maintained mutual commercial and strategic interests that have been instrumental in bringing them progressively closer to one another, as exemplified by the Russian-North Korean friendship pact of 2000. Russia has provided ongoing assistance in maintaining North Korean infrastructure established under the USSR, and the two countries have continued to explore joint ventures in exploiting North Korean oil and natural gas assets. Russia has also played an important moderating role in the SPT, and h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articularly when the latter has faced international backlash against its nuclear ambitions.

Figure 6: North Korea and Russia Relations, 2000–2011



The highest levels of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occurred in 2002, 2003, 2005 and 2011. In August 2002, Kim Jong-il visited three cities in Russia's Far East, capping his tour by meeting with Russian President Putin in Vladivostok. A few months later, in October 2002, Russia and North Korea announced plans to hold their first joint naval exercises. In 2003, the SPT convened to seek a peaceful means of

settl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or Russia, the SPT represented an opportunity to play a leadership role in a multinational forum of critical importance involving a key strategic partner. The six nations adopted a Russian proposal for creating working groups to deal with the denuclearization issue in February 2004. Another period of high cooperation occurred in 2005, when Putin invited Kim Jong-il to Moscow for celebrations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Russian victory in WWII. In 2006, Moscow did not veto UNSC Resolution 1695, but ensured that the resolution did not include Chapter 7. Moscow, like Seoul and Beijing, opposed to the use of force and warned against escalating the situation, and while Putin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n nuclear tests, he blamed the US for its heavy-handed attitudes at the negotiating table and warned against efforts to drive North Korea into a corner. Following the increase in tensions after the Cheonan and Yeonpyeong incidents, Russia joined China in calling for emergency SPT consultations to help defuse the Korean crisis.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 emergency session on December 20 failed to adopt a joint statement, Russia, while condemning North Korea's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UEP), continued to call for consultative meetings among the SPT members to de-escalate the crisis and foster conditions conducive to the resumption of negotiations. The most recent spike in levels of cooperation occurred on August 25, 2011, when President Medvedev met with Kim Jong-il and agreed to establish a special commission to outline the details of bilateral cooperation on the transit of natural gas through North Korea to South Korea. Following this meeting, the two nations announced plans to hold their first joint defense drill.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has remained strong overall, there have been dips in the level of cooperation, the most notable recent examples having occurred in March 2009 and December 2010 (see the graph 11). In 2009,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s second round of nuclear tests, Russia repeatedly demanded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SPT, and announced that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st continue until it halt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On March 30, 2010, Russian President Medvedev signed a decree implementing stronger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rtly afterward, in the wake of the attack on Yeongpyeong, Russia urged North Korea to unconditionally comply with the UN and call for resumption of the SPT. Nevertheless, Russian condemnation of North Korean actions has been measured, and the time series data clearly demonstrates consistent patterns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What is the underlying source of this cooperation?

The creation of a multipolar order to replace the US-dominated unipolar world tops the list of Russia's foreign policy objectives, and Russia's multilateral effort is closely

linked to Russia's consistent efforts to build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and to strengthen political security ties with China in opposition to hegemonic US power, an ambition that is facilitated by Russia's growing economic power. Russia's measured response to inter-Korean crises and its reluctance to destabilize the Kim Jong-Il regime is driven by its desire to creating a Northeast Asian security regime to oppose US regional hegemony. Russian efforts toward establishing a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regime have been quite persistent, and have taken various forms over the years.

During his visit to Seoul in 1992, then-president Yeltsin suggested the creation of a multinational negotiation mechanism beginning with expert-level consultations on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the creation of a crisis regulation system that included conflict prevention and strategic studies centers in the region; and a proposal for a multinational mechanism focused on military issues such as nuclear and missile non-proliferation. In 1994, the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oposed an 8-party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S, Russia, China, Japan, the IAEA, and the UN Secretary-General) multilateral conference to serve as a forum to discu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n 1997 Russia proposed a multilateral conference on the Korean question as a vehicle for developing a comprehensive collective security system in Asia and the Pacif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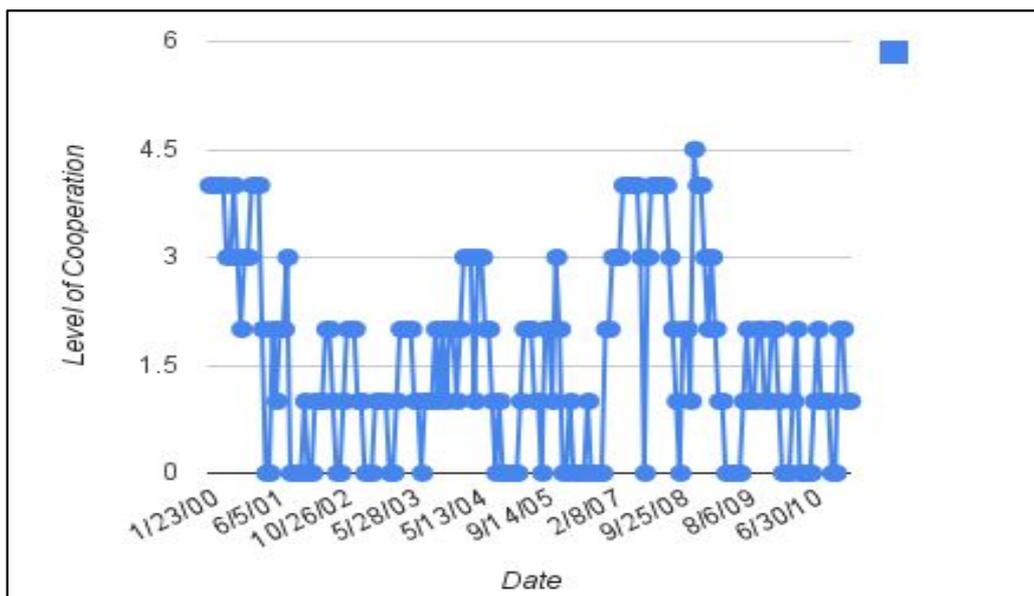
In 2007, the SPT created five working groups intended to carry out the initial actions and implement the provisions of 2005 SPT joint statement. As chair of the working group for Northeast Asian peace and security cooperation, Russia promoted the creation of the institutions for a Northeast Asian security mechanism, and its revised draft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earned a favorable response from other SPT members. This draft proposal was consistent with Russia's ongoing efforts to forge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in North East Asia. Even after the SPT stalled, Russia sponsored a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in Moscow in 2009 in hopes of refining the draft on the Guiding Principles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lthough the SPT nations failed to agree on the Principles, Russia is expected to resume its efforts in this context following the resumption of the SPT process.

In summary, the 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is indicative of Russia's renewed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y with Northeast Asia, and demonstrative of its desire to foster regional multilateralism in order to counter US hegemony and advance its own economic and strategic interests.

#### 4. A gradual increase in the level of engag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le the conventional wisdom regarding North Korea-US relations suggests the highest levels of hostility and a lack of substantive interactions, the data reveals a pattern of substantial interaction and engag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is in part due to the fact that while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 one another archenemies, their interactions with one another have been significantly constrained by regional play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contentious, but the maintenance of mult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majority of the SPT principals has exerted a spillover affect that has allowed Washington and Pyongyang to maintain a working level of engagemen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peaked with Madeline Albright's 2000 visit to Pyongyang, but Washington's policy toward the North subsequently underwent a dramatic shift under the Bush doctrine, with North Korea being inducted into the "Axis of Evil" in 2002. Relations deteriorated sharply in 2006-2007 as a result of the North's nuclear tests, but 2008 marked a revival of negotiations, culminating in North Korea's removal from the State Department's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coupled with the influence of the SPT framework, had helped moderate US unilateralism and maintain a working level of multilateralism.

Figure 7: North Korea-US Relations, 2000-2011



The spike between January-December, 2000 coincides with the establishment of a new round of talks between two countries, after which Pyongyang considered placing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tests. In exchange, the US removed North Korea from its terrorism list, lifted a broad set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pened air and shipping ro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llowed North Korea to export raw materials and goods to the United States, and allowed foreign investment in the North's economy. V-type corrections occurred in June 2000 when the US announced that it would continue to move ahead with its own missile defense program, and in July 2000 when North Korea refused to stop developing missiles for self-defense. V-type corrections in 2001 and 2002 correlate respectively with president-elect Bush's stated support for a hardline policy with regard to the North, and the induction of North Korea into the Axis of Evil in Bush'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e highest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occurred in mid-2008, when North Korea shut down its main nuclear reactor and readmitted a permanent international inspection team into its territory, thus completing the initial steps towards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other high point was reached in October 2008,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removed North Korea from the State Department's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eading North Korea to announce its intention to continue dismantl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lowest levels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ere reached in 2009-2011, beginning with North Korea's launch of a three-stage rocket in 2009, continuing through the Cheonan and Yeongpyeong incidents, and maintaining low levels into the present.

In summary, although North Korean-US relations have undergone drastic corrections over the past decade, the two nations have maintained a relatively steady level of engagement. The influence of the SPT framework, combined with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that exists between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has helped moderate US unilateralism, thus demonstrating the critical effect that economic interdependency and multilateralism exert upon political relations.

#### **IV. Conclusion**

“What belongs together can at long last grow together.”-- Former West German Chancellor Willy Brand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entatively affirm the potential of Trustpolitik and the applicability of liberal theory to the Korean peninsula. A considerable degree of neoliber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political multilateralism have resulted in: (1) a gradual trend towards engag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 China's increasing contribution to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region; (3)

Russia's increasing involvement in bringing about a multilateral world; and, (4) a gradual increase in the level of engag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has hypothesized that these developments can serve as an important foundation both for the success of Trustpolitik and the prospects for liber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ftermath of New Cold War under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President Park's Trustpolitik is a welcome and promising policy shift ; however, the implication of my research is that the success of this policy will require more than building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rustpolitik must be firmly grounded in a broader liberal vision for the future of Korea; one that is based on the seamless integration of the three components of liberalism—liberal internationalist, institutionalism and neoliberal economic integration.

I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envisioned by this paper as an obtainable goal for two societies that have technically been at war for 60 years? One must consider that the current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schism dividing the Korean nation is, in terms of Korea's cultural and political heritage, an aberrational consequence of historical circumstance. The establishment of liberal order in the peninsula would entail measures such as the regulation of power and force through shared economic interest, rationality, law and reason between two nations that share an identity and heritage spanning 50 centuries. As the unification of Germany demonstrates, shared identity and heritage can be a powerful force for the actualization of liberal peace, particularly when supported by concerted diplomacy integrating broader regional support. The day when all Koreans can say as one, "I am free a citizen of Seoul, of Pyongyang, of Asia, and of the world," is an attainable possibility.

## **Appendix A**

### Economic integration and multilateralism

#### Data collecting and coding

#### **A. Independent variable: economic interdependence**

1. Major developments related to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six-nation—China, Russia,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between 2000 and 2011 were collected from diverse media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hypothesis regarding a gradual increas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2. Chronologies of economic relationship of six-party nations were created and coded by the following criteria:

3. Scales from 5 (the highest level of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to 0 (the lowest level of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5: Major trade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s such as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agreements, major foreign aids and other economic cooperation, creating new economic institutions, IGOs, etc.

4: New commercial exchanges between private corporations, contracts, etc.

3: Major economic policy statements regarding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s, etc. (i.e., maintaining existing economic relation)

2: Economic disputes, discord, etc.

1: Severe economic disputes, verbal and actual economic threats and sanctions

0: Severing trade, retaliation, economic sanction, trade war, etc.

#### **B. Dependent variable: multilateral political 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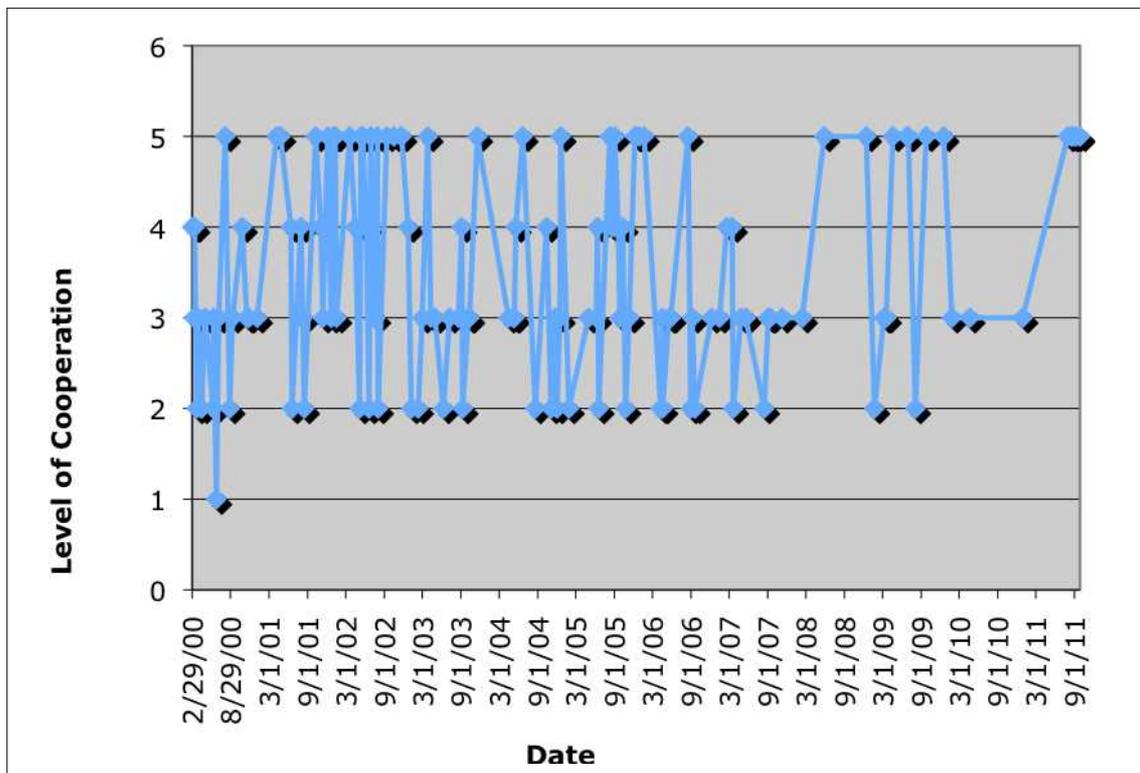
1. Major developments related to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six-party nations—China, Russia,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between 2000 and 2011 were collected from diverse media for the purpose of testing the hypothesis regarding the degree of multilateralism and cooperation.

2. Chronologies of the following political relationship of six-nation were created and coded by the following criteria:

3. Scales from 5 (the highest level of multilateralism and cooperation) to 0 (the lowest level of cooperation)

- 5: Maj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such as summit meetings
- 4: Developments that lead to a breakthrough of stalemate and that reduces tension and hostility
- 3: Status quo such as no major hostility
- 2: Increased hostility and tension
- 1: Serious level of hostility
- 0: Verbal threats, military confrontation and serious security threat

Example: China-South Korea Economic Relations, 2000-2011



**Appendix B**

**Transcription of interview with a North Korean researcher, Lingnan University, Hong Kong, June 14, 2010.**

**Chun:** What is North Korea’s main concern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n researcher:** The United States divided Korea and has posed a threat, including nuclear threat,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 with the South... The United States has enslaved South Korea.

**Chun:** We can make the same argument about the North. North Korea depends on China about everything from energy to food. You were enslaved by USSR and China before, and now by China.

**North Korean researcher:** There are no Chinese soldiers stationed in North Korea!

**Chun:** Sovereignty i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North Korea. How is sovereignty understood?

**North Korean researcher:** Sovereignty means national sovereignty, being able to defend oneself, one's own roots. Sovereign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t means the ability to defend yourself on your own. Without sovereignty, you have nothing. South Korea relies on the United States for defense. How could you let yourself submit and subject to other country? How can you rely on other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for national defense? The sinking of navy warship shows that the South failed in national defense even with the supposed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Chun:** National sovereignty entails other issues besides national defense, such as economic welfare, the ability to feed people, producing products that can compete in the world market, etc. What's the point of having sovereignty if 2/3 people are suffering from famine, repression?

**North Korean researcher:** Those are subordinated to national sovereignty and liberation. We have to remember the purpose of our sovereignty. We have to remember our Korean roots, tradition, history and culture which need to be preserved. What's the point of making the best car and computer if you either rely on others to defend your sovereignty or is not able to defend yourself at all?... We just want to be left alone. They—the United States--divided our country. We respect their [the United States] system, and they should respect our system too... We launched civilian satellite, and was punished. Other countries are allowed to do that. Why are we the only one being punished. That's not fair. We are the victim.

**North Korean researcher:** My question to you, Professor Chun. Why does the United States oppose a peace treaty with us?

**Chun:**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give something that big in one shot. It has to be gradual, step-by-step.

**North Korean researcher:** That's exactly what we DPRK wants too. We are not asking drastic steps, but want a step-by-step. But, the United States refuses. The US has

threatened us with nuclear weapons, joint military exercise with South Korea. Th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poses the biggest threat to stabil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United States wants us to collapse.

**Chun:** Despite the US military build up and joint military exercise, etc., I doubt very much the United States will attack North Korea.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on't support another war in the Korean peninsula... It's important to introduce market reform and integrate to the world.

**North Korean researcher:** It is not we who opposes the idea of integration into the world, but the United States prevents us from our integration to the world. We want a peace treaty! By the way, what is President Lee Myung-bak like?

**Chun:** Well... I believe that he is pragmatic conservative (not ideological), and therefore, North Korea should seek engagement and cooperation with his administration. Have patience, and don't give you.

### Appendix C

The following is the petition to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that the author drafted and submitted to the White House in order to appeal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1/28/2013**

To the White House: Stop humanitarian tragedy in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continuation of US-led United States sanctions imposed against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threatening to conduct a third nuclear test—an act that will almost certainly lead to the imposition of even more severe trade restrictions on the impoverished nation. Such a development will exacerbate an already severe food shortage in the country. More than a third of North Korean 6-year olds are stunted, while a fourth of pregnant breast-feeding woman are severely malnourished. We demand that President Obama immediately work to renew diplomatic efforts to prevent fur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facilitate delivery of humanitarian food aid to the North so that innocent civilians are not made to suffer needlessly. Help to stop this human tragedy.

### **Appendix D**

The following is the petition to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that the author drafted and circulate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n humanitarian crisis in North Korea.

**1/29/2013**

Dear Friend,

In response to the continuation of US-led United Nations sanctions imposed against North Korea for its past nuclear tests in 2006 and 2009 as well as testing of a long-range rocket in 2012,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threatening to conduct a third such test—an act that will almost certainly lead to the imposition of even more severe trade restrictions on the impoverished nation. Such a development will exacerbate an already severe food shortage in the country.

Currently, more than a third of North Korean 5-year olds are stunted, while over a fourth of pregnant breast-feeding woman are severely and acutely malnourished. The current food shortage is so acute that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have already starved to death.

While the regional security threat is real, innocent civilians continue to be caught in the political crossfire as the escalating humanitarian disaster in the North spirals into catastrophic proportions.

Please help to stop this humanitarian tragedy. Make your voice heard by emailing the following simple appeal to:

President Obama, [president@whitehouse.gov](mailto:president@whitehouse.gov)

President Lee Myung Bak, [president@president.go.kr](mailto:president@president.go.kr)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ecu@un.org](mailto:ecu@un.org)

We demand that Presidents Obama and Lee remain cognizant of the humanitarian crisis in North Korea, and that they immediately work to renew diplomatic efforts to prevent further North Korean nuclear tests. Most importantly, we demand that both governments facilitate rather than hinder delivery of humanitarian food aid to the North so that innocent civilians are not made to suffer needlessly.

**Appendix E**

The following is the petition to the government of United States that the author drafted and circulate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appeal for diplomacy.

**4/3/2013**

Dear Friend,

Please help to stop the current security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 your voice heard by emailing the following simple appeal to:

President Obama, [president@whitehouse.gov](mailto:president@whitehouse.gov)

Copy your message to: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president@president.go.kr](mailto:president@president.go.kr)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ecu@un.org](mailto:ecu@un.org)

.....

Honorable President Obama:

As you know, North Korea has responded to the annual US-ROK military exercises by withdrawing from the armistice accords of 1953 and preparing for another ballistic missile test.

With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ll-time high,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deplorably aggressive behavior is, in terms of Korea's cultural and political heritage, an aberrational consequence of historical circumstance that can in fact be corrected. The Korean nation, during its more than its 5000 years of history, has never resorted to aggression against its neighbors, but has rather historically maintained a path of peaceful coexistence—a path to which it can return if the United States has the will to facilitate rational, concerted and patient diplomacy.

I respectfully ask that you work to reduce the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by offering concrete diplomatic solutions to the current crisis, such as:

- Fulfilling your campaign to hold a dialogue with North Korea.
- Supporting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s diplomatic initiatives for defusing the current crisis.
- Persuad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Geun-Hye to fulfill her campaign pledge to shift away from her predecessor's hardline stance, and toward a policy of dialogue and engagement with the North.

Great nation have the foresight and courage to bring others together even in times of animosity, an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all nations to realize their true potential. We Koreans recall the days when America showed such courage, and exemplified a visionary leadership that inspired the world. President John F. Kennedy personified such leadership with his famous expression of solidarity with the German people at the height of the Cold War. Much like the Germans on either side of the Iron Curtai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while nominally enemies, share a common identity, history, and destiny. I hope that the United States can work to bring about a time when all Koreans can say as one, “I am free a citizen of Seoul, of Pyongyang, of Asia, and of the world.”

With respect,

### **Appendix F**

#### List of interviewees

Robert Hathway, Director of Asia Program, The Woodrow Wilson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Washington, D.C., June, 8, 2009.

North Korean researchers, Hong Kong, June 14, 2010.

Hon. Friedrich Loehr, former German ambassador to North Korea, Boston, May, 5, 2013.

## References

- Afanasiyev, Evgeny V. 2000. "Vladimir Putin's New Foreign Policy and Russian views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Winter.
- Agarkov, Valery. 2004. "Russia: Losyukov May head Russia Delegation at North Korean Nuclear Talks." *ITAR-TASS*. February 3.
- Bhang, Hyong-Nam. 2000. "US, China Vie for Influence in N. Korea." *Dong-A Ilbo*. October 23.
- Bosworth, Stephen W. 2011. "Breaking the Cycle of North Koreans Provocations: Remark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arch 1.
- Byun, See-won and Scott Snyder. 2011. "China-DPRK Strategic Partnership: China's Approach to North Kore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Paper Presented for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ontreal, Canada, March 19.
- Campbell, Kurt M. 2011.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Remark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arch 1.
- Cha, Victor D. 2003. "Korea's Place in the Axis," *Foreign Affairs*, May/June.
- Cha, Victor D. 2011. "The Free Trade Agreement Could Spoil South Korea's State Visit." *Foreign Affairs*, October 5.
- Cha, Victor D. 2007. *Winning Asia, Washington's Untold Success Stor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ang, Jae-soon. 2010. "China Tries to Save Face with Six-Party Talks Offer." *Yonham News*, November 8.
- Chang, Pak Ki. 2007. "South Korean Security Policy in the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the View from Seoul." *Far Eastern Affairs*, Vol. 35, No. 3.
- Chinoy, Mike. 2008. "Meltdown: 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ew York: St. Martin's Press.
- Choe, Sang-Hun, and Helene Cooper. 2008. "North Koreans Confirm Pledge to Disable Plant." *The New York Times*, October 13.
- Choe, Sang-Hun. 2007. "Inter-Korean Talks Focus on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The New York Times*, November 15.
- Choo, Jaewoo. 2005. "China plans to offer \$2 Billion to N. Korea." October 30.
- Choo, Jaewoo. 2008.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sian Survey*, Vol. 48, Issue 2, March/April.
- Chun, Simone. 2008. "In Search of a Perpetu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 Observer*, volume 39, No. 4, Winter.

- Chun, Simone. 2009. "The Political Economy of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on the panel, South Korea's Free Trade Strategy, at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International Scholars, Washington, D.C., June 8.
- Cooper, Helene and Choe Sang-Hun. 2008. "US Declares North Korea Off Terror List." *The New York Times*, October 12.
- Cumings, Bruce. 1993. "Japan's Position in the World System," in Andrew Gordon, ed., *Postwar Japan as Histo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umings, Bruce. 1997.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Cumings, Bruce. 2004.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The New Press.
- Denisov. 1997. *Russia and the Problem of Korean Unification*.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 Doyle, Michael. 1986.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 Engler, Yves. 2013. "The Korean Atrocity: Forgotten US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Global Research*, May 18.
- Ewell, Craig K., Labonte, Marc, and Wayne M. Morrison. 2007. "Is China a Threat to the US Economy?" CRS Report to the Congress.
- Funabashi, Yoichi. 2007. "The Peninsula Question: A Chronicle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ilpin, Robert. 1975.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New York: Basic Books.
- Glionna, John M. 2011. "N. Korea and South Korea Hold First Talks in 4 Months." *Los Angeles Times*, February 8.
- Glionna, John M. 2009. "North Korea launches Rocket." *Los Angeles Times*, April 5.
- Gowan, Peter. 2004. "Triumphing Toward International Disaster," *Critical Asian Studies*, Vol. 36, No. 1.
- Gowan, Peter. 1999. *The Global Gamble: Washington's Faustian Bid for World Dominance*. New York: Verso.
- Gregg, Donald P. 2012. "Testing North Korean Waters," *New York Times*. August 31.
- Guttenfelder, David, and Jean H. Lee. 2010. "US, S Korea launch war games in Yellow Sea." *Associated Press*, November 28.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2008.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8, No. 2.
- Harden, Blaine. 2009. "North Korea Says It Will Start Enriching Uranium." *Washington Post*, June 14.

- Harden, Blaine. 2009. "Value of N. Korea Sanctions Disputer: International Curbs After '06 Explosion Seen as Ineffective." *Washington Post*, June 12.
- Harlan, Chico. 2010. "Chinese Official Visits North Korea to Show Support for Pyongyang." *Washington Post*, December 9.
- Harlan, Chico. 2010. "In South Korea, Joint Chief Chairman Scolds China for its 'Tacit Approval' of North's Aggression." *Washington Post*, December 8.
- Huang, Jing, Li, Xiaoting. 2006. "Pyongyang's Nuclear Ambitions: China Must Act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13.
- Ikenberry, John G. 2003. "Is American Multilateralism in Decline?"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 No. 3.
- Ikenberry, John G. and Chung-in Moon. 2008.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Ikenberry, John G. 2009. *Liberal Internationalism 3.0: America and the Dilemmas of Liberal World Order*. *Perspective on Politics*, March 2009, pp 71-87.
- Interfax. 2006. "Russia, China Maintain Closest Contact Toward Settling DPRK Nuclear Problems." October 31.
- Jennings, Ralph. 2005. "China Hu Visits Landmark North Korean Factory, Talks Trade" *Kyodo News International*. October 30.
- Joo, Seung-Ho. 2011. "Russia's North Korea Policy: A Perspective from Structural Realism." Paper Presented at the 52nd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Montreal, Canada, March 17-19, 2011.
- Kang, David C. 2005. "Why China's Rise Will Be Peaceful: Hierarchy and Stability in the East Asian Region."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3, No. 3, September.
- Kang, David C. 2007. *China's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ng, David C. 2010. "Korea's New Cold War." *The National Interest*, December 31.
- Kang, Hyun-kyung. 2011. "N. Korea Turns to Dialog Under Acute Food Shortage." *Korea Times*, February 11.
- Kant, Immanuel. 1983.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on Politics, History, and Morals*, Ted Humphrey (trans.), USA: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Kim, Dogyun, and Phil Steward. 2010. "U.S Aircraft Carrier Heads for Korean Waters," *Reuters*, November 24.
- Kim, Samuel S. 1994. "The Dialects of China's North Korean Policy in a Changing Post Cold-War World." *Asian Perspective*, Vol. 18, No. 2, Fall-Winter.
- Kim, Samuel. 2006. "Chinas Conflict-Management Approach to the Nuclear Standoff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Perspective* Vol. 30. No. 1.
- LaFranchi, Howard. 2011. "US-North Korea nuclear talks: Why return to the table now?"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uly 28.

- Lankov, Andrei. 2004. "North Korean Refugees in Northeast China" *Asian Survey*, Vol. 44 Issue 6.
- Laurence, Jeremy. 2011. "North Korea Says Agrees More US Talks." Reuters. August 1.
- Laurence, Jeremy. 2010. "Q+A: What Next in the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uters, November 23.
- Lee, Jean H. 2009. "North Korea Declares It Conducted Nuclear Test." Associated Press, May 25.
- Lee, Jean H. 2010. "North Korea Threatens All-out War." Associated Press, May 20.
- Lee, Matthew. 2010. "Clinton: U.S, China Must Act Together on N. Korea." Associated Press, May 23
- Lee, Sung-Yoon. 2011. "North Korea's Carrot-and-Stick Strategy." *Los Angeles Times*. August 5.
- Lim, Wonhyuk. 2006. "Economic Integration and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The Brookings Institution Seoul-Washington Forum.
- Lim, Wonhyuk. 2006. "Kim Jon Il's Southern Tour: Beijing Consensus with a North Korean Twist?" The Brookings Institution, February 13.
- Makino, Yoshihiro. 2011. "Pyongyang Sends Mixed Signals on Summit Meeting." *Asahi*, March 5.
- Margesson, Rhoda, Chanlett-Avery, Emma, and Andora Bruno. 2007.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Human Rights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26.
- McDonald, Mark. 2011. "North Korea Threatens to Close Hotline With South." *The New York Times*. May 30.
- McDonald, Mark. 2011. "Korea Talks Enter Second Day," *The New York Times*, February 9.
- McDonald, Mark. 2010. "North and South Korea Exchange Fire, Killing Two," *The New York Times*, November 23.
- McDonald, Scott. 2011. "Rival Koreas Resume Contact, but No Closer Yet on Resuming Nuclear Disarmament Talks." Associated Press. September 21.
- Mearsheimer, John.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Moon, Chung-in and Bae Jong-Yun. 2003. "The Bush Doctrin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ian Perspective*, Vol. 27, No. 4.
- Moon, Chung-in, and Bae Jong-Yun. 2005. "Unraveling the East Asian Regional Security Complex: Old Patterns New Insight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17, No. 2.

- Moon, Chung-in, and Lee, Jong-Hoon. 2003.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visited: The Case for a Negotiated Settlement," *Security Dialogue*, Vol. 34, No. 2.
- Moon, Chung-in. "Between Kantian Peace and Hobbesian Anarchy: South Korea's Vision For Northeast Asia. <<http://tinyurl.com/5uwv9cx>>
- Morgenthau, Hans. 1960,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Knopf.
- Mukhin, Vladimir. 2005. "Rehearsal for Invasion. China and Russia Rehearse Scenario for World War III." *Moscow Nezavisimaya Gazeta*, August 22.
- Mydans, Seth. 2011. "North Korea Is Said to Weigh Nuclear Test Moratorium." *The New York Times*. August 24.
- Myo-ja, Ser. 2011. "GNP Reps Want Return of US Nuclear Weapons," *JoonAng Ilbo*, March 1.
- Noland, Marcus. 2008. "The (non)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 Working Paper 08-12, Peterson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December.
- Nordhaug, Kristen. 2005.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in an Age of Financialization." *Critical Asian Studies*, Vol. 37, No. 1.
- O'Neil, John. And Sang-Hun, Choe. 2006. "China Shows Willingness to Punish North Korea for Test." *New York Times*, October 10.
- Onishi, Normitsu. 2006. "North Korea Takes a Peek Down China's Capitalist Road" *The New York Times*. January 26.
- Park, Geun-hye. 2011. *A New Kind of Korea*, *Foreign Affairs*, September/ October.
- Park, Hoon. 2005. "Strategi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 Managerial Approach," *North Korean Review*, Fall.
- Park, Ju-min. 2011. "Diplomacy Stalemate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Reuters*, February 11.
- Popeski, Ron and Jeremy Laurence. 2011. "North Korea says Peace Treaty a First Step for Denuclearization." *Reuters*. July 27.
- Ramstad, Evan. 2011. "An Exit Interview with Gen. Sharp." *Wall Street Journal*. July 8.
- Rhodes, William. 2006. "A Trade Deal With Seoul Should Be a Priority." *The Financial Times*, January 9.
- Rozman, Gilbert. 2010. "Post-Cold war Evolution of the Chinese Thinking on Regional Institutions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9. No. 66.
- Samokohotkin, Aleksandr and Boris Yunanov. 2009. "Mushroom Leader. Once Again Kim Jong-Il Tests the World with a Nuclear Blast," *Vremya Novostey Online*, May 26.
- Sang-hun, Chloe. 2009. "Amid Missile Tests, North Korea Agrees to Talk." *Associated Press*, October 6.

- Sanger, David E. 2010. "North Koreans Unveil Vast New Plant for Nuclear Use," *New York Times*, November 20.
- Saunders, Phillip C. 2006. "Military Option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ian Social Science*, Vol. 2, No. 10.
- Scalapino, Robert A. 2001. "Inter-Korean Rapprochement: Issues to be Confronted."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ests*, Vol. 23, No. 4.
- Shin, Jung-Wong. 2008. "South Korea, Russia Reach Natural Gas Deal."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30.
- Snyder, Scott. 2005. "South Korea's Squeeze Pla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 4.
- Snyder, Scott. 2009. *China's Rise and the Two Koreas: Politics, Economic, Security*. Portland: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 Solomon, Jay and Jason Leow. 2008. "Beijing Spurs U.S Effort to Prepare in Event of Korean Leaders Demis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7.
- Solovyev, Nikolai. 1993. "Siberian and the APR," *International Affairs*. April.
- Song, Sang-ho. 2010. "North Korea Fires Artillery Into the Sea Near Northern Border," *Korea Herald*, November.
- Stephens, Kathleen. 2010. "US embassy cables: China 'would accept' Korean reunification." *The Guardian*. February 22.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ichiga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Waltz, Kenneth N.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Fall.
- Westall, Sylvia. 2010. "South Korea's Lee says talks the answer to nuclear crisis" *Reuters*, December 29.
- Whit, Joel S., Poneman, Daniel B., and Robert L. Galluci. 2004.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메 모

메 모